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380-01

한국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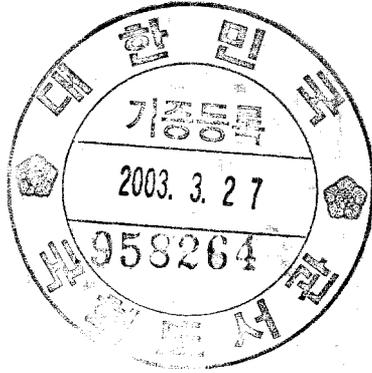
2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발간사

예로부터 영토와 그 안에 살고 있는 호구(戶口)를 헤아리는 일은 국가경영의 근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호구조사 역사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조선시대의 3년 간격 호구기록은 차치하고, 근세에 들어와 1925년에 시작된 인구센서스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에 제16차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이제 75년의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을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인구 및 주택의 규모, 구조, 분포와 경제·사회적인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국가 제일의 기본통계입니다. 국가정책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초자료, 연구 및 교육자료, 벤치마킹 통계자료 등 실로 그 쓰임새와 중요성은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75년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걸어 온 변화와 성장의 발자취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 귀중한 국가 유산을 사료(史料)로서만 보전하기보다는 이를 거울삼아 미래의 발전 모습을 담아내고자, 지난 2년간 사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한국의 인구(1, 2)」 및 「한국의 주택」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책자가 대학, 연구소는 물론 각계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번거로운 일임에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김두섭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12월

통계청장 오종남



인구조사의 역사는 서력 기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독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민수기(民數記, The Numbers)」는 모세 오경(五經)의 하나로서 3천여 년 전에 나온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도 2천여 년 전 한(漢) 제국 시기에 이미 비교적 자세한 인구자료가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도 근세 조선시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매 3년에 한번씩 인구를 조사해 놓은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당시 인구 중 일부 성이나 연령층이 제외되어 있거나 일정 계급을 배제한 기록들이며, 조사의 준거기간 또는 시점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현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현대적 기준에 맞는 전국적 규모의 인구센서스로는 스웨덴(1749년)과 미국(1790년)에서 실시된 것을 들 수 있으며,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에서도 18세기에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 점령시기인 1925년에 최초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현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인구센서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인구센서스 자료는 그 정확성과 완전성에 있어 일부 선진국들의 자료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발전수준을 헤아리는 국제적인 지표로서 국민소득이나 취학을, 평균 수명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 10여 년 전부터는 여러 지표들을 조합하여 인간개발지수 또는 국가발전지수 등을 작성하고, 이 지표들을 통해 국가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인구센서스나 표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므로 그 나라의 통계작성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 인구센서스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 자료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취업률, 실업률, 물가지수, 문맹률, 범죄율, 이혼율 등 모든 지수나 척도들은 해당 국가나 사회의 인구구조에 관한 기초자료의 완전성에 따라 그 정확성이 좌우된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체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구조적 특성의 규명, 변화의 해석, 나아가 장래를 예측하고 업무상의 결정을 함에 있어 인구센서스 자료는 기초자료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구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 초반이래 세계가 놀라워하고 주목할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낮은 출산력 수준은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전개되면서 가족구조, 노동시장과 산업구조가 변하고 사회복지체제의 긴장이 야기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 등 정치·사회적인 분야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모든 부문에 걸쳐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인구현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인구센서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인구센서스의 원자료는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매우 복잡한 작업을 거친 후에야 미로소 쓸만한 형태가 되어 나온다. 또한 센서스 자료의 분석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인구 자체의 구조와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들 상호간의 관계, 즉 인구변수와 인구 외적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자료 자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야 된다. 이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인문·사회·자연과학에서 요구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인구분석 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당시 인구학이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 했으나, 현재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가 수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진은 그들 중에서도 각자 자신이 집필한 주제에 대하여 다년간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온 것으로 널리 인정받거나 장래가 촉망되는 19명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1925년 최초의 인구센서스 이후 2000년 센서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인구와 가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계획되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나라의 인구상황과 인구관련 정책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닌다. 요즘 각급 학교와 인력 훈련기관에서는 인구현상과 이에 관련되는 용어 및 부호에 익숙하도록 많은 지식을 전수하고 훈련을 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개인들이 각자 평가하고 해석하여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한국의 인구변화 및 구조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인구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인구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참고문헌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교양도서로, 전문가 집단에게는 한국 인구에 대한 개론적 전문도서로,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이 우선 일반인들에게 지난 20세기 초반이래 한국 사회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학 및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인구현상과 연관지어 바라 보게 하고, 그들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1년 7월 학계와 통계청을 대표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연구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구성원의 명단은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사업은 통계청의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 한국인구학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관점이나 주장은 각 장을 집필한 필자들의 의견이지 정부나 한국인구학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 연구사업에는 통계청의 전문가도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계청 실무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어 왔다. 학계의 전문가들과 통계청의 실무진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앞으로 인구센서스를 기획, 집행하고 분석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 책은 1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자료, 인구변천, 인구성장의

구성요소, 인구구조 및 분포, 인구정책 등 인구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1925년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16번의 센서스에서 집계된 기본적인 인구자료와 장래(2000~2050년) 추계 인구, 그리고 생명표(1999년)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원고의 대부분은 2002년 9월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쳤음을 밝힌다.

우리는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각 장 체제의 균형을 맞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문용어를 통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기존의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의욕에 비해, 이 책의 체제나 내용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눈에 많이 띈다. 하지만 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집필진들이 한결같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므로, 앞으로 보다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으로 믿고 그간의 편집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이 책에 수록된 연구물들이 학계의 동료와 후학, 정책입안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도움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 책의 편집을 마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주위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좋은 원고를 써주신 각 장의 집필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모두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둘러 집필과 수정작업을 마쳐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김정석 교수는 이 연구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갖가지 귀중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환 교수와 전주대 국장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그 동안 이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오종남 청장, 윤영대 전 청장, 윤형백 소장, 권오술 과장, 김형석 사무관을 비롯한 통계청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작업을 도와준 대학원생 박효준 군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2002년 12월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발간사	1
머리말	3
차례	7
제1장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21
I. 머리말 / 21	
II. 인구센서스의 특징과 다른 인구자료원과의 관계 / 21	
III. 인구센서스의 발전 / 25	
1. 개관 / 25	
2. 제도적 측면 / 29	
1) 조직 / 29	2) 법령 / 30
3. 조사방법론적 측면 / 31	
1) 조사단위 개념 / 31	2) 자료수집 방법 / 33
3) 표본조사 / 34	
4. 조사 내용적 측면 / 35	
1) 조사항목의 변천 / 35	2) 주요 조사내용의 변천 / 39
IV. 향후의 발전 방향 / 45	
제2장 인구의 성장과 변천	49
I. 머리말 / 49	
II. 한국의 인구변천 / 50	
1. 전통적 성장기 / 50	
2. 초기변천기 / 53	

- 3. 혼란기 / 55
- 4. 후기변천기 / 57
- 5. 재안정기 / 59
- Ⅲ.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 62
 - 1. 출산력 저하의 결정요인 / 62
 - 2. 사망력과 출산력의 관계 / 67
 - 3. 인구이동과 출산력의 관계 / 68
- Ⅳ. 세계 속의 한국인구 / 72
- Ⅴ. 맺는 말 / 78

제3장 출산력 81

- I. 머리말 / 81
- Ⅱ. 출산력 변천의 단계 / 83
 - 1. 출산력 변천의 준비기간 / 83
 - 2.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 / 84
 - 3.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대 / 87
- Ⅲ. 출산력 변천의 메카니즘 / 89
 - 1. 출산력 변천의 중간변수 / 89
 - 2. 중간변수의 검토 / 91
 - 1) 유배우율의 변화 / 91
 - 2)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93
- Ⅳ.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차별출산력 / 95
 - 1. 출생성비의 불균형 / 95
 - 2. 차별출산력 / 97
 - 1) 거주지와 출산율 / 97
 - 2) 교육과 출산율 / 100
- Ⅴ. 장래 출산력의 예측 / 103
- Ⅵ. 종합 및 결론 / 111

제4장 사망력 115

- I. 머리말 / 115

- II. 연구 방법 / 116
 - 1. 연구 자료 / 116
 - 2. 연구 범위 / 117
 - 3. 분석방법 / 118
- III. 사망력의 변화 / 118
 - 1. 사망력 변천 / 118
 - 2. 조사망률 / 120
 - 3. 성·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 121
 - 4. 성·연령별 기대여명 / 123
- IV. 사망유형 / 124
 - 1. 성·연령별 사망유형 / 124
 - 2. 한국의 사망유형과 모형 생명표 / 126
- V. 차별사망력 / 127
 - 1. 분석방법 / 128
 - 1) 이용자료 / 128 2) 특성별 인구의 사망수준 비교 / 129
 - 3)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망수준의 변화과정 추정 / 130
 - 2. 교육정도별 차별사망력 / 130
 - 3. 혼인상태별 차별사망력 / 133
 - 4.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 / 136
- VI. 사망원인별 사망력 / 138
 - 1. 사망원인의 유형과 변화 / 138
 - 2. 성·연령별 사망원인 / 142
 - 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기대여명 / 146
- VII. 맺는 말 / 149

제5장 국제이동과 해외 한인사회 153

- I. 머리말 / 153
- II. 국제 이동의 개관 / 154
 - 1. 디아스포라의 시작 / 154

- 2. 식민지 시대의 대 탈출 / 156
- 3. 해방과 귀환이동 / 159
- 4.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동 / 162
- Ⅲ. 중국 조선족 사회 / 165
 - 1. 공동체의 성격 / 165
 - 2. 인구 추세와 공동체의 위기 / 167
 - 3.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 168
- Ⅳ. 재일 동포 사회 / 171
 - 1. 사회적 위치와 차별 / 171
 - 2. 인구의 추세 / 174
 - 3. 정체성의 분화 / 177
- Ⅴ. 미국의 한인 사회 / 179
 - 1. 인구규모 / 179
 - 2. 한인 사회의 특성 / 181
 - 3. 세대와 정체성 / 185
- Ⅵ. 맺는 말 / 186

제6장 성과 연령구조 189

- Ⅰ. 머리말 / 189
- Ⅱ. 자료 / 190
- Ⅲ. 기존 연구 검토 / 191
- Ⅳ. 분석결과 / 193
 - 1. 성·연령별 구조 / 193
 - 1) 성·연령별 인구규모의 변화 추이 / 193
 - 2) 인구성장의 요인 / 195
 - 3) 성·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추이 / 196
 - 4) 인구 피라미드 / 202
 - 5) 지역(도시·농촌)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 204

2. 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205
 - 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205
 - 2) 노인 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207
 - 3) 지역별 성비 불균형 / 209
3. 성·연령 구조 변화의 사회적 의미 및 정책적 함의 / 211
 - 1) 유소년 인구 감소 및 교육 문제 / 211
 - 2) 여성 및 노인 인력의 활용 활성화 / 212
 - 3)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복지대책 / 213
 - 4) 출생시 성비 불균형 대책 / 214
- V. 요약 및 결론 / 215

제7장 혼인상태 219

- I. 머리말 / 219
- II. 연구자료 및 개념정의 / 221
 1. 연구자료 / 221
 2. 개념 정의 / 221
- III. 기존 연구 검토 / 222
- IV. 분석 결과 / 224
 1. 혼인상태의 변화 / 224
 - 1)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 224
 - 2)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 227
 2. 미혼 / 228
 3. 혼인 / 233
 - 1) 초혼 및 재혼 특성의 변화 / 233
 - 2) 부부 상호간 결혼 특성의 변화 / 237
 4. 이혼 / 239
 - 1) 이혼율 및 평균 이혼연령의 변화 / 239
 - 2) 평균 동거기간 및 교육수준별 이혼사유 / 241
- V. 결론 및 정책제언 / 243

제8장 가족과 가구 247

- I. 머리말 / 247
- II. 가구변화의 전반적 추세와 쟁점 / 249
- III. 일반가구의 가구형태 변화 / 254
 - 1. 전체가구의 가구구성 비율 / 255
 - 2. 15세 이상 무배우자들의 1인가구 형성비율 / 259
 - 3.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의 부부가구 형성비율 / 262
- IV.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 263
 - 1. 아동들의 거주형태 / 263
 - 2. 노인들의 거주형태 / 267
- V. 성별 가구주 비율과 특성 / 273
 - 1. 성별 가구주 비율 / 274
 - 2. 가구주의 성에 따른 특성 / 276
- VI. 맺는 말 / 277

제9장 교육수준 283

- I. 머리말 / 283
- II. 교육수준의 변화 / 284
 - 1.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수의 변화: 1945~2000 / 284
 - 2. 학력구성의 변화: 1980~2000 / 285
- III. 교육수준과 인구 / 293
 - 1. 교육과 국제화 / 293
 - 2. 교육과 소득 / 296
 - 3. 교육과 출산 / 303
- IV. 정책적 함의 / 307
 - 1. 정부 교육예산의 증가 / 307
 - 2.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관 / 308
 - 3. 사회변화와 교육 / 309
- V. 맺는 말 / 311

제10장 경제활동: 직업 및 산업	315
I. 머리말 / 315	
II. 기존연구 검토 / 317	
III. 직업구조의 변화: 1955~2000 / 318	
1. 경제활동과 직업구성의 추이 / 318	
2. 성별 직업분포의 변화 / 320	
3. 연령별 직업분포의 변화 / 325	
4. 교육수준별 직업구성의 변화 / 330	
5. 종사상의 지위구성의 변화 / 333	
IV.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0 / 337	
V. 맺는 말 / 346	
참고문헌	349

제11장 노동력	393
I.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 / 394	
II. 노동력의 추이 / 397	
1.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397	
2.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401	
3. 남녀 노동력의 연령구성 / 403	
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405	

- 5.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 406
- 6. 거주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 407
- 7. 노동력 생명표 / 414
- Ⅲ. 여성의 경제활동 / 416
 - 1. 가족에서의 위치와 여성의 경제활동 / 416
 - 2.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 419
 - 1) 총출생아 수 및 동거자녀(아동) 수와 여성의 경제활동 / 419
 -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보육상태 / 420
- Ⅳ. 비공식부문 / 422
- Ⅴ. 토론 및 정책적 제언 / 423

제12장 고령화와 노인인구 429

- Ⅰ. 머리말 / 429
- Ⅱ. 노인연구의 기존 동향 / 431
- Ⅲ. 노인인구의 변화 / 435
- Ⅳ.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 438
 - 1. 노인 가구 특성의 변화 / 438
 - 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특성 / 440
 - 3. 1인 단독가구 노인의 증가 요인 / 443
- Ⅴ. 경제생활 / 447
 - 1. 노년기의 소득원과 소득수준 / 447
 - 2. 노동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령분리 / 448
- Ⅵ. 거주지 분포와 이동 / 454
 - 1. 고령화의 지역화 / 454
 - 2. 노년기의 거주지 이동 / 456
- Ⅶ. 맺는 말 / 457

제13장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461
I. 머리말 / 461	
II. 자료 / 462	
1. 인구센서스 자료 / 462	
2. 주민등록자료 / 463	
3. 표본조사자료 / 464	
III.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 / 464	
IV. 지역간 인구분포 / 466	
1. 시·도 인구분포 추이 / 466	
2. 수도권 인구집중 / 470	
V. 국내 인구이동 / 473	
1. 인구이동 추이 / 473	
2. 시·도간 인구이동 / 474	
3. 인구이동 유형 / 478	
1) 이동유형 분석의 의의 / 478	2) 이동의 유형구분 / 479
3)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 481	
4. 인구이동의 이유 / 483	
VI. 수도권 인구이동 / 484	
1.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 484	
2.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 487	
3.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 490	
VII. 요약과 결론: 정책적 함의 / 492	
제14장 도시화	495
I. 머리말 / 495	
II. 도시화에 대한 연구 동향 / 496	
III. 20세기 한국의 도시화 / 500	
1. 유예된 도시화: 식민지 시대의 도시화 / 501	
2. 과잉도시화: 식민지 해방과 전쟁, 그리고 도시화 / 503	

- 3. 압축적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의 병진 / 505
- 4. 성숙된 도시화로의 이행: 1990년대 이후의 도시화 / 507
- IV. 도시인구 성장의 분석 / 510
 - 1. 급속한 도시화와 도·농 관계의 변화 / 510
 - 2.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이농과 도시화 / 514
 - 3. 수도권 집중과 도시간 관계의 변화 / 516
- V. 맺는 말: 요약 및 분석의 함의 / 520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525

- I. 연구목적과 대상 / 525
 - 1. 연구목적 / 525
 - 2. 연구대상 / 526
- II. 기존 연구 검토 / 527
- III. 전국 통근·통학인구 / 528
 - 1.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 528
 - 2. 통근·통학인구의 특성 / 532
- IV.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 536
 - 1.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 536
 - 2. 수도권 주간인구의 변화 / 540
 - 3.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 544
 - 1) 통근·통학 유입, 유출지 / 544
 - 2) 통근·통학 소요시간 / 549
 - 3) 서울 밖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특성 / 551
- V. 맺는 말 / 553

제16장 종교 557

- I. 머리말 / 557
- II. 자료 및 분석대상 / 558
- III. 한국의 종교구성: 개인적 수준 / 560

1. 성별 종교구성 / 561
 2. 연령별 종교구성 / 562
 3. 종교별 교육수준 / 566
 4. 지역별 종교구성 / 568
- IV. 한국의 종교구성: 가구 수준 / 572
1.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 573
 2. 가구 내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 575
 3. 지역별 부부 및 가족 내 종교의 일치와 불일치 / 577
 - 1) 지역별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 577
 - 2) 지역별 가구 내 종교 일치와 불일치 / 580
 - 3) 지역별 종교불일치의 형태 / 581
- V. 결론 / 585

제17장 정보화 587

- I. 머리말 / 587
- II. 자료 및 분석 / 589
- III. 분석 결과 / 593
 1. 정보화의 접근수준 / 593
 2.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차들 / 597
 3. 인구 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 / 605
- IV. 요약 및 결론 / 611

제18장 인구추계 615

- I. 머리말 / 615
- II. 인구추계 / 616
 1. 인구추계 방법 / 616
 2. 우리 나라의 인구추계 역사 / 618
 3. 2000~2050년 장래인구 추계 / 619
 - 1) 추계방법 / 619
 - 2) 기준인구의 작성 / 619

- 3) 인구 변동요인의 가정 / 622 4) 인구추계의 결과 / 624

Ⅲ. 가구추계 / 627

1. 정의 및 연구범위 / 627
2. 가구추계 기법의 종류 / 628
3. 2000~2020년 장래가구 추계 / 630
 - 1) 추계방법 / 630 2) 가구추계의 결과 / 632

Ⅳ. 결론 및 토론 / 641

제19장 인구정책 645

I. 서론 / 645

II. 인구정책과 인구사상 / 646

1. 인구정책의 정의와 범위 / 646
2. 현대 이전 인구사상에서의 낙관적 전통과 비관적 전통 / 646
3. 정책적 함의 / 647

III. 출산력에 대한 인구정책 / 649

1. 저출산 - 새로운 사회문제 / 649
2. 세계적인 출산력 붕괴현상과 정책적 선회 / 650
3. 정책적 함의 / 651

IV. 사망률 저하를 포함한 보건정책 / 653

V. 인구분포 / 654

1. 인구재배치정책의 일반적 유형 / 654
 - 1) 이농민의 농촌귀환 / 655 2) 농촌개발 / 655
 - 3) 산업시설의 분산 / 656 4) 신도시 건설 / 656
 - 5) 성장거점도시 개발 / 657
2.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대비되는 관점 / 657
3. 수도권 개발과 국가발전 / 658

VI. 연령구조와 고령화 / 659

1. 연령구조의 인구학적 의미 / 659
2. 고령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의미 / 661

3. 우리 나라의 고령화 / 662

4. 정책적 함의 / 662

1) 고령인구 집단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정 / 663

2) 가족의 역할 / 663 3) 국가차원의 역할 / 664

VII. 성구조와 성평등 / 664

VIII. 국제이민 / 666

1. 우리 나라 노동이민의 현황 / 666

2. 외국인력에 대한 최근의 정책 / 668

IX. 맺는 말 / 669

참고문헌 675

부록 699

제11장 노동력

민 경 희

노동력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정보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저임금·저기술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1993년에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산업연수와 연수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106,915명을 포함하여 총 12만 명을 넘었다(통계청, 2001e: 187). 또한 정보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한편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를 가속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급인력의 수요를 증가시켜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노동력의 부족, 노동의 유연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은 신속한 해결책을 요하는 문제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외국인 노동력 사용의 증가는 유럽 각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인권문제, 시민권문제,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드는 해결방안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노동의 유연화는 개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적응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므로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 노동력의 구조, 여성노동력의 특성, 비공식부문의 규모 등을 지금까지의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인구란 전체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진 인구집단을 말한다. 노동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노동력이 실제 사회에서 쓰여지는 방식, 즉 경제활동의 양식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게 된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경제활동은 각 사회의 문화와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도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농업인구가 다수인 경제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은 대량생산체제의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노동 시장이 유연해지는 정보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은 산업사회의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방법과 달라야 한다. 각 문화마다 인간관계에 관한 규범들이 다르고 같은 문화 안에서도 남성, 여성, 아동의 행위규범이 다르고 경제활동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와 하위문화에서 규정하는 규범들을 고려하여 측정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야 한다. 단순히 인구의 몇 퍼센트(%)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총체적 노동 공급량의 측정이 목적인 조사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는 분명히 다른 측정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유엔의 국가계정체계(UN, 1993c: 4-5)는 시장과 관련되는 생산활동만을 생산활동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가구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예외는 가내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일이다. 노동력 통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는 유엔의 생산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생산활동에 종사

하는 인구로 제한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제외된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사용하는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 개념은 1954년에는 ‘보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로 정의되었고, 1966년에는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공급한 모든 남녀 인구’로 재정의되었다. 현재의 노동력 개념은 1993년의 유엔의 국가계정체계와의 관련하에 ‘유엔의 국가계정체계가 규정하는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공급한 남녀인구’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ILO의 경제활동인구의 조작적 정의는 생산활동을 ① 준거기간의 활동, ② 연령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의 활동, ③ 최소 기준시간 이상 한 활동으로 제한하며, 또한 ④ 경제활동인구 개념을 현장에 옳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예: 조사에서 사용하는 질문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ILO, 2002: 31-33).

우리 나라의 인구센서스에서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조작적 정의도 1980년 이후 센서스마다 바뀌어 왔다. 이들을 연령기준, 준거기간, 경제활동의 최소시간, 그리고 경제활동 내용 등의 측면에서 보면 <표 11-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80년 이후 다섯 번의 인구센서스에서 규정하는 연령기준, 준거기간, 경제활동 최소기준시간,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규정 문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계열적 연구를 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김민경, 1996). 따라서 이 장에서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한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들은 시계열적으로 비교될 수 없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만 1980년과 2000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2000년 센서스의 경제활동인구 규정 문항에서 ‘즉각적 취업가능성’ 문항(“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을 제외하면 경제활동추정 준거기간, 최소기준시간, 경제활동인구 규정 문항 등이 비슷하므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연도 자료의 횡단적 분석에 기초한 시계열적 비교(예를 들면, 각 연도 노동력의 연령별 분포, 성별 분포 등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기준이나 문항들이 특정 연령집단이나 성별 집단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1〉 경제활동인구 규정에 관한 인구센서스 지침, 1980~2000

센서스 연도	연령기준	준거 기간	경제활동 최소 기준시간	경제활동인구 규정 내용
1980	14세 이상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불분명)	1주간 (10월 25일~31일)	조금	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2. 조금이라도 수입을 위해 일함. 3. 구직활동함.
1985	14세 이상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불분명)	불분명 (주로 한 활동)	없음	1. 일하고 있음. 2. 틈틈이 일하고 있음. 3. 구직활동함.
1990	만15세 이상	평소	1년 중 30일 이상	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2. 틈틈이 일함. 3. 직장(사업)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음. 4. 구직활동함.
1995	세는 나이 16세 이상	1개월 (10월 1일~31일)	주로 한 활동	1. 주로 일함. 2. 틈틈이 일함. 3. 일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 4. 구직활동함.
2000	세는 나이 16세 이상	1주일 (10월 22일~28일)	조금 (1시간)	1. 수입있는 일을 했음. 2. 일해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 3. 구직활동함. 4. 지난 주에 일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음.

자료: 경제기획원(1982a, 1987); 통계청(1993, 1997a, 2002a).

경제활동인구는 각 인구센서스가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취업자들과 실업자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각 조사가 규정하는 준거기간에 최소 기준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을 했거나, 직장이 있으나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수입 있는 일에는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돕거나 부업, 아르바이트 등 조금이라도(1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것도 포함된다. 실업자는 준거기간에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2000년 센서스에서는 실업자의 규정을 더 구체화하여 준거기간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 중 그 기간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을

실업자로 규정했다. 이는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진 많은 여성들이 그 기간에 일이 있었다더라도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실업자 규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각 연도 조사가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으로서 조사 준거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통계청, 2001g: 6).

II. 노동력의 추이

1.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는 1930년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인구센서스라 할 수 있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1930년의 조사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고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자료가 따로 제시되고 있는데 조선인 전체(연령제한 없음) 중에서 유업자의 비율은 1930년에 남자 59.5% 여자 32.6%, 1940년에 남자 53.7%, 여자 21.9%, 1944년에 남자 52.9%, 여자 28.9%이다(조선총독부, 1934: 172, 1944: 72-73, 1945: 58-59). 그리고 1949년 5월 1일에 실시한 제1회 총인구조사의 자료는 6.25전란 중에 소실되었으며, 1955년에 실시한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에서는 14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때는 노동력에 취업자, 완전실업자, 무업자를 포함하였다. 무업자를 노동력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76.6%, 여자 48.0%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전쟁 직후에 여성들이 생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1960년에는 13세 인구부터 경

제활동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남자는 73.3%, 여자는 26.8%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기 후반에 상당히 증가해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한 1966~2000년 기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표 11-2>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적으로 1966년의 46.0%에서 2000년의 61.1%로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의 대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남성 노동력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966년의 70.0%에서 2000년의 74.0%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여성노동력은 1966년의 24.2%에서 2000년의 48.9%로 비율로 보면 두 배 이상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노동력의 증가를 매 5년 간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975~1980년과 1980~1985년 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남녀 노동력의 증가는 시기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남성노동력은 1970~1975년 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여성노동력은 전체적으로 남성노동력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980~1985년 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2>에서 1966

〈표 11-2〉 성별 경제활동참가의 추이, 1966~2000

연도	노동력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률 (%)		노동력 증가율 (%)			
	전체	취업자	여성 비율 (%)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도	전체	남자	여자
1966	7,312	6,697	27.7	46.0	70.0	24.2	91.4	92.0				
1970	8,665	8,224	31.9	49.2	70.8	29.8	94.2	96.3	1966~1970	18.5	11.6	36.6
1975	10,248	9,806	30.5	48.4	69.6	28.6	94.7	97.9	1970~1975	18.3	20.7	13.0
1980	12,679	11,876	33.4	51.3	70.8	33.2	92.5	95.9	1975~1980	23.7	15.7	35.5
1985	15,816	15,245	38.1	56.9	73.0	41.9	95.4	97.9	1980~1985	24.7	16.0	42.2
1990	18,822	18,388	40.6	60.6	74.5	47.5	97.3	98.3	1985~1990	19.0	14.2	26.8
1995	21,164	20,785	40.6	62.4	76.6	49.1	97.9	98.6	1990~1995	12.4	12.5	12.4
2000	22,164	21,366	41.3	61.1	74.0	48.9	95.8	97.2	1995~2000	4.7	3.5	6.5

주: 15세 이상 인구; 1966년부터 1980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4/4분기 자료이고, 그 이후는 해당 연도의 11월 자료임. 11월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인구센서스 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것임.
자료: 통계청(2002): KOSIS의 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년에는 남자 91.4%, 여자 92.0%이었으나 1995년에는 남자 97.9%, 여자 98.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경험한 경제적 침체와 정보경제로의 구조적인 변화로 2000년에는 취업률이 약간 떨어져서 남자 95.8%, 여자 97.2%를 기록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의 내용을 보면 남성들 중에는 완전취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들 중에는 부분취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5, 1990, 1995년의 인구센서스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완전취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각각 89.2%, 90.1%, 92.2%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73.7%, 67.4%, 74.8%이었다(각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980년과 2000년에는 부분취업을 측정하는 문항이 없음). 총 부분취업자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 85.9%, 1990년에 80.8%, 1995년에 90.6%이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전체적인 취업률이 높은 것은 부분취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력 관련 통계는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두 가지 자료에서 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자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조사의 범위, 포괄성, 무응답에 대한 처리, 그 외의 자료수집에 관련된 조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문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훨씬 많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사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조사원들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응답들이 나오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캐어붙어 가며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구센서스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항들의 수는 극히 적으며, 임시로 모집한 비전문적인 조사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므로 두 조사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ILO, 2002: 256; 김민경, 1996: 82).

두 조사는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1980~2000년 기간의 인구센서스 표본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두 조사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 크게 나고 있다. 특히 2000년 자료에서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의 (a)와 경제활동인구

(표 11-3)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 1966~2000

(단위: %)

연도	남자			여자		
	인구센서스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센서스		경제활동 인구조사
	보고서	2% 표본		보고서	2% 표본	
1966	78.6	-	70.0	31.5	-	24.2
1970	72.5	-	70.8	37.6	-	29.8
1975	77.8	-	69.6	45.7	-	28.6
1980	72.4	72.0	70.8	38.4	37.4	33.2
1985	-	71.5	73.0	-	32.1	41.9
1990	68.3	73.8	74.5	32.6	34.2	47.5
1995	71.6	77.5	76.6	36.6	38.9	49.1
2000	-	70.9 ^a /74.4 ^b	74.0	-	39.2 ^a /46.0 ^b	48.9

주: 1) a: 조사기준 기간(2000년 10월 22일~28일)에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 중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b: 조사기준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며 '직장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무시함.

2) 인구센서스의 조사 기준일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10월 1일이고,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11월 1일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4/4분기 자료이고, 1985~2000년에는 해당 연도의 11월 자료임.

자료: 통계청(2002);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2% 표본 원자료).

조사 자료가 모두 '즉각적 취업가능성'을 고려한 비율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데, 서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에는 인구센서스 보고서와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간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인구센서스 2% 표본 자료를 비교해보아도 1980~1995년 기간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들은 그 차이가 2% 이내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는 10%를 훨씬 넘는 차이(1990년에 13.3%)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와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66~1975년 기간에는 남녀 모두 인구센서스 보고서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보다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두 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다르게 나오는 것은 조사에 관련되는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표 11-

3)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두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 그 차이들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남성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함을 암시한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를 쉽게 넘나드는 현상은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유동적인 노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두 조사 모두 좀더 새롭고 정교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LO(2002: 25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인구센서스 결과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가 더 광범위한 인구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는 항상 인구센서스 결과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표 11-4>에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인구센서스의 문항들이 각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시계열적인 비교는 불가능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센서스 자료에서 ‘즉각적 취업가능성’ 여부를 무시하면 1980년 센서스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두 가지 유형으로 계산하였다. 하나는 조사 준거기간에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 중 즉각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킨 것(<표 11-4>에서 2000^a)이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 취업가능성’ 여부는 무시하고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킨 것(<표 11-4>에서 2000^b)이다. 후자를 1980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남녀 모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1-4)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성/연도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17	18~19	전체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남자										
1980	21.4	18.2	42.4	85.8	71.0	94.1	96.4	92.1	75.9	40.5
1985	12.7	8.7	31.7	85.5	61.5	94.3	97.9	94.3	75.5	40.0
1990	12.4	5.1	25.3	84.1	53.3	93.8	97.6	93.4	74.8	37.0
1995	10.6	3.8	25.0	86.1	58.4	94.6	98.2	95.0	78.6	40.5
2000 ^a	6.5	2.3	14.1	78.6	38.8	86.0	93.9	89.3	69.0	39.0
2000 ^b	11.1	6.1	20.5	82.0	45.8	89.2	95.9	92.3	73.4	42.9
여자										
1980	25.1	22.4	47.8	40.1	51.2	31.9	46.0	50.2	38.3	12.4
1985	13.9	9.0	35.0	35.7	49.4	28.1	38.8	46.3	35.2	10.7
1990	16.1	5.1	34.0	36.9	57.2	31.2	39.2	44.2	34.8	11.5
1995	11.9	2.7	28.7	42.0	61.3	39.2	44.4	46.7	40.2	16.8
2000 ^a	7.8	1.8	17.0	42.5	48.9	44.2	49.6	47.7	37.5	18.9
2000 ^b	12.9	5.7	24.3	49.5	57.0	51.9	57.1	54.6	43.6	23.5

주: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9세 이하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6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1-4〉를 보면, 1980년에는 19세 이하의 청소년 남성인구의 21.4%가 경제활동을 했는데 비해 2000년에는 11.1%가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청소년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25.1%에서 2000년의 12.9%로 감소했다. 특히 18~19세 인구를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4%에서 20.5%로 감소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에서 24.3%로 감소했다. 이는 1980년의 경제부흥기에 청소년 노동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0년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현상은 2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과 2000년의 두 시점간에 반대방향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5.8%에서 82.0%로 감소하였는데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1%에서 49.5%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로, 25~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도시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M-곡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곡선은 여성들이 미혼시절에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 자녀출산, 자녀양육 등을 경험하는 25~34세 연령에서는 경제활동이 저조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평등 수준이 비교적 높고, 적은 수의 자녀를 낳으며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회적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북구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이 남성의 곡선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95년까지의 여성경제활동 곡선들은 전형적인 M-곡선이었는데 2000년에는 25~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20~24세, 35~4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자료로는 개인 여성의 생애에서 25~34세 기간에 경제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다(박수미, 2002).

3. 남녀 노동력의 연령구성

지난 20년 동안 남녀 노동력 연령구성의 변화를 보면,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변화의 정도는 여성노동력이 남성노동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남성노동력에서 19세 이하의 청소년 남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6.4%에서 2000년의 1.6%로 감소한 반면, 전체 여성노동력에서 청소년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0%에서 2.7%로 감소하였다. 또한 20세 이상의 노동력의 연령분포에서는 25~34세 인구를 제외하면 남녀가 비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24세 인구의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해 왔으며 35~44세 인구의 비율은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남녀 모두 약간 증가했다. 남녀가 현저히 다른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연령은 25~34세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1980년의 30.2%에서 2000년의 27.9%로 약간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8.4%에서 24.8%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 연령층

〈표 11-5〉 연령별 노동력의 여성비율, 1980~2000

(단위: %)

연도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 미만	16~17	18~19	전체	20~24	25~34	35~44	45~54	55~64	65+
1980	51.3	55.1	52.2	50.4	34.6	48.5	25.5	32.3	37.9	37.8	34.2
1985	50.0	53.0	47.8	50.4	31.5	50.0	23.1	27.8	33.0	36.9	30.8
1990	55.4	45.6	48.2	57.0	32.4	57.3	25.3	27.8	32.1	36.5	34.4
1995	52.4	39.0	40.7	54.2	34.7	57.8	29.5	30.4	32.8	37.0	41.4
2000 ^a	53.4	27.5	41.1	55.3	37.2	62.7	34.5	34.4	34.6	37.6	44.2
2000 ^b	52.8	46.1	46.4	54.9	39.9	62.4	37.4	37.1	36.9	39.7	47.2

주: 2000^a와 2000^b의 설명은 〈표 11-4〉와 같음.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남성들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듯하고, 이 연령층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출산율의 감소, 교육수준의 증가, 경제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비교적 고급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구조로의 변화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령별 노동력의 성별구성을 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5〉를 보면, 조사시기에 관계없이 19세 이하의 노동력에서는 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6세 미만의 노동력에서는 여성비율이 1980년의 55.1%에서 2000년의 46.1%로 감소한 반면, 18~19세 노동력의 여성비율은 1980년의 50.4%에서 2000년의 54.9%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4세 노동력에서도 여성비율이 1980년의 48.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62%를 넘고 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가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물론 여성들의 가사노동의무, 자녀양육, 기혼여성노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편견과 그에 따른 고용회피 또는 권고퇴직 등의 관행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4세 연령층의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25.3%에서 현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29.5%, 2000년에는 37.4%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장년층인 45~64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거나 불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1980년의 34.2%에서 2000년의 47.2%로 현저

히 증가하였다.

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위에서 언급한 인구센서스 자료의 특성상 <표 11-6>에 있는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각 연도 내에서 교육수준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남녀 공통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어느 해에나 무학자들보다는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1995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년제 대학 이상을 다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대에는 그 차이가 상당히 컸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이상을 다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표 11-6> 성 및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성/연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초급대	대학 이상
남자							
1980	69.9	88.5	66.7	62.1	67.1	66.9	72.4
1985	63.2	87.3	68.2		69.2	70.6	67.0
1990	55.5	81.2	78.6		71.5	76.1	73.5
1995	54.7	78.7	78.0		78.9	80.0	77.0
2000 ^a	49.4	68.3	67.6		72.2	71.5	73.6
2000 ^b	53.9	72.7	71.4		75.5	75.5	76.5
여자							
1980	41.8	47.5	28.6	26.4	36.3	43.0	25.6
1985	34.1	43.9	24.7		28.2	38.3	24.7
1990	29.8	43.4	31.4		31.9	41.6	32.7
1995	31.2	46.3	37.8		36.8	47.2	39.8
2000 ^a	28.7	43.3	40.7		37.4	45.0	41.7
2000 ^b	33.8	49.4	47.6		44.8	52.3	48.1

주: 2000^a와 2000^b의 설명은 <표 11-4>와 같음.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전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셋째, 1980년 자료에서 실업고등학교에 다닌 사람들이 인문고등학교에 다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남성의 경우(67.1%: 62.1%)보다 여성의 경우(36.3%: 26.4%)에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1980년과 2000년을 보면, 4년제 대학 이상을 다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년 동안 증가했는데, 여기서도 그 증가의 폭이 남성들(4.1%)보다는 여성들(22.5%)에게서 훨씬 크다.

교육정도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1980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저임금노동이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경제구조가 정보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교육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현저해졌음을 알 수 있다

5.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차이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배우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배우자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를 반영한다(〈표 11-7〉 참조). 다음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 범주는 이혼자이며 미혼자, 사별자의 순서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유형은 어느 해에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성역할은 결혼과 더불어 여성을 경제적 책임에서 면제해주고 그 대신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결혼과 직장에 대한 여성들의 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관념이 바뀌고 있음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까지는 미혼여성들이 유배우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유배우 여성

〈표 11-7〉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연도	남자					여자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80	74.7	90.3	45.5	84.8	50.0	38.5	36.2	32.1	63.3	46.0
1985	74.1	91.4	43.8	85.1	45.6	33.1	31.1	28.5	60.9	39.2
1990	73.8	90.4	42.7	86.2	44.7	34.2	31.0	28.4	70.7	42.9
1995	77.6	91.0	46.7	88.1	51.3	38.9	36.8	30.3	70.2	47.2
2000 ^a	71.2	85.2	39.0	75.6	43.3	39.3	40.9	27.5	60.3	39.8
2000 ^b	74.7	87.5	44.7	83.2	48.9	46.1	47.7	33.6	72.3	46.7

주: 2000^a와 2000^b의 설명은 〈표 11-4〉와 같음.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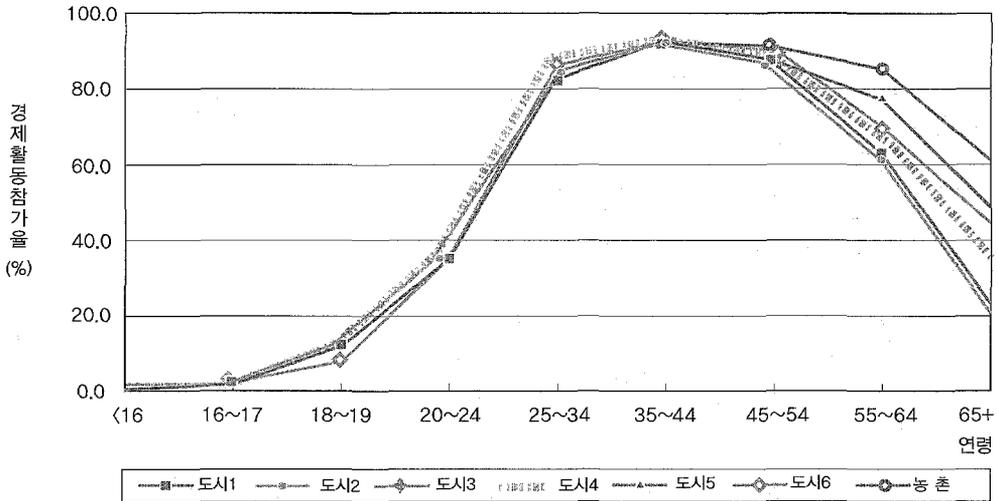
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기록되고 있다. 이혼한 여성들은 항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별한 여성들은 항상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혼한 여성들과 사별한 여성들은 모두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인데 경제활동에서 서로 상당히 대조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6. 거주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개인의 경제활동은 위에서 살펴본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개인적 조건들뿐만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거주지의 도시규모와 도시-농촌 구분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거주지 이동이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남녀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자료에서 보면, 도시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도시를 인구규모별로 거대도시, 대도시, 중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극소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을 그려보면, 남성 경제활동의 정점을 이루는 35~44세에서는 도시규모별로 경제활동참가율에 별 차이가 없지만, 18~1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대도시나 극소도시

〈그림 11-1〉 도시규모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주: 1) 도시1: 거대도시(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2: 대도시(인구 100만~500만 명); 도시3: 중도시(인구 50만~100만 명); 도시4: 중소도시(인구 20만~50만 명); 도시5: 소도시(인구 10만~20만 명); 도시6: 극소도시(인구 10만 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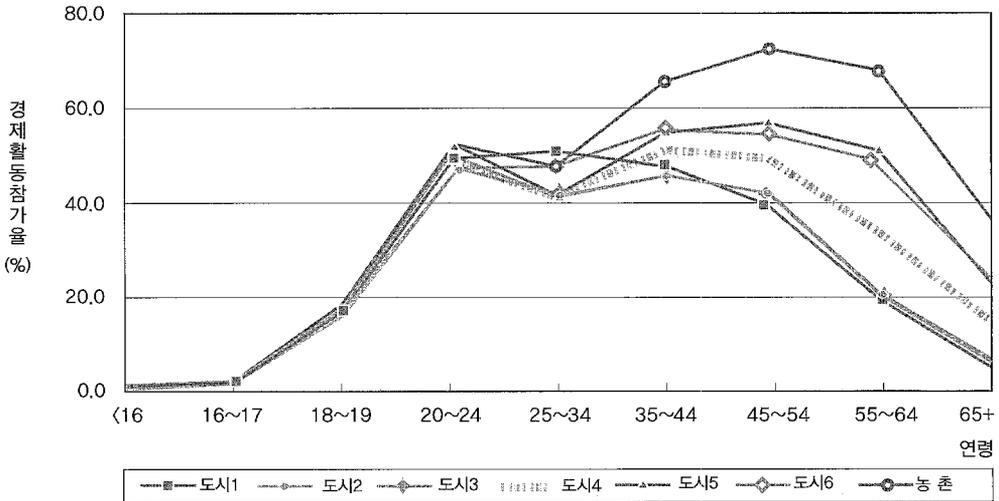
2) 농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의 목적으로 첨가했음.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보다는 중간 규모의 도시들에서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1-1〉 참조). 특히 도시규모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는 45세 이후이다. 이 연령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대도시와 대도시에서는 급격히 하강하는 데 비해 규모가 더 작은 도시들에서는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작은 도시들보다는 큰 도시들에서 남성들의 은퇴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 첨가시킨 농촌남성들의 곡선과 비교해보면 모든 도시의 남성들이 농촌남성들보다 일찍 은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더 흥미롭다(〈그림 11-2〉 참조). 일반적으로 20~24세까지는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다. 그러나 25~34세 여성들 중 거대도시 여성들과 극소도시 여성들은 다른 규모의 도시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도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여율(50.9%)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대도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림 11-2) 도시규모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주: 1) 도시규모에 대한 설명은 <그림 11-1>과 같음.

2)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의 목적으로 첨가했음.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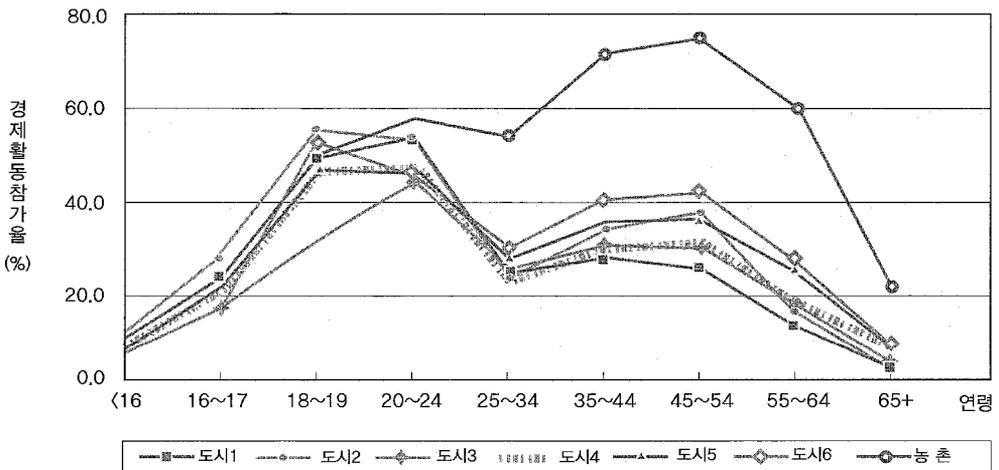
집단적으로는 M-곡선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M-곡선의 붕괴가 개인수준에서 취업의 연속성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여성들의 생애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극소도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44세 연령대까지 점점 높아지다가(55.2%) 하강한다. 중간규모 도시의 여성들은 여전히 M-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즉 25~34세에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도시규모에 따라 35~44세, 또는 45~54세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한 후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45세 이후에는 거대도시 여성들이 가장 낮은 비율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소도시와 극소도시 여성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규모의 도시들에서 3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3>에서 1980년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곡선들은 2000년의

곡선들과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규모에 관계없이 전형적인 M-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도시규모별 차이를 보면, 18~19세 여성들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52.5%)을 기록하였는데 비해 20~24세 여성들은 거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51.4%)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극소도시 여성들이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5세 이후의 여성들 중에는 거대도시 여성들이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두 그림의 곡선들이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1980년에는 18~24세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고 35~54세 여성들이 그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비해 2000년의 작은 도시들에서는 3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그림의 곡선들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은 장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작은 도시들에

〈그림 11-3〉 도시규모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80



주: 1) 도시규모에 대한 설명은 〈그림 11-1〉과 같음.

2)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의 목적으로 첨가했음.

자료: 경제기획원(198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는 높게 나타나고 거대도시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농촌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도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훨씬 높다(〈표 11-8〉 참조).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훨씬 크다. 예를 들면, 1980년에는 도시여성들 중에는 28.1%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농촌여성들 중에는 5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그 차이는 줄어들고는 있으나 2000년에도 그 차이가, 측정방법에 따라, 13.5%(2000^b) 또는 16.2%(2000^a)로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일반화에서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35~44세 도시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 이후 농촌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거나 비슷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예외는 19세 이하 여성들이다. 19세 이하 여성들 전체를 보면, 1980년이래 계속 도시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게 기록되고 있다. 특히 18~19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이런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거주지 이동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는 인간자본론,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가족자원이론, 성역할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과 많은 경험적 연구들의 대상이 되어 왔다(Sjaastad, 1962; Mincer, 1978; Shihadeh, 1991; Bielby and Bielby, 1992). 거주지 이동은 개인별 이동과 가족이동으로 구분되는데 인간자본론은 개인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거주지 이동이 이동자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킨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가족자원이론, 성역할이론 등은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의 이동에 관심을 가진다. 이 이론들은 거주지 이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주로 가장이며 이동은 가장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지만 아내는 성역할 규범에 따라 가족을 위해서 개인의 발전을 희생하는 입장임으로 아내의 경제적 활동은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인구센서스 2000년도 자료에서는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현 거주지 등 네 시점에서의 거주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점들간의 거주지들이 시·군·구의 경계선을 넘으면 거주지 이동으로 정의하고 거

〈표 11-8〉 도시-농촌 구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a	2000 ^b
남자						
도시	69.5	70.0	73.1	77.0	70.2	73.9
농촌	75.3	74.3	75.7	81.0	76.0	78.5
여자						
도시	28.1	24.9	29.7	36.5	37.2	44.3
농촌	50.4	45.8	47.0	52.5	53.4	57.8

주: 2000^a와 2000^b의 설명은 〈표 11-4〉와 같음.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주지 이동횟수를 계산하였다. 〈표 11-9〉는 거주지 이동횟수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준다. 거주지 이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거주지 이동횟수가 많은 남성일수록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과 경제활동의 관계가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서는 거주지 이동횟수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비해 농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거주지 이동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거주지 이동횟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는, 농촌여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 때는 정비례관계에 있다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정비례 관계가 약화되거나 무관계로 변하고, 연령이 더 높아지면 반비례관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관계가 변하는 연령은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남성을 보면, 도시에서는 34세까지 거주지 이동횟수가 많은 사람들이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35~54세의 남성들에게서는 여전히 정비례관계가 보이지만 많이 약화되어 있고, 55세 이상으로 가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비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는 24세까지 분명한 정비례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25~44세에서는 정비례관계가 많이 약화되고 곡선관계로 변하여 이동횟수가 2번까지는 이동횟수가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지만, 이동횟수가 3번인 사

〈표 11-9〉 거주지 이동 횟수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

(단위: %)

거주지 이동횟수	연령								
	전체	16~17	18~19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도시									
남자0	60.4	1.7	11.0	34.7	80.5	91.4	87.8	73.3	49.1
1	71.2	2.4	14.2	37.9	85.3	94.1	89.2	63.3	23.3
2	79.9	3.8	18.9	43.1	90.6	95.2	89.5	62.6	17.8
3	81.1	10.1	22.7	49.8	90.6	93.6	89.2	65.7	14.2
여자0	38.8	1.4	15.7	47.5	51.9	52.6	51.8	47.7	24.2
1	38.8	1.9	17.1	49.2	45.2	47.9	43.2	25.3	9.1
2	36.1	2.8	21.0	49.3	37.7	45.7	40.7	18.5	3.5
3	38.5	8.0	21.6	49.3	39.4	44.9	42.9	19.9	1.9
농촌									
남자0	75.7	1.4	16.3	48.0	87.2	93.5	93.6	88.4	67.8
1	73.7	8.2	19.3	45.1	90.1	94.5	89.8	77.9	47.8
2	80.8	6.8	18.8	49.3	92.9	95.0	89.2	69.2	30.8
3	83.5	-	25.0*	53.4	90.2	94.0	83.7	74.3	40.0*
여자0	56.1	0.9	15.2	57.7	55.1	72.0	78.0	76.3	42.2
1	53.5	2.3	20.9	46.2	48.8	65.2	69.5	63.4	34.0
2	40.3	2.1	22.2	45.2	37.0	54.0	52.2	36.6	11.4
3	36.4	20.0*	46.2*	40.9	33.7	41.5	47.2	35.0*	4.8*

주: * 표본 사례수 30 미만임.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람들은 이동횟수가 2번인 사람들보다 약간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45세 이상에서는 반비례관계를 보여주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비례관계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을 보면, 도시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층에서는 거주지 이동횟수가 높은 여성들이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24세에서는 두 현상간의 정비례관계가 많이 약화되어 거주지 이동횟수별로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5세 이상에서는 두 현상간의 반비례관계가 뚜렷하여 거주지 이동횟수가 많은 여성들일수록 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심화되고 있다. 농촌여성의 경우에는 19세까지는 정비례관계를 보여주고, 20세 이후에는 반비례관계를 보여주며,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비례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주지 이동횟수와 경제활동참가율 간의 반비례관계가 뚜렷해지는 연령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앞당겨지는 것은 농촌여성들이 도시여성들보다 결혼을 더 일찍 하기 때문일 것이다.

7. 노동력 생명표

노동력 생명표는 생명표의 원리를 이용하여 연령집단별로 노동력으로의 진입 시기 및 그 규모, 그리고 노동력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확률의 형태로 계산해 놓은 것(권태환·김두섭, 2002: 329)으로서 노동력의 연령구조, 노동력으로의 순진입률과 순퇴직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수급상황, 노동력의 구조 및 변동추이, 그리고 특정연령에서의 평균노동기대여명 등을 알 수 있어 인구·보건·고용정책을 세우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박원란, 2001).

우리 나라의 노동력 생명표는 김정근 외(1977), 이인모(1988), 조진만(1990), 김형석(1999), 박원란(2001), 권태환·김두섭(2002), 그리고 장지연·호정화(2002)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 노동력 생명표 작성방법 또는 OECD/ILO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평균노동력여명은 일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장지연·호정화(2002: 13)에 의하면, 15세 남성의 평균노동력여명은 1987년의 37.4세에서 1999년에는 39.5년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25.4세에서 27.8세로 증가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99년 현재 15세 남성은 약 40년, 여성은 약 28년의 노동력여명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력생명표 작성법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라는 경향률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단일최빈수곡선 형태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35~39세라고 한다면 35~39세를 정점으로 그 이전의 연령에서부터 35~39세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이 연령대가 지나면 점차적

으로 감소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 연령대 이전에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인구에서 퇴출하지 않으며 이 연령대 이후에는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없고 퇴출은 사망과 퇴직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일생동안 노동시장에 단 한번 진입하고 단 한번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런 전제 아래 작성되는 노동력 생명표는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하는 인구가 많을 수록 현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심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35세 이전에 결혼과 자녀출산·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탈퇴가 일반화되어 있는 M-곡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전통적 노동력 생명표는 여성들의 노동력 생명표를 작성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노동력 생명표를 작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증가-감소 생명표(increment-decrement life table)의 작성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증가-감소 생명표는 실제의 사건 발생률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며 서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방법이 노동력 생명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Hoem and Fong, 1976; Schoen and Woodrow, 1980: 298). 증가-감소 생명표는 두 시점간의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입직, 이직, 퇴직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므로 전통적 방법이 사용하는 전제들이 불필요하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 생명표를 만드는 데에도 적절하다.

개인이 일생에 경험하는 입직, 이직, 퇴직 등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해 오면서 더 잦아지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입직, 이직, 퇴직 등이 자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공식화하는 말이다. 또한 개인들이 전일제 고용, 시간제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 등 다양한 경제활동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러한 복잡한 경제활동행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증가-감소 노동력 생명표가 전통적인 노동력 생명표보다 사회정책을 세우는 데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Hoem and Fong, 1976; Schoen and Woodrow, 1980). 증가-감소 노동력 생명표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개인들의 경제활동행위의 변화를 알려주는 시계열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과거의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들을 첨가하여 현실을 좀더 잘 반영하는 노동력

생명표를 작성함으로써, 경제활동행위가 점점 복잡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인구·보건·노동관련 정책들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인구센서스에 포함된 구직자들의 즉각적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다면, 1980년의 38.5%에서 2000년의 46.1%로 증가했다.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증가를 분석해 보면 이 기간에 증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6% 중 대부분(6.9%)은 각 연령집단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에서의 성역할 및 자녀양육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에서의 위치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은 그 여성이 속한 가족에서의 위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먼저 도시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들과, 가구주와 가족적으로 무관하고 자신의 생계를 벌어야 하는 '기타 동거인'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준다는 점이다(〈표 11-10〉 참조). 두 번째로 눈에 띄는 현상은 아내, 딸, 며느리의 위치가 연령대에 따라 경제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세 미만 여성들을 보면, 자녀 또는 손자녀(손자녀의 배우자인 여성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인 여성들이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가족구성원의 배우자가 되는 여성들(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은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구주의 딸들과 손녀들은 학교에 다니는 데 비해 가구원과 결혼해서 들

〈표 11-10〉 가구주와의 관계 및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단위: %)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전체	<20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도시								
(1)	51.9	31.6	64.1	74.2	69.6	59.8	38.6	17.5
(2)	37.3	32.7	30.5	32.0	44.5	40.8	28.4	21.7
(3)	32.6	6.1	46.7	67.5	54.6	43.4	25.0	0.0*
(4)	43.4	17.9*	27.8	41.7	53.5	50.4	29.4	18.8
(5)	21.2	6.0	47.3	58.0	50.5	-	-	16.7*
(6)	56.5	24.1	60.0	69.9	54.6	34.6	14.9	5.0
(7)	44.8	14.2	53.0	75.5	57.1*	50.0*	0.0*	0.0*
(8)	46.8	17.8	59.7	73.7	55.0	43.8	24.3	4.0
(9)	57.4	44.1	61.3	77.6	58.0	61.7	35.3	17.0
농촌								
(1)	56.5	23.6	61.0	78.6	76.3	77.2	71.7	39.5
(2)	62.7	36.4*	28.0	39.9	64.9	72.4	73.3	60.0
(3)	30.2	5.0	57.7	68.1	50.4	38.9*	44.4*	66.7*
(4)	52.3	11.8*	25.3	49.8	65.2	76.9	68.0*	60.0*
(5)	14.4	5.8	73.3	50.0*	75.0*	-	-	-
(6)	47.5	20.0*	57.1	56.7	51.4	22.2*	25.0*	30.0*
(7)	36.2	8.0*	83.3*	71.4*	-	-	-	-
(8)	33.6	16.0*	65.0*	45.5*	72.7*	25.0*	42.9*	11.8
(9)	60.1	34.5	71.8	86.4	88.5	67.7	54.9	12.5

주: 1) * 표본규모 30 미만임.

2) ** 가구주와의 관계: (1)가구주, (2)가구주의 배우자, (3)자녀, (4)자녀의 배우자, (5)손자녀·그 배우자, (6)형제자매·그 배우자, (7)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8)기타 친인척, (9)기타 동거인.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어은 여성들은 같은 연령층임에도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듯하다. 이 연령층에서는 가구주들보다 가구주의 아내들이 약간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20~34세의 연령층에서는 가구주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가구주의 딸들은 상당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5~34세 연령층에서 가구주의 아내와 며느리의

입장이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잘 비교되고 있다. 가구주의 아내들의 경제활동참가율(32.0%)은 다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훨씬 낮는데 같은 연령대의 며느리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7%로서 가구주의 아내들보다 비교적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어머니가 가사를 돌보아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장년층인 45~64세 연령층에서는 며느리들이 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사를 돌보아주는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며느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데 비해 친정에 사는 이 연령층의 딸들은 친정의 가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은 모든 농촌 여성들 중 가구주의 배우자가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한 여성들은 '기타 동거인'인 여성들이고 가구주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현상은 가구주의 아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가구주나 '기타 동거인'인 여성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와 다르다는 것이다. 가구주와 '기타 동거인'인 여성들의 경우, 20세에서 64세까지의 여성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의 여성들은 극히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구주의 배우자들의 경우를 보면, 34세까지의 여성들은 비교적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35세 이상(65세 이상의 연령층을 포함)의 여성들은 상당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남편과 같이 사는 노년기 여성들은 농사일을 남편과 같이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농사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연령이 높아서 노동력을 파는 농업노동자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딸과 며느리의 위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인 20~34세의 연령에서는 딸들이 며느리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장년층인 45~64세 연령에서는 며느리들이 딸들보다 훨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파생되는 이런 현상은 도시에서와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 여부, 자녀들의 수, 자녀들의 연령, 자녀들과의 동거여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녀의 가치, 여성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 내 자녀양육 담당자의 수, 자녀양육을 보조해주는 사회적 기관들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고 있고, 더욱이 1980~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들이 자녀에 관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총출생아 수, 동거자녀(아동) 수, 그리고 아동보육방법을 중심으로 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총출생아 수 및 동거자녀(아동) 수와 여성의 경제활동

먼저 도시를 보면, 총출생아 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가구주인가 아니면 가구의 배우자인가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들을 보면,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들이 상당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령범주별로 보면 20~34세가 가장 높고(87.3%), 다음이 35~44세(68.7%)이며 45~54세가 가장 낮다(54.7%). 그러나 20~34세 가구주들 중 자녀를 1~3명 낳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45~54세 가구주들 중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약 60%)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배우자들을 보면, 자녀를 출생하지 않은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은 아주 저조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점 활발해져서 20~34세가 14.1%, 35~44세가 16.4%, 그리고 45~54세가 29.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서 출생아 수가 많은 배우

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을 보면, 출생아 수가 1~3명인 여성들의 경우 가구주들이 배우자들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34세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여 가구주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6%인데 같은 연령의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이다. 이보다 높은 연령층에서는 가구주들과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35~44세에서는 가구주들이 76.9%, 배우자들이 62.9%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45~54세에서는 가구주들이 75.3%, 배우자들이 66.6%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구주들과 배우자들 모두 총출생아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거자녀(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아동)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보면, 도시의 경우, 가구주이건 배우자이건 모두 44세까지는 자녀(아동)수가 적을수록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45~54세 여성들은 그 반대로 가구주들과 배우자들 모두 자녀(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농촌 자료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거자녀(아동)가 없는 여성들(가구주들과 배우자들 모두)이 동거자녀가 있는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이 어린 전학령기의 동거자녀(아동)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이건 배우자이건 모두 동거자녀(아동)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보육상태

앞의 <표 1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에 '즉각적 취업가능성'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는 3.5%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6.8%로 여성이 남성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들이 자녀양육 책임 때문에 직장을 찾아도 즉각적으로 일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인구센서스 2000년도 자료에 포함된 아동보육방법(2가지)을 분석해 보면 미취업여성들과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방법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들(20~34세)이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아내인 2·3세대 부모-자녀 가구들의 전(前)학령기 아동보육현황을 보면 미취업여성들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자신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비해 취업여성들은 자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직업(예: 소매업)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어린이 집 및 기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그리고 2차 보육방법으로는 유치원, 학원, 그리고 어린이 집 및 기타 보육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학원의 이용도는 미취업여성들이 취업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데 비해 어린이 집 및 기타 보육시설의 이용도는 취업여성들이 미취업여성들보다 훨씬 높다. 또한 취업여성들은 놀이방을 미취업여성들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여성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데 비해 취업여성들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좀더 자유로운 어린이 집이나 기타 보육시설 또는 놀이방을 선호하기 때문인 듯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44세 여성들의 경우에도 취업여성들과 미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미취업여성들은 주로 스스로 자녀를 돌보거나 학원에 보낸다. 취업여성들은, 직업의 특성상 스스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과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비슷하다. 그리고 조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아주 미미하고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자녀가 '혼자 또는 아동끼리' 낯시간을 보내게 두는 비율은 취업여성들이 미취업여성들보다 훨씬 높다.

요약하면, 미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몰두할 수 있는 데 비해 취업여성들은 취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직장일이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취업여성들은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어린이 집 및 기타 보육시설, 또는 놀이방을 이용하고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혼자 또는 아동끼리 놀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비교적

많게 된다. 자녀보육방법에 있어서 미취업여성들과 취업여성들의 이러한 차이는 자녀양육이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은 자녀양육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은 1970년이래 도시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어왔지만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여기서는 ILO가 제시하는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생산단위는 ① UN 국가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rev. 4)에서 가구부문(household sector)에 속하며, ② 시장을 위한 생산단위로서, ③ 비법인 기업이고, ④ 가구회계와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체계를 갖지 않으며, ⑤ 피고용자들의 수적 규모가 작고, 잠정적 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고용관계는 비법적,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비공식부문은 불법, 지하경제와는 구분된다.

비공식부문 인구는 조사 준거기간 동안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위에서 언급한 생산단위 또는 사업장(establishment)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고용주, 피고용자, 가족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적으로 비공식부문에만 종사하는 사람들과 공식부문-비공식부문 모두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특정 비공식부문 기업과 사전 계약에 의해 일하거나 상품/용역을 제공하지만 그 기업의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외주근로자들은 비공식부문에 속한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예를 들면 의사, 법률가,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중에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비공식부문에 포함한다. 특정 가구와 계약을 맺고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은 국가 사정에 따라 비공식부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며, 국제적 비교를 위해 별도의 하위범주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에서 제외되는 가내서비스, 비시장 생산, 그리고 농업활

동은 공식-비공식 부문의 구분과는 별도의 범주로 설정한다(ILO, 1993: 7).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추정하는 ILO방법(Gilbert, 2001: 54-59; ILO, 2002: 132-135)에 따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공식부문을 추정하였다. 비공식부문은 도시에서의 경제활동 현상으로 간주되므로 도시노동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① 우선 취업자들 중 고용원 없는 자영자들, 무급가족종사자들,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비공식부문이 분명히 아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 ③ 다음에는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들이 소규모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 취업자들 중에서 위의 ①과 ②에 속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사기업 종사자들) 중에서 1~4명을 고용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2001년 4월에 실시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참고하여 추출해낸다.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용원 없는 자영자들, 무급가족종사자들,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전체 취업자들의 40.8%이다.

비공식부문 종사자들 중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성별 분포를 알아볼 수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자들 중 남자가 72.2%, 여자가 27.8%이다. 무급가족종사자들은 대부분(89.4%)이 여자들이다.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대부분(80.2%)이 여자들이다.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은 성별로 구분해 볼 수 없지만, 산업별로 중요 산업들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18.0%이고, 도소매업이 전체의 34.0%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24.0%로서 이들 세 산업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V. 토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장에서는 193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역대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노동력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1930년부터 1975년까지는 역대 인구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5회에 걸친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의 문제, 노동력 구조(연령, 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거주지 등)의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노동력 생명표에 관한 논의, 여성의 경제활동과 성역할 및 자녀양육과의 관계, 비공식부문의 추정 등이다.

노동력의 시대적 추이를 보면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측정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70~75% 범위 내에서 증감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남성들에게 경제활동은 성역할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의 모든 남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시대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하게 증가해 왔듯이 앞으로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정보산업체제로의 이행이, 단기적으로 볼 때, 남성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양식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서 인력교체, 부분고용, 임시고용 등이 증가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잦은 기술혁신이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노동조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유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전체적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두 배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 이후의 자료에서 보면,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거주지역, 거주지 이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하고 있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가사와 육아에 한정되어 경제활동이 억제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에 의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마련됨에 따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산업화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에 젊은층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남녀평등을 향한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며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는 작업을 하였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이외에 사회참여라는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은 새로운 역할의 핵심으로 점점 자리잡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한편에서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요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 기간을 단축시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조성해 주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증가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수요자의 취향에 민감한 고급 여성전문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요인들이 맞물려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켜 온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고찰할 때 심각한 문제점으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성별직종분리 현상이다. 앞의 장에서 제시된 자료들에 나타난 수직적 성별직종분리 현상을 보면, 여성들은 특정 하위 직업군에 집중되어 2000년에는 전체 여성들의 66.3%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 네 종류의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는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전체 여성들의 0.9%였으며,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15.7%에 불과했다.

또한 수평적 성별직종분리 현상은 직업별 성비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서비스업이 59.1로서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업별 성비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1, 교육서비스업이 7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52.0, 가사서비스업이 9.5로서 여성들이 특정 산업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공식부문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고,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비공식부문의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여성의 성

역할과 자녀 양육의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가주주, 아내, 며느리, 딸 등)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또한 자녀수와 양육의 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① 수직적·수평적 성별 직종분리현상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관행의 철폐, ②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노인보살핌의 부부공동분담, ③ 아동보육과 노인보호를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시설들의 증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성별직종분리 현상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노인보살핌을 책임지는 여성들의 성역할이 그 핵심이 되고 있다(Anker, 1998: 14-37). 따라서 위의 ②와 ③은 노동시장의 성차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된다. 이 외에 ㉠ 여성을 위한 고용할당제 및 고용평등 시책들의 시행, ㉡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의 증가, ㉢ 사회에 만연하는 성별 고정관념들, 특히 직업능력·직업선호와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들(예: 여성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잘 보살피니까 간호직에 적절하다. 여성은 지도력이 부족하니까 고위직에는 부적절하다.)의 시정 등이 노동시장의 성차별관행을 없애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노동의 유연화 현상이 심화되면 가장의 불규칙한 취업활동만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며 다른 가족원들, 특히 아내의 취업이 중요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은 노동력 부족 현상, 노동의 유연화 경향,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 현재 노동시장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이 될 뿐 아니라 억압적 성역할에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증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장들의 취업불안정이 야기하는 개별 가정경제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다목적적 정책이 될 것이다.

노동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되어야 할 것은 시장경제 밖에서 하는 여성들의 노동(예: 가사노동, 자원봉사,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노동 등)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GNP의 1/3 내지 1/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Lazo, 1999: 4). 우리 나라에

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여성들은 이러한 비시장 노동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무급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 백

제12장 고령화와 노인인구

박 경 속

I. 머리말

최근 고령화 및 노인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 사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빨라서, 적절한 노인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고령화는 기회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피부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부담은 심화되며, 근로의욕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 연구자는 노인 의료비의 급상승은 의료보험 재정에 주요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많은 노인이 빈곤, 질병, 고립, 소외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쇠약하며, 가족 혹은 사회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덧 노인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며, 사회복지의 주요 목표 집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들만으로도 고령화, 노년기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쇠도하면서, 역설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방법론 자체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전제하고 있다는 자기 성찰적 반성도 일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사회, 경제, 노동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외생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그 사회의 주요 제도와 밀접한 관계에서 구성되고 변형된다. 따라서 고령화 자체를 선형적으로 문제로서 재단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조직환경의 어떠한 배경에서 고령화가 사회체계의 긴장과 불안을 심화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사회의 조직 원리와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 변혁의 과제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필자가 여기서 수행하려는 연구가 지금까지의 노인연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가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인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노인문제를 가족, 노동, 지역문제와 같은 현 우리 사회의 중심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각 절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노인 연구의 기존 동향과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3절 이하에서는 지난 20년 간 노인 인구의 주요 변화를 인구, 가족, 노동,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인구센서스 보고서와 1980년에서 2000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 혹은 고령자 집단의 연령 기준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고령화, 고령 사회의 기준으로 1960년대 UN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구성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고령인구로 정의된 것은 당시 여러 선진 사회에서 임금근로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었던 상황과 관계가 깊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활동인구도 공식적으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추이와 관련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인부양비도 현역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기대수명이 훨씬 개선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를 전망할 때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특성의 변화에 맞게 고령자의 정의도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에서 그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의 연령은 상이하다.¹⁾ 고령자를 위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수혜기준

으로 정한 연령 기준의 차이는 고령자 복지, 노동정책의 연계성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복지혜택이나 노동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연령기준이 고령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령차별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고령자의 공식적인 연령 규정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연령 기준은 몇 세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잠정적으로 고령자의 연령기준에 대해 다소 유보적 태도를 지니고 싶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에 초점을 두어, 인구, 가족, 거주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불가피하게 공식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인구를 분석한 부분도 있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특성은, 노동시장의 조기 정년 관행을 고려하여 55세 이상 인구로 연령층을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II. 노인연구의 기존 동향

노인 관련 주제는 가족학,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보건학에 걸쳐 학제간 연구가 활발한 분야에 속한다. 노인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는 전문 학회와 연구기관은 이미 1980년 이전에 조직되었다.²⁾ 그러나 고령화, 노인 문제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가 아닌가 사료된다. 우리 사회는 1980년대에 0~14세 유소년층 100명에 대해 65세 노인은 15명 정도의 연령구조를 유지하여, 고령화를 우려할 특성을 지니지 않았다. 비록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의 장기적인 결과가 우려되었지만, 장래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1)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로 연금 수혜자격은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시기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자활대상자는 60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64세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64세 이하로 정하였지만, 60세 이상에서 재취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 관련 정책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노동정책은 55~64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구의 분리와 비연계성의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이나 65세 미만 고령자의 복지 정책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2) 1979년 한국노년학회가 발족되었으며, 다음 해에 노인 연구 전문학술지인 한국노년학이 발간되었다. 또한 사단법인 민간연구기관으로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1973년 발족되었다.

사회적 인식과 대응이 존재하기에는 당시 연령구조가 너무 젊었고 당면한 사회 문제가 산재하였다. 또한 그 때까지 노인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비록 이러한 이념과 상치된 변화가 가족, 세대관계에 나타나고 있었지만 소수의 아노미적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인구특성을 띠고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966년 3.7%에 그쳤지만, 2000년에는 7.3%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9.9%, 2020년에는 7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변화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혁명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노인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1990년대 이후 크게 고조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 학계, 민간 조직이 보이는 관심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가를 의심할 만큼 단기간에 급상승하였다. 그 동안 수행된 연구 성과물은 풍요 속의 빈곤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다(〈표 12-1〉 참조).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건강, 심리 부문과 가족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또한 마치 암묵적으로 상호 표절을 인정하듯이 내용의 중복과 유사성이 크다. 복지과 의료 부문을 제외하면 노인문제를 여타 사회제도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접근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빈곤한 노인의 욕구 분석에 초점 지워져 있다. 근대화론, 교환론, 상호작용론이 노인 연구의 주요 이론 틀로 이용될 뿐, 노인 연구에 있어서 이론의 빈곤화 문제는 노인문제와 계급, 성, 이데올로기, 조직과의 깊은 연결을 밝히는데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구자순, 1992; 김혜순, 1989; 성규탁, 1989; 현외성, 1987).

연구 내용이 몇 개의 주제로 편향된 것은 노인 연구 자료의 불충분한 상황에도 그 원인이 있다(〈표 12-2〉 참조). 정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노인을 주제로 실시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가 유일하다. 이 밖에 노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많은 연구가 개별 연구집단의 직접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공유나 축적을 기대하기 힘들다.

비록 노인을 주제로 실시된 조사는 아니지만, 노인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주

〈표 12-1〉 노인연구의 주요 영역, 1980~2002

연도	총론	인구	노인 문제/ 근대화	노인 복지	지역 복지	가족/ 가족 주거/ 사적 부양	건강/ 노화/ 심리	교육/ 여가	경제	정치	성	기타
198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6												
2001												
2002												
소계	5	4	4	14	5	41	53	12	4	1	1	6

주: 본 집계는 『한국노년학』 학술지 중 일부 발행년도, 발행호에 게재된 논문에 기초하였으므로, 전체 집계분포와는 다를 수 있음.

〈표 12-2〉 노인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

자료	조사기관, 시기 및 대상	조사 영역
인구센서스	기관: 통계청 시기: 매 5년 전수조사, 대상: 조사시점 상주인구	가족: 가구원표,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자녀거주장소(2000년 총조사에 한함) 경제: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건강: 거동여부(2000년 센서스에 한함)
국민건강영양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기: 1998년 대상: 전국 일반가구 13,523	가족: 가구원표,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생활수준 경제: 직업, 종사상지위 건강: 이환여부, 장기활동제한, 의료이용,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행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기: 1994, 1998 대상: 센서스 조사구에 기초, 일반가구 9,355 가구와 조사된 가구 중 노인 2,335명 (1998년 기준)	가족: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자녀의 근접성, 자녀/형제/친척/친구와의 연락정도, 가구생활수준, 노후부양관, 부양의 교환 경제: 수입, 경제활동, 직업, 주요소득원, 지출 건강: 건강 및 의료 기타: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노동패널 조사	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시기: 1998년, 이후 매년 조사 대상: 전국, 비농촌지역 가구(5,000)와 15세 이상 개인 13,738명	가족: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가구소득수준 경제: 업종, 직종, 종사상지위, 수입 건강과 은퇴: 2001년 패널조사에 참가
도시가계연보	기관: 통계청 시기: 매월 대상: 전국 도시 거주 2인 이상가구 (약 5,000 가구 표본)	가족: 가구원에 관한 사항 경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소득, 지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관: 통계청 시기: 매월 대상: 전국 상주인구 중 15세 이상	가족: 가구원에 관한 사항, 혼인상태 경제: 취업, 구직, 전직에 대한 다양한 항목

요 자료는 〈표 12-2〉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및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가구원표이다. 가구원표는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정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조사이므로 중장기적인 가족관계, 경제활동 변화를 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이다.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강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가 각각 주관하였던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를 통합하여 1998년 새로이 실시되었다. 가구원표를 이용하여 가족, 경제생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환 여부, 장기활동제한, 의료이용, 건강 행위 등 건강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추천하고 싶다. <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의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자료이다. 처음 조사는 1998년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노동, 소득, 은퇴과정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2001년 실시된 조사는 은퇴와 건강에 관한 특별주제를 포함하여 건강, 은퇴의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도 패널조사로서 통계청이 매월 전국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료이며 취업, 구직, 전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가구 단위 소득, 소비수준을 연구하는 경우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Ⅲ. 노인 인구의 변화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노인 집단 내부의 성, 연령, 혼인 상태와 같은 주요 특성이 변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 몇 십 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3>에서 보는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집단은 74세 이하의 전기 노인(young-old)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차츰 전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old-old)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

〈표 12-3〉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 1970~2000

(단위: %)

연령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65~69	41.8	45.0	42.9	41.3	41.6	39.5	40.8
70~74	30.3	27.0	29.4	28.7	27.5	28.9	27.2
75~79	16.9	16.9	15.9	17.8	17.4	17.3	17.8
80~84	8.1	7.5	8.2	7.9	9.0	9.3	9.0
85 이상	2.9	3.6	3.7	4.3	4.4	5.0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j: KOSIS).

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의 비율은 1970년 72.1%, 1990년에는 69.1%, 2000년에는 6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비율은 1970년 27.9%, 1990년 30.9%, 2000년에는 32%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전개되면서 후기 노인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01c)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3.8%에서 2030년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자는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2-4〉에서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여자 100명 대비 남자가 6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비불균형은 심하다. 예를 들어, 2000년 현재 65세에서 69세 연령 집단의 성비는 75.9명이며, 75세~79세 연령집단에서는 61.1명, 80~84세 연령

〈표 12-4〉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남녀구성, 1980~2000

(단위: 여자 100명 대비 남자 수)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계
1980	72.5	61.5	47.8	36.4	26.9	59.5
1985	73.7	61.3	49.6	35.6	25.0	59.4
1990	71.6	64.5	51.3	39.1	24.9	60.0
1995	67.5	62.6	54.4	40.7	27.4	58.5
2000	75.9	61.1	54.3	44.9	29.8	61.8

자료: 통계청(2002j: KOSIS).

집단에서는 54.3명,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29.8명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성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성비불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고령자의 혼인상태는 성별로 차이가 크다. <표 12-5>를 보면, 2000년에 남자 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5분의 4 이상이지만, 여자 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배우자 비율이 남녀별로 차이가 큰 것은 남녀 생존율에 차이가 크고 주로 남편이 연상인 부부 연령구조에 비롯한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유배우자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즉 65세 이상 인구 중 유배우자 비율은 1970년 41.6%에서 2000년 52%로

〈표 12-5〉 65세 이상 인구의 성 및 연령별 유배우자 비율, 1970~2000

(단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65~69세	52.8	55.9	57.0	60.3	59.3	60.5	67.0
	70~74세	41.0	43.6	44.9	48.2	48.5	48.9	52.0
	75~79세	29.7	32.4	32.6	36.9	36.6	37.7	40.0
	80~84세	20.4	22.1	21.8	24.4	24.5	25.1	28.3
	85세 이상	13.3	14.8	12.7	15.7	13.1	13.4	15.3
	65세 이상	41.6	44.6	45.0	47.9	47.2	47.6	52.0
남자	65~69세	82.9	85.7	87.3	89.2	89.0	90.1	91.0
	70~74세	73.6	77.1	80.0	82.4	83.6	85.2	86.7
	75~79세	61.6	66.8	69.6	74.0	75.3	77.7	80.5
	80~84세	48.8	53.4	56.9	60.9	63.6	66.0	70.1
	85세 이상	35.6	39.8	41.2	46.7	47.5	50.5	53.2
	65세 이상	73.5	77.6	79.9	82.3	82.6	83.7	85.4
여자	65~69세	31.3	34.0	35.0	38.9	38.0	40.6	48.8
	70~74세	20.7	23.1	23.4	27.2	25.8	26.2	30.8
	75~79세	12.7	15.1	14.9	18.5	16.8	15.9	18.0
	80~84세	7.3	9.4	9.0	11.3	9.2	8.5	9.5
	85세 이상	4.4	6.5	5.0	7.8	4.5	3.3	4.0
	65세 이상	21.7	24.3	24.3	27.5	26.0	26.5	31.3

자료: 통계청(2002j; KOSIS).

〈표 12-6〉 65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 1990~2000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무학	63.7	53.3	44.3	44.7	32.5	23.0	75.1	65.5	57.5
초등	25.9	31.9	33.9	34.3	38.3	36.2	20.9	28.1	32.4
중학교	4.9	6.4	8.4	9.5	11.8	14.0	2.1	3.2	4.9
고등학교	3.3	4.9	8.0	6.3	9.1	14.4	1.5	2.5	4.1
대학이상	2.2	3.5	5.4	5.2	8.3	12.3	0.5	0.7	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j; KOSIS).

크게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73.5%에서 85.4%로 12% 정도 증가하였다. 여자 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같은 기간 21.7%에서 31.3%로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현 노인집단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다. 〈표 12-6〉을 보면, 2000년 현재 10명 중 8명이 초등 이하의 교육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여자 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10명 중 9명이 초등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록 대다수 노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육수준도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다.

IV.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1. 노인 가구 특성의 변화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는 노인인구 특성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권태환·박영진, 1995;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김정석, 2000). 〈표 12-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년 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뚜렷하다. 우선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

〈표 12-7〉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주와의 관계, 1990~2000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가구주	63.7	53.3	44.3	44.7	32.5	23.0	75.1	65.5	57.5
가구주의 배우자	25.9	31.9	33.9	34.3	38.3	36.2	20.9	28.1	32.4
가구주의 부모	4.9	6.4	8.4	9.5	11.8	14.0	2.1	3.2	4.9
배우자의 부모	3.3	4.9	8.0	6.3	9.1	14.4	1.5	2.5	4.1
기타	2.2	3.5	5.4	5.2	8.3	12.3	0.5	0.7	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 KOSIS).

우자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주의 비율은 1990년 44.5%에서 2000년 51.8%로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가구주 비율이 특히 크게 상승하였다.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 11.5%에서 16.2%로 상승하였으며, 이 또한 주로 여자노인 구성변화에 따른 것이다.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구주의 부모인 비율은 전체 38.4%에서 27.3%로 감소하였다. 남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자노인 중 가구주의 부모비율은 17.2%에서 12.4%로 감소하였으며 여자노인에서는 51.2%에서 36.4%로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가구구성은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에서 훨씬 더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노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노인가구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며 세대구성도 단순해짐을 반영한다. 〈표 12-8〉에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형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1990년 49.6%에서 2000년 3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남자노인 중 확대가족형에 속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37.0%에서 21.7%로 감소하였으며, 여자노인 중 해당 비율은 57.2%에서 36.4%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노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나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우선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노인은 1990년 16.9%에서 2000년 28.7%로 증가하였다. 남자노인 중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같은

〈표 12-8〉 65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의 세대구성, 1990~2000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인 단독가구	8.9	13.3	16.2	3.4	4.9	6.2	12.2	18.2	22.4
비혈연 가구	0.7	0.8	0.4	0.4	0.8	0.3	0.8	0.8	0.5
1세대 가구	16.9	23.3	28.7	29.4	39.9	45.8	9.4	13.5	18.1
2세대 가구	23.4	23.0	23.9	29.4	26.0	25.9	19.7	21.2	22.6
3세대 가구	47.6	38.4	29.9	35.9	27.6	21.2	54.7	44.7	35.3
4세대 가구	2.0	1.2	0.9	1.1	0.7	0.5	2.5	1.6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2j; KOSIS).

기간 29.4%에서 45.8%로, 1세대 가구에 속하는 여자노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9.4%에서 18.1%로 크게 상승하였다.

노인 혼자 거주하는 1인 단독가구 노인의 비율은 1990년 전체 노인의 8.9%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에는 16.8%에 이르고 있다. 남자노인 중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6.2%로 상승하였지만, 여자노인에서는 12.2%에서 22.4%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j; KOSIS).

대체로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남자노인에서,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여자노인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유배우, 무배우 노인 모두에서 자녀와의 동거율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여 유배우의 경우에는 부부 단독거주 노인의 비율이, 배우자를 사별하였을 때는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있는 남자노인에서는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별한 여자노인에서는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노인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특성

비록 현재에도 많은 수의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분명 과거에 비해 그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게

〈표 12-9〉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에 대한 로짓분석, 1980~2000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b	S.E.	b	S.E.	b	S.E.
성	남(기준: 여)	0.42	0.04	0.22	0.03	-0.09	0.02
연령	70~74	-0.11	0.03	-0.09	0.03	-0.15	0.02
	75~79	-0.01	0.04	0.13	0.03	-0.02	0.02
	80+(기준: 65~69세)	0.10	0.05	0.45	0.04	0.48	0.03
혼인상태	유배우(기준: 무배우)	-0.61	0.03	-0.60	0.03	-0.73	0.02
ADL장애	있음(기준: 없음)					0.44	0.04
교육수준	초등(기준: 중학교 이상)	0.13	0.06	0.26	0.04	0.13	0.02
취업상태	취업(기준: 비취업)	-0.84	0.04	-0.80	0.03	-0.47	0.02
5년간 거주지이동	이동(기준: 비이동)	-0.28	0.04	0.02	0.03	0.18	0.02
거주지	동	0.33	0.04	0.55	0.03	0.72	0.02
	읍(기준: 면)	-0.00	0.04	0.11	0.04	0.21	0.03
상수		1.47	0.07	0.52	0.05	-0.26	0.03
Pseudo R ²		0.04		0.07		0.08	
N		30,595		43,882		67,858	

주: ——— 친 계수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임. 회귀계수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비율(p)의 로짓값($\log(p/(1-p))$)의 크기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1980년, 1990년,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인식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와의 동거가 점차적으로 생활조건, 기회, 개인들의 가치, 태도에 따라 상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녀와 동거할 개연성이 높은가?

자녀와의 동거율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12-9〉 참조). 한편으로 연령효과는 노인집단 내부의 세대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증가한 결과에 따를 수 있다. 연령효과가 코호트효과 혹은 개인의 고령화(aging effect)효과를 반영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시계열적 자료와 종단적 분석을 종합할 때 가능하므로 현재의 연구 수준을 넘어선다.

혼인상태의 효과도 자녀와의 동거가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시

사한다. 유배우 노인에 비해 무배우 노인은 자녀와 동거할 개연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도 자녀와의 동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연령, 혼인상태 등이 노후 생애과정에 따라 변화되는 속성이라면, 교육수준은 노년기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된 속성이기 쉽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자녀와의 동거율에서의 차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가치, 태도, 혹은 경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대다수 노인의 교육수준이 무학 혹은 초등학교 수준인 코호트 특성을 전제할 때, 현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은 동 코호트의 일반 태도와는 대조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거나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졌을 개연성이 크다.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양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에 장애가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개연성이 크다. 또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이동이나 거주지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지난 5년 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개연성이 크다. 이는 다음의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노인이동의 원인이 주로 자녀와의 결합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살 개연성이 유의미하게 높다.

정리하면,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는 노후생활에 흔히 수반되는 신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의 필요, 부양에 대한 가치관, 자녀세대와의 지리적 접근 가용성,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석할 수 없었지만 자녀의 생활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무배우자이고, 건강에 장애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비취업상태에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특성이 강하다. 이는 혼인상태, 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이 노년기의 생활조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함축한다. 물론 이 분석은 단일 시점에서의 횡단적 조사에

기초하므로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3. 1인 단독가구 노인의 증가 요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 노인의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독거 가능성이 큰 노인의 구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독거 가능성을 조성한 요인들의 효과가 시기적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인가?

먼저 후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1980년에서 2000년 기간동안 독거율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거 경향을 조성한 요인으로서 그 효과가 시기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혼인상태, 거주지로 나타났다. 반대로 그 효과가 감소한 요인은 성, 연령, 취업상태, 거주지 이동이다. 따라서 이들 공변인의 효과변화를 종합해보면, 독거 경향을 조성한 요인의 효과가 시기적으로 크게 증폭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비록 무배우자 노인과 농촌노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혼자 사는 경향이 높지만, 다시 말하여 혼인상태, 거주지의 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지만, 이들 노인이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의 전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배우자 비율이 증가하였고 도시거주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듯이, 단독거주 경향이 낮은 노인집단의 구성비가 증가하여 왔다.

그렇다면 인구구성의 변화가 단독거주 노인의 증가 혹은 감소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였을까?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인구의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거주지 이동, 거주지의 구성분포는 변화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구성분포의 변화는 단독거주율을 증가 혹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연령분포에서는 점차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독거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유배우자 비율의 증가도 독거 노인의 비중을 감소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하의 노인비율이 감소한 것은 독거 노인의 구성비를 증가하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다. 도시거주 노인의 증가는 독거 노인의 구성비를 감소하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구성상의 변화가 단독거주율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목적,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해방법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기타카와의 분해방법(Kitagawa, 1955, 1964)과 이를 보완한 다스굽타의 분해방법(Das Gupta, 1978)을 이용하였다.

<표 12-10>에서는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분석한 각 요인들의 구성비 변화 효과와 구성비 변화를 통제하였을 때의 비율변화, 그리고 실제로 관측된 총변화의 크기를 요약하고 있다. 요인들의 효과가 모두 양일 때에는 요인들의 수치값을 해석하기가 쉽다. 이 때 각 효과의 값은 총변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요인이 양이 아닐 때는 해석이 좀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비율 변화 값이 총변화보다 크다면, 요인들 중 적어도 한 요인의 값은 음이다. 이 경우 음의 값을 띤 요인효과는 이 요인의 구성비 변화에 의해 상쇄된(은폐된) 비율변화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10>에 제시되었듯이 모든 분해방법에서 비율 효과의 값이 절대적으로 큰 수치이다. 이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구성변화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독거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요인분해 결과에서 총변화 값보다 비율변화 값이 큰 데, 이는 요인들의 구성비 변화가 비율변화를 다소나마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구성요인 중 독거율 변화에 가장 기여도가 큰 요인은 혼인상태이다. 제1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혼인상태의 변화는 전체 비율변화의 약 10%를 상쇄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시 말하여 지난 20년 간 유배율의 증가는 독거율 증가 효과의 약 10%를 상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를 통제한 제2요인 분해 결과에서는 혼인상태 구성변화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 다음으로는 거주지 변화효과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제1요인 분석에서 비율변화의 7.9%를 상쇄한 것으로 계산되며, 제2요인 분석에서도 비

〈표 12-10〉 1인 단독가구 노인비율 변화의 요인분해, 1980~2000

요인수	요인효과						비율변화	총변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거주지 이동	거주지		
1	0.004						11,998	12.01
		-1,346					13,353	12.01
			-1,061				13,064	12.01
				0,0478			11,939	12.01
					-0,033		12,025	12.01
						-1,035	13,040	12.01
2	-0,197	-1,553					13,759	12.01
	-0,006		-1,063				13,079	12.01
	0,036			0,073			11,876	12.01
	-0,008				-0,048		12,044	12.01
	0,004					-1,046	13,050	12.01
		-0,822	-0,524				13,352	12.01
		-1,048		0,311			12,723	12.01
		-1,409			-0,093		13,489	12.01
		-1,511				-1,193	14,718	12.01
			-1,070	0,052			13,006	12.01
			-1,069		-0,021		13,111	12.01
			-0,907			-0,847	13,757	12.01
				0,036	-0,044		11,996	12.01
				-0,138	+1,290		13,415	12.01
				-0,042	-1,019	13,048	12.01	

자료: 통계청(1980년, 1990년,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슷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의 효과는 좀 복잡하다. 제1요인분해에서 교육수준의 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육수준의 변화가 독거 노인의 비율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제2요인 분석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의 구성변화는 독거 노인의 비율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년 간

초등학교 이하 수준의 노인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독거 노인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변량 분석결과와 모순된다. 독거율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요인이 통제될 때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노인은 초등 이하의 노인에 비하여 혼자 사는 비율이 높다. 두 분석 사이의 차이는 교육수준과 밀접히 연관된 공변인인 혼인상태와 성 변인의 혼재효과(confounding effect)에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노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배우자 비율과 남성의 비율이 높다. 결국 상이한 교육수준 인구는 혼인상태, 성구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 요인의 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재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혼인상태를 통제된 상황에서 교육수준 효과가 크게 감소한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요컨대 상이한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집단의 혼인상태, 성별 차이는 교육수준의 실제 효과를 은폐하고 있다. 이들 공변인 요인들의 혼재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교육수준의 효과는 제1요인, 제2요인분해 결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독거 경향이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몇 십 년 사이 독거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노인 집단의 구성비 변화나 집단 내 차이 정도의 변화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이다. 정확히 말하여 노인인구집단의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 등의 인구구성분포의 변화는 독거율을 증가시킨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독거 경향은 거주지에 따라, 혼인상태에 따라, 연령, 건강, 취업생활의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인집단 내 차이가 전체 독거율 변화에 미친 영향 또한 미온적이다. 결국 인구구조상의 변화나 동일 코호트 내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주지와 같은 집단 내 차이는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여 독거율의 총변화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몇 십 년 간 독거 노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구성변화나 집단 내 차이와는 다소 무관한 사회 변동의 힘에 비롯하였다.

V. 경제생활

1. 노년기의 소득원과 소득수준

현재 노인의 소득수준은 매우 취약하다(김동배, 1999; 은기수, 2001b; 박경숙,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65세 이상 노인 중 전혀 소득이 없는 노인이 3.9%이며 50만원 미만인 노인은 74.8%에 이르고 있다(정경희 외, 1998).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소득원은 근로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세 명 중 두 명의 노인이 비동거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지원액은 평균 1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은 노인 자신의 근로소득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은 월 14.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주요 소득이 자녀와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듯이, 비근로 노인이나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대다수는 빈곤선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노년기 빈곤문제의 심각성은 사회보호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 14.1%에서 1999년 27.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보조 혹은 자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4.2%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2001).

이렇게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 노인집단의 고유한 세대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금 65세 이상인 노인 집단이 청장년기였을 때 우리 사회의 경제발달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다수가 소득 축적의 기회가 적은 농어업에 종사하였다. 노후에 이르러서는 노령연금과 같은 소득보완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집단의 비율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1995년 60세 이상 노인 중 노

령연금 수급권자의 비율은 0.9%에 불과하였다. 비록 2000년에는 9.3%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급권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보건복지부, 2001).

2. 노동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령분리³⁾

지난 20년 동안 고연령층의 경제활동 기여도는 증가하였다(〈표 12-11〉 참조).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5~39세의 청·중년층의 구성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전체 남자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에 10.4%이었지만, 2000년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여자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10.3%에서 17.1%로 증가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표 12-12〉에서 보는 것처럼, 고연령층 취업률 변화에 집단 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분석결과에 따르

〈표 12-11〉 경제활동참여 인구의 연령구성비의 변화, 1980~2000

(단위: %)

	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자	15~39	60.0	59.5	56.2	55.9	49.3
	40~54	29.6	30.1	31.0	30.0	35.3
	55 이상	10.4	10.4	12.8	14.2	15.4
	15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5~39	59.3	58.2	56.7	56.3	49.9
	40~54	30.4	30.1	29.2	28.0	33.0
	55 이상	10.3	11.7	14.1	15.7	17.1
	15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1g, 2002j; KOSIS).

3) 복지법 관련하여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같이 노동 관련 법규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55~59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법규나 노동시장내 정년관행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2-12〉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성별, 연령별 취업률, 1975~2000

(단위: %)

성	연령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15~54	60.2	52.1	50.2	52.0	56.3	55.8
	55 이상	39.5	37.4	38.7	37.7	42.1	38.8
	55~59	62.4	55.0	56.9	56.8	60.2	55.1
	60~64	45.8	43.5	45.6	42.6	49.4	45.9
	65~69	29.5	31.2	32.8	31.4	35.6	36.6
	70~74	13.4	17.4	19.5	19.3	24.8	25.4
	75~79	6.8	9.9	10.1	10.6	15.4	17.1
	80~84	2.5	4.4	4.1	4.9	7.4	9.3
85 이상	2.0	2.5	1.8	1.9	2.8	3.1	
남자	15~54	78.2	70.8	68.4	70.6	74.6	71.2
	55 이상	60.0	58.8	59.8	57.5	60.5	53.9
	55~59	82.5	76.4	78.3	77.9	80.0	72.2
	60~64	68.1	65.4	66.2	60.3	65.7	58.2
	65~69	47.1	51.0	52.0	48.4	50.1	46.9
	70~74	24.0	32.4	36.4	33.6	38.0	36.4
	75~79	13.3	19.7	21.8	21.5	27.5	29.3
	80~84	7.1	10.5	11.1	10.5	15.8	18.1
85 이상	5.5	5.5	4.9	5.3	6.6	7.7	
여자	15~54	43.0	34.3	32.4	33.8	38.5	40.9
	55 이상	24.5	22.0	23.8	23.7	28.5	27.4
	55~59	44.5	36.7	39.7	38.5	42.1	38.8
	60~64	27.8	26.1	29.4	29.3	36.2	35.1
	65~69	17.0	17.0	18.6	19.6	26.1	28.9
	70~74	7.3	8.3	8.7	10.1	16.5	18.8
	75~79	3.7	5.4	4.3	5.2	8.8	11.0
	80~84	0.5	2.1	1.7	2.7	3.9	5.4
85 이상	0.9	1.7	1.1	1.1	1.7	1.7	

주: 취업률 = (해당 연령층의 취업자/해당 연령층의 전체인구) × 100.

자료: 통계청(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면, 지난 1975년에서 2000년 사이, 55세에서 59세 연령집단의 취업률은 1995년 까지 증감경향을 반복하다가 1995년 이후 다소 크게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여자) 혹은 70세 이상 (남자) 연령집단의 취업률은 증가 유형을 나타낸다. 아마도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고연령층과 함께 조기정년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취업률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 고연령층의 취업기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고연령층의 취업생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취업률이 반드시 좋은 노동조건을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사업종이 농업부문이나 단순노무직, 임시직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연령층이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은 다른 연령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직업구조의 커다란 변화과정에서 청·중년층과 고연령층의 업종분포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전체적으로 농어림 비율이 감소되어 왔으며 제조업의 비율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부동산, 사회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중년층, 고연령층의 취업구조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령집단의 업종분포의 대조는 지속되고 있다. <표 12-13>을 보면,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전 기간을 통해 농어림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청·중년층 취업자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에서도 연령분리가 지속되고 있다.

〈표 12-13〉 청중년층과 고연령층 취업자의 직업분포, 1980~2000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15~54	55+	15~54	55+	15~54	55+	15~54	55+	15~54	55+
전문/기술직	4.8	2.5	6.6	3.6	8.2	4.3	18.5	6.8	18.3	5.5
행정/관리직	1.2	1.1	1.8	1.8	2.3	2.3	4.3	4.0	4.7	4.0
사무직	10.3	1.7	13.3	2.0	17.1	4.0	13.1	2.2	16.3	2.7
판매/서비스직	20.5	13.7	22.4	14.6	24.3	17.1	21.3	12.6	23.8	14.6
농어림	34.3	73.9	26.7	70.7	15.6	61.5	9.5	54.3	6.7	51.3
생산/단순노무직	28.9	7.1	29.2	7.3	32.4	10.7	33.3	20.2	30.1	21.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연령분리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직종에 따라 그 분리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기술직에서의 연령분리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표 12-13>에서 1980년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15~54세 취업자의 4.8%, 55세 이상 취업자의 2.5%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전문기술직 취업자의 구성비의 연령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즉 2000년도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은 15~54세 취업자의 18.3%, 55세 이상 취업자의 5.5%를 구성하고 있다. 연령차이가 가장 작은 직종은 행정/관리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도 두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크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월등히 크며 그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생산/단순노무직에서는 연령분리 현상은 완화되어 왔다. 즉 1980년 당시만 해도 생산/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15~54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고연령층 집단에서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연령집단별 취업률 차이가 줄어들어 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직업분포의 차이를 좀더 분명하게 고찰하기 위해서 직종분리지수를 계산해 보았다. <표 12-14>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지수는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먼저 R 은 두 연령집단의 취업자비의 평균편차로서, 청·중년층 취업자 대비 고연령층 취업자 비의 평균값($1/I \sum_{i=1}^I \ln(F_i/M_i)$)과 각 직업에서 취업자의 연령비의 차이(편차)를 평균화한 값이다. 취업자의 연령구성이 모든 직종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R 값은 0에 가까울 것이다. 반대로 R 값이 클수록 연령집단의 직종분리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지수 R_i 는 개별 직업 i 에서 취업자의 연령비가 평균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음의 값은 평균분포에 비하여 고연령층의 비율이 과소반영된 경우를 가리키며, 양의 값은 평균분포에 비하여 고연령층의 비율이 과다반영된 경우를 가리킨다. 음, 양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직업의 연령구성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전체 직업에서 취업자의 연령구성비의 평균편차값(R)을 살펴보면, 그 값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령집단의 직업분리가

〈표 12-14〉 연도 및 성별 직종 차이지수, 1980~2000

(단위: %)

		차이지수		직업별 차이지수(R)					
		R	exp(R)	전문/ 기술	행정/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농어림	생산/ 단순 노무직
전체	1980	0.70	2.01	-0.08	0.54	-1.21	0.19	1.36	-0.80
	1985	0.74	2.10	-0.07	0.58	-1.33	0.13	1.58	-0.83
	1990	0.70	2.01	-0.27	0.35	-1.08	0.01	1.74	-0.74
	1995	0.80	2.22	-0.65	0.28	-1.43	-0.17	2.11	-0.14
	2000	0.84	2.31	-0.88	0.16	-1.47	-0.17	2.35	0.00
남자	1980	0.61	1.84	0.00	0.41	-1.00	0.13	1.30	-0.84
	1985	0.68	1.98	0.06	0.45	-1.13	0.08	1.46	-0.91
	1990	0.62	1.85	-0.07	0.24	-0.85	-0.03	1.61	-0.89
	1995	0.70	2.02	-0.51	0.16	-1.01	-0.27	1.95	-0.32
	2000	0.74	2.09	-0.66	0.07	-1.17	-0.20	2.15	-0.19
여자	1980	1.12	3.08	-0.22	0.56	-2.61	0.81	2.00	-0.55
	1985	1.19	3.29	-0.41	0.92	-2.69	0.60	2.05	-0.47
	1990	1.02	2.78	-0.70	0.31	-2.28	0.46	2.31	-0.09
	1995	1.31	3.71	-1.21	0.49	-2.72	0.29	2.64	0.51
	2000	1.24	3.46	-1.58	0.21	-2.14	0.13	2.81	0.57

주: $R = 1/I \sum_{i=1}^I \ln(F_i/M_i) - (1/I \sum_{i=1}^I \ln(F_i/M_i))$

단, I: 직업범주수, F_i : i 직업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인구.

M_i : i 직업에 종사하는 15~54세 인구.

$R_i = \ln(F_i/M_i) - (1/I \sum_{i=1}^I \ln(F_i/M_i))$

자료: 통계청(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강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전체 차이지수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차이지수는 비록 그 정도가 다르지만 남녀 모두에서 1985년 이후 다소 완화되다가 1990년대 이후에 다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차이지수값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큰 데, 이는 연령집단별 직업분리 경향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심함을 반영한다.

연령집단의 분리정도는 직종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연령층이

과소반영된 전문/기술직에서의 차이지수 절대값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기술직에서 젊은 연령층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행정/관리직에는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과다반영되었지만, 연령분리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완화되고 있다. 사무직에서는 고연령층이 계속해서 과소반영되어 있다.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청·중년층으로 대체되고 있다. 농어림에서 고연령층의 과다반영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연령층이 과소반영된 생산/단순노무직에서는 점차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1980~2000년의 다소 최근의 기간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중 고연령층 노동력의 특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상대적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고연령층 인구 크기가 다른 집단보다 빨리 성장한 결과에 비롯한다.

다음으로 고연령층 취업률변화에 집단 내 차이가 존재한다. 즉 55~59세 인구의 취업률은 증감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의 취업률은 지난 20년 기간동안 크게 증가되어 왔다. 이처럼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고연령층과 함께, 조기정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부양기회가 약화되고 연금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노년기 노동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중년층, 고연령층 두 연령집단의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업분포의 차이가 여전히 심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율이 큰 농어업에는 고연령층이 계속해서 과다반영되어 있는 반면, 전문기술직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층의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생산/단순노무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청·중년층에서는 그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연령층에서는 그 속도가 완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V. 거주지 분포와 이동

1. 고령화의 지역화

도시화과정은 노인의 거주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표 12-15>을 보면, 1980년 60세 이상 노인의 39.1%가 시소재 동부에 거주하였으나, 2000년 동부에 거주한 노인의 비율은 61.5%로 증가하였다. 군소재 읍부에 거주한 노인의 비율은 1980년 12.9%에서 1990년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3%에 머물고 있다. 군소재 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1980년 48.1%에서 2000년에는 28.2%로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에 비하여 훨씬 많은 비율의 노인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노인의 도시 거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전체 시도지역의 연령분리정도(R)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표 12-16> 참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광역시는 전국의 평균분포에 비하여 노인비율이

<표 12-15> 60세 이상 노인의 거주지 분포, 1980~2000

(단위: %)

행정단위	연도	전체	남자	여자
동	1980	39.1	36.0	41.1
	1985	46.5	43.7	48.4
	1990	54.7	52.6	56.0
	1995	58.5	57.6	59.1
	2000	61.5	62.2	61.1
읍	1980	12.9	13.2	12.6
	1985	13.7	13.9	13.5
	1990	10.6	10.8	10.5
	1995	10.4	10.5	10.4
	2000	10.3	10.1	10.4
면	1980	48.1	50.7	46.2
	1985	39.4	42.4	38.1
	1990	34.7	36.6	33.4
	1995	31.0	31.9	30.5
	2000	28.2	27.8	28.5

자료: 통계청(2002j: KOSIS).

〈표 12-16〉 시도구역의 연령분리 정도, 1980~2000

분리지수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R		0.22	0.30	0.33	0.35	0.38
exp(R)		1.24	1.34	1.39	1.41	1.46
지역별 R _i	서울	-0.50	-0.44	-0.46	-0.46	-0.38
	부산	-0.63	-0.60	-0.50	-0.38	-0.26
	대구		-0.38	-0.36	-0.39	-0.28
	인천		-0.43	-0.43	-0.40	-0.34
	광주			-0.32	-0.28	-0.33
	대전			-0.22	-0.34	-0.40
	울산					-0.70
	경기도	-0.19	-0.07	-0.17	-0.33	-0.33
	강원도	0.07	0.16	0.18	0.22	0.30
	충청북도	0.25	0.34	0.33	0.23	0.26
	충청남도	0.16	0.21	0.41	0.51	0.52
	전라북도	0.16	0.28	0.35	0.38	0.46
	전라남도	0.19	0.21	0.40	0.60	0.68
	경상북도	0.09	0.45	0.50	0.49	0.50
	경상남도	0.13	0.06	0.07	0.01	0.18
	제주도	0.15	0.22	0.21	0.14	0.13

주: $R = 1/I \sum_{i=1}^I |\ln(O_i/Y_i) - (1/I \sum_{i=1}^I \ln(O_i/Y_i))|$

단, I: 시도수, O_i: I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Y_i: I시에 거주하는 64세 이하 인구.

$R_i = \ln(O_i/Y_i) - (1/I \sum_{i=1}^I \ln(O_i/Y_i))$

자료: 통계청(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과소반영된 지역들이다. 특히 울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노인비율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한다. 이 표에서 1980년에서 2000년의 기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서의 연령분리정도는 완화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은 전국평균에 비해 노인비율이 과다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지역은 상당히 고령화된 지역이다.

동·읍·면 단위로 노인구성비를 분석해보아도 연령분리정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읍지역에는 노인구성이 점차적으로 과소반영되고 있는 반면, 면지역에서는 노인구성비가 더욱 과다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시와 일반 도지역에서 그리고 동·읍·면 지역별로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 연령선별적으로 진행된 인구이동의 영향이 크다. 지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엄청난 이촌향도 현상과 현재에도 지속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은 젊은 연령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농촌에는 이동성향이 약한 노년층이 주로 남게 되어 정주민구의 고령화가 크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2. 노년기의 거주지 이동

생애를 통하여 지리적 이동 강도와 이동의 원인이 다르다. 일생을 통하여 거주지 이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는 20~30대이다. 이 연령대에서는 교육, 직업, 새로운 가족 형성 등의 역할변천이 집중된 시기이므로, 지리적인 이동도 가장 활발하다. 중·장년층 시기에는 역할변천의 속도가 다소 완만하며, 지리적 이동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청·장년층에 비하여 크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거주지 이동이 제한된다. 청·장년층과 같이 거주지 이동을 동기화하는 경제적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역할로부터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고령층에서는 일과 관련된 지리적 이동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또한 오랜 기간 친분을 맺은 친구, 이웃과 헤어져야 하는 사회적, 심리적 비용도 크다.

비록 이동률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지만 은퇴 이후 노년기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그런데 노년기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는 노인은 선별적이다. 일반적으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거주지 이동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여자 노인의 거주지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자 노인의 혼인상태와 밀접히 관련된다. 여자 노인 대다수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거주지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다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강에 장애가 있는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이동률이 높다. 이동한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것인지, 아니면 건강에 장애가 있는 노인이 거주지를 이동하기 쉬운 것인지, 현 분석에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이동을 경험한 노인은 현 거주지에서 자녀와 동거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보면, 건강장애 이후 자녀와의 결합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취업상태에 따라 거주지 이동률에 차이가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은 일하지 않고 있는 노인에 비해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적다. 이는 노년기 이동은 비경제적 원인에 의해 동기화됨을 반영한다.

단일 요인으로 가장 효과가 큰 변인은 현거주지 특성이다. 현재 동, 읍에 거주하는 노인은 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보다 지난 5년간 거주지를 이동한 비율이 높다. 이는 노년기 이동을 결정할 때 그 목적지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가 지배적임을 시사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경향은 비노인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집단에서도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의 목적에서 두 집단은 대비된다. 젊은층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는 달리, 노년기 도시로의 이동은 주로 자녀와의 결합을 위해 이루어진다.

VI.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노인 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경제생활, 지역분포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의 주요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고령자 집단의 고령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배우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비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노부부 혹은 1인 단독으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동안의 인구구성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가족변화의 크기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독거을 증가 요인을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유배우자 비율의 증가 및 도시거주 비율의 증가는 독거 노인 비율의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일 요인의 효과를 살펴볼 때, 혼인상태에 따른 독거율 차이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과거에는 많은 무배우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혼자 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동거가 과거에는 규범적으로 당연시 되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상황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는 배우자 사망, 건강 약화에 대응하는 생활적응 양식으로 취해지고 있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는 흔히 노부모가 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가 상황적으로 구성되는 경향과 함께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현 노인집단의 주요 소득원은 일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국민연금이나 민간 보험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기초수급대상자 4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는 사실 또한 현 노인집단의 절대적 빈곤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회보험의 미성숙,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한계 상황에서 많은 노인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창출을 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도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그 기여도가 증가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고연령층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5~39세의 청·장년층의 노동력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세 이상 연령집단의 노동력 기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노동력 기여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고연령층의 취업률이 다른 사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IMF 경제위기 직후 55세 이상에서 60대 초반 고연령층의 취업률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60대 후반의 취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연령 노동력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는 견고하다. 직업, 업종별 연령분리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고연령층 중 55세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전기 고령층의 취업기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조기정년, 명예퇴직 압력에 의해 더욱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많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연령차별적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도 빈곤의 위협 때문에 주변적이고 임시적인 노무라도 종사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많음을 반영한다.

연령분리 현상은 지역수준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광역시는 노인비율이 과소반영된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지역은 노인의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동·읍·면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은 노인의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동·읍·면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은 노인인구가 과소반영된 반면, 면지역에는 노인인구가 과다반영되어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지역별 연령분리 현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심해지고 있다.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인구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간 결과이다. 젊은 인구의 불균형적인 전출을 결과한 경제, 생활기회의 지역격차는 세대간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자.

결론적으로, 지난 몇 십 년간의 노인집단의 주요 변화 모습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노년기의 빈곤, 지역과 노동시장에서의 연령분리,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노인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중층적이다. 이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복지, 지역환경과 같은 우리의 생활을 중요하게 규제하는 사회적 관계안에서 형성되고 있다. 결국 연령통합적인 노동과 복지제도의 개혁 그리고 균형적 지역발전이 노인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여 백

제13장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최진호

I.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지역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의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센서스가 처음으로 실시된 해는 1925년이나 센서스 조사항목 중에서 인구이동 분석을 할 수 있는 출생지가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이고, 5년 전 거주지는 1970년 센서스부터, 그리고 1년 전 거주지는 1980년부터 조사되었다.

한국사회는 지난 1960년 이래 매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화와 더불어 이 시기부터 도시화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도시화율은 1960년의 28%에서 2000년에는 79.7%로 급증하였고 도시 수도 27개에서 79개로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기로서 이 시기에는 서울 중심의 일극 도시화였다.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서울 주변 위성도시와 지방의 공업도시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량 인구이동에 기인하였는데, 기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구이동이 자연증가 못지 않게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한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개발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간에 걸친 우리 나라의 지역간 인구분포 추이를 개관하고 인구분포 변화의 주요 원인인 인구이동을 분석하려 한다. 이때 인구이동은 1970, 1980, 1990 그리고 2000년 센서스 자료의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양, 이동방향, 이동의 선별성 등을 분석하는데, 특히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자료

우리 나라에서 인구이동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인구센서스 자료,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자료, 그리고 표본조사자료들이 있다.

1. 인구센서스 자료

인구이동 분석을 위해서 가장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현재 인구센서스에는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항목이 조사되고 있어 출생지와 현거주지를 비교한 평생이동, 그리고 센서스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이동과 1년간 이동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센서스는 1925년이래 해방 전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왔는데 센서스에서 인구이동 분석에 필요한 위의 사항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즉 센서스에 출생지 항목이 처음 포함된 것은 1960년이고 5년 전 거주지는 1970년부터, 그리고 1년 전 거주지는 1980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 센서스 이후부터는 이들 항목을 이용한 인구이동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센서스는 이들 거주지들을 읍·면·동 단위까지 분류하고 있어 이동의 공간 단위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 원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한 이동의 양과 방향뿐 아니라 이동유형별로도 더 자세한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용성에 반하여 센서스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분석할 경우에 발생하는 약점은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동을 모두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5년과 2000년 거주지를 비교하여 이동 분석을 할 경우, 어떤 개인이 이 5년 동안에 여러 번 이동을 했더라도 두 시점만 비교하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한 것으로만 나타나게 된다. 또 기간 중 이동이 있었지만 5년 전 거주지로 다시 되돌아간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번 이동했으나 여기에서는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센서스의 두 시점을 비교해서 인구이동 분석을 할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반복이동과 귀환이동의 누락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이동의 양은 분석에서 나타난 이동의 양보다 훨씬 많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자료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결과인 인구이동통계자료가 있는데 이 인구이동통계자료는 1971년부터 매년 인구이동통계연보로 발간되어 오고 있다. 현재 인구이동통계연보에는 시·도 및 시·군별 이동상 지위, 시·도 및 시·군별 전입 및 전출자, 그리고 각 시·도별로 시·도 내의 구·시·군간 이동 등 많은 이동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자의 배경변수로는 성과 연령만 포함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이동사유도 집계되었으나 현재에는 빠져 있다.

이 인구이동통계자료는 매년 집계되고 모든 이동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스의 5년간, 1년간 이동에서 나타나는 이동의 상쇄나 누락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은 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은 경우, 또 이동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들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의 전산화와 자가용의 보급에 의한 실제 거주지에서의 차량 등록 등으로 과거보다는 그 신뢰성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감안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표본조사자료

앞에서 든 센서스와 주민등록자료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본조사자료도 인구이동 연구에 유용하다. 특히 전반적인 이동의 양과 방향보다는 이동의 원인과 결과 등의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우 표본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

표본조사는 그 동안 주로 개별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으나 전국적인 규모의 표본조사도 통계청에 의해서 세 차례 실시되었다. 즉 1966년에는 1966년 센서스의 사후조사의 성격으로 출생지 및 5년 전 거주지, 이동횟수, 이동이유 등이 조사되었고, 1983년에는 인구이동특별조사로 개인의 이동 및 생활사, 지난 12개월간의 이주 및 생활상태, 장래이동의향 등이 조사되었다. 또 1997년에는 역시 인구이동특별조사로서 출생 이후의 이동경험, 직전, 1년 전, 5년 전 거주지와 이동이유, 경제활동 상태 등 모두 54개 항목이 조사된 바 있다.

Ⅲ.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

우리 나라의 인구분포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인구이동 분석에 사용되는 주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센서스에서 5년 전 거주지 항목이 정식으로 조사된 것은 1970년이나 1966년 센서스의 사후 표본조사에서 5년 전 거주지가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연구된 인구이동 연구는 주로 센서스간의 생산율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순이동을 추정하고 성 및 연령별 특성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 연구로는 유의영(Yu, 1974, 1975, 1980)과 권태환(Kwon,

1977)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그 이후 센서스에 5년 전, 1년 전 거주지 항목이 포함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들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총량, 도시-농촌간 및 지역간 이동 그리고 이동자의 특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김대영·이효구, 1979; Kim and Sloboda, 1981; 이한순·이우리, 1983; 최진호, 1982, 1986, 1994, 1997; Noh, 1991).

또 1980년 이후에는 수도권외의 인구집중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행해졌으며(문현상·한영자, 1989), 1985년 센서스 이후부터는 매 센서스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중에 인구분포와 인구이동도 포함되어 분석되었다(최인현 외, 1989; 최진호, 1993; 김남일 외, 1997).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센서스를 이용한 연구는 인구이동의 주요한 연구분야인 이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행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전국적인 규모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규모의 표본조사는 그 동안 통계청이 주관되어 세 차례 실시되어 분석되었는데, 1966년 특별조사 결과는 개략적인 분석에 결과표만 제시되었으나(최인현·박재수, 1969), 두 번째 전국 표본조사인 1983년 인구이동특별조사 결과는 개인의 이동사, 이동형태, 이동과 출산력, 이동과 사회이동 등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어 발표되었다(최인현 외, 1986; 권태환·전광희, 1990).

이밖에 국지적인 표본조사 연구로는 귀환이동을 다룬 연구(Lee, 1978; Choi, 1984)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의 이유와 장래이주동기 등을 분석한 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92)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그 동안의 인구이동연구는 센서스 자료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적인 표본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이동의 원인과 결과 등 보다 미시적인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IV. 지역간 인구분포

1. 시·도 인구분포 추이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 인구분포 변화의 특징은 1990년까지는 농촌으로부터 일부 대도시로의 대량의 인구이동의 결과로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1990년 이후에는 서울과 부산의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표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출산력 때문에 농촌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인구의 절대수는 모두 다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전국 인구에 대한 비중이 증대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제주 등 8개 시·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재배치의 결과로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도가 출현하게 된다. 즉,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경우 10년 동안 절대인구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경남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70, 80년대에도 전국 인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시·도는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7개의 대도시와 경기도로서 역시 8개 시·도 지역이다.

전반적으로 1960~1990년의 30년간을 통해 볼 때 우리 나라 시·도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 인구증가율을 상회해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한 시·도들로서 여기에는 서울, 부산 등 7개의 광역시급 이상 대도시와 경기, 제주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비록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인구의 절대수는 증가한 지역으로서 충북과 경남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역들은 인구의 절대수마저도 감소된 시·도들로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1960~1990년의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 오던 인구분포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대도시 주변 대도시권 형성의 영향으로 서울과 부산의 인구의 절대수와 인구비중이 최초로 감소하게 된다.

〈표 13-1〉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1960~2000

(단위: 천 명, %)

시·도	1960	1970	1980	1990	2000
전국	24,989(100.0)	31,434(100.0)	37,436(100.0)	43,411(100.0)	46,136(100.0)
서울	2,445 (9.8)	5,525 (17.6)	8,364 (22.3)	10,613 (24.4)	9,895 (21.4)
부산	1,164 (4.7)	1,876 (6.0)	3,160 (8.4)	3,798 (8.7)	3,663 (7.9)
대구	677 (2.7)	1,081 (3.4)	1,605 (4.3)	2,229 (5.1)	2,481 (5.4)
인천	401 (1.6)	643 (2.0)	1,084 (2.9)	1,818 (4.2)	2,475 (5.4)
광주	314 (1.3)	484 (1.6)	728 (1.9)	1,139 (2.6)	1,353 (2.9)
대전	229 (0.9)	407 (1.3)	652 (1.7)	1,050 (2.4)	1,368 (3.0)
울산	207 (0.8)	271 (0.9)	535 (1.4)	805 (1.9)	1,014 (2.2)
경기	2,348 (9.4)	2,710 (8.7)	3,850 (10.3)	6,156 (14.2)	8,984 (19.5)
강원	1,637 (6.5)	1,865 (5.9)	1,791 (4.8)	1,580 (3.6)	1,487 (3.2)
충북	1,370 (5.5)	1,480 (4.7)	1,424 (3.8)	1,390 (3.2)	1,467 (3.2)
충남	2,229 (9.2)	2,451 (7.8)	2,304 (6.2)	2,014 (4.6)	1,845 (4.0)
전북	2,395 (9.6)	2,432 (7.7)	2,228 (6.1)	2,070 (4.8)	1,891 (4.1)
전남	3,239 (13.0)	3,511 (11.2)	3,052 (8.2)	2,507 (6.8)	1,996 (4.3)
경북	3,171 (12.7)	3,475 (11.1)	3,350 (9.0)	2,861 (6.6)	2,725 (5.9)
경남	2,811 (11.2)	2,848 (9.1)	2,787 (7.4)	2,867 (6.6)	2,979 (6.5)
제주	282 (1.1)	365 (1.2)	463 (1.2)	515 (1.2)	513 (1.1)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즉 서울은 1990년에 전국 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21.4%로 감소하였고, 부산도 8.7%에서 7.9%로 감소하였다. 또 서울과 부산은 같은 기간 동안 인구의 절대수도 감소하여 서울은 약 72만 명, 부산은 약 14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과 부산이 일반적인 도시화의 단계에서 말하는 상대적 분산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통 한 사회의 도시화는 특정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이 일어나는 점(點)적인 도시화의 단계를 지나, 이

[표 13-2] 전국 인구 증가분의 시·도별 비중, 1960~2000

(단위: 천 명, %)

시·도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2000
전국	6,445(100.0)	6,002(100.0)	5,975(100.0)	2,725(100.0)
서울	3,080 (47.8)	2,839 (47.3)	2,249 (37.6)	-718(-26.3)
부산	712 (11.0)	1,284 (21.4)	638 (10.7)	-135 (5.0)
대구	404 (6.3)	524 (8.7)	624 (10.4)	252 (9.2)
인천	242 (3.8)	441 (7.3)	734 (12.3)	657 (24.1)
광주	170 (2.6)	244 (4.1)	411 (6.9)	214 (7.9)
대전	78 (2.8)	245 (4.1)	398 (6.7)	318 (11.7)
울산	64 (1.0)	264 (4.4)	270 (4.5)	209 (7.7)
경기	362 (5.6)	1,140 (19.0)	2,306 (38.6)	2,828(103.8)
강원	228 (3.5)	-75 (-1.2)	-210 (-3.5)	-93 (-3.4)
충북	110 (1.7)	-56 (-0.9)	34 (-0.6)	77 (2.8)
충남	222 (3.4)	-147 (-2.4)	-290 (-4.9)	-169 (-6.2)
전북	37 (0.6)	-144 (-2.4)	-218 (-3.6)	-179 (-6.6)
전남	272 (4.2)	-459 (-7.6)	-545 (-9.1)	-511(-18.8)
경북	304 (4.7)	-125 (-2.1)	-489 (-8.2)	-136 (-5.0)
경남	37 (0.6)	-61 (-1.0)	80 (1.3)	112 (4.1)
제주	83 (1.3)	90 (1.5)	52 (0.9)	-2 (-0.1)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대도시권 전체가 성장하는 면(面)적인 도시화로 이행된다. 이때 대도시권이 형성, 성장하는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화의 초기인 첫째 단계는 중심도시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 근교는 인구가 감소한다. 둘째, 절대적 집중 단계에서는 중심도시와 근교 모두에서 인구가 증가하나 중심도시의 성장이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셋째, 상대적 집중 단계는 근교의 성장이 오히려 중심보다 빠르다. 넷째, 상대적 분산단계에 진입하면 중심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 절대적 분산 단계에서는 중심도시의 인구 감소가 커 대도시권 전체로서도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Vanhove and Klaassen, 1980).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화의 단계 가설에 비추어보면 서울은 이미 1970년대 후반기에 상대적 집중단계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부터는 상대적 분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지방 대도시인 대구, 대전, 광주도 언젠가는 서울, 부산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하여 각 시·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은 1960~1970년 기간 중 전국 인구 증가분의 47.8%를 흡수하였고 1970~1980년에는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든 47.3%였으나, 1980~1990년에는 37.6%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에는 -26.3%로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부산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21.4%) 다시 줄어들어 1980~1990년에는 전국 인구 증가분의 10.7%를 흡수하였으나 부산 역시 1990년대에는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그 밖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는 그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최근 이들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도 중에서는 경기도의 성장이 두드러져 1960~1970년에는 전국 인구 증가분의 5.6%만을 흡수하였으나 1970~1980년에는 그 비율이 19.0%로 급증하고, 다시 1980~1990년에는 38.6%, 그리고 1990~2000년에는 전국 인구 증가분의 103.8%를 흡수해 서울보다도 많은 인구를 흡인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빼앗기고 있는 도는 전남으로서 1960~2000년 기간 중 일관되게 가장 높은 인구 유출률을 기록하여 왔다. 전남 다음으로 인구 유출률이 높은 지역은 시기마다 달라 1970년대에는 충남, 전북이, 그리고 1980년대에는 경북, 충남, 전북 등의 순서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전북, 충남, 경북 등의 순서로 유출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1960~2000년 기간 중 우리 나라 전국 인구는 총 2,115여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서울이 35.2%, 경기도가 31.4% 그리고 인천이 9.7%를 흡수하여 전국 인구 증가분의 76.3%를 수도권이 흡수하였고, 나머지는 부산(11.8%), 대구(8.5%) 등 대도시들이 흡수하였다. 따라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지역간 인구분포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인구집중이었다고 표현

할 수 있겠다.

2. 수도권인구집중

앞에서 분석한 바 대로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 인구분포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권인구집중이다. 이제 수도권인구집중 현상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수도권을 세분하여 서울, 경기도, 수도권 등으로 나누어서 1960~2000년 기간 중의 인구변화를 정리해 보면 <표 13-3>과 같다.

우선 <표 13-3>에서 보면 2000년 현재 서울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21.5%로서 한국사람 5명 중 1명은 서울시민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4.8%로서 이 두 지역을 합친 수도권인구는 전국 인구의 46.3%나 된다.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서울 인구의 비중은 1960년의 9.8%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1960년대에 가장 괄목할만한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서울의 비중은 거꾸로 감소하기 시작해 1995년에는 22.9%, 그리고 2000년에는 21.5%로 줄어들었다.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의 경우는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즉 경기도의 비중은 1960년의 11.0%에서 1970년에는 오히려 감소해 10.7%가 되었다가 그 이후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1980년 이후에는 매

<표 13-3> 수도권인구집중, 1960~2000

(단위: 천 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서울	2,445	5,525	8,364	10,613	10,231	9,895
경기도 ¹⁾	2,749	3,353	4,934	7,974	9,958	11,459
수도권 ²⁾	5,194	8,879	13,298	18,587	20,189	21,354
전국	24,989	31,434	37,436	43,411	44,609	46,136
서울/전국	9.8	17.6	22.3	24.4	22.9	21.5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8.4	22.3	24.8
수도권/전국	20.8	28.2	35.5	42.8	45.3	46.3

주: 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년 평균 0.6%씩 늘어나 2000년에는 오히려 서울보다 그 비중이 더 커졌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인구는 1990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경기도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성장 추세는 1995년 이후에 많이 둔화되었다.

이제 이와 같은 수도권 인가집중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표 13-4>에서는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내 각 지역의 증가분의 비율을 정리하여 보았다.

<표 13-4>를 보면, 1960~1970년 기간 중 서울은 전국 인구 증가분의 47.8%를 흡수해 기간 중 늘어난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에도 이어져 1970~1980년에는 47.3%가 서울에서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는 다소 떨어져 37.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그 비율이 -26.3%로 감소해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최근에 들어서 상당한 정도로 둔화되었다가 이제는 거꾸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특히 1970년대부터 전국에서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 1980년대에는 오히려 서울보다 많은 50.9%를 흡수하였고 1990~2000년 기간에는 무려 전국 인구 증가분의 127.9%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1990년대의 변화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5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면 1990년대 전반기에는 서울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나 경기도의 인구는 급증해 수도권 전체로는 전국 인구 증가분의 133.7%를 흡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 후반기에는 달라져 서울은 계속 인구 감소를 보이고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둔화되어, 수도권 전체로는 이 기간 중 증가인구의 76.3%를 흡수해 수도권 인구집중 경향이 많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계속 가속화되어 오던 수도권 인구 집중경향은 1995년을 고비로 하여 그 추세가 급속도로 완화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반전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야 하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은 우리 나라도 이제는 도시화의 단계에서 지방의 대도시들이 서울과

〈표 13-4〉 수도권 인구증가분, 1960~2000

(단위: 천 명, %)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1995	1995~2000	1990~2000
서울	3,080	2,839	2,249	-382	-336	-718
경기도 ¹⁾	605	1,580	3,040	1,984	1,501	3,485
수도권 ²⁾	3,685	4,419	5,289	1,602	1,165	2,767
전국	6,445	6,002	5,975	1,198	1,527	2,725
서울/전국	47.8	47.3	37.6	-31.9	-22.0	-26.3
경기도/전국	9.4	26.3	50.9	165.6	98.3	127.9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33.7	76.3	101.5

주: 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견줄만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전입 압력이 상당히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면 수도권의 인구집중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로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199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서울 근교의 대규모 신도시의 건설로 수도권 외에서 그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이 있었고, 거꾸로 1990년대 후반기에는 한국 경제의 침체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많이 둔화된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의 단초를 구하기 위하여 매년 집계되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5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매년 일관성 있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1985년에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자 총수는 76.4만 명이었다가 1997년에는 51.8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47.9만 명으로 감소의 폭이 컸다가 1999년에는 다시 58.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침체로 인한 이동의 감소는 1998년 한 해에만 관찰된다.

또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1993~1995년 사이에도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자는 일관성 있게 줄고 있어 신도시 건설의 영향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도시화 단계 가설이 가장 설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V. 국내 인구이동

1. 인구이동 추이

먼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이동의 양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13-5>는 1970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 인구센서스의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각 5년간의 이동자수와 이동률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동은 구·시·군의 경계를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13-5>에서 보면 1965~1970년의 5년간 우리 나라의 구·시·군간 총 이동자수는 약 440만 명으로써 당시 5세 이상 전국 인구의 16.2%가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총 이동자를 다시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중 약 44%는 같은 시·도내에서 구·시·군간을 움직인 것이고 나머지 56%가 다른 시·도로 이동해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이 표에서 기타이동은 주로 외국에서 국내로 전입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5년간의 총 이동자수는 1990년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져 1975~1980년에는 약 766만 명이, 그리고 1985~1990년에는 약 987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최근 1995~2000년 기간에는 그전 1985~1990

<표 13-5>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1965~2000

(단위: 천 명, %)

	총이동자수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기타이동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1970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1980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1990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2000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 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최근 1995~2000년의 이동률은 23.1%로서 대체로 우리 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5년 동안에 구·시·군을 바꾸어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동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대도시 내의 구간(區間) 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거주지 이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2000년 센서스에서 보면 서울 등 7대 대도시 내의 구간(區間) 이동자가 259만 명으로써 총 이동자의 26.7%가 대도시 내의 구간(區間) 이동자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전체 이동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해서 지역내 이동과 지역간 이동의 비율을 보면, 1975~1980년 기간에만 시·도내 이동이 50.7%로 시·도간 이동보다 다소 많았으나, 나머지 기간 중에는 시·도간 이동이 55~56%로 시·도내 이동보다 많았다. 시·도간 이동은 1965~1970년의 246만 명에서 1995~2000년에는 539만 명으로 2.2배나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시·도간 이동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도시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는 거주지 교외화에도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시·도간 인구이동

이제는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시·도간의 인구이동을 보기로 하자. <표 13-6>은 네 기간 동안의 시·도간의 인구이동을 전입, 전출, 순이동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서울을 보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1965~1970년의 119만 명에서 1985~1990년에는 133만 명으로 완만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97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전출은 1965~1970년의 25만 명에서 1995~2000년에는 16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순이동을 보면 1965~1970년의 94만 명을 정점으로 1975~1980년에는 5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1995~2000년에는 69만 명의 전출초과 현상을

〈표 13-6〉 시·도간 인구이동, 1965~2000

(단위: 천 명)

	전입				전출				순이동			
	65~70	75~80	85~90	95~00	65~70	75~80	85~90	95~00	65~70	75~80	85~90	95~00
서울	1,191	1,256	1,333	971	248	753	1,377	1,656	943	503	-44	-685
부산	309	539	373	216	127	221	348	400	182	318	25	-184
대구	-	-	292	201	-	-	213	248	-	-	79	-47
인천	-	-	413	339	-	-	174	279	-	-	239	60
광주	-	-	186	164	-	-	122	144	-	-	64	20
대전	-	-	199	210	-	-	96	152	-	-	103	58
울산	-	-	-	110	-	-	-	111	-	-	-	-1
경기	346	905	1,457	1,680	320	437	727	908	26	468	730	772
강원	103	105	123	164	184	275	299	178	-81	-170	-176	-14
충북	56	73	122	169	164	208	190	143	-108	-135	-68	26
충남	99	166	137	262	308	332	326	199	-209	-166	-189	63
전북	55	65	81	133	205	274	267	169	-150	-209	-186	-36
전남	58	89	140	171	277	429	437	226	-219	-340	-297	-55
경북	146	264	245	275	303	400	453	281	-157	-136	-208	-6
경남	98	296	360	283	307	385	372	262	-209	-89	-12	21
제주	14	22	29	36	12	25	33	31	2	-3	-4	5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의 전출초과 현상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와의 이동의 결과로서 1995~2000년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전출은 110만 명으로 총 서울 전출 인구 166만 명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43만 명으로서 서울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만 63만 명의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이외에도 타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이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는 시·도로는 인천과 대전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이 있다. 서울은 인천에서 6.5만 명의 전입자를 받아들이고 12.6만 명의 전출자를 내보내 6.1만 명의 전출초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전과는 3.2만 명의 전입에 4.5만 명의 전출을 나타내 1.3만 명의 전출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은 충남과 충북에

각각 2.2만 명과 1.2만 명의 전출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서울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인구를 흡입하여 주로 경기도와 인천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대도시권의 형성에 따른 근교 지역과 경기도 위성 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기인하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에 있어서는 1990년까지는 모든 대도시가 인구가동에 의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에는 부산과 대구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출초과를 보여 이동에 의해 인구를 잃고 있었다. 반면에 인천, 광주, 대전은 순이동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전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부산과 대구에서도 주변 근교 지역의 교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대도시권화가 상당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도지역은 1990년까지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전출초과를 나타냈었으나 1995~2000년에는 충남, 충북과 경남에서 전입초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의 전입초과는 서울-경기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대도시권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충남과 충북의 경우는 대전과의 관계에서만 전출초과를 보일 뿐 서울을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고른 전입초과를 나타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러면 각 도별로 전출자들의 이동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제 이를 알기 위해서 도별로 총 시·군간 이동자 중 타도로의 전출자 비율, 그리고 타도 전출자 중에서 서울로의 전출자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13-7>이다.

<표 13-7>에서 보면, 네 기간을 통하여 경북을 제외한 각도에서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의 전출자보다 다른 도로의 전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총 이동자 중 도외 전출자의 비율은 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과거에는 충남, 충북, 강원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최근에는 충남, 전남, 경북 등에서 도외 전출자의 비율이 높다. 이는 이들 도에 속한 대전, 광주, 대구 등이 광역시로 독립해서 타 시·도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3-7>을 보면 타도로의 전출 비중이 눈에 띄게 낮은 도는 경남인데, 경남의 경우에는 타도 전출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 1965~1970년에는

〈표 13-7〉 도별 총 이동자의 도외(道外) 및 서울 이동비율, 1965~2000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경기	68.5	78.4	58.8	71.2	61.6	60.5	51.3	47.6
강원	63.0	47.3	71.6	36.7	72.4	29.1	68.7	27.5
충북	74.9	51.8	76.5	36.1	68.3	28.4	70.1	20.3
충남	75.9	63.3	69.7	47.0	81.7	28.2	76.2	20.1
전북	65.1	63.4	71.0	49.3	63.7	41.9	62.6	30.8
전남	57.9	62.8	61.3	47.3	79.6	30.4	74.6	20.8
경북	49.0	43.6	38.1	32.0	71.1	16.6	70.4	14.6
경남	70.6	21.5	64.7	15.3	53.1	15.6	55.6	13.4
제주	50.0	41.7	62.5	32.0	55.9	33.3	52.5	32.3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70.6%였으나 1975~1980년에는 64.7%로, 그리고 1995~2000년에는 55.6%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에서 도외(道外) 진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부산 대도시권의 형성과 울산, 마산, 창원 등의 동남 해안 공업벨트 등의 인구 흡인 요인이 도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타도로의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 이동에 있어서 거대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의 인구를 흡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구 이동에 있어서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도의 도외(道外) 진출자 중 서울로 이동한 인구의 비율을 정리하여 시기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네 기간을 통하여 각 도에서 거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변화의 하나는 각 지역의 도외 진출자중 서울 진출자의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와 제주를 제외하고서 총 도외 진출자 중 서울 진출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도는 전북인데, 1965~1970년 기간 중에는 63.4%를 기록하였으나 1975~1980년에는 49.3%로 줄어들고, 1995~2000년에는 30.8%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도에서 고루 발견되는데 다만 경북, 경남과 제주에서만 그 줄어드는 폭이 적다.

〈표 13-7〉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지난 네 기간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서울 전출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전북, 전남, 강원이라는 것이다. 충남과 전남의 경우 1985~1990년 기간 중 서울 전출자 비율이 전북에 비해 낮아진 것은 이 기간 중 대전과 광주가 직할시로 독립되어 도의 전출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전출자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경향은 이들 세 지역이 서울로 인구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 지역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서울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 인구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각 도에 인근의 인구를 흡인할 만한 대도시가 있는가, 또 있다 하더라도 서울과 견주어서 얼마나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보다 더 자명해진다.

즉 1995~2000년의 경우 경남은 도외 이동자중 서울 전출자의 비율이 가장 낮아 13.4%인데 반해서, 인근 대도시인 부산은 경남 도외 전출자의 34.0%를 흡수하고 있어,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흡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북은 도외 전출자의 14.6%가 서울로 향하고 있으나 인근 대구로는 35.2%가 이동하고 있어, 대구 역시 지역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구이동 유형

1) 이동유형 분석의 의의

최근 인구이동 연구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는 이동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이동 동기들을 자세히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1960년 이후에 각 국의 센서스 조사항목으로 출생지, 5년 전 혹은 1년 전 거주지 항목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분석이 어려웠던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과 그 반대되는 흐름을 포함한 이동의 유형별 분류와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DaVanzo, 1976; Kiker and Traynham, 1976; Kau and Sirmans, 1976, 1978; Miller, 1977).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유형은 이동자의 세 시점 이상에서의 거주지를 비교하여 1) 1차 이동(primary migration), 2) 2차 이동(secondary migration) 혹은 반복이동(repeat migration), 그리고 3)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시점을 비교한다 할 때, 1차 이동은 이동자가 어느 특정 기간 중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2차 이동은 이미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이동자가 다시 제3의 곳으로 이동한 경우를 일컫는다. 한편 귀환이동은 출생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이동자가 다시 원래 살았던 출생지로 되돌아가는 경우이다. 이때 물론 꼭 출생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 b, c 세 거주지를 비교하여 $a \rightarrow a \rightarrow b$ 는 1차 이동, $a \rightarrow b \rightarrow c$ 는 2차 이동, 그리고 $a \rightarrow b \rightarrow a$ 는 귀환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동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석이 필요한 까닭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동의 결과, 이동자 개개인의 이동동기, 그리고 이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이동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들 유형을 다 합친 총량적인 이동의 성격은 이들 유형의 비중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이동의 유형구분

한국의 2000년 센서스에서는 이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현거주지 등 4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들 4개의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민을 모두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이동의 공간적 단위는 시·군으로서 대도시의 구간 이동은 이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우선 비이동자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및 현거주지가 모두 동일한 시·군으로 적어도 센서스 상으로는 한번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음 1차 이동자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그리고 1년 전 거주지는

동일하나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최근 1999~2000년의 1년 사이에 이동한 사람들이다.

정착이동자는 출생부터 최근 1년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출생지를 떠나 적어도 1번 이상 이동하였으나 1999~2000년 사이에는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2차 이동자는 1999~2000년 사이에 이동한 사람들로서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귀환이동자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을 경험하였으나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같아 출생지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표 13-8〉은 2000년 센서스의 2% 표본자료에 근거하여 앞에서 분류한 대로 우리 나라 5세 이상 인구의 인구가동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유의할 점은 각 유형별 사례수는 2% 표본자료에 근거한 사례수로서 각 유형별 실제 인구의 수는 아니다.

〈표 13-8〉에서 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5세 이상 인구의 40.1%는 비이동자로서 센서스 상으로는 출생 이후 한번도 시·군의 경계를 벗어나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이동유형은 정착이동자로서 52.9%는 출생 이후 1999년 사이에 적어도 1번 이상은 이동을 경험하였으나 1999~2000년 사이에는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한편 출생 이후 적어도 2번

〈표 13-8〉 우리 나라 5세 이상 인구의 이동상 지위, 1990, 2000

(단위: %)

	1990	2000
비이동자	37.2	40.1
1차이동자	1.6	1.3
정착이동자	53.6	52.9
2차이동자	5.6	3.4
귀환이동자	2.1	2.3
합계 (사례수)	100.0 (773,669)	100.0 (821,386)

자료: 통계청(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상 이동한 인구는 5.7%로서 3.4%는 계속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였고 2.3%는 출생지로 다시 귀환이동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 인구의 이동유형을 1990년과 비교해 보면 비이동자의 비율은 늘고 1차 이동자나 2차 이동자의 비율은 감소해 전체적으로 10년 전보다 이동성향이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이제 이동유형별로 이동자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 13-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성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1차 및 2차 그리고 귀환이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정착이동에서 남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해 여자의 정착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최근 1년간 처음 이동한 1차 이동자는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계속 이동한 2차 이동자에서는 25~29세와 30~34세가, 그리고 정착이동자의 경우는 35~39세와 40~44세의 비율이 높아 대체로 5년간의 시차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한편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2차 이동자에서 가장 높아 25.3%를 나타내며 1차 이동자에서는 23.4%, 그리고 귀환이동자에서는 20.2%로서 교육수준과 이동성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이수 그 자체가 이동의 목적이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자는 주로 1차 이동자나 비이동자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 이동유형에서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유배우자는 정착이동자와 2차 이동자에서 많은데 특히 2차 이동자에서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 원인이 되는 이동도 상당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이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1차나 2차 이동

〈표 13-9〉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2000

(단위: %)

구분		비이동자	1차 이동자	정착 이동자	2차 이동자	귀환 이동자	합계
성	남자	51.6	50.8	46.4	50.4	51.7	48.8
	여자	48.4	49.2	53.6	49.6	48.3	51.2
연령	14 이하	25.4	20.5	8.5	9.7	23.7	15.8
	15~19	12.7	14.1	5.1	4.1	6.1	8.2
	20~24	8.9	17.3	5.2	10.3	8.2	7.1
	25~29	9.0	20.3	8.7	18.5	13.5	9.4
	30~34	6.6	10.3	11.1	19.0	15.8	9.7
	35~39	6.0	5.6	12.8	14.0	13.1	10.0
	40~44	6.3	3.5	12.5	8.3	7.8	9.6
	45~49	4.8	2.0	9.2	4.5	3.7	7.1
	50~54	4.1	1.3	7.1	3.0	2.2	5.6
	55~59	3.8	1.2	5.9	2.4	1.9	4.8
60 이상	12.4	3.9	13.9	6.4	4.0	12.6	
교육	불취학	11.2	8.1	6.5	4.6	6.4	8.4
	초등학교	25.5	14.8	17.1	11.0	19.3	20.3
	중학교	13.6	6.4	14.9	8.1	9.8	13.9
	고등학교	29.9	31.0	38.1	38.3	33.6	34.6
	초급대	8.4	16.2	8.5	12.7	10.7	8.7
	대학교	11.2	23.1	14.5	24.5	19.4	13.7
	대학원 이상	0.2	0.3	0.5	0.8	0.8	0.4
혼인상태	미혼	40.5	51.1	18.7	25.9	28.8	27.3
	유배우	50.2	43.6	71.1	66.9	64.3	63.0
	사별	7.6	3.9	8.1	4.5	3.5	7.7
	이혼	1.7	1.4	2.2	2.7	3.3	2.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63.0	61.0	56.9	60.7	66.1	59.7
	실업자	5.6	5.8	6.9	6.6	6.4	6.4
	가사 및 학생	31.5	33.3	36.2	32.6	27.5	33.9
직업	전문·기술	8.0	15.5	14.4	20.9	14.0	12.0
	행정·관리	42.3	36.2	20.0	22.8	39.5	30.3
	사무	8.2	13.5	11.9	15.2	10.8	10.5
	판매	6.6	6.3	11.8	8.9	8.4	9.3
	서비스	4.6	7.7	9.0	9.1	7.5	7.1
	농·임·어업	16.8	1.5	5.2	1.3	5.3	9.9
	생산·운수·장비·노무	13.5	19.2	27.7	21.8	14.5	21.0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자의 비율이 높아, 이동자들은 주로 이들 산업부문에 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 직업을 보면 특히 2차 이동자의 경우에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고학력 전문·기술직의 이동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도 봉급자의 비율이 1차와 2차 이동자에서 매우 높아 신규 취업이나 전근, 전직 등 직업관련 이동이 매우 주요한 이동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4. 인구이동의 이유

센서스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자료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이동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서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인구이동 분석이 가능한 전국적인 표본의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즉 1966년에는 1966년 센서스의 사후조사 성격의 특별조사에 인구이동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하였고, 1983년과 1997년에는 인구이동만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제 <표 13-10>은 그 중 1966년과 1997년 특별조사에서 집계한 이유를 비교한 것으로서, 이동이유는 각 조사에서 사용한 분류를 그대로 정리하였다. 이때 표에서 이동자는 조사시점과 그 5년 전 사이에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로써 5세 이상 이동자 전체와 가구주를

<표 13-10> 인구이동의 이유, 1966, 1997

(단위: %)

1966			1997		
이동 이유	전체이동자	가구주	이동 이유	전체이동자	가구주
구직/생활고	13.1	30.0	직업	19.3	36.4
직장/사업	17.9	41.6	교육	7.1	10.4
취학/교육	9.2	4.9	주택	13.2	22.9
주택	9.2	15.8	가족	56.2	23.5
가족	47.9	5.5	주거/근린환경	2.7	4.5
건강	0.4	0.4	자연환경/기타	1.5	2.3
기타	2.3	1.7			
합계	100.0	100.0	합계	100.0	100.0

자료: 최인현·박재수(1969); 통계청(1998).

따로 정리하였다.

〈표 13-10〉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이동이유의 변화를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구직·취업·전근 등 취업관계 이유는 대폭 줄고 그 대신 주택, 가족, 교육 이유가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66년에는 가구주의 71.6%가 구직, 직장, 사업 등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하였으나 1997년에는 그 비율이 36.4%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대로 주택관련 이유는 1966년의 15.8%에서 22.9%로 그리고 가족관련 이유도 5.5%에서 23.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산업화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에는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따라서 이동이 구직과 취업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인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는 도시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대도시 주변에서의 대도시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도시간 취업과 교육 목적의 이동과 더불어 대도시권 내에서의 주택과 분가 등 가족 이유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주택과 가족관련 이유가 증가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및 대규모 주택단지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수도권 인구이동

1.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30년간의 인구이동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표 13-11〉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을 보면 1965~1970년 기간 중 총전입 인구는 116.4만 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1975~1980년에는 141.4만 명, 그리고 1985~1990년에는 154.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1995~2000년에는 1965~1970년보다도 적은 113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가 최근 들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13-11〉 수도권 인구의동, 1965~2000

(단위: 천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수도권내 이동	373	747	1,656	1,962
경기 → 서울	251	311	440	432
→ 인천	-	-	102	122
인천 → 서울	-	-	64	65
→ 경기	-	-	65	119
서울 → 경기	122	436	825	1,098
→ 인천	-	-	160	126
수도권외 전입	1,164 (100.0)	1,414 (100.0)	1,547 (100.0)	1,130 (100.0)
서울 ←	940 (80.8)	945 (66.8)	829 (53.6)	535 (47.3)
인천 ←	-	-	151 (9.8)	96 (8.5)
경기 ←	224 (19.2)	469 (33.2)	567 (36.6)	499 (44.2)
수도권외 전출	195 (100.0)	443 (100.0)	622 (100.0)	881 (100.0)
서울 →	126 (64.6)	317 (71.6)	392 (63.0)	432 (49.0)
인천 →	-	-	45 (7.2)	95 (10.8)
경기 →	69 (35.4)	126 (28.4)	185 (29.8)	354 (40.2)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69 (100.0)	971 (100.0)	925 (100.0)	249 (100.0)
서울	814 (84.0)	628 (64.7)	437 (47.2)	103 (41.4)
인천	-	-	106 (11.5)	1 (0.04)
경기	155 (16.0)	343 (35.3)	382 (41.3)	145 (58.2)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또한 수도권 전입자의 수도권 내에서의 목적지도 지난 3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인다. 즉 1965~1970년에는 수도권 전입자의 81%가 서울로 전입하고 있었으나 점차 서울 전입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 전입자의 비율은 증가해 1985~1990년에는 서울로 53.6%, 그리고 경기도로는 36.6%가 전입하였다. 그러나 1995~2000년에는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47.3%와 44.2%가 전입하고 있어, 이제는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자 중 서울과 경기도로의 전입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최근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의 형성이 가속화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상당수가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는 전출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65~1970년에는 19.5만 명이 전출해 나갔으나 1985~1990년에는 62.2만 명, 그리고 1995~2000년에는 88.1만 명으로 큰 폭으로 전출자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의 수도권 전출자의 전출지를 보면 서울에서 49%,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51%가 전출해 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전출해 나가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입과 전출의 차이인 순이동은 1990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이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1965~1970년의 5년간 수도권 내·외간 전입과 전출의 결과 수도권은 약 97만 명의 전입 초과를 보였다. 이는 1975~1980년에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1985~1990년에는 약 93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1995~2000년에는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24.9만 명으로 대폭 감소해 인구가동 유형 상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구가동에 의한 인구의 증가는 최근에는 서울에서보다도 경기도에서 더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즉 1965~1970년에는 인구가동에 의한 수도권 인구증가분의 84%를 서울에서 차지하였으나, 1985~1990년에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47.2%와 41.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995~2000년에는 서울이 41.4%, 경기도가 58.2%로 이제는 경기도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수도권 인구가동에서 두 가지 변화가 발견되는데 첫째는 그동안 가속화되어 왔던 수도권 인구집중이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고 둘째는 이동의 목적지가 서울에서 점차 경기도로 옮겨가 이제는 경기도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수도권 내에서의 변화는 이제는 서울이 거의 도시성장의 한계점에 다달아 주변 대도시권 지역으로 기능이 분산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는 지방에서 이동할 잠재적 인구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과거에 비해 지방 대도시가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이와 같은 인구가동의 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

〈표 13-12〉 수도권 인구이동의 비중, 1965~2000

(단위: 천 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수도권외에서 전입	1,164 (47.4)	1,414 (37.8)	1,547 (28.5)	1,130 (21.0)
수도권외로 전출	195 (7.9)	443 (11.8)	622 (11.4)	881 (16.4)
수도권내 이동	373 (15.2)	747 (20.0)	1,656 (30.5)	1,962 (36.4)
합계	1,732 (70.5)	2,604 (69.6)	3,825 (70.4)	3,973 (73.8)
전국 시·도간 이동	2,457 (100.0)	3,739 (100.0)	5,435 (100.0)	5,386 (100.0)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도권의 위상을 정리해 보면 〈표 13-1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대체로 전국 시·도간 총이동의 약 70%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은 크게 수도권으로의 전입, 수도권에서의 전출,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의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외로의 전출은 197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는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변화 유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내의 신도시와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로 수도권 내 이동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그러면 그 동안 인구이동 면에서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는 어디인가? 〈표 13-13〉에서 보면 1990년까지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내보낸 도는 전남, 충남, 전북, 강원 등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1965~1970년의 경우 총 수도권 전입자 116만 명중 22.0%인 21만 명이 충남으로부터 전입하였다. 그 다음이 전남의 18.0%, 그리고 경북 13.4%, 전북 13.2%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1975~1980년에는 다소 바뀌어 수도권 전입자 중 전남 지역에서의 전입이 2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이 18.2%, 그리고 전북 13.6%, 경북 12.7%의 순이었다. 한편 1985~1990년에는 그전 10년과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14.8%, 충남에서 13.5%가 전입해 가장 많은 전입자를 내고 있다 또한

〈표 13-13〉 수도권 전입자의 전(前)거주지별 비율, 1965~2000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부산	5.8	5.5	7.6	9.8
대구	-	-	4.3	6.3
광주	-	-	4.1	5.6
대전	-	-	3.2	6.2
울산	-	-	-	2.4
강원	10.2	12.3	12.7	10.4
충북	9.3	8.6	7.5	6.5
충남	22.0	18.2	13.5	9.5
전북	13.2	13.6	12.7	9.5
전남	18.0	20.3	14.8	8.9
경북	13.4	12.7	8.7	7.8
경남	6.8	6.0	7.0	6.4
제주	0.5	0.8	1.1	1.6
외국 및 미상	0.9	2.0	2.7	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전입자(천명)	1,163	1,415	1,549	1,134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새로이 강원이 12.7%로 전북과 더불어 많은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1995~2000년에는 강원도가 10.4%로 가장 많은 인구를 수도권으로 전출시켰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9.8%, 그리고 충남과 전북이 각각 9.5%씩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으로부터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지난 30년 간의 수도권 전입자의 시·도별 분포 비중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최근으로 올수록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전입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강원 등 도지역에서의 전입 비중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도권 전입자의 도별 분포 비중은 각 도의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인구가 많은 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표 13-14〉에서는 인구이동 면에서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지역을 가려내기 위

〈표 13-14〉 수도권으로의 이출률, 1965~2000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부 산	4.7	3.2	3.4	3.2
대 구	-	-	3.3	3.2
광 주	-	-	7.1	5.6
대 전	-	-	5.7	6.1
강 원	6.5	9.3	11.4	8.7
충 북	7.0	8.0	8.3	5.8
충 남	8.8	8.7	9.9	6.6
전 북	6.1	7.8	8.9	6.2
전 남	5.2	7.2	8.1	5.3
경 북	3.5	3.7	4.5	3.6
경 남	2.5	2.6	3.1	2.9 ¹⁾
제 주	1.8	2.7	3.5	3.9

주: 1) 울산 포함.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해서 각 도의 인구규모를 감안한 수도권 이출률을 계산하였다. 이때 각 지역의 인구는 인구이동의 시작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13-14〉에서 보면 1975년이래 수도권 이출률이 가장 높은 도는 강원으로서 예컨대 1985~1990년 기간 중 11.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85~1990년 5년간 강원도 주민의 11.4%가 수도권으로 전출해 나간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출율이 매년 높아져 1965~1970년의 6.5%에서 1975~1980년에는 9.3%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8.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이유 이외에도 자체 인구를 유인할 만한 대도시나 기간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도권 의존율이 높은 도는 충남으로서 충남 인구의 6.6%가 최근 5년간 수도권으로 이출하였다. 이들 두 지역 이외에도 이출률이 높은 도는 전북의 6.2%, 대전 6.1%, 그리고 충북의 5.8%의 순으로서 호남과 충청, 강원은 6% 이상의 전출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영남 지역은 대구를 포함하여 전출율

이 3~4%에 머물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도의 수도권 전출율은 대체로 199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동이 가능한 인구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3.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이제 이 절에서는 수도권 전출입자의 특성을 분석하려 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가동의 중심지역이고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의 인구과잉집중 문제가 항상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수도권 전출입자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향후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표 13-15〉에서는 1995~2000년의 5년 사이에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전입자와 1995년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2000년에는 수도권 외로 전출해 나간 전출자, 그리고 1995년과 2000년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서로 비교하려 한다. 이때 거주자는 수도권 내에서 이동한 사람도 포함한다.

우선 성별 분포를 보면 전입자 중에는 여자가 많고 전출자는 남자가 더 많아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입자 중에는 25~29세 연령층이 2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4세, 30~34세로서 20~34세 연령층이 전체 전입자의 52.1%를 차지해 젊은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이 두드러진다.

한편 전출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14세 이하를 제외하면, 30~34세가 1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5~29세, 35~39세의 순이다. 이들 세 연령층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전입자에 비해 5세 정도 더 나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 집단을 비교해보면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 다 거주자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나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꾸로 14세 이하 유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거주자에서 제일 높고, 전출자, 전입자의 순으로 낮다.

다음으로 교육정도를 보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를 비교했을 때, 전입자의

〈표 13-15〉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1995~2000

(단위: %)

	구분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성	남자	47.5	50.9	49.4
	여자	52.5	49.1	50.6
연령	14 이하	13.7	20.0	22.4
	15~19	6.4	4.5	7.6
	20~24	15.7	7.2	6.4
	25~29	22.1	14.4	9.1
	30~34	14.3	17.6	9.6
	35~39	9.8	14.4	9.9
	40~44	6.5	8.1	9.4
	45~49	3.4	4.0	6.7
	50~54	1.9	2.4	5.2
	55~59	1.3	2.0	4.3
	60 이상	4.9	5.5	9.4
교육	불취학	5.4	7.0	13.3
	초등학교	12.2	17.2	16.6
	중학교	7.1	9.0	12.4
	고등학교	31.0	34.5	34.6
	초급대	13.8	9.6	8.4
	대학교	29.5	21.9	14.3
	대학원 이상	1.2	0.9	0.4
혼인상태	미혼	41.1	23.3	28.6
	유배우	52.7	70.0	63.0
	사별	4.2	4.1	6.2
	이혼	2.0	2.6	2.2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61.7	62.5	62.3
	실업자	6.7	5.6	6.2
	가사 및 학생	31.6	32.0	31.6
직업	전문·기술	25.4	12.3	13.1
	행정·관리	26.6	38.2	40.0
	사무	15.4	10.3	10.5
	판매	6.8	8.7	8.7
	서비스	7.5	8.6	6.2
	농·임·어업	0.3	5.5	2.0
	생산·운수·장비·노무	18.1	16.5	19.6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 전출자, 거주자의 순으로 학력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전입자 중에는 30.7%가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인데 비해 전출자에서는 22.8%, 그리고 거주자 중에는 14.7%만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거주자와 전출입자간의 학력수준 차이가 크다. 전입자 중에서 고학력자가 많은 것은 대학교 재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전입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전입자에서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미혼 비율이 41.1%로 가장 높고 전출자에서 미혼이 가장 적다. 일반적으로는 이동자 중에서 미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거주자보다 오히려 전출자 중에서 미혼 비율이 적어 다소 의외의 결과로 여겨진다.

경제활동상태는 세 집단 간에 그리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다만 실업자 비율이 전입자 중에서 가장 높고 거꾸로 전출자 중에서 낮아 구직을 위한 수도권 전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력과 더불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직업을 보면,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이 전입자 중에서 현격히 높아 25.4%로서 전출자나 거주자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고학력 전문기술을 지닌 고급 인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아직도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고급인력의 전입은 줄어들지 않아 향후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Ⅶ. 요약과 결론: 정책적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40년간의 우리 나라 지역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유형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1990년까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이었다.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서울은 1990년대 전반기부터, 그리고 부산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변화를 나타내 도시화의 단계로 볼 때 상대적 분산단계에 진입한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근교 경기도의 인구집중 추세는 지속되어,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00년까지도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되어 왔다. 다만 199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동안 가속화되던 수도권 집중 추세가 상당히 완화된 현상을 보여 고무적이다.

이러한 집중 추세의 반전현상은 이제 한국사회의 도시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점차 지방 대도시들이 지역거점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인구이동에 있어서도 이동의 총량은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0년에는 구·시·군간 이동률이 24.6%에 이르렀으나 이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이동률이 다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간 인구이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형성의 영향으로 이들 권역 내에서의 시·도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순이동은 1980년대 후반의 서울의 마이너스 순이동을 시발로 부산, 대구 등도 이제는 순이동에서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의 전출초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다른 대도시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이동성향의 감소현상은 전체인구를 이동유형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비이동자의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1차나 2차 이동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이동 이유도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여 취업 등 경제적인 이유의 비중은 감소하고 주택과 결혼, 분가 등 가족관계 이유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동이유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도 역시 대도시권화의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대도시의 주택 부족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1995년을 기점으로 순이동의 양이 급속히 감소해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내의 목적지도 과거 서울 중심에서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출하는 중요한 지역은 일관성 있게 전남, 전북, 충남, 강원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입자의 수는 1995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에서 고학력의 고급 인력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제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199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경향이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도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급인력들은 선별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의 우수인력 양성과 이들의 지방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연구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첨단산업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향후의 정책은 이점을 유념해서 지방 대도시의 우수인력 양성과 정착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제14장 도시화

장 세 훈

I. 머리말

지난 20세기를 ‘도시화의 세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간 한국사회의 도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도시 인구의 비중이 1915년 2.8%에 지나지 않다가 2000년 현재 79.7%로 급등했다는 사실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전근대적인 농촌형 사회에서 근대적인 도시형 사회로 변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서울로의 ‘일극집중(一極集中)’ 현상이 완화되는 등, 도시화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거의 도시화 추이를 점검하고, 그 미래상을 진단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도시화가 어떠한 궤적을 그려왔는지, 또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촉발시킨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화는 도시-농촌간, 또 도시간 관계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20세기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종단적 분석과 도시 인구 성장의 구조적 차원을 살피는 횡단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분석의 기초 자료로는 그 동안의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화의 전반적인 추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여러모로 유용하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자료도 적절히 활용해서 이들 공식 통계 자료의 빈틈을 메울 방침이다.

II. 도시화에 대한 연구 동향

도시화는 근대화의 공간적 표상인 데다가, 특히 급속한 도시화가 각종 사회 문제를 증폭시켜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그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크게 보아 인구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문화적 접근, 그리고 정치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접근은 도시화를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파악하고, 인구의 규모와 이동을 중심으로 도시화 과정을 분석해 왔다(윤종주, 1991; 최진호, 1995, 1997; ESCAP, 1980; Kwon, 1977). 이는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도시화 과정의 전반적인 추이를 밝히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러나 도시화를 인구가동의 문제로 좁혀 볼 뿐 아니라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단순히 '서술'하는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리학적 접근은 도시화를 건조환경(建造環境, built environments)으로서의 도시 공간의 형성 및 확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도시의 공간적 분포 및 도시 내 공간 배치 문제에 주목해 왔다. 특히 도·농간, 도시간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집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권용우, 2001; 김인·권용우, 1988; 이기석, 1998; 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Lee, 1979). 이들은 물리적 공간의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도시화의 양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간 구성과 사회변동간의 관계를 소홀히 다루어,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로 문화적 접근은 Wirth(1938)의 도시성(urbanism) 개념에 기초해서 도시화를 인구 집중이나 도시 공간 구조 등과 같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인주의, 비인격적인 인간관계 등과 같은 근대적인 의식 및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도시 주민의 의식 및 생활에 주목한다(강대기·홍동식, 1982; Oh and Lee, 1980). 이는 도시의 물리적 특성, 예컨대 Wirth가 논의한 규모, 밀도, 이질성을 통해 도시적 특성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도·농간 차이를 통해 도시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나름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도시성을 통한 도시화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역사적 추이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이러한 도시성이 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사실은 근대사회의 일반적 속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학적 접근은 도시화를 도시 공간의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사회세력들간의 갈등을 통해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변모하는 한편으로 도시 공간에서 근대적인 시민이 양성되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철거와 재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의 재편, 신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의 공간적 확장 등을 둘러싸고 국가기구의 '공익성',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권 등이 각축하는 도시정치 과정에 주목해 왔다(강명구, 1997, 1999; 박재욱, 1996, 1999; 염미경, 1996, 1997; 장세훈, 1998a, 1999).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서 역동적인 도시화 과정을 담아낼 수 있었지만, '도시적 특성'을 확연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접근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도시화의 여러 단면을 제각기 다루고 있어, '장님 코끼리 더듬는' 식의 잘못을 범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딛고 도시화의 전모를 밝히는 학제간 종합 연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특정 접근방식에 입각한 개별 연구들이 좀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구학적 접근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을 거시적이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화의 역사적 과정과 그 구조를 밝히려는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도시화에 대한 인구학적 연구 역시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 글에서 다룰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 쟁점으로는 도·농의 경계 설정 문제, 과잉도시화 문제, 도시간 불균등 발전의 문제, 도시화의 요인 설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도시화가 농촌과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획은 도시화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구획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회 전체가 도시화되어 농촌과 구별되는 도시적 특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데다가,

산업사회, 대중사회, 자본주의사회의 일반적 속성과 뒤섞여 도시 '지역'만의 특성을 색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권태환, 1984; Castells, 1978). 따라서 도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하나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를 규정짓는 방식이다. 센서스 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료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다수 연구가 이 방식을 취해 왔다(김남일·최순 외, 1997; 문현상 외, 1992; 석현호, 1986; 윤종주, 1991; 최진호·최병선, 1993). 그러나 도시 행정구역의 구획 기준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또한 행정적 편의에 따라 지역적 속성을 무시한 채 엉뚱하게 도·농의 지역 편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농촌적 속성과 도시적 속성이 중첩된 '전이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화 단계에 따라 도·농 분류를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과 도·농 구획간의 불일치가 낳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규모라는 별도의 척도로 도·농을 구분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송병락, 1978, 1979; 송병락·Mills, 1980). 그러나 이 방식 역시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인구규모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자의적 구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데다가, 도·농 구획에서 인구밀도가 규모 못지 않게 중요한 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성'을 판별하고, 이에 근거해서 도·농의 구획을 나누고, 그 구획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과제를 모두 수행할 수 없는 까닭에, 이 글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획하는 기존 방식에 입각해서 도시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앞서의 '전이 지역' 문제이다. 그런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이 지역을 도·농 어디에 위치 지우기가 쉽지 않고, 또 동일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이 지역인 읍부(邑部)의 인구를 농촌인구로 분류하는 기존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도·농 통합시의 구획 문제이다. 행정구역상으로 도·농 통합시의 리부(里部)는 도시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인한 도·농 격차의 심화를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행정적 편의가 강하게 작용

해서 도·농 통합시가 탄생한 사실에 주목한다면(이재원, 1996; 임석희, 1996), 도·농 통합시의 리부(里部)는 동부(洞部)와는 이질적인 농촌지역이지, '도시화된 농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농 통합시의 리부(里部)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과잉도시화론은 제3세계에서 도시화가 산업화와 보조를 맞춰가는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산업화보다 앞서 간다면, 이러한 제3세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김두식, 1991; 최중현, 1991; Golden and Davis, 1955). 즉 도시로 몰려든 대규모의 이농 인구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도시빈곤층으로 적체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범죄, 빈곤 등의 도시문제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서구의 도시화를 표준으로 삼아 제3세계의 도시가 '비정상적인 과잉 상태'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무의미하다. 특히 서구에서도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속도가 서로 어긋나면서 과잉도시화 양상이 빚어졌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도시를 전체 사회 맥락과 떼어내어 도시 내 문제로만 한정지워 도시의 '과잉'을 주장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과잉도시화는 농촌의 과잉이 이농을 통해 도시로 전파되는 과잉 인구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석현호, 1986: 111; 조혜인, 1978).

이러한 비판처럼 우리 사회에서 과잉도시화 현상이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자리잡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과잉도시화 현상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과잉' 여부를 판별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도시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수위도시화', '중주도시화'¹⁾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한편에서는 국가 주도의 불균등 성장 전략으로 서울

1) 수위도시화, 중주도시화는 '특정 국가의 어느 한 도시가 다른 도시들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과도하게 급성장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면서, 수위도시화가 가속되었다고 주장한다(문석남, 1993: 47-50; 문현상·전학석, 1992: 65-76; 홍경희, 1986: 90-92).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간 불균형 현상이 일시적으로 심화되기도 했지만, 도시간 관계가 반드시 '영·합 관계(zero-sum relationship)'는 아니라고 본다. 즉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되었지만, 이러한 집중 추세가 다른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강명구, 1993: 232-239, 1999: 77-79). 따라서 도시 규모별 성장 추이를 통해 이 문제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 흔히 도시화는 이농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농촌의 인구 과밀과 도시의 풍부한 일자리라는 유출/유입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증가는 단순히 이농의 결과만은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도시 영역이 확장되거나, 기존의 농촌지역이 도시로 지정되거나, 또는 도시의 자체 인구 재생산 과정 등을 통해서도 도시화가 진행된다(최진호, 1997; 최진호·최병선, 1993; Kwon, 1988).²⁾ 그런데 이들 요인은 시기별로 그 영향력을 달리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요인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며 도시화를 진행시켜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Ⅲ. 20세기 한국의 도시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도시화 과정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20세기 전반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외 이주로 이농민의 도시 이주가 유예된 시기이고, 2단계는 식민지 해방과 민족 분단, 한국전쟁 등과 같은 잇따른 사회 격변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진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시기이다. 다음 3단계는 국가 주도형 산

2) 이러한 점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인구의 자연증가를 통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실질적 도시화'와 행정조치 등으로 농촌 인구가 단순히 도시 인구로 산입되는 '명목적 도시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南亮三郎, 1972: 180-181).

업화 전략에 입각한 고도성장에 발맞춰 대규모 이농이 이루어진 1960~1980년대 시기이고, 마지막 4단계에는 고도성장의 고비를 넘긴 1990년대 이후 도시화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해지고 ‘역도시화(逆都市化, counter-urbanization)’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별로 20세기 한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자.

1. 유예된 도시화: 식민지 시대의 도시화

전통사회의 신분제적 질서와 교통·통신수단의 취약성 등으로 조선시대까지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일제가 농촌에 대한 수탈을 강화해서 농민의 토지 이탈을 부추기는 한편,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새로운 도시 개발에 앞장섬으로써, 도시화가 촉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표 14-1>에서 보듯이, 1915~1944년 간 농촌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채 1%도 안 되는 정체 상태에 머문 데 반해, 도시 지역은 연평균 7%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15년 전체 인구의 2.8%인 51만여 명에 지나지 않던 도시 인구는 1920~1930년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1930년 총인구의 5.6%,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13.2%인 340만여 명

<표 14-1> 일제시대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915~1944

(단위: %)

연도	총인구 증가율	도시인구 증가율	농촌인구 증가율
1915~1920	0.52	3.32	0.43
1920~1925	1.14	7.29	0.91
1925~1930	1.53	6.96	1.25
1930~1935	1.69	6.18	1.40
1935~1940	1.22	11.90	0.20
1940~1944	1.60	4.90	1.14
1915~1944	1.27	6.79	0.88

주: 1935~1940년 도시 인구의 급증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아울러 조선총독부가 그 동안 규제해 왔던 부(府)의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6개 읍을 부(府)로 승격시킨 데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
자료: 조선총독부(1926, 1934, 1936, 1944, 1945); Kwon et al(1975).

으로 성장을 거듭 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인구이동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농 인구가 모두 도시로 몰려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 중 상당 수는 일제의 혹독한 수탈을 피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만주, 사할린, 일본 등지로 이주했다. 실제로 1910~1940년 간 해외로 이주한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국내 인구이동은 약 87만 명에 불과했다(문석남, 1993: 34; 석현호, 1987: 118). 물론 20세기 전반기 일본인의 국내 유입 인구가 70만 여명으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정착했다는 점에서(권태환 외, 1997: 108), 전체 이동 인구 가운데 도시 유입 인구의 비중이 결코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농 인구의 대다수가 해외로 이주해서 도시화 속도가 늦춰짐으로써, 도시의 급팽창이 ‘유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시대의 도시화 과정은 다시 크게 두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920년대까지의 도시화로, 일제가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항구 도시 건설에 주력한 시기이다. 일제는 1910년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해서 12개 부(府)를 설치하면서, 미곡 수출 및 일본의 공산품 수입을 목적으로 경성, 대구,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府)를 모두 항구도시로 지정했다(손정목, 1996; 홍경희, 1979: 12-27).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과 일본과의 교역 증대에 힘입어, 부산, 인천, 원산, 목포, 군산, 청진 등의 임해도시가 새롭게 발달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1930년대 이후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북부 내륙의 산업도시가 중점 육성된 시기이다. 당시 일제는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병참기지화 전략에 따른 ‘남농북공(南農北工)’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부 내륙 지방에 광공업 도시를 잇달아 건설하는 한편, 철도교통의 활성화로 이들 도시간의 유기적 연계를 꾀했다. 이에 따라 그 이전까지 12개로 묶여 있던 도시 수가 1944년까지 21개로 증가했으며, 1935~1940년 간에는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의 도시화는 일제의 식민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이 굴절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적 도시화는 그 시발점에서부터 자생적 발전의 궤도에

서 벗어나 파행적인 경로를 밟아갔다고 할 수 있다.

2. 과잉도시화: 식민지 해방과 전쟁, 그리고 도시화

두 번째 단계는 1945~1960년 간의 시기로, 식민지 해방으로 그 동안 유예되었던 도시화의 물결이 쇄도함과 동시에,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에 따른 대규모 인구이동 과정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인구 유입으로 ‘과잉도시화’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해방을 맞이해서 해외동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1945~1949년에만 일본으로부터 138만여 명, 만주·사할린 등지에서 42만여 명 등 약 180만 명이 유입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월남 인구가 약 74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더해 한국전쟁 과정에서 약 70만 명이 사망했지만, 65만여 명의 월남민이 남한으로 이주했다(Kwon, 1977). 문제는 이들 유입 인구가 전국에 고루 분산된 것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귀환인구, 월남인구가 도시로 집중된 것은 해방 후 피폐한 농촌 경제가 이들 신규 유입민을 부양할 여력이 없었고, 경제력이 빈약한 이들로서도 농토를 장만해서 농촌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데다가, 각종 빈민구제사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1955년에 실시된 간이총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이입 인구의 66.7%가 도시 지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별로 보면 일본 출신의 53.4%, 중국 출신의 70.8%, 북한 출신의 94.3%가 도시로 유입되었다(윤종주, 1985: 60). 그 결과 1949~1955년간 도시 인구는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47만여 명에서 528만여 명으로 늘어 도시화율이 17.2%에서 24.5%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던 개방적 인구이동 시기에 도시로의 진입을 유예했던 이농 인구들이 봉쇄적 인구이동 시기로의 이행 단계에서 도시로 대거 유입되면서, 일종의 ‘도시 폭발’을 가져온 것이다.

물론 ‘유예된 도시화’가 당시 ‘도시 폭발’의 도화선이기는 했지만, ‘도시 폭발’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우선 해방 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러

한 도시인구 폭증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정부는 ‘행정단위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 시로 승격한다’는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1949년 14개였던 시를 1955년 25개로 늘렸다(권태환, 1980: 208-210). 이와 같은 ‘명목적 도시화’는 당시 도시 인구 증가의 1/3 가량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49~1955년간 도시 인구 증가의 18%만이 월남민일 뿐, 81.2%는 이농민에 의한 사회적 증가의 산물이며, 그 대부분인 62%는 남한 내 이농민들로 이루어졌다(홍경희, 1979: 57).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국내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도시화의 물결을 선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두는 일제가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이농의 물결을 억제하거나 우회시킨 데 따른 문제점이 해방 이후 분출한 데 따른 것으로, 파행적 도시화가 정상 궤도로 되돌아가는 이행기적 양상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유예된 도시화’가 해방 후 ‘도시 폭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 폭발’은 1950년대 ‘과잉도시화’와 ‘수위도시화’ 현상을 촉발시켰다. 우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그 전후 시기에 비추어볼 때, 해방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와해된 도시의 경제 기반이 복구되지 못한 탓에, 제조업 성장률이 도시의 인구증가율을 크게 밀돌아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예컨대 1961년 현재 서울의 취업자는 약 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해서, 1930년의 취업률(30%)에도 못미쳤으며, 도시의 정상 취업률(45%)을 크게 밀돌았다. 따라서 신규 이농민들은 행상, 지게꾼, 막노동 등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고, 후방의 농촌경제로부터 지원 받아 부족한 생계를 매워야 했다(조석곤·오유석, 2001). 원조경제의 혜택을 받은 서울마저 이 지경이었던 까닭에, 다른 지방 도시는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결국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도시 폭발’이 곧바로 ‘과잉도시화’로 나아갔던 것이다.

또한 월남 인구 가운데 62%가 서울에 집중되는가 하면, 1950년대 후반 서울의 순인구 유입량이 시·군간 순이동량의 93%에 달하는 등, 이농 인구의 대다수가 서울로 몰려들었다(윤종주, 1986: 25; Kwon, 1977: 390-395).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다면 전주, 대구, 대전, 광주, 원주 등 ‘군사도시’적 성격을 띤 일

부 지방 도시들만이 전국의 인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마저 보였다(홍경희, 1979: 45-46). 따라서 서울과 기타 도시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다.

결국 이 시기의 도시화는 식민지 시기에 유예되었던 도시화의 물결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도시화의 물결이 중첩되어 ‘과잉도시화’와 ‘수위도시화’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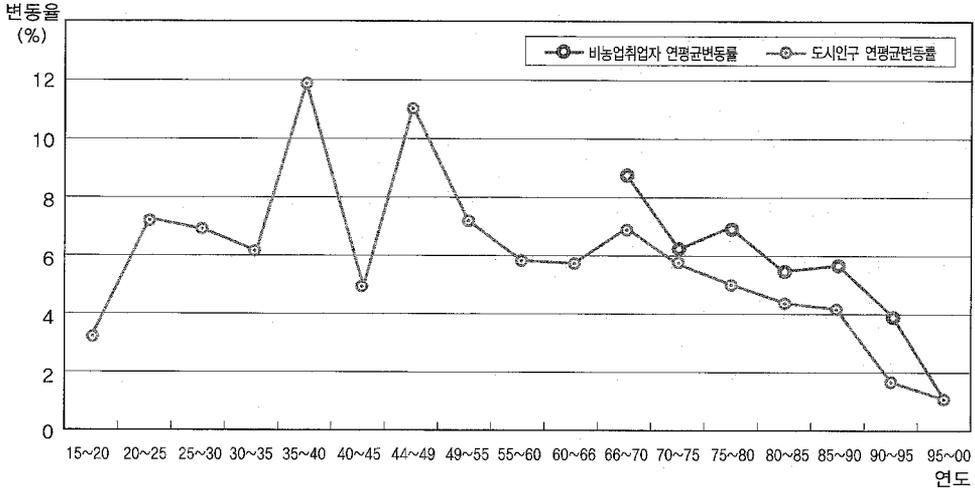
3. 압축적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의 병진

그 이전 시기가 급작스런 사회변동에 따른 ‘도시 폭발’의 시대였다면, 1960년대 이후는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따른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가속된 시기였다. 특히 1960년대에는 개발도상국 평균 도시화율이 21.9%에서 25.8%로 완만하게 성장한 데 반해, 한국의 그것은 28.0%에서 41.2%로 급상승을 기록했다(UN, 1980). 이러한 고도성장 추세는 교통의 발달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집적의 이익’의 확대 등에 힘입어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도시화율은 1980년 57.3%, 1990년 74.4%로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는 도시의 인구증가(1,087만 명)가 전국 인구증가(598만 명)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서구 사회가 지난 두 세기 간에 밟아온 도시화의 경로를 30~40년 만에 따라잡는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압축적 도시화’로 이처럼 선진국 따라잡기에는 성공했지만,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이농이 일어난 탓에 농촌의 희생이 극심했다. 우선 이미 1960년대 중·후반부터 농촌의 절대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³⁾ 또한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서서 마침내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능가하는 도·농 인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농촌 문제가 심화되었고 도·농간 격차도 더

3) 이는 빠른 도시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의 ‘상대적 감소’ 현상만이 관찰되는 제3세계 일반의 도시화 추세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그림 14-1) 산업화와 도시화의 추이, 1915~2000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1g, 2002h, 2002j).

육 벌어졌다.

그런데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가 제조업의 성장과 발맞추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는 그 이전의 도시화와 뚜렷이 구분된다. <그림 14-1>에서 보듯이,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1960년대 초반부터 산업화 속도는 도시화 속도를 앞섰다. 물론 1950년대 ‘도시 폭발’의 유제가 여전히 남아 신규 이농민의 도시 적응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용기회의 증대로 도시의 이농민 수용 능력이 커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다. 또한 군 복무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기회를 가졌던 미혼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났고, 이들이 도시 공식부문에 비교적 손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되면서(윤중주, 1975), ‘과잉도시화’의 흔적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갔다. 이는 1950년대까지 농촌의 유출 요인이 이농을 크게 부추겼던 데 반해, 1960년대 이후에는 농촌의 유출 요인과 도시의 유입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도시화를 가속시켰음을 뜻한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이와 같은 병진은 도시화의 양상도 바꿔 놓았다. 우선 이미 거대도시로 변모한 서울이 여전히 도시 성장을 주도했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신흥 공업도시들이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등장했다. 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울산, 마산, 포항, 여수, 창원 등과 같은 남동 지역의 공업도시들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또한 서울의 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수원, 인천, 부천, 성남, 안양, 의정부 등 주변 위성도시들도 서울의 제조업 기능 및 주거 기능을 나눠 가지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남동 지역의 신흥 공업도시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도시 인구 집중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도시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한 점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표 14-10>에서 보듯이, 1960년대에는 ‘성장의 세레’를 받지 못한 강릉, 충주, 군산, 삼천포 등의 일부 도시들만 전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못미쳤을 뿐이며,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 도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속초와 1980년대 동해·삼천포만이 절대인구가 감소한 지역이었다. 이는 지방의 군소도시들이 대대적인 이농 추세 속에서 주변 농촌 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인구 흡인력을 지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효과를 상쇄했음을 뜻한다. 이처럼 서울 및 신흥공업도시의 성장이 다른 지방도시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정체를 부추기지 않았다는 점 또한 1950년대와 구분되는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1960~1980년대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나란히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병행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압축적 도시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4. 성숙된 도시화로의 이행: 1990년대 이후의 도시화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도시화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었다. 압축적 도시화 시기에 매 10년마다 20% 안팎씩 증가하던 도시화율은 1990년대에 5.3% 상승하는 데 그쳤고, 특히 1990년대 전반 4.1% 증가했다가 그 후반에 1.2% 증가에 그치는 등, 그 둔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도 서구와 같이 도시화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2〉 전국 도시 대비 3대 도시의 인구 비중, 1960~2000

(단위: 천 명, %)

연도	도시 인구(A) (천 명)	서울 인구(B) (천 명)	부산 인구(C) (천 명)	대구 인구(D) (천 명)	(B+C+D)/A (%)
1960	6,997	2,445	1,164	677	61.3
1970	12,710	5,433	1,842	1,064	65.6
1980	21,434	8,364	3,160	1,605	61.3
1990	32,309	10,613	3,798	2,229	51.5
2000	36,755	9,895	3,663	2,481	43.6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이러한 변화의 주된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도시 인구 집중을 부추기던 이농민의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표 14-8〉을 보면, ‘압축적 도시화’ 시기에는 매년 30만여 명이 농촌을 떠났는데, 1990년대부터 그 규모가 격감해서 1990년대에는 10년 간 총 41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탈산업화, 정보화로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이농민의 도시 정착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이농의 물결이 주춤하는 한편,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이농 대상자의 절대적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발맞추어 도시화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 한 세기 동안 도시화의 흐름을 선도하던 서울은 성장의 한계 상황에 부딪쳐 절대인구의 감소를 기록했다. 즉 10년 사이에 72만여 명의 인구가 서울을 빠져나가 1천만 명을 웃돌던 서울 인구가 2000년 현재 990만여 명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다른 대도시들의 인구 집중 추세도 완화되었다. 〈표 14-2〉에서 서울, 부산, 대구의 3대 도시 인구가 전국 도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0년 65.6%로 최고조에 달하던 이들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서 2000년에는 43.6%로 줄었다. 특히 아직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대구와 달리 1990년대부터 서울과 함께 부산도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주요 대도시들이 성장을 주도하던 양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표 14-3〉에서 보듯이, 서울의 절대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중에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도시 인구 집중의 기착지로 기능하던 서울이 이제는 도시간 인구가

〈표 14-3〉 서울 및 수도권 인구증가 추이, 1960~2000

(단위: 천 명, %)

연도	도시 인구(A) (천 명)	서울 인구(B) (천 명)	수도권 인구(C) (천 명)	B/A (%)	C/A (%)
1960	24,989	2,445	5,194	9.8	20.8
1970	30,882	5,433	8,730	17.6	28.3
1980	37,436	8,364	13,298	22.3	35.5
1990	43,411	10,613	18,586	24.4	42.8
2000	46,136	9,895	21,354	21.4	46.3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동의 새로운 출발지, 또는 도시간 인구가동의 계류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 결과 교외화의 물결이 넘쳐나면서, 서울 주변 수도권 위성도시들은 서로 연담 도시를 이루며, 하나의 거대도시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인구의 집중 대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시간 불균형은 일부 시정되었지만,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특기할 사실은 수도권 인근 신도시의 개발이다. 정부는 이미 1960년대부터 공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포항, 창원, 여천, 반월 등 새로운 공업도시를 잇따라 건설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문제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그 대처 방안으로 수도권 주변에 약 12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5개 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전반적인 도시화가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이처럼 국가 주도의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압축적 도시화'를 강행하는 모습은 현 단계 한국 도시화의 불안정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숙 단계로의 이행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과거 도시화의 유제가 사라지고, 서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화 속도가 늦춰지며 대도시 집중의 양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지역 경쟁력이 증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 추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도시화는 독일과 같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경로보다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일극집중형 발전의 길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간, 도시 간 균형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간, 도시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IV. 도시인구 성장의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20세기 도시화 과정에 관한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로 1960년대 이후 40여 년간 이루어진 도시인구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농 관계 및 도시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면서, 도시화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급속한 도시화와 도·농 관계의 변화

지난 40년간 한국의 도시는 급속한 신장세를 기록했다. 즉 1960~2000년간 전국 인구는 2,500만여 명에서 4,614만여 명으로 1.8배 가량 늘었는데, 도시 인구는 약 700만 명에서 3,676만여 명으로 약 5.3배 증가했다. 이 같은 도시 인구의 증가는 전국의 인구증가 2,114만여 명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행정구역의 개편에 힘입어 1960년 27개에 지나지 않던 도시 수가 2000년에는 79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같은 도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도시 인구의 성장으로 개별 도시 당 평균 인구는 1960년 25.9만여 명에서 2000년 52만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의 폭발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농촌 인구의 대폭적인 감축이 진행되어 왔다. 높은 출산력 수준이 1970년대까지 유지되었지만, 대규모 이농으로 인해 이미 1966년 1,941만 명을 고비로 농촌의 절대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청·장년층 중심의 이농 행태로 인해 최근에 올수록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0

〈표 14-4〉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60~2000

(단위: %)

연도	전국	도시	농촌
1960~1966	2.6	5.7	1.2
1966~1970	1.4	6.8	-1.6
1970~1975	2.4	5.7	-0.3
1975~1980	1.5	5.0	-2.2
1980~1985	1.6	4.3	-2.6
1985~1990	1.4	4.1	-4.5
1990~1995	0.6	1.6	-2.9
1995~2000	0.7	1.0	-0.4
1960~2000	1.5	4.2	-1.6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년에는 1966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38만 명만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또 도시의 증설에 따라 1960년 140개였던 군(郡)이 2000년에는 91개로 줄어드는 등, 행정구역 차원에서도 농촌의 위상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추이는 이러한 도·농간 격차의 심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4-4〉를 보면, 도시 인구는 최근 40년 동안 4.2%의 고속성장을 거듭 해 왔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80년대에도 4%대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농촌 지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1980년대 후반에는 -4.5%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의 1/4 규모로 줄어들고 이농 추세도 한풀 꺾이면서, 인구성장률이 -1% 이하로 감소했지만, 농촌의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표 14-5〉에서 1960년과 2000년의 도·농 인구의 연령구조를 비교해 보면, 1960년에는 도·농간의 연령구조가 거의 유사했다. 다만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에서 10세 미만의 유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고 청·장년층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

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했다. 그런데 대규모 이농이 거의 완료된 2000년에 이르면, 농촌의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 농촌 지역이 인구 고령화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한편, 유년층을 포함한 49세 이하 전 연령층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향후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추이에서도 도·농간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표 14-6>을 보면, 농촌 인구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따라 농촌의 가임연령 여성인구가 4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고, 특히 면부의 경우에는 1/3 수준으로 줄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에서 이들의 비중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면부에서는 1960년대에만 증가했을 뿐, 1970년대부터 정체되어 이후에는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비중 감소는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를 더욱 부추겨, 향후 인구 재생산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5】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 구조, 1960, 2000

(단위: 천 명, %)

연령	구분	1960		2000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 ~ 9		28.0	29.9	14.7	12.8
10 ~ 19		22.2	20.3	15.2	12.8
20 ~ 29		17.9	16.4	18.1	13.9
30 ~ 39		13.5	11.3	18.8	15.0
40 ~ 49		9.0	8.8	15.6	13.0
50 ~ 59		5.3	6.6	8.9	11.1
60 ~ 69		2.7	4.3	5.5	12.4
70 이상		1.4	2.4	3.2	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총수(천명)		7,000	17,992	36,642	9,342

자료: 경제기획원(1963); 통계청(2002a).

〈표 14-6〉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1960~2000

(단위: 천 명, %)

구분 연도	가임연령 여성인구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비중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읍부	면부		전체	읍부	면부
1960	1,816	4,082	531	3,551	51.8	45.6	47.1	45.4
1970	3,467	3,830	652	3,178	63.0	50.1	55.0	49.2
1980	6,218	3,648	1,148	2,500	66.1	51.8	58.0	49.4
1990	9,756	2,619	950	1,669	66.8	50.9	57.7	47.7
2000	11,021	2,133	974	1,159	65.8	49.0	57.4	43.6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이에 더해 인구의 질적인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1966년과 2000년의 도·농 간 교육수준을 비교한 〈표 14-7〉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도·농 간 비중이 86:58에서 42:17로 크게 벌어졌다. 물론 국민의 평균 교육수준이 초등 학력에서 중등 학력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중에서는 도·농 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의 확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으로, 청·장년층의 이촌향도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저학력층에서의 도·농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급속한 도시화는 이처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표 14-8〉에서 보듯이, 이농민의 절대수가 격감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농의 직접적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대규모 이농에 따른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가임연령 여성의 감소 등은 농촌의 인구 재생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즉 이농의 간접적 효과가 농촌사회의 위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도·농 격차의 심화와 그에 따른 농촌사회의 와해가 우려된다.

〈표 14-7〉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1966, 2000

(단위: 천 명, %)

구분 학력	1966		2000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무학	19.3	43.1	6.0	17.5
초등학교	39.2	43.2	10.6	24.8
중학교	21.6	8.3	12.3	13.3
고등학교	12.0	4.1	42.3	31.5
초급전문대학	1.2	0.3	10.1	5.9
대학교 이상	6.6	0.9	18.7	7.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총수(천 명)	5,694	11,453	24,473	6,797

주: 미취학 연령층 및 재학생을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경제기획원(1969): 통계청(2002a).

2.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이농과 도시화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향한 이농민의 물결은 급속한 도시화를 가속시키며, 도시 인구 성장의 주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실제로 〈표 14-8〉에서 보듯이, 1965년부터 2000년까지 35년간 농촌 지역에서 유입된 순이동인구는 8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65~1990년 사이에는 연평균 32만 명씩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농이야말로 압축적 도시화의 견인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도시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농의 효과는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4-9〉를 보면, 1960년대 후반 농촌 인구의 유입은 도시화의 3/4 가량을 설명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력했고, 1980년대까지도 이농 인구는 도시 인구증가의 40% 안팎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10% 수준으로 격감하면서, 도시화의 추진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달리 도시 인구의 자연증가는 도시화의 꾸준한 원동력이었다. 즉 이농의 물결이 거셌던 1960년대 후반을 제외한다면, 도시 인구의 자연증가는 일관되게 도시 인구 성장의 40% 안팎을 차지해 왔다. 도시의 인구규모가 그리 크

〈표 14-8〉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1965~2000

(단위: 천 명)

기간	도시		농촌		도시로의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965~1970	3,359	1,919	1,037	2,476	1,440
1970~1975	4,029	2,833	1,122	2,318	1,196
1975~1980	6,379	4,536	1,239	3,082	1,842
1980~1985	7,008	5,472	1,358	2,893	1,535
1985~1990	8,705	7,119	1,111	2,697	1,586
1990~1995	8,893	8,703	1,194	1,384	190
1995~2000	8,338	8,117	822	1,043	221

주: 센서스 자료의 한계로 도·농 통합시의 읍·면을 도시 지역으로 간주함.
자료: 김남일 외(1997: 26);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지 않던 1960~1970년대에도 도시 인구는 독자적인 인구 재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이농 인구와 함께 ‘압축적 도시화’의 쌍두마차로 기능해 왔다. 그러다가 이농인구의 절대 규모가 격감한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2/3 수준으로 커지면서, 이제는 도시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도시 인구증가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수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 조치로 1960년 27개였던 도시 수는 2000년에는 79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도시의 신설은 도시 인구증가의 20~3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에 힘입어 농촌사회가 도시로 탈바꿈하는 양상이 가파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도시화된 사회(urbanized society)’로의 진입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시 승격을 통한 도시의 인구성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기존 도시의 권역 확대를 통한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시의 과밀화, 거대화로 인해 도시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기존 도시의 공간적 확장을 억제하면서도, 도시의 넘쳐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개구리 뿔뿔기’ 식으로 도시 외곽의 농촌지역을 도시로 개발하고 대도시 외곽에 위성도시들을 대거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거대한 이농의 물결이 ‘압축적 도시화’ 시기의 초기 국면에서 도시화의

〈표 14-9〉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1960~2000

(단위: 천 명, %)

연도	도시인구 증가 (천 명)	도시인구 증가 요인(%)			
		자연증가	순이동	권역 확대	시 승격
1960~1966	2,709	42.1	40.6	9.3	8.0
1966~1970	3,223	26.8	73.2	0.0	0.0
1970~1975	3,842	47.2	45.1	2.5	5.2
1975~1980	4,638	45.7	39.7	4.1	10.5
1980~1985	5,506	44.4	36.8	1.3	17.4
1985~1990	5,866	36.3	27.0	6.2	30.4
1990~1995	2,727	72.8	7.0	1.3	19.0
1995~2000	1,719	62.2	12.9	0.0	24.9

주: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농촌 지역으로 간주함.

자료: 이한순·이우리(1983: 125); 최진호·최병선(1993: 11);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한국행정문화원(각 연도).

흐름을 주도하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일관되게 도시의 인구성장을 이끌고 간 것은 도시의 자체 인구 재생산 및 공간적 확장이었다. 이농의 효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러한 도시 내부 요인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3. 수도권 집중과 도시간 관계의 변화

급속한 도시화는 도·농 관계를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도시들간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의 일극집중 현상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1960년대까지 도시 성장의 선두주자로, 이농민의 대다수를 흡수하는 괴력을 발휘했지만, 〈표 14-10〉에서 보듯이, 이미 1970년대부터 거대도시가 되어 고도성장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1990년대에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역도시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이 압축적 도시화 과정을 밟으면서, 신속하게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의 집중 완화로 도시간 불균형 문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표 14-10〉 시기별 도시 성장 유형, 1960~2000

	고도성장도시	성장도시	저성장도시	낙후도시
1960년대 (27)	서울, 대전 (2)	부산, 인천, 수원, 춘천, 원주, 청주, 전주, 이리,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진해, 제주(17)	강릉, 충주, 군산, 경주, 김천, 마산, 충무, 삼천포 (8)	-
1970년대 (32)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수원, 마산, 진주, 포항, 제주, 청주, 이리 (11)	서울, 대구, 광주, 춘천, 원주, 강릉, 의정부, 진해, 경주, 안동, 목포, 여수, 순천, 전주, 군산, 천안, 충주, 충무 (18)	김천, 삼천포(2)	속초(1)
1980년대 (40)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창원, 포항, 구미, 순천, 전주, 제주, 천안, 청주, 이리(19)	서울, 부산, 원주, 강릉, 마산, 진주, 경주, 군산, 제천, 충무 (10)	춘천, 속초, 진해, 김천, 안동, 영주, 목포, 여수, 충주(9)	동해, 삼천포(2)
1990년대 (71)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춘천, 원주, 속초,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 안산, 구리,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창원, 김해, 거제, 구미, 경산, 여수, 순천, 전주, 익산, 제주, 천안, 아산, 서산, 청주, 충주, 제천 (35)	강릉, 동해, 부천, 진주, 경주, 김천, 안동, 영천, 광양 (9)	대구, 광명, 동두천, 남양주, 진해, 포항, 영주, 상주, 문경, 목포, 공주, 보령 (12)	서울, 부산, 태백, 삼척, 과천, 마산, 통영, 사천, 밀양, 나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서귀포 (15)

주: 1) 고도성장도시: $i > u$ 이고 $i > n$; 성장도시: $n < i < u$; 저성장도시: $0 < i < n$; 낙후도시: $i < 0$.
단, n: 전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u: 도시 전체의 연평균성장률; i: 개별 도시의 연평균성장률.

2)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한 도시 수.

3)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농촌 지역으로 간주함.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김인(1983).

했지만,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대도시 서울이 '성장의 병목' 상황에 부딪쳐 주변의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를 유출시킴에 따라 '서울의 집중'이 '수도권 집중'으로 확산·변형되었기 때문이다. <표 14-3>에서 보았듯이, 서울의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은 1990년대 들어 그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을 뿐,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이제 전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끌어안은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의 집중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인구 집중을 부추기는 각종 경제활동,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집중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각종 수도권 집중 억제 시책이 강도 높게 실시되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인 금융기관과 정치·행정 권력의 중심점인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서울의 '일극집중'이 수도권 '일극집중'의 형태로 확대재생산되고, 거대도시(metropolis) 서울이 그 외곽 수도권 지역을 끌어안으며 거대도시군(megalopolis)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14-10>에서 잘 드러나듯이, 서울의 집중에 뒤이은 수도권 팽창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의 성장이 결코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미 1960년대에 울산, 포항 등의 신흥공업도시가 개발되고,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창원, 마산, 구미 등이 신설되어, 이들 신흥도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또한 서울 주변의 성남, 부천, 안양 등의 위성도시들도 고속 성장을 거듭 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이미 이들 도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는 중·대형 도시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공업도시로 개발한 지역이나 수도권 주변에 위치해서 서울로부터 '성장의 세례'를 받아 급성장한 지역이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들에서도 고속성장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구 10~100만 명 규모의 중·대형 도시들이 도시화의 물결을 주도한 사실은 <표 14-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형 도시들이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최근에 올수록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형 도시들은 고도성장도시로부터 낙후도시까지 고르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표 14-11〉 도시 규모별 도시 성장 추이, 1960~2000

	고도성장도시	성장도시	저성장도시	낙후도시
1960년대 (27)	S C: 1 (2)	A: 1, B: 1 C: 6, D: 9 (17)	C: 3, D: 5 (8)	(0)
1970년대 (32)	A: 1, B: 1 C: 7, D: 2 (11)	S, A: 1 C: 7, D: 9 (18)	D: 2 (2)	D: 1 (1)
1980년대 (40)	A: 2, B: 2 C: 15 (19)	S, A: 1 C: 6, D: 2 (10)	C: 6, D: 3 (9)	C: 1, D: 1 (2)
1990년대 (71)	A: 3, B: 7 C: 21, D: 4 (35)	B: 1 C: 4, D: 4 (9)	A: 1 C: 4, D: 7 (12)	S, A: 1 C: 2, D: 11 (15)

주: S: 서울; A: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B: 인구 50~100만 명의 도시; C: 인구 10~50만 명의 도시; D: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김인(1983).

소형 도시 가운데 장기간 저성장 상태에 머물거나 낙후도시로 전락한 사례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항구도시, 탄광도시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나(삼천포, 충무, 태백 등) 정책적 규제(과천) 등으로 성장이 지체된 예외적 사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중소도시의 꾸준한 성장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간 관계가 결코 ‘영·합 관계’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음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결국 급속한 도시화가 도시 간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 왔지만, 특정 지역(서울 또는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이 병행하는 도시화의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했던 것이다. 물론 1960년대에는 도시 규모와 도시의 인구성장 속도가 비례하는 양상이 빚어져, 서울 일극집중 추세 하에서 도시 간 불균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도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 간의 상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일부 대도시에서 ‘역도시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집중과 분산 발전이라는 서로 상반된 추세가 병존하는 한국의 도시화는 수위도시화의 길로 나아가는 제3세계 국가들의 도시화 경로나 지역간 균형 발전의 길을 밟아간 서구의 도시화 경로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⁴⁾

V. 맺는 말: 요약 및 분석의 함의

이 글에서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역사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한 세기동안의 도시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일제 시대 해외 이주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잠시 지체된 ‘도시화의 유예기’를 거쳐, 민족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겪으며 해외 이주 동포와 월남민이 대거 도시로 몰려들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과잉도시화의 시기’를 거쳤다. 그 뒤 이농민의 도시 이주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또 한 번의 도시 폭발을 초래했지만, 산업화가 도시화와 병행함으로써 빠른 도시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과잉도시화’의 늪에 빠지지 않았던 ‘압축적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의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거대도시들에서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화의 성숙’ 단계로의 이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추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제기되는데, 우선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제3세계 일반에서 발견되는 ‘과잉도시화’로 규정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글의 분석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의 도시화를 ‘과잉도시화’로 규정한 Golden and Davis(1955)는 1950년대 산업화와 괴리된 도시 폭발 현상에 주목했고, 과

4) 이처럼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경향이 병존하는 현상은 압축적 도시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화의 물결이 대도시를 휩쓸면서 동시에 중소도시로까지 폭넓게 파급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잉도시화론을 비판한 조혜인(1978)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병존한 1960년대 이후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화 전반을 ‘과잉도시화’로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 즉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의 혼란기에는 ‘과잉도시화’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⁵⁾

둘째로 도시 간 성장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주목하는 ‘수위도시화론’과 대도시와 지방 도시의 ‘병행 성장론’이 대립하고 있다. 도시 규모별 도시성장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1960년대까지는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집중 현상이 도시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지만, 그 이후로는 지방 중소도시들의 성장이 잇달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성장이 병행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수위도시화론과 병행 성장론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이들 주장의 제한적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도시화의 설명 요인과 관련해서, 이농이 급속한 도시화의 촉발 요인이자 가속 요인으로 기능해 왔지만, 이러한 도시 외적 요인 이외에 도시 내적 요인, 즉 도시의 사회적/공간적 확장 요인이 도시화의 또 다른 설명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 인구의 자연증가를 통한 도시의 사회적 확장은 이농의 비중이 약화되는 최근 상황에서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으며, 시 승격 등과 같은 공간적 확장도 도시의 성장에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 여기서도 시기별로 도시화의 설명 요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변모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론적으로 외국 현실을 근거로 만들어진 특정한 이론적 가정에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억지로 꿰어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그래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도시화의 여러 단계들이 중첩되어

5) 물론 과잉도시화 추세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도시의 과부하(overloaded urbanization)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 주민의 생활고는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도시의 과부하 문제에 집착해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화를 과잉도시화로 파악하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관계에서 도시화 문제를 접근하는 ‘과잉도시화’ 개념과 도시의 수용능력 일반을 문제삼는 ‘도시의 과부하’ 개념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있음에 주목해서, 역사적 변동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화의 시기별, 단계별 특수성을 밝히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상의 도시화 논의는 기존의 도시정책을 되짚어보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선 도시화 과정의 복합성 및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가 강압적으로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도시의 인구 급증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 발전, 서울 및 수도권 집중 억제 등의 갖가지 정책 수단을 실험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정책 실험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96; 장세훈, 1998b). 물론 이러한 정책 실패는 여러 원인이 복합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도시화에 대한 정책 당국의 편견과 몰이해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도시화 및 대도시 집중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 및 자원의 집적·집중이라는 공간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및 문화적 자원의 집중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할 뿐, 감춰져 있는 후자의 문제는 소홀히 다뤘다. 이같이 편향된 진단과 처방은 도시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왔다.

그에 버금 가는 또 다른 요인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정책 행태를 들 수 있다. 즉 정부는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시민사회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압축적 도시화가 온갖 도시 문제를 한꺼번에 쏟아놓기도 하지만, 국가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도시화 단계로 신속하게 이행해서 도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 물론 이 같은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이 도시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에⁶⁾ 대한 인식도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도시정책의 실효성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6)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역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간 불균형 및 서울의 과밀 문제를 완화시켰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정책은 도시화의 역사적 역동성과 압축적 도시화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민·관 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등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통해 도시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왕의 도시(인구)정책은 이농에 따른 도시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인구의 재배치 대책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압축적 도시화의 초기에는 도시 인구증가의 진앙지였던 농촌의 과잉 문제에 무관심했고, 최근에는 도시 과밀화 문제에 버금 가는 농촌 과소화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도·농간의 격차 확대가 도시 과밀화와 농촌 과소화를 더욱 부추겼던 그간의 도시화 과정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도시’ 정책으로 좁혀진 기존의 도시화 대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화 대책은 농촌을 아우르는 전국적 단위의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과거 지향적 정책 노선을 밟아왔다. 즉 ‘과잉 도시화’,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도시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려는 대책이었다. 따라서 인간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노선에 대한 탐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최근 들어 도시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도시의 과부하 문제가 많이 완화되는 한편, 지방자치제까지 실시되면서, 도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발아하고 있지만, 아직 산발적인 시도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화 대책은 인구의 규모만이 아니라 인구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인구)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압축적 도시화에 따른 도시화의 부정적 폐해를 극복하면서, 도시화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해서 보다 인간적인 도시의 건설을 좀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여 백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은 기 수

I. 연구목적과 대상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이동의 형태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일터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주거지에서는 잠만 자고 하루 생활의 대부분은 주거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일터에서 보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처럼 일터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상주인구는 야간인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반면에 각 지역에는 상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나 일터를 찾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들은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상주인구와 다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들은 상주인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가 높아질수록 이처럼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인구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구개념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파악한 인구인 상주인구이다. 상주인구 개념은 비단 학문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원을 각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인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상주인구 이외에 비통근·통학 활동인구 및 주거지의 경계 밖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면서 활동하는 인구를 주간인구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간인구 개념은 복잡하고 이동이 잦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각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시를 위해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새로운 인구개념이자 현실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간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간인구 가운데는 주거지의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동의 유형과 이동에 걸리는 시간 등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성격이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

통계청에서는 1980년부터 인구센서스에서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근·통학의 여부, 통근·통학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간인구라고 칭하는 인구는 만 12세 이상으로 비통근·통학 활동인구 및 자신이 살고 있는 구나 시의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를 뜻한다. 한 지역의 주간인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 \text{주간유입인구} - \text{주간유출인구} \\ &= \text{비통근·통학자수} + \text{지역내 통근·통학자수} \\ &\quad + \text{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수} \end{aligned}$$

이 연구는 만 12세 이상으로 비통근·통학 활동인구 및 자신이 살고 있는 구나 시의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는 주간인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세는 나이 13세부터 통근·통학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세는 나이 13세부터 분석대상으로 삼지만 분석은 만 나이로 통일하였다. 직업이나 계층구분을 위해서는 만 15세, 2000년의 경우에는 세는 나이 16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전국 및 수도권이다. 제3절에서 전국의 통근·통학에 관해 기본적인 분석을 한다.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통근·통학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 대도시 및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주간인구의 의미가 높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2000년의 경우 46%)이 몰려 있고, 서울에 생업의 터전이 있으면서도 주거는 서울 바깥에서 하면서 통근·통학하는 인구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우리 나라 전체의 사회문제로 쉽게 비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수도권의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시기는 1995년과 2000년 등 두 해로 한정한다. 1990년 및 그 이전에는 통근·통학의 분류가 그 이후와 다르게 설정되어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념과 분류체계가 같은 1995년과 2000년의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1997년에 서울시 중구청의 의뢰를 받아 중구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은기수(1997a)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중구에서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간인구 개념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상주인구의 규모는 서울시의 구 가운데에서 가장 작지만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비가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명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구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중구의 행정 및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의 개념보다도 주간인구의 개념을 활용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통계청(1997d)은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에서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을 밝히고 있다. 통계청의 분석은 주간인구에 관한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전 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규모, 이동방향, 이동에 걸리는 시간 등 주간인구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걸쳐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은기수(2000)는 도심부의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대도시 도심부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대비하여 상주인구의 감소와 주간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심부의 변화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은기수는 상주인구의 지나친 감소로 인해 대도시 도심부의 공동화가 초래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은기수(2001a)는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 등 인구개념을 달리 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권의 계층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상주인구의 의미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계층구조 분석은 여전히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간인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은기수(2001a)는 계층구조의 분석에서 주간인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동이 잦은 사회에서 주간인구의 개념을 이용해 계층구조를 분석한다면 연구대상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동하는 인구의 특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Ⅲ. 전국 통근·통학인구

이 절에서는 전국의 통근·통학인구 실태를 살펴본다.

1.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표 15-1〉은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만 12세 이상 또는 세는 나이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이나 학업을 위

〈표 15-1〉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

지역	통근·통학 인구비율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1995	2000
서울	64.6	63.7	105	105
부산	61.5	58.7	98	98
대구	60.9	58.9	96	97
인천	63.1	63.1	96	95
광주	62.9	61.2	98	98
대전	62.0	61.5	98	99
울산	-	63.0	-	101
경기	62.8	63.9	93	95
강원	61.6	60.7	101	101
충북	64.6	64.6	101	101
충남	66.3	66.1	103	104
전북	65.8	63.5	100	100
전남	68.4	66.9	101	101
경북	65.0	63.4	104	103
경남	65.6	64.2	102	102
제주	70.6	68.9	100	100

주: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상주인구 × 100.

자료: 통계청(1997a, 2002a).

해 단거리 혹은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3 정도이다. 그런데 1995년의 경우 대구지역의 통근·통학인구비율이 61%로 제일 낮고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70.6%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4.6%의 인구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보다는 도 단위에서의 통근·통학인구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표 15-1〉을 보면, 2000년에는 1995년에 비해 통근·통학인구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통근·통학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58.7%이고 대구가 58.9%으로 그 다음으로 낮다. 반면에 역시 제주지역이 68.9%로 가장 높은 통근·통학인구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통근·통학은 일상생활에서 단거리 혹은 장거리이동을 의미한다. 이동은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혹은 도를 넘어서도 이루어진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시나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근·통학은 흔한 일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시군구를 넘어서는 인구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사이에 인구규모의 차이를 낳는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에서는 1995년과 2000년 모두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울산의 경우만 2000년의 주간인구지수가 101로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는 주간인구지수가 95에서 99 사이로 대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보다 대도시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오히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에는 1995년과 2000년 모두 주간인구지수가 105로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5%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서울에서 서울 바깥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보다는 서울 주위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음을 뜻한다.

도 단위에서는 대부분 도의 주간인구지수가 100 혹은 그 이상인데 반해 경기지역은 1995년에 93, 2000년에 95의 주간인구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기지역 전체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경기지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경기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5-2〉는 일상생활에서 주간에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120 이상인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에서 1995년과 2000년 모두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중구이다. 서울 중구의 2000년 현재 상주인구는 128,340명인 반면 주간인구는 374,747명이다. 중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간에 중구에서 일이나 학업을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상주인구의 규모에 비해 매우 큰 것이다.

서울 중구를 비롯해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은 거의 모두 대도시 중심부이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서울 강남구, 서울 용산구 등 대도시의 도심부 지역은 모두 상주인구는 적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일상생활을 영

〈표 15-2〉 주간인구지수 120 이상인 시군구, 1995~2000

1995		2000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서울 중구	395	서울 중구	292
부산 중구	249	서울 종로구	216
서울 종로구	244	부산 중구	191
인천 중구	191	대구 중구	168
대구 중구	167	서울 강남구	166
서울 강남구	160	인천 중구	145
서울 영등포구	150	광주 동구	141
광주 동구	140	서울 영등포구	138
서울 용산구	135	부산 강서구	133
대전 유성구	134	서울 용산구	131
서울 동대문구	126	서울 동대문구	130
서울 서초구	125	서울 서초구	121
경기 김포군	125	대전 유성구	120
경기 광주군	121		

자료: 통계청(1997a, 2002a).

위한다. 대도시의 도심부 외에 1995년에는 경기 김포군과 광주군에서 주간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는 신흥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대전의 도심 부인 중구에 몰리던 주간인구수요를 흡수하여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2〉에 나타난 것처럼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훨씬 많아서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주간에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주간인구는 매우 적은 지역들이 있다.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부분 밤시간만 거주지역에서 보내고 주간에는 다른 시군구에서 생업을 위한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서울 도봉구(주간인구지수 81), 부산 수영구(80), 인천 연수구(78), 울산 중구(82), 경기 광명시(80), 경기 의왕시(80) 등은 야간에만 해당 지역에서 잠

을 자고 주간에는 인접한 다른 시군구에 가서 생업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대표적인 예이다.

2. 통근·통학 인구의 특성

통근·통학 인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먼저 <표 15-3>을 통해 전국의 통근·통학 인구를 연령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통근·통학비율이 가장 높다. 10대는 대부분 학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 내에서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어느 연령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특히 12~14세 연령층에서는 거의 모든 인구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고, 15~19세 연령층의 통근·통학 인구비율도 89% 정도로 높다.

그러나 20대에 들어서면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낮아진다. <표 15-3>에서 20세부터 49세까지의 인구가운데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59%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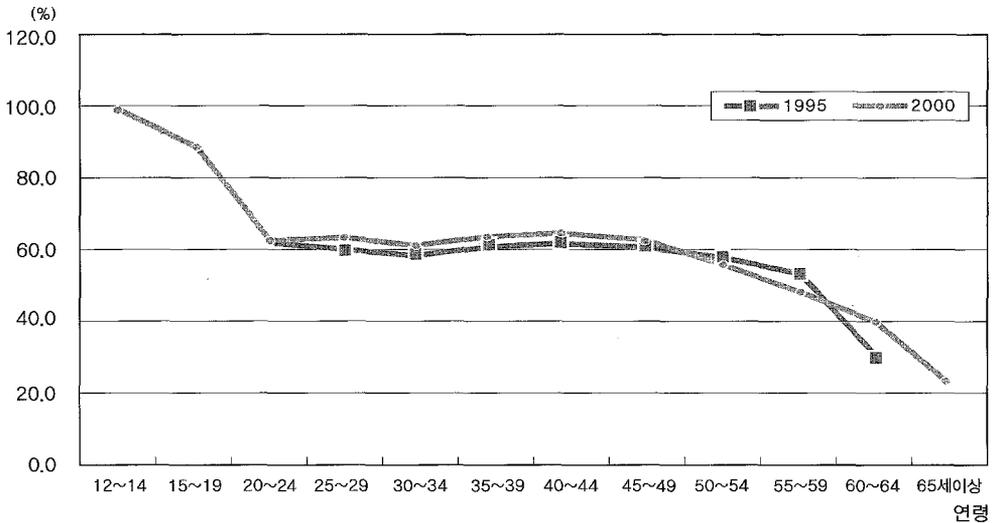
<표 15-3>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 1995~2000

(단위: %)

연령	1995	2000
12~14	99.6	99.6
15~19	89.5	88.8
20~24	62.8	62.0
25~29	60.9	63.9
30~34	59.1	61.7
35~39	61.7	64.6
40~44	62.9	65.1
45~49	61.5	62.7
50~54	58.7	57.0
55~59	53.6	49.2
50~64	29.9 ¹⁾	41.2
65 이상		23.2

주: 1) 1995년은 60세 이상의 인구 중 통근·통학 인구비율임.
자료: 통계청(1997a, 2002a).

〈그림 15-1〉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0



65%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연령층이 되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을 갖지 않고 일상생활을 집에서 영위하는 인구가 많아진다. 이러한 인구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주부를 들 수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통근·통학을 할 수밖에 없다. 즉 20세부터 49세까지의 인구가운데 약 60%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일 통근·통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근·통학인구비율이 본격적으로 낮아지는 연령은 50대부터다. 〈표 15-3〉에서 2000년의 경우 50~54세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인구비율은 57%, 55~59세 49%, 60~64세 41% 등으로 통근·통학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도 23%는 일상생활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1〉은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통근·통학의 형태는 연령별로 다양하다. 〈표 15-4〉는 전체 인구를 비통근·통학 및 통근·통학의 형태에 따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비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10대 가운데 비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은 4.9%이지만 20대 31%, 30대 37% 등으로

높아져 60대 이상은 70%에 달한다. 통근·통학을 하지만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이다. 즉 10대의 경우 전체 인구의 78%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 주로 통학을 한다. 반면에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10대의 경우 전체 인구의 16.7%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보다 낮다.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이다. 20대는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 내 통근·통학, 그리고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20대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32%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비율은 20대에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낮아진다. <표 15-4>를 보면, 1995년이나 2000년 모두 20대에서 높은 연령층으로 옮겨갈수록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신 비통근·통학 및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형태는 직업별로도 차이가 있다. 직업별로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까? <표 15-5>는 직업별로 통근·통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 가운데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서비스직과 판매직이다. <표 15-5>에서 2000년의 경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인구의 16%, 판매직에 종사하는 인구의 12%는 통근·통학

<표 15-4>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1995~2000

(단위: %)

연령	1995			2000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시군구 내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시군구 내
10대	3.9	75.8	20.4	4.9	78.4	16.7
20대	33.1	34.3	32.6	31.0	37.1	31.9
30대	39.4	37.0	23.5	36.5	39.8	23.7
40대	37.7	40.5	21.8	35.4	42.9	21.7
50대	43.5	41.0	15.5	46.3	39.1	14.6
60대	69.5	27.1	3.4	69.9	27.0	3.1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5-5] 직업별 통근·통학의 형태, 1995~2000

(단위: %)

직업	1995			2000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다른 시군구내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다른 시군구내
관리직	4.3	43.5	52.2	3.5	47.0	49.5
전문가	5.4	44.8	49.8	3.9	49.8	46.3
준전문가	3.7	44.9	51.4	3.5	48.7	47.8
사무직	2.1	47.1	50.8	2.2	52.2	45.6
서비스직	23.8	53.0	23.2	16.0	62.0	22.0
판매직	18.7	50.0	31.3	11.9	58.0	30.1
농림어업직	6.1	92.7	1.2	0.4	97.8	1.8
기능직	8.7	55.8	35.5	6.3	59.9	33.8
장치조립직	9.2	60.0	30.8	7.5	62.0	30.5
단순노무직	8.7	63.0	28.3	7.1	67.1	25.8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을 하지 않는다. 통근·통학을 한다해도 같은 시군구 내에 생업의 터전이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고위임직원이나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통근·통학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시군구 내에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다른 한편, 기능직, 장치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로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이 높다.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경우 대부분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다.

일반적으로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모든 직종에서 비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대신 증가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 가운데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멀리 이동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V.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괄하는 수도권에는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주위에 위성도시가 여러 곳에 만들어졌다. 지난 1980년대 말에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 개발되고 서울의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인구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심부는 여전히 업무, 서비스의 중심지로 주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수도권의 인구는 서울 내에서의 이동, 서울 및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이의 이동, 경기지역 내의 이동 등 여러 형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수도권내 인구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통근·통학인구비율은 위의 <표 15-1>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이 표를 보면, 2000년 현재 서울 인구의 64%, 인천 인구의 63%, 경기지역 인구의 64% 등 인구의 2/3가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인구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분포를 다르게 만든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이동은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분포에 차이를 낳지 않지만 일이나 학업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분포에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먼저 수도권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5-6>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을 보

〈표 15-6〉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만 12세 이상 인구 중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비율

(단위: %)

지역	1995	2000	지역	1995	2000
서울 전체	35.2	30.8	인천	30.2	26.2
종로구	26.5	24.5	수원	17.8	19.6
중구	24.5	24.4	성남 수정	22.2	21.7
용산구	32.2	27.5	성남 분당	38.0	33.5
성동구	25.9	31.3	의정부	28.4	29.5
광진구	35.2	31.7	안양	30.9	31.2
동대문구	31.1	24.7	부천	27.7	26.5
중랑구	35.7	31.3	광명	38.9	36.3
성북구	35.4	29.9	평택	10.3	10.0
강북구	40.2	33.2	동두천	17.4	16.4
도봉구	39.5	38.3	안산	15.0	18.5
노원구	37.6	33.7	고양 덕양	36.1	30.7
은평구	36.6	29.8	고양 일산		29.9
서대문구	34.6	31.1	과천	44.3	41.1
마포구	34.4	29.6	구리	34.4	32.9
양천구	37.7	35.3	남양주	24.9	29.8
강서구	33.6	29.4	오산	23.4	28.0
구로구	34.9	33.4	시흥	32.6	30.7
금천구	37.1	31.5	군포	40.1	38.7
영등포구	31.1	29.0	의왕	43.1	43.0
동작구	41.1	33.8	하남	35.2	33.6
관악구	37.6	30.9	용인	10.8	25.3
서초구	36.1	31.1	파주		14.3
강남구	30.9	24.9	이천		8.6
송파구	34.3	29.5	안성		11.1
강동구	32.5	32.3	김포		17.9
			양주		13.4
			여주		
			화성		
			광주		
			연천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여주고 있다.

서울의 인구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에 35%에서 2000년에 31%로 약 4% 감소하였다. <표 15-6>을 보면, 1995년에 서울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동작구(41%), 강북구(40%), 도봉구(39.5%), 양천구(37.7%), 노원구(37.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중구(24.5%), 성동구(25.9%), 종로구(26.5%), 동대문구(31.1%) 등 서울의 도심부나 오래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낮다.

또한 2000년에도 1995년과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다. 불과 5년 사이에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인구비율이 평균 4% 정도 감소했지만, 성동구는 오히려 5%가 증가했다. 반면에 강북구, 은평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인천지역에서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4% 감소하였다. 한편 경기지역은 지역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에 차이가 크다. <표 15-6>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의 경우 의왕(43%), 과천(41%), 군포(38.7%), 광명(36.3%)에서는 높은 비율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했다. 반면에 이천(8.6%), 평택(10%), 안성(11.1%), 동두천(16.4%), 안산(18.5%) 등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다.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에 인접한 지역은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5-7>은 수도권에서 매일 이동하는 인구들의 이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에서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들의 이동유형 가운데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서울 내의 이동은 1995년에는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에는 42%로 10%나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동유형은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유형으로 1995년에는 17.5%를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20.1%로 2.6%가 증가하였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표 15-7〉 수도권 내 주간인구 이동유형

(단위: %)

이동유형	1995	2000
서울 → 서울	52.0	42.1
서울 → 인천	1.2	1.2
서울 → 경기	7.8	10.2
인천 → 서울	2.5	3.0
인천 → 인천	7.5	5.3
인천 → 경기	1.4	2.3
경기 → 서울	17.5	20.1
경기 → 인천	1.1	1.4
경기 → 경기	8.9	14.4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나타내는 이동유형은 경기 내에서 이동하는 유형으로 1995년에는 8.9%에서 2000년에는 14.4%로 5.5%나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1995년에 전체 이동유형의 7.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 10.2%로 2.4%가 증가하고 있다. 〈표 15-7〉을 보면, 5년 사이에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 경기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주간에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지만,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유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다음의 〈표 15-8〉은 서울 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내에서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지난 1995년에 37.5%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이동유형은 2000년에는 35.9%로 1.5%가 감소하고 있다.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2000년에 28%로 5년 사이에 0.6% 증가하여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주간에 이동하는 유형은 2000년에 16.7%로 5년 사이에 1.3% 증가하고 있다.

〈표 15-8〉 서울 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

(단위: %)

이동유형	1995	2000	변화량 (2000-1995)
강북 → 강북	37.4	35.9	-1.5
강북 → 강남	15.4	16.7	1.3
강남 → 강북	19.8	19.4	-0.4
강남 → 강남	27.4	28.0	0.6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수도권 주간인구의 변화

이 절에서는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주간인구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표 15-9〉는 서울의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간에 일어나는 인구이동의 결과로 서울 내 여러 구 사이에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크기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 중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395로 주간인구의 크기가 상주인구 크기의 거의 4배에 달하고 있었다. 이 주간인구지수가 2000년에는 292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종로구도 2000년 현재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2.2배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더 높은 지역은 강남구(주간인구지수 166), 영등포구(138), 용산구(131), 동대문구(130), 서초구(121), 서대문구(110), 마포구(106), 성동구(104), 구로구(10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도봉구(81), 강북구(82), 양천구(82), 중랑구(83), 은평구(84), 노원구(85), 강동구(86) 등은 주간에 인구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여 주간인구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이다.

서울의 구 도심부인 중구, 종로구와 부심부인 영등포구에서는 주간인구지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 마포구 등에서는 소폭이나마 주간인구지수가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서초구의 주간인구지수는 5년 사이에 감소하였는데 강남구는

〈표 15-9〉 서울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1995	2000	지수의 변화량
종로구	6.5	6.4	244	216	-28
중구	13.1	9.8	395	292	-103
용산구	2.1	2.3	135	131	-4
성동구	1.4	1.1	115	104	-11
광진구	0.4	0.7	80	92	12
동대문구	1.8	2.4	126	130	4
중랑구	0.4	0.4	78	83	5
성북구	0.9	0.9	96	98	2
강북구	0.2	0.4	69	82	13
도봉구	0.6	0.5	83	81	-2
노원구	0.5	0.4	80	85	5
은평구	0.4	0.4	79	84	5
서대문구	1.3	1.4	112	110	-2
마포구	1.1	1.2	102	106	4
양천구	0.4	0.4	76	82	6
강서구	0.7	0.7	90	93	3
구로구	1.3	1.1	111	101	-10
금천구	0.5	0.6	80	89	9
영등포구	2.5	2.5	150	138	-12
동작구	0.5	0.6	81	90	9
관악구	0.5	0.6	81	88	7
서초구	1.7	1.7	125	121	-4
강남구	2.9	3.9	160	166	6
송파구	0.7	0.8	90	95	5
강동구	0.5	0.5	84	86	2

자료: 통계청(1997a, 2002a).

160에서 166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 인구의 비도 1995년에 2.9에서 2000년에는 3.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하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적었던 지역은 대부분 5년 사이에 주간인구지수가 증가하여 주간인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북구의 경우 1995년에 주간인구지수가 69로 주간에 극심한 인구

유출을 보여주었는데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82로 여전히 주간인구의 크기가 상주인구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간인구를 많이 회복하고 있다. 광진구도 5년 사이에 주간인구지수가 12나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 내에서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사이의 격차가 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구인 강남구에서는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인구의 비가 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도 주거지와 업무지역의 구분이 뚜렷하다(〈표 15-10〉 참조). 중구와 동구는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즉 주간에 다른 지역에서 중구와 동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중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191이었고 2000년에는 145로 감소하였다.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1.5배인 것이다.

반면에 인천 연수구는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 64로 주간에 극심한 인구유출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2000년에 78로 주간인구지수가 14만큼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간에 다른 시군구로 인구유출이 높음을 보여준다. 계양구(86), 부평구(89)도 주간에 인구유출이 높게 일어나고 있다.

경기의 시부 지역가운데는 동두천시와 안산시, 과천시를 제외하면 군지역이었다가 시로 승격한 지역들의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난다. 김포시(114), 안성시(108), 이천시(105), 용인시(104) 등에는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다.

그러나 경기의 다른 시부는 주간인구지수가 100 미만으로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더 작다. 광명(80), 의왕(80), 군포(83), 남양주(84), 고양(85), 하남(88), 성남(89), 의정부(89) 등 서울에 인접한 지역의 주간인구지수는 낮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밤에 잠만 자고 낮에는 인접한 서울 및 다른 지역으로 일과 학업을 위해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은 것이다.

〈표 15-10〉 인천 및 경기 시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시·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1995	2000	지수의 변화량
인천 중구	4.6	3.7	191	145	-46
인천 동구	1.0	1.7	100	115	15
인천 남구	1.0	1.1	100	101	1
인천 연수구	0.2	0.3	64	78	14
인천 남동구	0.9	0.9	98	98	0
인천 부평구	0.9	0.5	96	89	-7
인천 계양구	0.3	0.3	74	86	12
인천 서구	0.8	0.8	96	96	0
수원시	1.1	1.0	102	99	-3
성남시	0.5	0.5	82	89	7
의정부시	0.7	0.6	93	89	-4
안양시	0.6	0.8	89	94	5
부천시	0.5	0.6	86	91	5
광명시	0.3	0.3	71	80	9
평택시	0.9	1.1	99	101	2
동두천시	0.9	0.9	99	98	-1
안산시	1.3	1.2	105	103	-2
고양시	0.3	0.4	76	85	9
과천시	1.1	1.1	102	105	3
구리시	0.6	0.7	85	92	7
남양주시	0.5	0.3	87	84	-3
오산시	1.5	1.0	112	100	-12
시흥시	0.9	0.7	96	94	-2
군포시	0.4	0.4	76	83	7
의왕시	0.4	0.4	75	80	5
하남시	0.3	0.6	76	88	12
용인시	1.0	1.2	115	104	-11
파주시	1.9	1.0	98	100	2
이천시	1.9	1.7	107	105	-2
안성시	0.8	1.9	106	108	2
김포시	2.8	1.9	125	114	-11

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는 1995년에는 군부이었음.

자료: 통계청(1997a, 2002a).

3.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서울 전체의 주간인구지수는 100을 넘어 서울의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더 많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도 서울의 외곽지역에는 상주인구를 수용하는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구가 있고,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더 많아서 업무서비스 지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구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낮아 주간에 서울로 인구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음도 확인했다.

1) 통근·통학 유입, 유출지

이제 이 절에서 우리는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15-11>과 <표 15-12>는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서울의 구의 경우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11>은 1995년에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대부분의 구의 경우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는 인접한 구에서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구의 경우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등에서 주간인구가 오고, 동대문구의 경우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광진구 등에서 주간인구가 많이 오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는 고양시에서 오는 주간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도 성남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강남구는 인접한 송파구 다음으로 성남시에서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구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처음 세 번째까지의 지역을 경기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광명시(11.2%), 부천시(9.7%), 인천시(7.8%) 등 구로구에 인접한 경기지역의 시에서 가장 많이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표 15-12> 참조). 1995년과는 달리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에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를 많이 공급하는 지역은 서울의 각 구에 인접한 구가 아니라 대부분 서울의 인접도시 및 경기 지역이다.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의 경우 여전히 인접한 서울지역에서 가장

〈표 15-11〉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 유입지, 1995

(단위: %)

구	유입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종로구		성북구(6.96)	은평구(6.20)	노원구(5.77)	서대문구(4.59)	고양시(4.18)
중구		성동구(5.88)	노원구(5.14)	은평구(5.13)	성북구(4.86)	고양시(4.38)
용산구		동작구(7.26)	인천시(5.00)	마포구(4.67)	강남구(4.31)	은평구(2.88)
성동구		광진구(8.95)	강동구(7.59)	송파구(7.26)	동대문구(5.54)	중랑구(5.10)
동대문구		중랑구(12.98)	노원구(9.97)	성북구(7.97)	강북구(4.70)	광진구(4.28)
서대문구		은평구(12.96)	마포구(9.39)	고양시(7.96)	강남구(4.50)	서초구(4.28)
마포구		고양시(8.87)	서대문구(7.49)	강서구(6.36)	은평구(5.93)	양천구(5.41)
구로구		광명시(11.23)	부천시(9.74)	인천시(7.83)	관악구(7.72)	영등포구(7.09)
영등포구		양천구(7.73)	강서구(7.38)	부천시(6.97)	인천시(6.34)	구로구(6.03)
서초구		성남시(10.70)	강남구(9.06)	관악구(8.25)	동작구(6.78)	송파구(5.97)
강남구		송파구(9.78)	성남시(8.17)	관악구(5.67)	서초구(5.46)	강동구(4.67)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의 경우에도 고양시가 두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고양, 성남, 인천, 광명 등지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중구(고양시), 용산구(인천시), 서대문구(고양시), 마포구(고양시), 구로구(광명시), 영등포구(인천시), 서초구(성남시), 강남구(성남시) 등의 지역은 각 지역에 인접한 서울의 다른 구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받지 않고, 경기지역의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및 광명, 인천 등에서 주간인구를 가장 많이 공급받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에는 광명, 인천, 부천의 순으로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인천 다음으로 인접한 양천구, 강서구에서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경기지역인 고양시와 부천시에서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 외에 주간인구를 많이 공급하는 5대 지역 가운데 경기지역이 두 지역을 차지하는 경우는 용산구(인천, 고양), 마포구(고양, 인천), 서초구(성남, 안양)

〈표 15-12〉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 유입지, 2000

(단위: %)

구	유입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종로구		성북구(7.99)	고양시(6.64)	노원구(5.80)	서대문구(4.76)	은평구(4.67)
중구		고양시(6.48)	노원구(5.75)	성동구(4.68)	은평구(4.28)	성북구(4.20)
용산구		인천시(6.72)	동작구(5.61)	고양시(5.17)	노원구(4.02)	영등포구(3.71)
성동구		광진구(10.46)	동대문구(5.45)	강동구(5.45)	노원구(5.39)	성남시(5.12)
동대문구		중랑구(10.19)	노원구(8.77)	성북구(7.03)	도봉구(5.15)	강북구(4.64)
서대문구		고양시(11.12)	은평구(10.70)	마포구(7.33)	강남구(4.57)	양천구(4.16)
마포구		고양시(10.46)	서대문구(7.43)	강서구(7.29)	인천시(5.83)	은평구(5.23)
구로구		광명시(13.95)	인천시(11.94)	부천시(10.90)	양천구(6.93)	영등포구(5.75)
영등포구		인천시(8.61)	양천구(8.07)	강서구(7.47)	고양시(6.44)	부천시(6.37)
서초구		성남시(10.73)	강남구(7.04)	관악구(6.72)	동작구(6.09)	안양시(5.52)
강남구		성남시(9.40)	송파구(7.58)	서초구(4.37)	관악구(4.35)	강동구(4.14)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등이다.

서울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그런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100을 넘는 서울의 각 구에 주간인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지역이 각 구에 인접한 서울지역에서 서울 주위의 신도시 및 위성도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표 15-2〉의 결과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주간인구가 이동하는 것일까? 〈표 15-13〉과 〈표 15-14〉는 각각 1995년과 2000년의 경우 경기지역의 일부 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최종목적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남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38%는 서울 강동구를 오고 간다. 강동구가 생업의 터전이지만 거주는 하남시에 하고 있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용인의 경우에는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34%가 강남구를 최종목적지로 하고 있다.

〈표 15-13〉 경기의 일부 시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유출인구의 통근·통학지, 1995

(단위: %)

시	유출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인천시		영등포구(14.92)	강남구(9.74)	구로구(8.93)	중구(8.33)	종로구(8.25)
수원시		강남구(15.58)	영등포구(12.23)	구로구(6.90)	중구(8.68)	종로구(8.28)
성남시		강남구(22.83)	서초구(14.97)	송파구(14.66)	중구(7.42)	종로구(4.50)
의정부시		도봉구(18.12)	동대문구(9.76)	중구(9.25)	종로구(9.00)	성북구(8.24)
안양시		강남구(14.76)	서초구(11.07)	영등포구(10.52)	구로구(9.10)	중구(8.43)
부천시		영등포구(17.49)	구로구(11.83)	강서구(11.06)	중구(7.79)	강남구(7.39)
광명시		구로구(18.91)	영등포구(15.70)	금천구(12.94)	중구(7.54)	강남구(6.66)
고양시		은평구(14.59)	중구(12.49)	종로구(8.96)	서대문구(8.84)	영등포구(8.76)
과천시		서초구(26.10)	강남구(20.23)	중구(8.50)	종로구(7.33)	관악구(5.57)
구리시		중랑구(19.34)	동대문구(17.41)	강남구(8.51)	성동구(8.32)	중구(7.35)
남양주시		중랑구(18.09)	동대문구(14.86)	강남구(9.53)	노원구(8.56)	중구(7.11)
군포시		강남구(13.00)	서초구(10.53)	중구(9.44)	구로구(8.36)	영등포구(8.36)
용인시		강남구(33.96)	서초구(21.38)	송파구(8.81)	동대문구(5.03)	중구(3.77)
하남시		강동구(37.62)	송파구(18.06)	강남구(10.24)	성동구(6.70)	종로구(4.28)

주: 1995년 현재 용인시는 용인군임.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5-11〉에서 1995년에 서울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첫 번째 유출지는 서울 송파구였고, 그 다음은 성남시였다. 그러나 서울 바깥에 위치한 경기도 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출인구가 강남구로 유입되는 지역은 여러 곳이다. 용인(34%), 성남(22.8%), 과천(20.23%), 수원(15.6%), 안양(14.8%), 군포(13%), 하남(10.2%), 인천(9.7%), 남양주(9.5%) 등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의 인구가 서울 강남구로 가고 있다. 즉 서울 강남구에서 생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주택의 문제 등 여러 이유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과 부천시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영등포구에 가장 많이 유입된다. 인천을 떠나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의 15%, 부천을 떠나는 통근·통학 인구의 17.5%가 영등포구로 간다. 비율로만 본다면 광명(15.7%), 수원

〈표 15-14〉 경기의 일부 시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유출인구의 통근·통학지, 2000

(단위: %)

시	유출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인천시	영등포구(14.92)	강남구(11.61)	구로구(9.04)	중구(6.88)	강서구(6.81)	
수원시	강남구(22.79)	서초구(12.20)	영등포구(8.59)	중구(5.98)	종로구(5.11)	
성남시	강남구(30.68)	송파구(14.19)	서초구(13.93)	중구(5.20)	종로구(4.94)	
의정부시	노원구(12.79)	도봉구(12.43)	동대문구(9.86)	강남구(9.59)	종로구(8.17)	
안양시	강남구(20.11)	서초구(12.89)	영등포구(9.82)	중구(6.48)	종로구(5.81)	
부천시	영등포구(15.23)	구로구(11.38)	강서구(11.38)	강남구(9.59)	양천구(7.18)	
광명시	구로구(20.59)	영등포구(13.20)	금천구(12.62)	강남구(8.99)	중구(5.37)	
고양시	중구(11.64)	강남구(10.81)	영등포구(10.43)	종로구(9.94)	은평구(9.91)	
과천시	강남구(23.51)	서초구(21.85)	중구(8.28)	동작구(5.63)	관악구(5.30)	
구리시	중랑구(14.69)	강남구(13.55)	동대문구(11.45)	광진구(8.21)	중구(6.68)	
남양주시	동대문구(12.92)	중랑구(12.54)	강남구(12.25)	노원구(8.33)	광진구(6.99)	
군포시	강남구(16.58)	영등포구(10.84)	서초구(10.67)	중구(9.36)	구로구(5.58)	
용인시	강남구(33.44)	서초구(17.45)	송파구(10.02)	중구(5.01)	동대문구(4.04)	
하남시	강동구(37.27)	송파구(15.32)	강남구(11.39)	광진구(6.42)	중구(4.14)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2.2%), 안양(10.5%), 고양(8.8%), 군포(8.4%) 등에서 서울로 떠나는 통근·통학 인구들도 영등포구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중구에도 경기도의 여러 시에서 주간인구가 골고루 유입되고 있다. 고양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인구의 12.5%를 선두로 해서 군포의 9.4%, 의정부의 9.2%, 수원의 8.7%, 과천의 8.5%, 안양의 8.4%, 인천의 8.3%, 부천의 7.8%, 광명의 7.5%, 성남의 7.4%, 구리의 7.3%, 남양주의 7.1% 등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에 위치한 여러 도시의 주간인구가 서울 중구로 골고루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에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는 용인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33.4%, 성남의 30.7%, 과천의 23.5%, 수원의 22.8%, 안양의 20.1%, 군포의 16.6%, 구리의 13.5%, 남양주의 12.2%, 인

천의 11.6%, 하남의 11.4%, 고양의 10.8%, 부천과 의정부의 9.6% 등이 골고루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 경우 부천의 15.2%, 인천의 14.9%, 광명의 13.2%, 군포의 10.8%, 고양의 10.4%, 안양의 9.8% 수원 8.6% 등 주로 경기 남부지역의 시부에서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도심부인 중구의 경우에는 고양의 11.6%, 군포의 9.4%, 과천의 8.3%, 인천의 6.9%, 구리의 6.7%, 안양의 6.5%, 수원의 6%, 성남의 5.2% 등이 주간인구로 유입되고 있다. <표 15-13>과 <표 15-14>를 비교해 보면, 1995년에는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중구로 많이 유입되었는데, 2000년에는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 중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비율이 줄고 있다. 대신 강남구에 높은 비율로 주간인구를 유출하는 경기도 지역이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중구의 주간인구지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강남구의 주간인구지수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통근·통학 소요시간

서울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표 15-15>는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광명시, 과천시와 하남시이다. 광명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45분이고, 과천시는 45.9분, 하남시는 46.5분이다. 광명시의 경우 통근·통학자들이 인접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으로 주로 이동하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하남시의 경우에는 인접한 강동구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통근·통학에 걸리는 평균시간이 가장 짧다. 특히 과천의 경우 평균시간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도 가장 작아, 실질적으로 과천에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천이나 수원, 안산 등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75분 이상이다. 평택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9분

〈표 15-15〉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00

(단위: %)

출발지	~30분	31~40분	41~50분	51분~ 1시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이상	평균 (분)	표준 편차 (분)
인천	5.9	6.9	3.9	27.3	39.2	16.8	75.9	26.8
수원	3.9	7.6	4.5	30.8	36.5	16.8	75.3	25.7
성남 수정, 증원	24.0	16.2	7.1	32.0	17.6	3.1	53.8	22.3
성남 분당	19.8	20.6	8.8	27.2	19.5	4.2	55.8	24.0
의정부	19.6	10.9	6.7	28.0	28.1	6.7	61.2	26.2
안양	11.2	17.8	9.3	40.1	22.0	2.7	58.8	20.3
부천	22.0	13.8	6.9	30.0	23.1	4.1	56.7	24.6
광명	44.2	11.2	7.0	22.4	13.4	1.7	45.3	23.2
평택	1.3	0.0	2.6	22.4	43.4	30.3	89.0	26.6
동두천*	0.0	2.0	0.0	9.8	33.3	54.9	103.7	28.8
안산	4.6	6.4	5.1	24.7	42.6	16.5	76.8	25.7
고양 덕양	18.6	14.3	8.3	31.1	24.6	3.1	57.6	22.6
고양 일산	6.2	12.8	8.0	31.5	32.1	9.5	67.3	23.7
과천	31.5	21.5	12.2	22.8	10.9	1.0	45.9	18.8
구리	29.0	14.1	5.7	33.4	15.3	2.5	51.7	22.5
남양주	18.1	12.4	6.1	26.8	27.1	9.5	62.8	28.3
오산*	2.1	6.2	10.4	20.8	32.1	29.2	81.8	29.4
시흥	8.6	12.0	7.1	22.2	36.4	13.6	71.5	28.3
군포	4.9	11.2	7.1	10.6	32.7	3.6	64.2	18.8
의왕	6.6	14.6	4.9	38.5	31.0	4.4	63.6	20.7
하남	43.5	16.2	6.0	17.8	13.2	3.3	46.5	25.6
용인	11.3	14.4	11.3	29.7	23.7	9.5	63.3	25.3
파주	1.7	3.4	6.2	22.0	44.1	22.6	82.6	26.9
이천*	0.0	0.0	0.0	30.2	58.1	11.6	79.3	17.7
안성*	0.0	0.0	0.0	7.7	57.7	34.6	93.1	18.0
김포	12.7	10.0	8.1	24.7	33.6	10.8	68.0	27.9
군부	6.4	8.6	5.7	23.1	34.7	21.5	68.0	27.9

주: * 60 사례 이하임.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파주에서 서울로 오는데도 평균 83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통근·통학에 소요하는 평균시간은 분당의 경우 56분으로 1시간이 채 안되지만, 일산의 경우에는 67분으로 1시간이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지역이라 할지라도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서울 밖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특성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물론 이들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지 통근·통학 인구의 거주지별로 나누어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절에서는 1995년과 2000년의 두 연도를 대상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구조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만 2000년의 직업구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5-16>은 서울 이외의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의 직업구조를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의 직업구조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과천의 경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20%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이고 27%는 전문직에 종사한다. 또 12%는 준전문직 그리고 22.7%는 사무직에 종사한다.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80%가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분당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도 21%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가 전문직, 13%가 준전문직, 26%가 사무직 등 역시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산, 군포, 의왕, 용인 등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도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부천, 광명 등 서부 경기지역과 하남, 의정부 등 북동부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의 직업 가운데는 판매직, 기능직, 장치조립직, 단순노무직 등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

〈표 15-16〉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직업구조, 2000

(단위: %)

지역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장차, 조립직	단순 노무직
인천	8.1	11.8	16.3	22.0	5.5	13.2	12.4	6.4	4.4
수원	12.6	16.1	13.2	27.9	4.7	10.5	6.6	4.1	4.4
성남 수정, 중원	5.0	9.2	12.2	25.6	6.9	11.6	12.7	5.9	10.9
성남 분당	21.4	18.9	13.3	26.4	3.8	9.4	2.5	2.1	2.3
의정부	5.0	12.1	10.7	27.0	6.9	16.2	9.5	5.7	7.1
안양	9.7	13.1	12.1	30.8	4.8	11.2	8.6	5.3	4.4
부천	5.6	12.6	14.9	20.8	6.1	13.4	11.2	9.6	5.9
광명	4.8	10.6	15.5	18.6	7.9	12.1	11.0	11.6	8.0
평택	6.8	11.9	17.0	32.2	3.4	13.6	10.2	3.4	1.7
동두천*	4.9	2.4	2.4	31.7	9.8	17.1	9.8	7.3	14.6
안산	7.2	12.6	14.1	21.3	5.1	16.4	12.6	8.0	2.8
고양 덕양	12.1	14.4	7.2	28.3	5.4	15.4	8.4	4.9	3.9
고양 일산	13.0	18.3	10.9	33.5	2.5	9.4	5.2	3.6	3.7
과천	20.4	26.9	12.3	22.7	4.6	8.1	1.9	1.5	1.5
구리	8.9	11.8	8.0	25.0	4.8	19.6	11.4	5.2	5.5
남양주	12.2	13.7	6.4	26.2	5.6	15.9	10.4	5.3	4.4
오산*	11.4	6.8	18.2	38.6	2.3	11.4	6.8	0.0	4.6
시흥	5.7	8.9	18.6	20.1	6.0	13.5	12.6	10.0	4.6
군포	9.2	13.6	19.6	25.2	5.6	9.2	9.8	4.7	3.1
의왕	10.8	16.7	11.8	26.5	3.4	13.7	9.8	4.4	2.9
하남	8.0	9.3	7.0	21.5	7.5	14.5	14.0	8.3	9.8
용인	13.3	20.3	16.3	22.2	3.0	13.5	5.7	3.0	2.8
파주	4.9	10.4	6.3	34.7	9.0	12.5	13.2	4.2	4.9
이천*	16.7	19.4	8.3	30.6	5.6	8.3	8.3	0.0	2.8
안성*	13.0	0.0	13.0	21.7	0.0	17.4	8.7	8.7	17.4
김포	5.6	8.9	20.1	26.2	8.4	15.9	7.0	6.1	1.9
군부	9.1	12.2	8.6	19.9	5.8	16.3	13.6	6.9	7.5

주: 1) * 60 사례 이하임.

2) 세는 나이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수원과 인천을 비교하면 인천보다는 수원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이 상대적으로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서울의 남쪽 외곽에 위치한 과천, 의왕, 군포, 용인 등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이나 중구, 종로구 등 전통적인 도심부로 통근·통학을 많이 한다. 이들은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에 많이 종사한다. 반면에 부천, 광명 등 서부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은 경우 이들은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남부 경기지역의 통근·통학자보다 높다. 또 하남, 의정부 등 북부 및 동부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의 직업구조도 직업위세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일산의 경우는 북부 경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분당 등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들의 직업구조는 비교적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V. 맺는 말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구이동현상인 통근·통학의 실태 및 주간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인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인구개념으로 상주인구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잦은 이동이 특징인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동이 잦고 주거지와 일터 사이에 불일치가 높기 때문에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학업을 위해 이동하는 주간인구는 상주인구 못지 않게, 지역에 따라서는 상주인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행정수요를 야기하는 등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인구가 더 중요한 인구개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입인구보다는 유출인

구가 더 많아 주간인구보다 상주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도 단위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도 전통적으로 업무, 서비스의 중심지인, 주로 대도시의 도심부에서는 상주인구는 작은 반면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아서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서울의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서울의 도심부 및 부심부 혹은 새로운 도심부 지역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특히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높았던 서울의 도심부에서 주간에 인구의 유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강남구는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오히려 주간인구지수가 더 커지고 있어 강남구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 100 이상인 서울의 각 지역에는 주로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었지만 2000년에는 일산, 분당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각 지역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사이에 서울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의 신도시나 위성도시가 서울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지역도 매우 다양하지만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강남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밝혀졌다.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에서 강남구로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며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서부 경기지역이나 북동부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학 연구에서 인구이동은 주요 연구분야이지만 주로 5년, 1년, 6개월, 혹은 한달 사이 등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이 분석의 대상이

었다. 일상생활에서 거주지의 경계를 벗어난 인구이동, 즉 통근·통학에 관한 분석은 인구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잦은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결과이기도 한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서울을 둘러싼 지역 사이에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이동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의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분석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에 따라 통근·통학지가 다르고,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편차가 크며, 연령, 교육수준, 직업구조 등 통근·통학자의 특성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분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여 백

제16장 종교

은 기 수

I. 머리말

한국사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다양한 기성종교 및 신흥종교가 존재한다.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수많은 종교가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한국사회이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상황을 두고 ‘종교백화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최종철, 1996: 177).

많은 사람들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여러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종교가 여타의 종교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배타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종교간에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성표, 2001). 지금까지는 여러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이 수 있는 무종교인의 풀(pool)이 있어 종교갈등이 적었지만, 이제는 무종교인의 풀이 줄어들어 종교갈등이 표면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강인철, 1997). 실제로 최근에는 단군상 건립을 두고 기독교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단군상이나 불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종교집단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종교로 인한 갈등은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부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나, 제

사를 두고 부모와 자식, 며느리 간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를 이유로 발생하는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예를 들어, 노치준, 1998; 최종철, 1996).

그러나 갈등이 많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 종교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적다. 특히 전국적인 수준에서 조사 및 분석결과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연구는 1985년과 1995년 등 두 차례의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종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종교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이 연구는 1985년과 1995년의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종교구조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밝히고자 한다. 인구센서스의 종교변수를 분석한다는 일차적인 목표 외에 한국의 종교분석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가족, 가구 수준에서의 고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구 수준의 종교일치도도 함께 분석하려고 한다.

II. 자료 및 분석대상

종교에 관한 통계는 많은 경우 종교단체별로 작성되어 발표된 통계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들이 여러 종교에 중복 기록된 경우가 많아 각 종교의 인구통계치를 합하면 전 국민의 수보다 더 많게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조사에서 응답자의 종교를 조사하기 때문에 일견 종교에 관한 자료가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종교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통계보고서를 이용하더라도 종교단체별로 산출된 통계보다는 공신력있는 통계청의 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종교인구에 관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인구센서스는 종교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자료가 개인수준의 자료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가족 내 종교 구성은 개인을 단위로 조사한 자료로는 분석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조사기관에서는 몇 백 명부터 몇 천 명까지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조사는 개인을 조사단위로 삼고 개인의 종교의식 및 행위에 관해 조사하게 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종교에 관해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목표하고 있는 가족 내 종교 구성은 분석할 수 없다. 가족 내 종교의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가구를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가구원의 종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5년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인구센서스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인구센서스의 종교 조사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 종교문항에 대한 응답의 신뢰도 등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의 종교자료가 가질 수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구센서스는 한국의 종교구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센서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전수조사로서 일반적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85년과 1995년의 인구센서스는 개인의 종교도 조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할 경우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 나라 인구의 종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가구에 속한 개인의 종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서 가족 내 종교구성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는 1985년과 1995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다.

이 연구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종교인구의 구성을 분석할 때는 만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한정하여 분석한다. 만 7세 이하의 경우 자신의 종교를 분별할 만화나이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인 만 7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종교구성을 분석한다.

Ⅲ. 한국의 종교구성: 개인수준

이 절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종교구성을 살펴본다. <표 16-1>은 1985년과 1995년의 종교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종교가 없다는 무종교인은 1985년에 전체 인구의 54.8%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불교 인구는 21.8%, 개신교 인구는 16.4%, 천주교 인구는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교를 비롯한 기타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유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말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종교의 비율은 원불교 0.25%, 대순진리회 0.12%, 천도교 0.08% 등으로 매우 낮다.

무종교인의 감소는 종교구성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표 16-1>에서 1995년에 무종교인은 47.4%로 10년 전에 비해 7.4%나 감소하였다. 반면에 불교 인구는 24.9%로 3.1% 증가하고, 개신교 인구도 19.6%로 3.2%가 증가하였다. 천주교 인구는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2.1% 증가하여 불교, 개신교의 인구 증가보다는 증가량이 적다. 무종교인이 크게 감소한 대신 기성종교를 믿는 인구가 기성종교별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불교를 믿는 인구의 비율은 1985년의 0.25%에서 1995년에 0.21%

〈표 16-1〉 7세 이상 인구의 종교구성의 변화, 1985~1995

(단위: %)

종교	1985	1995
불교	21.8	24.9
개신교	16.4	19.6
천주교	4.7	6.8
유교	1.4	0.5
원불교	0.3	0.2
천도교	0.1	0.1
대종교	0.0	0.0
대순진리회	0.1	0.1
기타	0.4	0.4
없음	54.8	47.4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85년과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천도교도 0.01%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대순진리회를 믿는 인구의 비율은 10년 동안 0.02%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는 사실 외에도 무종교인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무종교인의 비율이 7.4%나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성장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1995년 현재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7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약 25%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나 인구 네 명 중 한 명 꼴로 기독교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인도 25%로 우리 나라 인구 네 명 중 한 명은 또한 불교인인 셈이다. 우리 나라의 종교 구성은 무종교인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불교와 기독교인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1. 성별 종교구성

한국 종교의 구성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6-2>와 같다. 이 표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은 1985년과 1995년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표 16-2〉 7세 이상 인구의 성별 종교구성의 변화, 1985~1995

(단위: %)

종교	1985		199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불교	20.1 (45.0)	23.5 (55.0)	23.3 (45.5)	26.5 (54.5)
개신교	14.5 (43.3)	18.2 (56.7)	17.7 (43.3)	21.5 (56.2)
천주교	4.2 (43.0)	5.3 (57.0)	6.0 (43.1)	7.5 (56.9)
유교	1.5 (54.1)	1.3 (45.9)	0.5 (55.9)	0.4 (44.1)
원불교	0.2 (44.7)	0.3 (55.3)	0.2 (43.1)	0.2 (56.9)
천도교	0.1 (47.8)	0.1 (52.2)	0.1 (46.8)	0.1 (53.2)
대종교	0.0 (50.5)	0.0 (49.5)	0.0 (44.6)	0.0 (55.4)
대순진리회	0.1 (46.1)	0.1 (53.9)	0.1 (44.8)	0.1 (55.2)
기타	0.3 (44.7)	0.4 (55.3)	0.4 (43.4)	0.5 (56.6)
없음	59.0 (52.7)	50.8 (47.3)	51.7 (53.1)	43.2 (4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 안은 각 년도 종교별 성 구성임.

자료: 통계청(1985년과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차지하고 있다. 즉 1985년에 남자 가운데 59%가 무종교인이었고 여자는 51%가 무종교인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종교인의 비율은 감소했는데, 1995년에는 무종교인의 비율이 남자의 52%, 여자의 43%로, 남녀 모두 무종교인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무종교인이 감소함에 따라 종교인구가 증가했는데, 불교 인구의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3.0~3.2%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도 남자나 여자 모두 10년 사이에 3.2~3.3%가 증가하고 있다. 천주교는 여자의 경우 2.2% 증가하였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1.8% 증가하여 불교나 개신교보다는 퍼센트 증가량이 적다. 그러나 유교는 남자나 여자 모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각 종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유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종교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3~45%이다. 반대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5~57%이다. 원불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등의 종교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그러나 유교의 경우는 1985년에 남자가 54%를 차지하고 있었고, 1995년에는 남자의 비율이 56%로 2%가 더 높아졌다.

2. 연령별 종교구성

한국의 종교구성은 연령별로도 차이가 난다. 다음 <표 16-3>은 1985년의 경우 연령별로 종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모든 연령층 가운데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이다. 즉 7세 이상 19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62%가 무종교인이라고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신교를 믿는 경우가 18%로 가장 높고 천주교인은 4.5%로 나타났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하면 10대의 22.4%가 기독교인인 것이다. 한편 10대 가운데 불교인은 14.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 무종교인이 감소하고 불교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 먼저 20대의 경우를 보면, 10대에 비해 무종교인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여 58.7%가 무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다음 불교는 20대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는

〈표 16-3〉 7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종교구성, 1985

(단위: %)

종교	7~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불교	14.3(20.9)	18.5(18.7)	25.4(19.3)	30.3(17.6)	31.6(12.6)	30.2(7.0)	28.2(3.9)
개신교	17.9(34.9)	16.5(22.2)	17.9(18.2)	14.9(11.5)	13.0(6.9)	12.9(4.0)	12.2(2.3)
천주교	4.5(30.2)	4.7(21.8)	5.6(19.6)	4.9(13.0)	4.3(7.9)	4.5(4.8)	4.2(2.7)
유교	0.7(16.1)	0.9(14.7)	1.1(13.6)	2.0(18.2)	2.9(18.1)	3.2(11.7)	3.6(7.6)
원불교	0.2(23.6)	0.2(20.1)	0.3(16.8)	0.3(13.9)	0.4(12.9)	0.4(7.6)	0.4(5.1)
천도교	0.1(20.7)	0.1(22.8)	0.1(16.2)	0.1(12.2)	0.1(13.1)	0.1(9.5)	0.1(5.5)
대종교	0.0(25.0)	0.0(13.3)	0.0(13.8)	0.0(15.3)	0.0(17.3)	0.1(10.7)	0.0(4.6)
대순진리회	0.1(24.6)	0.1(22.5)	0.2(22.5)	0.1(13.8)	0.1(8.6)	0.2(6.2)	0.1(1.8)
기타	0.3(23.9)	0.3(20.2)	0.3(15.7)	0.4(13.8)	0.6(13.3)	0.7(9.8)	0.4(3.3)
없음	61.9(36.0)	58.7(23.6)	49.1(14.9)	47.0(10.8)	47.0(7.5)	47.7(4.4)	50.8(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연령 구성임.

자료: 통계청(198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반면에 개신교인은 이보다 적은 1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대에서 천주교인의 비율은 4.7%로 10대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한 기독교인의 비율은 21.2%로 불교인구의 비율보다는 높다.

모든 연령층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와 30대이다. 즉 30대 연령층 가운데 17.9%가 개신교인이라고 밝히고 있고 천주교인의 비율도 5.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한 기독교인의 비율은 23.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30대에서 불교인의 비율은 25.4%로 10대 및 20대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비율보다도 더 높다. 이 연령층에 이르러 비로소 불교인의 비율이 기독교인의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 또 30대에 이르러 무종교인의 비율은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불교인의 비율이 30%에 이르는 40대부터 기독교인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표 16-3〉에서 40대 가운데 개신교인은 14.9%, 천주교인은 4.9%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20%에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40대의 무종교인의 비율은 47%로 모든 연령층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낮다.

종교별로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세 종교 가운데 개신교가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 전체 인구 가운데 35%는 10대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신교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데, 20대는 22%, 30대는 18% 순으로 개신교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그 결과 개신교인 가운데 5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개신교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개신교보다는 나이 들고 불교보다는 젊은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천주교인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개신교에 비해 거의 5% 정도 낮다. 또한 20대가 천주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개신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간 낮다. 반면에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신교보다 천주교에서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 종교 가운데 불교가 가장 나이 든 연령구조를 보이고 있다. 불교인구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개신교의 35%, 천주교의 30%에 비해 크게 낮다. 불교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개신교나 천주교보다 낮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되면 불교인구의 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의 비율보다 높다. 불교인구에서 5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24%에 이르러 개신교의 경우 13%와 비교하면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구조의 측면에서 유교는 가장 나이 든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다. 유교인구 가운데 5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7.5%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젊은 층에서는 유교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유교인구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6%, 20대는 15%, 30대는 13.5%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종교의 연령구조는 10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표 16-4>를 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기성 종교의 연령구조가 10년 전에 비해 약간 더 나이 든 구조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모두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불교는 1985년에 비해 1995년에 10대의 비율이 4.1%, 개신교는 7.1%, 천주교는 5.1%가 감소하

〈표 16-4〉 7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종교구성, 1995

(단위: %)

종교	7~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불교	17.6(16.8)	19.4(15.0)	24.8(21.6)	31.9(18.1)	34.8(14.3)	34.5(9.2)	30.0(5.0)
개신교	23.0(27.8)	18.3(18.0)	19.9(22.0)	20.1(14.5)	16.5(8.6)	15.7(5.3)	17.9(3.8)
천주교	7.1(25.1)	5.6(16.0)	7.0(22.5)	7.9(16.6)	6.4(9.6)	6.2(6.1)	6.6(4.1)
유교	0.2(8.9)	0.3(10.7)	0.2(11.3)	0.5(13.4)	1.0(20.7)	1.6(22.1)	1.5(12.9)
원불교	0.2(20.0)	0.1(13.0)	0.2(18.4)	0.2(15.9)	0.3(14.5)	0.3(11.1)	0.4(7.1)
천도교	0.0(19.4)	0.1(15.4)	0.1(19.6)	0.1(14.0)	0.1(13.1)	0.1(10.8)	0.1(7.7)
대종교	0.0(19.8)	0.0(15.2)	0.0(17.5)	0.0(15.8)	0.0(15.3)	0.0(10.7)	0.0(5.7)
대순진리회	0.1(18.7)	0.1(20.8)	0.2(24.7)	0.1(15.3)	0.2(11.3)	0.1(6.2)	0.1(3.1)
기타	0.4(21.3)	0.4(15.9)	0.4(22.6)	0.4(14.5)	0.5(11.3)	0.6(8.4)	0.6(6.0)
없음	51.4(25.8)	55.7(22.8)	47.2(21.6)	38.8(11.6)	40.2(8.7)	40.9(5.8)	42.8(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연령 구성임.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고 있다. 20대의 경우에도 불교는 3.7%, 개신교는 4.2%, 천주교는 5.8%나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30대부터는 1985년에 비해 1995년의 경우 모든 종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모두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보다 1995년에 크게 늘고 있다. 즉 1995년에는 개신교의 경우에도 5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육박하고 있고, 천주교는 20%에 달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1995년에 5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8.5%로 역시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에서도 연령구조가 나이 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종교의 연령구조도 고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3. 종교별 교육수준

한국 종교의 구성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표 16-5>와 <표 16-6>은 1985년과 1995년의 종교별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별로 교육수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모든 종교에서 구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이다. 둘째, 모든 종교 가운데 천주교인들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개신교로 나타나 기독교인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불교인의 교육수준은 기독교인에 비해 낮다.

종교에 따른 교육수준의 특성 및 그 변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불교인의 경우 1985년에는 전체 불교인 가운데 40.6%가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교인은 전체 불교인의 9.3%에 불과했다.

반면에 천주교인은 전체 천주교인 가운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천주교인이 18.5%에 달했다. 또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천주교인도 32%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천주교인은 전체 천주교인의 30.1%로 불교인의 40.6%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학력수준이 높기는 개신교인도 마찬가지이다. 천주교인보다는 교육수준이 낮

〈표 16-5〉 7세 이상 인구의 종교별 교육수준, 1985

(단위: %)

종교	무학·초등	중학	고등	전문대 이상	합계
불교	40.6	23.3	26.8	9.3	100.0
개신교	32.1	22.2	30.5	15.2	100.0
천주교	30.1	19.7	31.7	18.5	100.0
유교	59.1	18.1	17.6	5.2	100.0
원불교	37.9	20.2	23.9	18.0	100.0
천도교	41.9	19.0	25.7	13.4	100.0
대종교	45.4	19.9	20.4	14.3	100.0
대순진리회	42.3	26.1	24.8	6.8	100.0
기타	47.8	22.7	22.2	7.3	100.0
없음	41.3	23.5	26.5	8.7	100.0

자료: 통계청(198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6-6〉 7세 이상 인구의 종교별 교육수준, 1995

(단위: %)

종교	무학·초등	중학	고등	전문대 이상	합계
불교	30.1	19.3	34.9	15.7	100.0
개신교	24.8	16.4	35.0	23.8	100.0
천주교	22.4	15.1	34.3	28.2	100.0
유교	51.8	16.6	22.1	9.5	100.0
원불교	31.9	17.1	28.2	22.8	100.0
천도교	28.0	16.2	35.0	20.8	100.0
대종교	32.2	18.6	28.3	20.9	100.0
대순진리회	27.5	21.7	40.1	10.7	100.0
기타	34.1	19.5	33.2	13.2	100.0
없음	28.0	17.0	37.3	17.7	100.0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지만 개신교인의 경우에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개신교인의 15.2%를 차지하고,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개신교인이 31%에 달하고 있다. 무학이나 초등학교 등 낮은 학력을 지닌 개신교인은 전체 개신교인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종교는 유교를 비롯해서,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등 전통 종교 및 신흥종교들이다. 이들 종교는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전체 종교인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별 교육수준 구성은 1995년에도 1985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향상된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불교인의 경우 전체 불교인 가운데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지닌 불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에 40.6%에서 1995년에 30.1%로 10.5%가 감소했다. 또 중학의 학력을 가진 불교인도 1985년에 23.3%에서 1995년에 19.3%로 4% 감소했다.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불교인의 비율은 1985년에 26.8%에서 1995년에 34.9%로 10년 사이에 8.1%가 증가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교인도 1995년에 15.7%에 이를 정도로 고학력 인구가 많아졌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기독교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천주교인의 경우 무학 및 초등의 학력을 지닌 천주교인의 비율이 1985

년의 30%에서 1995년에는 22%로 8%나 감소했다. 중학의 학력을 가진 천주교인도 10년 사이에 4% 이상 감소했다. 반면에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천주교인은 1985년에 18.5%에서 1995년에 28.2%로 10% 가까이 높아졌다.

개신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무학 및 초등의 학력이나 중학의 학력을 가진 개신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고등의 학력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신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등 전통종교나 신흥종교의 경우에도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사이에 종교인구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별로는 여전히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불교의 경우에는 아직 불교인의 교육수준이 천주교나 개신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각 종교별로 연령구조의 차이에도 기인한다.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불교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데, 전반적으로 고령인구의 교육수준이 그보다 젊은 인구의 교육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불교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종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4. 지역별 종교구성

한국의 종교구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종교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구성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표 16-7>과 <표 16-8>은 1985년과 1995년의 시도별 종교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불교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 부산 및 경남, 경북 지역이다. <표 16-7>에서 1985년에 부산 인구의 35.3%가 불교인이었고 무종교인이 49.7%였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종교인 아니면 불교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다. 부산을 에워싸고 있는 경남지역도 무종교인의 비율이 5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불교인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30%가 불교인이다. 대구를 제외한 경북지역에서도 전체 인구의 28%가 불교인으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표 16-7) 7세 이상 인구의 시도별 종교분포, 1985

(단위: %)

시·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없음
서울	19.9(22.1)	24.8(36.6)	6.8(34.6)	0.5(8.8)	0.2(16.8)	0.6(24.4)	47.3(20.9)
부산	35.3(14.1)	10.0(5.3)	3.8(6.9)	0.4(2.7)	0.2(7.4)	0.6(8.8)	49.7(7.9)
대구	30.0(6.9)	11.2(3.5)	6.0(6.3)	0.3(1.1)	0.1(1.4)	0.9(8.1)	51.5(4.7)
인천	14.3(2.2)	23.0(4.6)	7.9(5.5)	0.6(1.5)	0.1(0.9)	0.6(3.5)	53.5(3.2)
경기	19.1(9.9)	19.6(13.6)	5.7(13.6)	2.5(20.6)	0.1(5.9)	0.6(12.5)	52.4(10.9)
강원	20.2(4.0)	11.9(3.1)	3.6(3.3)	1.4(4.2)	0.1(1.5)	0.5(3.6)	62.3(4.9)
충북	18.8(3.0)	10.8(2.3)	4.0(3.0)	0.7(1.8)	0.1(1.2)	0.2(1.3)	65.4(4.2)
충남	19.4(6.6)	15.5(7.0)	3.7(5.8)	2.0(10.4)	0.2(7.2)	0.6(7.6)	58.6(7.9)
전북	8.9(2.3)	19.0(6.6)	3.8(4.5)	0.7(2.8)	1.3(29.9)	0.4(3.2)	65.9(6.8)
전남	11.6(5.0)	14.9(8.6)	3.2(6.4)	4.3(28.6)	0.4(13.5)	0.4(6.9)	65.2(11.2)
경북	28.1(9.5)	10.1(4.6)	2.8(4.3)	2.1(11.0)	0.1(4.6)	0.6(7.6)	56.2(7.6)
경남	32.5(12.6)	7.2(3.7)	2.7(4.8)	0.9(5.5)	0.3(8.8)	0.7(10.9)	55.7(8.6)
제주	31.7(1.8)	7.2(0.5)	4.0(1.0)	1.2(1.0)	0.2(0.9)	0.7(1.6)	55.0(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시·도 구성인.

자료: 통계청(198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가운데 불교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에 더 심화되어 부산의 불교 인구 비율은 40.8%로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무종교인의 비율은 42.8%로 감소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1985년에 32.5%의 불교 인구가 1995년에는 39.7%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1985년에 비해 1995년에 불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즉 경상도 지역에서 불교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불교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다. 1985년에 전북지역에서 불교 인구의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불교 인구가 전북지역에서도 13.8%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1985년에 불교 인구가 11.6%였는데 이 역시 1995년에 15.3%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경상

〈표 16-8〉 7세 이상 인구의 시도별 종교분포, 1995

(단위: %)

시·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없음
서울	19.6(18.1)	26.6(31.2)	8.6(30.7)	0.3(13.2)	0.2(16.8)	0.6(19.3)	43.9(21.4)
부산	40.8(14.2)	10.7(4.7)	4.6(5.9)	0.2(2.9)	0.2(6.8)	0.7(9.8)	42.8(7.9)
대구	35.3(7.9)	11.5(3.3)	6.6(5.4)	0.2(2.3)	0.1(1.9)	0.9(7.7)	45.4(5.4)
인천	15.9(3.3)	24.7(6.5)	9.5(7.2)	0.3(3.0)	0.1(1.8)	0.8(5.7)	48.7(5.3)
광주	16.1(1.8)	22.3(3.2)	9.4(4.0)	0.5(3.1)	0.3(4.4)	0.6(2.6)	50.8(3.0)
대전	25.8(2.9)	20.7(2.9)	6.3(2.6)	0.2(1.0)	0.2(2.6)	0.7(3.0)	46.1(2.7)
경기	20.1(13.5)	23.9(20.4)	7.9(19.8)	0.5(15.4)	0.1(8.1)	0.8(20.7)	46.7(16.6)
강원	24.6(3.3)	16.4(2.8)	5.3(2.6)	0.6(4.3)	0.1(2.0)	0.6(2.9)	52.4(3.7)
충북	25.9(3.3)	14.9(2.4)	5.8(2.7)	0.3(1.8)	0.1(1.6)	0.5(2.3)	52.5(3.5)
충남	20.9(3.4)	18.7(3.8)	4.8(2.9)	1.0(8.3)	0.2(3.2)	0.5(3.0)	53.9(4.5)
전북	13.8(2.4)	25.9(5.7)	5.9(3.8)	0.8(7.2)	1.7(34.4)	0.6(3.7)	51.4(4.7)
전남	15.3(2.9)	20.4(4.9)	4.6(3.2)	1.7(16.8)	0.4(8.1)	0.5(3.3)	57.1(5.6)
경북	32.9(7.8)	12.5(3.8)	4.0(3.5)	0.8(10.3)	0.0(1.0)	0.6(5.0)	49.2(6.2)
경남	39.7(13.5)	9.3(4.0)	3.6(4.5)	0.5(9.3)	0.2(6.9)	0.7(9.5)	46.0(8.3)
제주	36.1(1.7)	7.0(0.4)	7.2(1.2)	0.4(1.1)	0.0(0.2)	0.8(1.5)	48.5(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시·도 구성임.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도 지역에 비해 전라도지역의 불교 인구 비율은 매우 낮다.

반면에 전라도지역은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높다. 전북지역의 개신교인 비율은 1985년에 19%이었는데 1995년에는 25.9%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의 개신교인 비율은 1985년 14.9%에서 1995년 20.4%로 증가하면서 불교 인구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개신교 인구가 불교인구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1985년에 개신교인은 24.8%이고 불교인은 19.9%인데 1995년에는 개신교인이 26.6%로 증가하는 반면 불교인은 19.6%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1985년에 개신교인이 23%이고 불교인이 14.3%였는데 1995년에는 개신교인이 24.7%, 불교인이 15.9%로 개신교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별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1985년에 불교의 경우 서울지역의 불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1%로 가장 높지만 부산의 불교 인구가 14.1%, 경남의 불교 인구가 12.6%, 경북의 불교 인구가 9.5% 등 경상도 지역의 불교 인구가 전체 불교 인구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서울 36.6%, 경기 13.6% 등 서울, 경기 지역의 개신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8.6%, 충남 7%, 전북 6.6% 등 충남과 전라도의 개신교인도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천주교는 서울 34.6%, 경기 13.6% 등 서울과 경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시 가장 높다.

반면에 유교는 전남 지역의 유교 인구가 2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경기 20.6%, 경북 11% 등 불교, 개신교, 천주교와는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원불교의 경우 전체 원불교인의 30%가 전북에 있고, 서울이 16.8%, 전남이 13.5% 등 전라도와 서울의 원불교인이 전체 원불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불교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시작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종교별 시도 구성은 1995년에도 1985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불교의 경우 경상도 불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고, 개신교의 경우 서울 및 전라도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원불교도 전북을 비롯한 전라도 및 서울의 원불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종교구성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지역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살펴본 대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종교구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종교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지역에 따른 종교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의 변화가 한국 종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해야 한다.

IV. 한국의 종교구성: 가구 수준

종교의 선택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종교가 선택된다면 우리는 같은 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선택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과 같이 가족이나 집단의 영향이 강한 사회에서 종교의 선택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있지만, 종교를 개개인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절에서는 비록 한국사회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 종교의 선택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맡겨져 있지만,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가족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과는 달리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종교선택은 가족의 종교정체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비교적 동일한 종교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가족구성원의 종교선택이 전적으로 개인 의사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의 종교적 전통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결국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종교는 이질성을 띄기보다는 동질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가족 내에서 종교의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동질적인 종교구성에 이르게 되는 과정 또한 매우 다양할 것이다. 예컨대 가족 내에서 가장 연장자가 택한 종교를 가족구성원이 따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기존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로 바꾼 후 다른 가족구성원이 차례로 새로운 종교를 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종교가 없는 집안에 어린 자녀가 종교를 갖게 되고 그 영향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이 모두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결혼 등의 생애사건을 통해 개종하거나 새로 종교를 갖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처럼 가족 내에 종교적 동질성이 존재한다면 종교의

동질성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종교를 갖게되거나 개종을 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분석도 할 수 없다. 그 대신 가구의 수준에서 부부 및 가구원 전체의 종교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종교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 불일치한다면 어떤 구성으로 불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다음의 <표 16-9>는 1985년과 1995년 현재 한국의 부부 사이에 얼마나 종교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일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¹⁾ 이 표에 따르면 1985년에 부부 모두 종교가 없는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부부가 불교로 일치하는 부부는 23.6%, 개신교로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은 13.5%, 천주교로 일치하는 비율은 13.5%이다. 전체 부부의 88%가 종교가 없음으로 일치하거나 종교가 있으면서 동일한 종교를 믿는 부부들이다. 반면에 부부간에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는 12%인데 이들 부부 가운데 한 쪽은 무종교인이지만 다른 한 쪽은 불교인인 경우가 4.6%, 개신교인인 경우가 4.2%, 천주교인인 경우가 1.5%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9>를 보면, 1995년의 경우에는 무종교인으로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1995년 현재 부부 모두 종교가 없는 부부는 전체 부부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두 부부가 모두 불교인 경우는 전체 부부 가운데 26%, 그리고 부부 모두 천주교를 믿는 경우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하면, 1995년 현재 전체 부부 가운데 종교가 없거나 혹은 종교가 있으면서 동일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부부는 전체 부부 가운데 88.6%를 차지하고 있다. 부부 10쌍 중 거의 9쌍의 부부는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있다면 동일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1) 종교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도 무종교라는 범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종교가 일치한다고 보고, 종교가 없는 사람과 기성종교를 지닌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표 16-9〉 부부사이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1985~1995

(단위: %)

일치여부	종교 구성	1985	1995
일치	무종교	44.6	38.9
	불교	23.6	26.0
	개신교	13.5	16.7
	천주교	4.0	5.7
	기타 일치	2.3	1.3
불일치	무종교 + 불교	4.6	3.9
	무종교 + 개신교	4.2	4.3
	무종교 + 천주교	1.5	2.1
	기타 불일치	1.7	1.1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85년과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반면에 1995년에 부부 사이에 종교가 서로 다른 부부는 전체 부부 가운데 11.4%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쌍의 부부 가운데 한 쌍 정도의 부부만이 종교가 다른 셈이다. 부부 중 한 쪽은 무종교, 다른 한 쪽은 불교를 믿는 경우가 전체 부부의 3.9%이고, 무종교와 개신교를 믿는 부부가 4.3%, 그리고 무종교와 천주교를 믿는 부부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서로 다른 기성 종교를 믿거나 그 외의 종교를 믿는 부부의 비율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표 16-9〉를 통해서 한국의 부부들 사이에는 종교의 일치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부부 10쌍 가운데 1쌍 정도만이 이러한 갈등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6-9〉는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동일한 종교를 지녔었는지, 아니면 살면서 동일한 종교를 공유하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표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1985년과 1995년 현재 한국사회의 부부들은 종교적 동질성이 매우 높고,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확률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종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기성종교끼리 불일치하는 경우보다는 배우자의 한 쪽이 무종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성종

교를 지닌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종교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된다.

2. 가구 내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이 소절에서는 부부를 넘어 가구내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6-10>은 부부 및 다른 가구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가구 내에서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6-10>에 따르면 1985년의 경우 가구원 모두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으로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40.8%이다. 반면에 가구원이 모두 불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은 12.2%이고, 개신교로 일치하는 비율은 10.5%이다. 가구원 모두 천주교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67.7%의 가구가 가구원의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가구원의 종교가 무종교와 불교로 섞여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15.4%를 차지하고 있다. 무종교와 개신교가 섞여 있는 가구의 비율은 9.1%, 무종교와 천주교의 가구 비율은 9.1%이다.

<표 16-10>에서 1995년의 경우 어떤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종교가 없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2%를 차지하여 10년 전보다 4.6%나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가구구성원 모두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16.6%를 차지하여 10년 전에 비해 4.4%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구성원이 모두 개신교인 가구는 14.7%로 10년 전에 비해 4.2% 증가하고 있으며, 천주교인 가구는 4.8%를 차지하여 1.7% 증가하고 있다. 기성 종교 외의 한 종교를 가구구성원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구성원들이 모두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있는 경우 동일한 종교를 지녀 가구 내에서 종교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73.2%에 달하고 있다. 즉 10년 전에 비해 가구의 종교적 동질성의 비율이 5.5%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995년에 가구구성원들 사이에 둘 이상의 종교가 있는 가구는 전체

〈표 16-10〉 가구구성원들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1985~1995

(단위: %)

일치여부	종교 구성	1985	1995
일치	무종교	40.8	36.2
	불교	12.2	16.6
	개신교	10.5	14.7
	천주교	3.1	4.8
	기타 일치	1.1	0.9
불일치	무종교 + 불교	15.4	13.0
	무종교 + 개신교	9.1	7.7
	무종교 + 천주교	2.5	3.0
	불교 + 개신교	0.7	0.7
	불교 + 천주교	0.1	0.2
	개신교 + 천주교	0.3	0.2
	기타 불일치	4.2	2.0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85년과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가구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내에서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종교와 불교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가구의 13%, 무종교와 개신교로 이루어진 가구가 7.7%, 무종교와 천주교로 이루어진 가구가 3%에 달하고 있다.

〈표 16-9〉의 부부사이의 종교일치도 분석에서 부부의 종교일치도가 높았듯이, 가구수준에서 종교의 분포를 분석해보아도 한 가구 내에 기성 종교가 두 개 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불교와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0.7%이고 불교와 천주교가 함께 있는 가구는 0.2%,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혼재해 있는 가구도 0.2%에 그치고 있다.

〈표 16-10〉에 나타난 결과를 〈표 16-9〉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구내 구성원의 종교일치도는 부부의 종교일치도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종교일치도는 부부 10쌍 중 아홉쌍에 달하고 있지만 가구구성원의 종교일치도는 이보다는 낮아 1985년의 경우에는 100가구당 68가구, 1995년에는 100가구당 73가구만이 종교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종교일치도와 마찬가지로 가구내에서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두 개 이상의 기성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적고 무종교와 하나의 기성 종교의 결합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종교 불일치도에 비해 가구내 종교의 불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상, 즉 종교가 다름으로써 가구의 구성원들 사이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의 문제는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 16-9>와 <표 16-10>의 결과는 이러한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부부 및 가구내 종교의 동질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부 혹은 가구 내에서 종교가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무종교인의 존재에 의해서이다. 무종교 아닌 서로 다른 종교가 부부 혹은 가구 내에 혼재해서 종교의 불일치율을 높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3. 지역별 부부 및 가족 내 종교의 일치와 불일치

1) 지역별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분포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부 혹은 가구 내에서 종교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지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1995년의 자료에만 국한하여 지역별 종교분포를 가구수준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표 16-11>은 지역별로 부부간의 종교가 얼마나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6-11>에 따르면 부부간에 무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전체 부부 가운데 49%가 무종교인 부부이다. 전남의 뒤를 이어 강원(45.4%), 충남(45.4%), 전북(43.3%), 충북(43.2%)의 순으로 무종교인 부부가 많다. 무종교인 부부의 비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부산(31.4%), 경남(35.3%), 대구(35.6%) 등의 지역이다.

불교인 부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44.2%), 경남(42.2%), 제주(38.7%), 대구(38.3%), 경북(35.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상도 지역

에서 불교인 부부의 비율이 높다. 반면에 불교인 부부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14.2%), 인천(15.7%), 전남(15.7%), 광주(16.3%), 서울(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의 분포도 매우 뚜렷하게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 모두 개신교인인 부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2.6%)이다. 그 뒤를 인천(21.3%), 경기(21%), 전북(20.6%), 대전(18.1%), 광주(17.8%)가 잇고 있다. 반면에 제주지역에는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6.7%로 가장 낮고 경남(8.3%), 부산(8.9%), 대구(9.9%), 경북(10.5%)의 순으로 개신교 부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불교와 개신교에 초점을 맞춰보면 불교인 부부의 비율이 높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도지역에서는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매우 낮다. 불교인 부부의 비율 대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부산(44.2 : 8.9), 대구(38.3 : 9.9), 경남(42.2 : 8.3), 경북(35.2 : 10.5)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도 불교인 부부(38.7%)에 비해 개신교인 부부(6.7%)의 비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반면에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높은 지역 중 인천과 전북지역은 개신교인 부부대 불교인 부부의 비율이 각각 21.3 : 15.7과 20.6 : 14.2로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불교인 부부의 비율에 비해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난다.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서울(22.6 : 20.0), 광주(17.8 : 16.3), 경기(21.0 : 19.6), 전남(15.8 : 15.7) 등에서는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과 불교인 부부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부부의 종교일치도를 종합하면, 부산을 포함한 경남 및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는 부부가 함께 불교를 믿는 불교인 부부의 비율이 높다. 반면에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의 대도시 및 경기, 전북, 전남 등의 지역에서는 부부가 모두 개신교를 믿는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에는 부부 사이에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불교의 비율이 높은 부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에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은 불교를 믿지만 다른 한 명은 무종교인으로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의 종교가 무종교+불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부산

〈표 16-11〉 지역별 부부의 종교일치도, 1995

(단위: %)

종교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종교	36.2	31.4	35.6	42.2	41.4	37.1	40.1	45.4	43.2	45.4	43.4	49.1	40.2	35.3	38.2
불교	20.0	44.2	38.3	15.7	16.3	26.4	19.6	25.5	26.8	21.4	14.2	15.7	35.2	42.2	38.7
개신교	22.6	8.9	9.9	21.3	17.8	18.1	21.0	14.3	13.0	15.9	20.6	15.8	10.5	8.3	6.7
천주교	7.6	3.9	5.5	7.9	7.2	5.5	6.9	4.9	5.0	4.4	4.8	3.7	3.3	3.3	6.3
기타 일치	0.8	0.9	1.0	1.0	1.3	1.0	1.1	1.2	1.0	1.6	2.9	2.7	1.6	1.4	1.3
무종교+불교	3.3	6.1	4.6	2.6	4.3	4.2	2.7	2.7	4.9	3.8	3.3	3.9	4.6	5.7	5.3
무종교+개신교	5.4	2.1	2.3	5.3	5.6	4.2	5.1	3.9	3.5	5.3	7.0	5.8	2.6	1.8	1.5
무종교+천주교	2.9	1.6	1.9	3.1	4.7	2.3	2.5	1.5	1.9	1.2	2.1	1.8	1.3	1.0	1.2
불교+개신교	0.4	0.3	0.2	0.3	0.4	0.5	0.3	0.2	0.2	0.2	0.4	0.2	0.1	0.3	0.2
불교+천주교	0.2	0.2	0.2	0.1	0.2	0.2	0.1	0.1	0.1	0.1	0.2	0.1	0.1	0.1	0.3
개신교+천주교	0.2	0.0	0.1	0.2	0.2	0.1	0.2	0.0	0.1	0.0	0.0	0.1	0.0	0.0	0.0
기타 불일치	0.4	0.4	0.4	0.3	0.6	0.4	0.4	0.3	0.3	0.7	1.1	1.1	0.5	0.6	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지역으로 전체 부부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5.7%), 제주(5.3%), 충북(4.9%), 대구(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 사이에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불일치 형태가 무종교+개신교인 경우는 전북(7.0%), 전남(5.8%), 광주(5.6%), 서울(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부가 모두 개신교인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부부의 종교가 무종교+개신교의 형태로 불일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 사이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기성종교들이 혼재해 있는 경우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16-11〉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개인별 종교분포가 지역별 특성을 갖듯이, 부부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정도도 지역에 따른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부부의 종교일치 뿐만 아니라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지역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지만, 이 경우도 불교가 강한 지역에서는 부부 가운데 한쪽은 불교인데 다른 한 쪽은 무종교 형태의 불일치가 많고, 개신교가 강한 지역에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은 개신교인데 배우자는

무종교인으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이 주를 이룬다. 기성 종교의 혼합으로 인한 부부간 종교불일치의 현상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2) 지역별 가구 내 종교 일치와 불일치

이번에는 가구 내 종교의 일치/불일치 현상을 지역별로 살펴보자. 다음 <표 16-12>는 가구내 종교의 일치/불일치 현상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16-12>에 나타난 지역별 가구내 종교 일치/불일치 현상을 <표 16-11>의 지역별 부부 종교 일치/불일치 현상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부부간 종교일치/불일치 분석에서 드러났던 종교의 지역별 분포 특성이 가구 내 종교일치/불일치 분석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불교인 부부가 많았던 경상도지역에서 가구구성원 모두 불교인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개신교인 부부가 많았던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및 경기, 전라도 지역에서 개신교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둘째, 부부의 종교일치도에 비해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불교를 포함한 가구 내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부부의 종교일치도보다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3명 이상으로 가구구성원이 늘어날수록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무종교나 혹은 다른 가구구성원과는 이질적인 종교를 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가운데 불교가 포함된 가구에서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더 낮아지고 있다.

셋째, 두 번째 특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구구성원의 종교결합유형 가운데 무종교+불교의 비율이 부부의 무종교+불교의 비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경우 불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무종교인 가구에서 누군가가 불교를 택해 가구의 종교결합유형이 무종교+불교로 되는 것보다 불교인 가구 내에서 누군가가 무종교를 택해 가구의 종교결합유형이 무종교+불교로 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가구 내에서 불교와 무종교가 섞여서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25%), 부산(23.7%), 제주(20.2%), 대구(19.5%)이다. 반면에 인천(7.4%), 전북(7.7%) 등은 불교와 무종교가 섞여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다.

〈표 16-12〉 지역별 가구내 종교일치도, 1995

(단위: %)

종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종교	33.0	29.2	33.9	39.1	38.7	33.8	37.3	43.5	41.1	42.6	39.8	46.3	38.5	33.2	36.4
불교	13.4	26.2	22.6	11.1	10.4	17.1	14.0	18.9	17.0	14.6	9.0	9.7	22.8	23.8	23.8
개신교	20.3	7.9	8.6	19.3	15.8	15.3	18.6	12.5	10.6	13.2	18.1	13.6	9.2	6.7	5.4
천주교	6.4	3.3	4.6	6.8	5.9	4.1	5.8	4.2	4.0	3.6	3.9	2.9	2.7	2.4	5.5
기타 일치	0.6	0.7	0.8	0.7	0.9	0.6	0.9	0.8	0.5	1.2	2.0	1.8	1.0	1.0	1.0
무종교+불교	9.1	23.7	19.5	7.4	8.7	13.7	8.5	9.1	14.8	11.1	7.8	8.9	16.5	25.0	20.2
무종교+개신교	9.6	4.0	4.4	9.1	10.0	8.3	8.7	6.6	6.9	9.3	11.6	10.2	5.0	3.7	3.2
무종교+천주교	3.9	2.0	2.8	4.0	5.6	3.5	3.4	2.2	2.9	1.8	2.9	2.4	1.9	1.8	2.1
불교+개신교	0.9	0.9	0.6	0.5	0.9	0.8	0.6	0.4	0.4	0.4	0.8	0.8	0.5	0.4	0.3
불교+천주교	0.2	0.2	0.3	0.1	0.2	0.1	0.1	0.1	0.1	0.1	0.1	0.1	0.2	0.1	0.5
개신교+천주교	0.3	0.0	0.1	0.2	0.2	0.3	0.3	0.0	0.1	0.1	0.2	0.1	0.0	0.1	0.1
기타 불일치	2.3	1.9	1.8	1.7	2.7	2.5	1.8	1.7	1.6	2.0	3.8	3.2	1.7	1.8	1.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가구구성원들 사이에 무종교+개신교의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11.7%)이고 그 뒤를 전남(10.3%), 광주(9.9%), 서울(9.6%), 충남(9.4%), 인천(9.1%)의 순으로 잇고 있다. 불교가 강한 제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등에서 무종교+개신교의 유형을 보이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

〈표 16-12〉에서도 우리는 한 편으로는 가구 내의 종교 동질성이 높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종교 동질성이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구구성원들 사이에 종교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 불교집안에 무종교가 섞여 있거나 개신교 혹은 천주교 집안에 무종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구 내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기성종교가 두 개 이상 섞여 있는 비율은 매우 낮다.

3) 지역별 종교불일치의 형태

우리는 〈표 16-11〉과 〈표 16-12〉를 통해 지역별로 부부의 종교일치도 및 가구 내 종교일치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표 16-11〉과 〈표 16-1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부부의 종교일치도에 비해 가구 내 종교일치도는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종교일치도에 비해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역, 어느 종교에서 가구 내 종교불일치율이 높아지는지를 분석해서 가구내 종교적 동질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6-13>은 <표 16-11>의 부부의 종교분포의 비율에서 <표 16-12>의 가구의 종교분포비율을 빼서 그 차이를 구해본 것이다.

<표 16-13>에 나타난 수치의 의미를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보자. 서울의 무종교가 3.18이라는 의미는 서울지역에서 부부가 모두 무종교인이었던 비율에서 가구구성원이 모두 무종교인인 비율을 빼서 나온 차이가 3.18%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모두 무종교인이었던 비율보다 가구내 가구구성원들이 모두 무종교인인 비율이 3.18%만큼 작다는 의미이다. <표 16-13>에서 무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일치의 수치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은 그만큼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에 비해 가구내 구성원들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이 낮음을 뜻한다.

부부의 종교일치도보다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낮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그 차이가 특정 지역,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부부의 종교일치도보다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 불교가 강한 지역에서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부가 불교인으로 일치하던 비율과 가구구성원이 모두 불교인으로 일치하는 비율 사이에는 무려 18%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 경북, 제주 지역은 부산, 경남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각각 15%, 14.9%, 12.4%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교가 아주 강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충북(9.85%), 대전(9.27%), 충남(6.84%), 강원(6.6%), 서울(6.58%)의 순으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불교가 강한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가구 내 불교의 일치도가 크게 낮아진 현상은 가구 내 종교의 구성이 무종교+불교인 결합유형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경남지역의 경우 부부의 종교가 무종교+불교였던 비율보다 가구 내의 종교가 무종교+불교인 경우는 19.3% 증가하고 있

〈표 16-13〉 부부의 종교일치도 분포와 가구 내 종교일치도 분포의 차이, 1995

(단위: %)

지역	무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일치	무종교 + 불교	무종교 + 개신교	무종교 + 천주교	불교 + 개신교	불교 + 천주교	개신교 + 천주교	기타 불일치
서울	3.18	6.58	2.27	1.24	0.24	-5.73	-4.20	-0.99	-0.47	-0.04	-0.16	-1.90
부산	2.17	18.00	0.99	0.58	0.23	-17.58	-1.90	-0.40	-0.53	-0.01	-0.04	-1.50
대구	1.70	15.70	1.26	0.84	0.23	-14.88	-2.04	-0.88	-0.41	-0.05	-0.01	-1.45
인천	3.06	4.64	2.03	1.12	0.23	-4.76	-3.78	-0.93	-0.21	0.01	-0.08	-1.33
광주	2.75	5.92	2.01	1.30	0.34	-4.34	-4.32	-0.92	-0.48	-0.06	-0.06	-2.13
대전	3.23	9.27	2.84	1.36	0.35	-9.46	-4.12	-0.99	-0.29	0.03	-0.19	-2.04
경기	2.78	5.60	2.41	1.17	0.22	-5.77	-3.62	-1.00	-0.27	-0.03	-0.07	-1.43
강원	1.94	6.60	1.81	0.72	0.36	-6.41	-2.69	-0.70	-0.25	0.01	0.00	-1.40
충북	2.09	9.85	2.36	1.02	0.42	-9.83	-3.33	-1.06	-0.20	-0.04	-0.03	-1.25
충남	2.79	6.84	2.73	0.79	0.41	-7.30	-4.04	-0.59	-0.27	-0.04	-0.05	-1.28
전북	3.64	5.22	2.45	0.87	0.93	-4.43	-4.71	-0.83	-0.42	0.08	-0.15	-2.65
전남	2.76	6.02	2.20	0.79	0.93	-4.97	-4.44	-0.66	-0.52	-0.03	-0.03	-2.05
경북	1.73	12.39	1.28	0.60	0.53	-11.89	-2.40	-0.59	-0.35	-0.11	0.00	-1.20
경남	2.10	18.36	1.61	0.85	0.44	-19.26	-1.92	-0.78	-0.10	0.02	-0.02	-1.29
제주	1.84	14.90	1.29	0.73	0.28	-14.96	-1.63	-0.87	-0.15	-0.19	-0.03	-1.20

주: 표에 나오는 수치는 각 지역별로 부부 내의 종교결합유형의 분포비율에서 가구 내 종교결합유형의 분포비율을 뺀 것이다.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다. 부산지역에서도 17.6% 차이가 나고, 제주(15%), 대구(14.9%)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9.8%)과 대전(9.5%)은 두 자리 숫자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교에 비해 개신교나 천주교는 부부의 종교일치도와 가구 내 종교일치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부부가 모두 개신교인 비율과 가구 내 구성원들이 모두 개신교인 비율의 차이가 제일 큰 지역은 대전인데 그 차이도 2.8%에 불과하다. 천주교의 경우에도 대전지역에서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광주, 서울이 잇고 있다.

부부의 종교결합유형이 무종교+개신교인 비율과 가구내 구성원의 종교결합 유형이 무종교+개신교인 비율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전북(4.71%), 전남(4.4%), 광주(4.3%), 서울(4.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부의 종교일치도 분포와 가구 내 구성원의 종교일치도 분포의 차이를 우리는 비유사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구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표 16-14>는 부부 내 종교일치도 및 가구 내 구성원의 종교일치도 사이의 비유사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6-14>를 보면 비유사성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23.4), 부산(22.0), 대구(19.7), 제주(19), 대전(17.0), 경북(16.5)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 가운데 경남, 부산, 대구, 제주, 경북은 모두 불교가 강한 지역이다. 이미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부부는 모두 불교인으로 종교의 일치도가 높지만 가구 내 구성원들이 모두 불교인으로 종교가 일치하는 정도는 현격하게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 곳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6-14> 부부의 종교분포 및 가구 내 종교분포에 따른 비유사성 지수, 1995

지역	비유사성 지수
서울	13.5
부산	22.0
대구	19.7
인천	11.1
광주	12.3
대전	17.0
경기	12.2
강원	11.4
충북	15.7
충남	13.6
전북	13.2
전남	12.7
경북	16.5
경남	23.4
제주	19.0

자료: 통계청(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V. 결론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종교인의 비율이 매우 높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전환가능한 무종교인의 풀(pool)이 어느 정도 고정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무종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도 발견했다. 이 10년 사이에 감소한 무종교인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기성종교 안으로 골고루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종교구성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종교를 많이 갖고 있다. 연령의 측면에서는 어린 연령층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무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한다. 개신교나 천주교 등 기독교 인구 가운데는 1985년의 경우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1995년에 이들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인의 연령구조는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연령구조를 지니고 있는 불교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는 천주교나 개신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1985년에 비해 1995년에는 각 종교마다 구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기성종교 가운데 천주교, 개신교, 불교의 순으로 교육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구성은 지역별 종교구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은 불교 인구의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 불교 인구의 비율은 1985년에 비해 1995년에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서울, 경기,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의 종교구성은 지역별로 종교구성이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부 및 가구 내에는 강한 종교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 혹은 가구구성원들은 모두 종교가 없는 것으로 종교적 성향이 일치하거나, 종교가 있다면 동일한 종교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의 종교일치도는 매우 높으며 가구 내 종교일치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부부의 종교일치도에 비해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종교의 불일치는 무종교로 인해 나타난다. 즉, 무종교+불교, 무종교+개신교, 무종교+천주교 등 무종교와 하나의 기성 종교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종교불일치가 가장 흔한 종교불일치 유형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의 하나는 다른 지역,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가 강한 경상도지역에서 부부는 불교이지만 자녀를 포함한 다른 구성원들 가운데는 종교가 불교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 가구 내 종교의 불일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부부의 종교일치율에 비해 가구 내 종교일치율이 낮아지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경상도 불교집안에서 무종교+불교의 형태로 종교 결합유형이 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 연구의 일부분은 서울대 사회학과 김경동교수 정년기념논총인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에 발표되었다.

제17장 정보화

최 순

I. 머리말

정보화는 199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의 흐름을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행세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동통신 또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의 거리 요소 요소에 운집한 수백만의 붉은 인파, 그리고 그들이 내뿜는 함성과 열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걸작품이라고들 말하기도 한다. 이 사건은 인터넷의 위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그 실상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거대한 군중을 자발적으로 거리로 끌어 내오는 데는 인터넷이 주요한 통신수단이 되었으며, TV화면에 클로즈업되는 화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속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군중의 열기와 더불어 그들의 독특한 인구학적 속성을 엿 볼 수 있다.

최근에 감지되는 정보화와 관련된 일련의 급격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이 확충되고, 정보통신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서 한국사회도 이제는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보사회란 정보지식이 사회전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사회성원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사회로의 진입은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얻게 되는 부가가치 창출이 증시된다는 측면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차원에서 많은 혜택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보화의 당초 지향과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 육체적, 지리적 또는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없는 정보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된다. 학자들은 이같은 정보매체의 접근과 이용의 차별화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전망한다(Castells, 1989; Schiller, 1996). 이처럼 정보격차 현상은 경제의 생산성과 정보통신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가능성을 저해시키며, 동시에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의 해소는 정보격차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에 관한 전국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1988년 정보화 사회 인식 및 수용도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국민생활정보화 실태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이 조사는 1996년까지는 격년에 한번씩 실시되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에서도 1999년 10월 이래 <인터넷 이용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정보격차 현황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 4년 주기로 반복하여 실시되는 <사회통계조사>에 정보와 통신부문을 포함시켰으며, 이미 1997년과 2000년 2차에 걸쳐 정보와 통신부문에 관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통계청, 2001a). 그리고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정보화 관련항목을 기본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조사집계하고 있으며(통계청, 2002a), 2001년 3월부터는 <정보화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2001, 2002e).

대체로 한국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

격적으로 조사, 집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관련된 일련의 통계정보를 접하는 경우, 각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정보화 관련 항목을 기본조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센서스 자료의 심층분석은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2000년에 실시된 센서스 자료 가운데 정보화 관련 자료를 재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사한 시점에 조사된 다른 조사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정보화수준과 인구의 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를 기술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정보화의 접근수준을 측정하는데 이용된 조사문항과 표본조사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의 정보화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그 다음 한국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집단이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화 접근수준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사람들과 비교적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게 된다. 그밖에 이 글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정보화수준의 차별현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게 된다. 이 분석은 인구특성에 따른 정보격차 현상이 혁신(innovation)의 초기 전파단계에서 관찰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는 앞으로 한국의 정보화 수준과 격차, 그리고 이들 변화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기준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자료 및 분석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수집, 집계된 정보화관련 자

료를 분석하게 된다. 한국의 인구센서스에 정보화와 관련된 조사항목이 포함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그러나 2000년 한국의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정보화 관련 조사항목은 센서스의 특성상 몇 개의 조사항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보화수준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정보화 격차와 관련된 실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가구원별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상태, 그리고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한 3개의 기본 질문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가구별로 팩스, 인터넷 회선, 케이블 TV 등 통신기기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조사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 (1) 컴퓨터 활용상태: 평소 컴퓨터(PC)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 직장 및 PC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4개월 이상에 1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음).
- (2) 인터넷 활용상태: 평소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 직장 및 PC방에서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했으며, 4개월 이상에 1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음).
- (3)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 여부: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삐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는 제외함).
- (4) 가구별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현재 맥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통신기기로서는 팩스, 인터넷회선, 케이블TV, 지역유선방송, 위성방송 수신기, 일반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이 제시되고 있음).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보활용 및 활용능력 지표로서, 그리고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보유 여부 및 가구별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은 정보의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의를 갖는다. 다른 사회지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정보화수준과 격차를 관찰할 수 있는 정보화 지표는 최소한 단순성과 표준화, 그리고 포괄성이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즉 한 사회의

정보화수준과 인구 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를 비교, 관찰하는데 유용한 지표는 정보화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단순성), 실태파악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표준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으로 구성된 개념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포괄성)(유지열, 2002;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a).

이 점을 감안하면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위의 네 조사항목을 통해 정보화의 수준과 격차를 관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즉 2000년 인구센서스에 포함된 항목 중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상태는 주로 지표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취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로 반복 조사되는 인구센서스의 주요 항목으로 위의 네 항목이 조사된다는 사실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정보의 접근 및 활용능력은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의 활용 능력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보 활용을 통한 불평등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센서스의 기본 조사항목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 상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 자료가 한 사회의 정보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제한성을 갖고 있지만, 정보화수준과 불평등현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이 조사항목은 앞으로 계속 인구센서스의 기본조사항목으로 조사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실시될 일련의 센서스 자료나 기타 표본조사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보화 수준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는 거의 대부분 한국정보문화센터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리고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조사되는 <정보화실태조사>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정보문화센터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구단위의 표본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조사의 자료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1988년 11월 <정보화 사회 인식 및 수용도 조사>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2년에 한번씩, 그리고 그 이후는 매년 전국 규모의 정보화실태를 조사하였다. 정식 조사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6년 이후는 대체로 매년도 별로 <국민정보화 인식 및 생활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조사를 보면 표본의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조사모집단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조사모집단의 경우 1988년 조사에서는 18세 이상 인구를, 1990년은 13~59세의 인구를, 1994~2000년은 13~64세의 인구를, 그리고 2001년 조사에서는 전국 7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각각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한편 통계청(2001a)에서는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정보화 관련 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전인 1997년과 2000년 <사회통계조사>에 이미 정보와 통신부문을 포함시켜 매 4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 집계하고 있다. 그밖에도 2001년 3월 <정보화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3월 두 번째로 <2002년 정보화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통계청, 2001f, 2002e).

이들 일련의 조사는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이들 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몇몇 통계정보는 조사모집단의 정의가 다르고, 조사에서 측정된 조사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비교하는데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표본조사 이기는 하지만, 인구센서스는 가구내의 전 가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는 분석인구의 정의 여하에 따라 다양한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일련의 통계적 정보가 갖는 혼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잡다하게 조사, 집계되어 발표되는 일련의 통계정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Ⅲ. 분석 결과

1. 정보화의 접근수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화수준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일은 이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한국의 정보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유지열, 2002;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표 17-1>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노력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 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정보문화센터와 통계청에서 조사, 집계하여 발표된 각 가구별 개인용 컴퓨터보유율의 변동상태를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누구나 한국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동시에 이 표를 접하는 사람들은 통계수치가 일관된 흐름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에서 현재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수준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의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계청과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된 두 조사를 비교해 보면 각 조사기관별 조사결과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는 있으나, 두 조사를 연도별 시차 순으로 함께 비교해 보면 <표 1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래 통계수치가 들쭉날쭉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의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률을 보면 2001년 4월에 조사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실태조사에서는 78.6%가 되는데 반해 통계청의 2002년 정보화실태조사의 경우는 60.1%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 준다. 이 사실은 한국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률이 최근에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가, 아니면 두 조사가 갖는 다른 어떤 요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의 결과인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

〈표 17-1〉 각 조사자료별 컴퓨터 보유가구의 비율, 1994~2000

(단위: %)

조사시점	조사명	조사 주관처	
		한국정보문화센터	통계청
1994. 3.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 수용도 조사	20.7	
1997. 7.	사회통계조사		29.0
1997.10.	정보사회 인식 및 실태조사	43.2	
1998.12.	국민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44.5	
1999. 5.	국민생활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51.8	
2000. 5.	국민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66.0	
2000. 7.	사회통계조사		46.4
2000.11.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53.0
2001. 3.	정보화실태조사		53.8
2001. 4.	국민정보격차현황 및 정보생활실태조사	78.6	
2002. 3.	정보화실태조사		60.1

보급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후자의 경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한 두 조사간 차이는 표본오차 이외에 두 조사의 실시 시점의 차이에 따른 실제의 변동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보다는 다른 원인, 즉 두 조사간 표본설계와 관련된 계통적인 오차, 그리고 두 조사간의 도구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이들 두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항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컴퓨터 보유가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질문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1년 국민정보격차 및 정보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의 〈정보화실태조사〉를 제외한 일련의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은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사용된 질문과 2001년 이후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조사한 〈정보화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은 이들 조사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2000년 인구센서스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2000년까지 사용된 질문은 “다음 중 귀하의 맥(또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표 17-2〉 인구집단의 차별적 설정에 따른 각종 정보화지표의 비교, 2000

(단위: %)

정보화지표	인구집단			
	전체 인구	3세 이상 인구	6세 이상 인구	13~64세 인구
컴퓨터 이용	48.4	50.4	51.9	53.5
인터넷 이용	38.8	40.5	42.2	45.4
정보통신기기 이용				
팩스	3.7	3.8	3.7	3.7
인터넷전용선	25.8	26.0	26.2	26.9
케이블 TV	11.7	11.7	11.6	12.0
지역유선방송	53.3	53.2	47.0	53.5
위성방송	1.6	1.6	1.5	1.5
일반전화	96.9	96.8	96.7	96.2
컴퓨터	62.0	62.3	62.4	75.1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이동전화기(휴대폰 등)	45.8	47.8	50.1	61.3
무선호출기(삐삐)	0.2	0.2	0.2	0.2
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0.4	0.5	0.5	0.5
없음	53.6	51.6	49.2	37.9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더불어 각종 정보화기기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1년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실태조사〉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정보화실태조사〉에서는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시점별로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단순히 도구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일련의 표본조사의 경우, 가구를 표집하고 그 가구 내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정보를 조사,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일련의 조사에서는 표본가구의 수와 응답자 수가 동일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와 가구원의 관계, 그리고 가구원의 표집절차에 대한 설

명이 없다. 조사보고서(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2000, 2001)를 보면 표본은 단지 조사모집단(예컨대, 전국 13~64세의 남녀 000명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선정절차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 이들 일련의 조사보고서와 조사표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 조사에서 가구사항은 응답자 개인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질문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된 표본조사의 경우, 적어도 가구사항에 관한 일체의 통계정보는 상당한 수준의 계통적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컴퓨터 보유가구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변화의 흐름만을 반영할 뿐, 전체적인 보유상황을 기술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가구 당 컴퓨터 보유율은 대체로 2000년 하반기에 50%를 넘어섰으며 2002년 현재로는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컴퓨터 보유율과 더불어 정보화의 접근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 여부, 또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여부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들 일련의 이용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는 분석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의 정의에 따라 지표의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표 17-2>는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에서 분석대상 인구의 차별적 적용에 따라 이들 각종 지표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여부를 보여 준다.

팩스나 인터넷 전용선, 케이블 TV 등 가구단위로 설치가 필요한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인구집단의 연령 정의와 무관하게 각 집단별로 비교적 유사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컴퓨터 기기는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 개인휴대용 전화기 등처럼 개인의 속성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지표는 인구집단의 연령에 따른 정의 여하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기 사용자 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차이는 이들 기기의 이용능력이 연령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조사항목을 기초로 지표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의 연령구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통계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인구를 기준인구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지표구성인구의 연령을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화할 경우, 상한선은 개방적으로 그대로 열어두는 대신 하한선만 정의하는 것이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전화기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의존하는 정보통신기기이다. <표 17-2>에 의하면, 이제는 전화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도 매우 높다. 통계청(2002e: 5)에서 발표한 <2002년 정보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0.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보유 가구의 67.8%가 인터넷 전용회선이나 모뎀 등 통신장비를 장착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제는 컴퓨터도 각 가정에서 일반전화기 못지 않게 중요한 통신장비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자가 각각 51.9%와 42.2%를 차지하고 있다(<표 17-2> 참조). 그리고 통계청(2002e: 6)에서 발표한 <2002년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인구 중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63.0%나 되며 그 중에서 94.3%(6세 이상 인구 전체의 59.4%)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최근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들

혁신의 초기전파과정에서 혁신은 대체로 특정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수용되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된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의 초기 수용자들은 어떤 인구집단이 되는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은 먼저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는 고 연령층 인구에 비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혁신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인구특성에 따른 격차가 불가

〈표 17-3〉 인구 특성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 2000

(단위: %)

인구 특성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거주지	동(시부)	52.4	33.9	42.7	26.4
	읍	41.2	25.7	31.3	18.0
	면	27.4	15.6	19.4	9.5
가구특성	비농어가	51.2	33.0	41.4	25.4
	농어가	23.8	13.5	17.2	8.4
계 (N = 43,406,000)		48.4	31.0	38.8	23.6
성별	남자	57.3	39.3	46.5	30.0
	여자	44.9	26.1	36.0	29.1
연령	10 미만	49.1	29.9	24.2	12.6
	10~19	90.4	66.7	77.7	52.3
	20~29	76.9	52.5	69.3	45.2
	30~39	57.0	32.7	45.8	25.5
	40~49	36.7	19.2	29.2	14.8
	50~59	16.3	7.9	12.2	5.8
	60 이상	3.4	1.5	2.9	1.0
계 (N = 43,406,000)		51.0	32.6	41.2	25.0

주: 1) 기준인구는 3세 이상 인구임.

2) 거주지와 가구특성에 따른 자료는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에서 계산되었고, 나머지는 통계청의 표본집계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002b: 24).

피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특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수렴되는 추세에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2000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된 질문은 각각 평소 컴퓨터(PC)나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활용빈도에 따라 다섯 개의 범주를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자들을 이 중에서 어느 범주까지 응답한 사람들로 한정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구에서는

⑤번 범주(사용하지 않음)를 제외하고, ①번 범주, 즉 ‘매일(주 5일 이상)’ 과 ①~④번 범주, 즉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 경험자’를 분리하여 관찰해 보기로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생활의 일부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사용빈도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두 범주의 응답자를 각각 컴퓨터나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경험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했다.

〈표 17-3〉은 2000년 인구센서스의 표본집계결과(통계청, 2002b)와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를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과 ‘매일 사용하는 사람’의 범주로 분류하고, 인구 특성에 따라 이들 두 범주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만 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컴퓨터 사용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51.0%로서 전체 인구의 반을 약간 상회한다. 이 수치는 2000년 7월에 통계청(2001a)의 〈사회통계조사〉에서 “귀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십니까? 사용할 줄 아신다면 사용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서 6세 이상 인구 중 51.6%가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응답한 결과와 아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1년 3월에 조사된 〈2001년 정보화실태조사〉에서 컴퓨터 사용가능 인구로 집계된 58.7%보다는 약 6% 정도 낮은 비율이다. 이는 두 조사의 질문문항의 차이로 인한 도구효과와 두 조사의 시점이 약 4~5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따른 실제의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컴퓨터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의 80% 이상이 인터넷 사용경험이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경험이 있는 인구 가운데서 60%를 넘는 비율이 거의 매일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 특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는 모두 시 지역(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읍이나 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비 농어가 인구가 농어가 인구에 비해 이용률이 높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률이 높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별 이용률을 보면 30대 미만의 인구의 이용

〈표 17-4〉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 2000

(단위: %)

인구 특성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교육수준 ¹⁾				
무학	14.3	7.2	4.5	1.9
초등학교	39.3	27.2	25.8	15.5
중학교	37.0	25.2	30.1	19.5
고등학교	51.4	27.1	41.1	20.9
초대·전문대	80.3	52.6	70.3	43.1
대학교	85.1	62.8	78.0	54.7
대학원	92.4	75.8	87.4	66.7
합계 (N=43,394,000)	51.0	32.6	41.2	25.0
직업 ²⁾				
고위임직원	67.6	43.5	57.5	34.8
관리자 등 전문가	89.7	70.0	82.4	59.3
기술공 및 준전문가	80.0	57.6	71.0	47.5
사무 종사자	81.4	61.0	72.0	49.0
서비스 종사자	34.1	17.0	27.1	13.0
판매종사자	44.7	23.4	34.8	17.0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6.6	2.1	4.2	1.3
기능원 및 관련직	38.4	19.0	29.0	14.3
장치·기계 및 조립	38.1	16.6	28.6	12.4
단순노무자	21.5	9.0	15.6	6.5
기타(군인)	88.9	56.1	68.5	35.7
합계 (N=18,456,000)	48.9	31.0	41.0	24.6

주: 1) 6세 이상 인구가 기준인구임.

2)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인구가 기준인구임.

자료: 통계청(2002b: 24-25).

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30대 인구의 이용률은 30대 미만보다는 낮지만 40대 이상 인구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이는 이 연령층의 인구의 많은 비율이 재학생이거나 젊은 직장인으로서 교육이나 직업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근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설명은 〈표 17-4〉에 의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7-4〉를 보면 한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표 17-5〉 교육수준별 일반인구와 학생인구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 2000

(단위: %)

교육수준		사용경험 있음		거의 매일 이용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무학	일반인 (N=53,810)	9.4	3.5	5.1	1.7
	초등				
초등	일반인 (N=86,052)	2.3	1.3	0.7	0.5
	학생 (N=77,884)	80.3	52.7	56.8	32.2
중학	일반인 (N=75,890)	10.8	6.6	3.2	2.1
	학생 (N=36,062)	92.5	79.7	71.6	56.5
고등	일반인 (N=239,659)	44.2	33.8	20.7	15.3
	학생 (N=40,017)	91.6	82.0	64.7	54.1
초급대	일반인 (N=54,544)	76.0	64.9	47.3	37.6
	학생 (N=16,052)	93.6	86.4	70.0	61.0
대학교	일반인 (N=85,309)	80.9	73.0	56.8	48.3
	학생 (N=26,317)	96.5	91.9	78.9	72.0
대학원	일반인 (N=12,156)	90.6	85.2	72.7	63.0
	학생 (N=2,805)	97.4	93.3	82.9	74.4
합계	일반인 (N=607,420)	39.9	32.4	22.8	17.9
	학생 (N=199,137)	88.2	72.0	65.4	49.2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있는 인구집단에서, 전문관리직과 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 등 화이트 칼라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앞의 〈표 17-3〉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3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표 17-4〉에서 보는 바처럼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 연령층을 구성하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인구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동시에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전문관리직, 준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구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은 학교교육과 연관되어 컴퓨터나 인터넷의 접근기회가 있거나, 직장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17-5〉에서는 교육수준별로 일반인구와 학생인구 간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구는 컴퓨터사용능력이 있는 인구가 39.9%인데 반해 학생인구는 무려 88.2%나 되며,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자를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학생인구에 비해 일반인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생인구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은 중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인구의 이용률에 비해 약간 떨어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차이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유사한 유형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일반인구의 경우 이와는 다른 유형을 나타낸다. 컴퓨터 이용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9.9%에 불과하나, 이용경험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인구는 9.4%, 초등학교만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인구에서는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10.8%, 고등학교는 44.2%로 높아지며, 초급대의 경우는 다닌 학교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76.0%에서 90.6%로 크게 높아진다. 연령에 따른 이러한 유형은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도 단지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는 적어도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구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자가 극히 일부의 특정 인구집단에 몰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구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능력이나 일상적인 이용은 이러한 혁신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필요성은 각자의 직업상의 지위와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17-4>에서 보는 바처럼 전문관리직 종사자나 준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80% 이상이 컴퓨터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집단의 경우, 거의 매일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60%를 넘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도 50%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림 어업, 단순 노무직 및 서비스 종사자는 이들 인구에 비하면 극히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의

인구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이며, 어떤 사람이 이들로부터 가장 소외된 집단인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인구를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인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직업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를 분석해 보았다. 대체로 컴퓨터 이용경험률이 높은 집단은 컴퓨터관련 전문가(98.1%), 컴퓨터관련 준 전문가(95.9%), 교육전문가(91.5%) 등의 순으로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90% 이상이 컴퓨터 이용경험이 있는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과학전문가(89.3%), 행정·경영 및 재정전문가(89.3%), 보건의료전문가(88.5%), 공학전문가(87.4%), 보안서비스 종사자(86.4%), 기타 준 전문가(86.1%), 그리고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85.1%) 등이 뒤따른다. 이처럼 컴퓨터 이용률이 높은 직업은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업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컴퓨터 이용률이 낮은 집단은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5.6%)가 가장 낮고, 농업숙련노동자(6.3%), 어업숙련노동자(9.0%) 등이 10%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광업·건설·운송관련 단순노무직(15.8%), 기타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21.3%),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21.5%), 조리·음식서비스(22.0%), 제조관련 단순노무직(22.6%), 임업숙련종사자(22.7%) 등의 순으로 낮다. 이들 직종의 직업종사자들은 전체 인구 중 컴퓨터 이용가능자가 25%가 안 되는 인구집단이다. 이들 직업종사자들이 갖는 공통점은 일상적인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사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직업종사자란 점이다.

그밖에 컴퓨터의 매일 사용자와 인터넷 이용자(이용경험자 및 매일 이용자)의 경우,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직종은 컴퓨터 이용가능자의 직업 유형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들 직종 중 순위는 <표 17-6>에서 보는 바처럼, 이들 직종 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교육전문가는 컴퓨터 이용경험은 3위이지만 이를 매일 사용하는 경우는 6위로 처진다. 이에 반해 공학전문가는 이용경험은 7위지만 컴퓨터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4위로 꺾충 뛰어 오른다.

〈표 17-6〉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자의 직종: 상위직종 및 하위직종, 2000

(단위: %)

컴퓨터 활용수준	직업의 종류	컴퓨터		인터넷	
		활용경험 있음(순위)	매일이용 (순위)	활용경험 있음(순위)	매일이용 (순위)
상위 10 직업 (85% 이상)	컴퓨터관련 전문가 (N=2,736)	98.1 (1)	92.6 (1)	95.7 (1)	87.9 (1)
	컴퓨터관련 준 전문가 (N=1,184)	95.9 (2)	86.4 (2)	91.3 (3)	77.3 (3)
	과학전문가 (N=12,612)	89.3 (4)	75.7 (3)	92.9 (2)	77.5 (2)
	교육전문가 (N=12,612)	91.5 (3)	67.8 (6)	84.0 (4)	56.8 (7)
	행정·경영 및 재정전문가 (N=869)	89.3 (4)	75.7 (3)	83.8 (5)	64.9 (4)
	보건의료전문가 (N=4,126)	88.5 (6)	64.5 (9)	78.8 (7)	48.7(10)
	공학전문가 (N=5,093)	87.4 (7)	70.4 (5)	79.8 (6)	60.0 (5)
	보안서비스 종사자 (N=2,660)	86.4 (8)	60.1(10)	71.3(10)	40.6 (-)
	기타 준 전문가 (N=2,982)	86.1 (9)	67.0 (7)	76.7 (9)	53.4 (8)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N=3,049)	85.1(10)	66.6 (8)	78.6 (8)	58.0 (6)
25% 미만 직업	임업 숙련 종사자 (N=163)	22.7 (9)	11.7 (9)	16.0 (9)	9.2 (9)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N=4,452)	22.6 (8)	8.8 (7)	16.3 (8)	6.6 (7)
	조리·음식서비스 (N=22,653)	22.0 (7)	7.9 (6)	16.7 (7)	6.2 (6)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 (N=15,461)	21.5 (6)	9.3 (8)	15.2 (5)	6.6 (7)
	기타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N=9,999)	21.3 (5)	7.3 (5)	15.2 (5)	5.5 (5)
	광업·건설·운송관련 단순노무자 (N=6,027)	15.8 (4)	5.6 (4)	10.9 (4)	4.1 (4)
	어업 숙련 종사자 (N=2,271)	9.0 (3)	2.5 (3)	5.7 (3)	1.8 (3)
	농업 숙련 종사자 (N=46,271)	6.3 (2)	1.9 (2)	3.9 (2)	1.2 (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N=1,076)	5.6 (1)	1.7 (1)	4.2 (1)	0.9 (1)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인터넷의 경우도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보안서비스 종사자는 인터넷 이용경험은 10위이지만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14위 정도로 밀려난다. 이에 반해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경험은 8위지만 거의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6위로 올라간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 모두 경험자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인구의 순위변화는 각 직종의 일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컴퓨터의 이용으로부터 소외된 인구의 경우 이용경험이나 매일 이용하는 인구의 순위는 동일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는 대체로 유사한 순위 유형을 보이고는 있으나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약간의 순위변동을 나타낸다. 이 경우도 순위변동이 일어나는 직종은 컴퓨터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적어도 성인인구에서는 직장과 같은 일터의 작업환경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

3. 인구 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

위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는 이용경험자와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로 범주화해서 관찰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경험자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거의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대체로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10대와 20대의 특정한 연령, 초급대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의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높았다. 이 현상은 혁신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혁신이란 특정한 선도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정보화격차 여부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국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인구는 앞서 본 바처럼 학교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컴퓨터나 인터넷 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한 학생이나 직장인이다. <표 17-7>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인구의 컴퓨터 및 인터넷의 이용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 모두 아주 높은 수준의 이용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용률(매일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높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상태를 보면 전체 인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가구특성과 성, 연령 및 다니고 있는 학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 경험률이나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경우에 비해 아주 높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표 17-7〉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상태: 학생 인구, 2000

(단위: %)

사회인구학적 특성		N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매일 사용	사용경험	매일 사용
거주지	동	166,308	89.4	67.2	74.3	51.9
	읍	14,756	84.9	61.2	65.2	41.9
	면	18,073	79.6	52.5	56.3	30.3
가구특성	농가	13,373	80.4	52.8	58.5	31.4
	어가	995	78.3	48.6	57.9	32.6
	농어가	520	83.3	55.2	61.2	31.9
	비농가	184,240	88.8	66.5	73.0	50.6
성	남자	106,158	89.8	69.9	73.4	52.0
	여자	92,979	86.4	60.4	70.3	46.0
연령	6~14	105,932	83.5	38.6	59.9	38.6
	15~24	84,278	93.5	60.8	85.5	60.8
	25~34	7,583	95.1	68.3	89.6	68.3
	35 이상	1,344	87.6	49.8	78.7	49.8
교육	초등학교	77,884	80.3	56.8	52.7	32.2
	중학교	36,062	92.5	71.6	79.7	56.5
	고등학교	40,017	91.6	64.7	82.0	54.1
	초급대	16,052	93.6	70.0	86.4	61.0
	대학교	26,317	96.5	78.9	91.9	72.0
	대학원	2,805	97.4	82.9	93.3	74.4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현상을 기술하고자 할 경우, 각 집단 내에서 학생인구 구성비율의 차이가 격차로 기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격차 존재 여부의 기술은 20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에서 학생인구를 제외한 일반인구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7-8〉은 학생인구를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상태를 보여준다.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경험자나 매일 사용중인 사람 구분 없이 모든 범주에 걸쳐서 유사한 특성의 인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거주지는 동(도시)이, 가구특성은 비농가, 남자, 20대, 전문관리직, 그리고 임금·봉급근로자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집단이다. 이

〈표 17-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상태: 비학생 인구, 2000

(단위: %)

사회인구학적 특성		N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매일 사용	사용경험	매일 사용
거주지	동	472,758	44.6	25.8	36.7	20.6
	읍	49,965	32.7	18.1	25.3	13.3
	면	84,697	18.0	8.8	13.0	5.8
가구특성	농가	67,881	13.0	6.0	9.4	4.0
	어가	3,492	16.5	7.1	11.8	4.8
	농어가	2,346	17.1	8.0	12.8	6.0
	비농가	533,701	43.6	25.1	35.6	19.8
성	남자	286,067	46.9	29.3	38.4	23.1
	여자	321,353	33.8	17.0	27.1	13.3
연령	6~19	17,933	60.8	35.2	39.9	21.6
	20~29	104,657	70.8	44.9	62.3	37.7
	30~39	160,435	56.6	32.2	45.4	25.0
	40~49	135,891	36.4	18.8	28.8	14.5
	50 이상	188,504	9.2	4.4	6.7	3.1
교육	중졸이하	215,752	7.0	2.7	3.7	1.3
	고등학교	239,659	44.2	20.7	33.8	15.3
	초대·대학	139,853	79.0	53.1	69.8	44.1
	대학원	12,156	90.6	72.7	85.2	63.0
	계	607,420	39.9	32.4	22.8	17.9
직업	전문관리직	30,536	89.3	69.3	81.7	58.5
	사무·준전문직	91,859	78.2	56.3	68.6	45.3
	서비스·판매직	79,271	39.0	19.7	30.4	14.4
	농림어업	48,705	6.5	2.0	4.0	1.3
	기능직	75,492	36.9	17.0	27.2	12.5
	단순노무직	27,016	19.8	8.1	14.0	5.8
종사상 지위	임금·봉급근로자	216,644	59.6	31.8	50.9	3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80,832	23.8	7.8	17.2	7.8
	고용원을 둔 자영자	24,177	56.2	25.5	45.9	25.4
	계	321,653	47.3	29.7	39.3	23.4

주: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만 15세 이상 현재 취업자가 기준인구이고, 나머지는 만 6세 이상이 기준인구임.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에 반해 면(농촌), 농가, 여자, 50대 이상, 농림어업종사자,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학생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기초로 집계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경험 및 현재의 이용률 등을 보면 거주지나 가구특성, 성,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모든 범주의 인구가 모두 전체인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7-3〉, 〈표 17-4〉 및 〈표 17-8〉 참조). 그러나 학생인구를 제외했을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측면은 각 범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을 제외했을 경우, 각 범주별 인구 중에서 비교적 학생인구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주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예컨대, 연령이 6~19세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는 컴퓨터 사용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84.3%이나, 학생인구를 제외했을 경우는 60.8%에 불과하다. 그리고 20대의 경우도 76.5%에서 70.8%로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반해 30대 이상의 경우는 두 자료간 큰 차이가 없다. 교육수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여준다. 전체 인구 중 학생인구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는 학생인구를 제외했을 때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이 크게 줄었으나,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의 경우 두 자료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는 정보화의 격차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경우는 학생인구를 제외하는 것이 보다 더 사실에 접근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각각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 17-9〉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상태에 대한 로짓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은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특정 인구집단에서는 학생인구의 구성비율의 차이가 그 집단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짓분석은 학생인구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두 개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모형 1〉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 여부를 거주지, 가구의 특성, 성, 연령 및 교육수준에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모형 2〉는 〈모형 1〉에 응답자의 직업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표 17-9〉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상태에 대한 로짓회귀모형의 회귀계수, 2000

변인 및 범주		컴퓨터				인터넷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022*	2.780	1.718*	5.575	0.578*	1.782	1.066*	2.905
거주지 (기준: 동)	읍	-0.084*	0.919	-0.013	0.987	-0.177*	0.837	-0.118	0.888
	면	-0.353*	0.703	-0.260*	0.771	-0.539*	0.026	-0.461*	0.631
가구형태 (기준: 농어가)	비농가	0.534*	1.706	0.259*	1.295	0.550*	1.733	0.369*	1.447
성별 (기준: 여자)	남자	0.640*	1.896	0.472*	1.604	0.599*	1.821	0.511*	1.667
연령 (기준: 20대)	30대	-0.581*	0.559	-0.525*	0.592	-0.660*	0.517	-0.634*	0.531
	40대	-0.944*	0.389	-0.931*	0.394	-0.981*	0.375	-0.985*	0.374
	50대 이상	-2.045*	0.129	-1.787*	0.592	-2.078*	0.125	-1.848*	0.158
교육수준 (기준: 대학원)	초대·대학	-1.127*	0.324	-0.803*	0.448	-1.009*	0.364	-0.719*	0.487
	고등학교	-2.571*	0.076	-1.885*	0.152	-2.457*	0.086	-1.809*	0.164
	중졸 이하	-4.483*	0.011	-3.482*	0.031	-4.418*	0.012	-3.488*	0.031
직업 (기준: 전문 관리직)	사무·준 전문직			-0.104*	0.902			-0.116*	0.891
	서비스·판매직			-1.138*	0.320			-1.061*	0.346
	농업			-1.988*	0.137			-1.663*	0.190
	기능직			-1.367*	0.255			-1.250*	0.287
	단순노무직			-1.711*	0.181			-1.583*	0.205
Chi-Square		275.614		62.919		115.884		64.695	

주: * $p < 0.05$.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 로짓모형에 직업변수가 추가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표본이 결측치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업을 통제한 상황에서 교육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 그리고 교육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업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1〉에 직업변수를 추가한 별도의 〈모형 2〉을 구성하여 분석해 보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률에 적용된 두 모형에 의하면 앞서 〈표 17-8〉에서 본 바처럼 거주지특성, 가구형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가 그대로 확인되었다.

먼저 컴퓨터 이용 여부에 대한 <모형 1>의 로짓계수의 지수값을 기초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odds)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에 대비한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의 대수를 말한다. 우선 거주지를 중심으로 컴퓨터 활용상태를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동(도시)거주자에 대비하여 읍 거주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동(도시) 거주자의 91.9%가 되며, 면 거주자의 승산비는 동 거주자의 70.3%가 된다. 농어가에 비해 비농어가 출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70.6%가 증가하며, 성별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89.6% 증가한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55.9%, 38.9% 및 12.9%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저학력일수록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학원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중졸 이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32.4%, 7.6%, 및 1.1%에 불과하다.

또한 이 모형에 직업변수를 추가했을 경우(<모형 2>의 경우), 읍 및 면 거주자, 높은 연령층 및 낮은 교육수준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직업변수를 제외했을 경우에 비해 증가한다. 특히 50대 이상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은 크게 증가한다(20대 대비 12.9%에서 59.2%로 증가). 이에 반해 비농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남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오히려 감소된다. 이는 직업이 통제될 경우 인구 특성에 따른 컴퓨터이용과 관련된 격차가 감소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인터넷 이용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한 결과도 <표 17-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인터넷의 경우도 컴퓨터의 이용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가구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이 모두 인터넷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된다. <표 17-9>에서 인터넷 칼럼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수 값을 중심으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컴퓨터 이용 여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에 대비한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의 대수를 가리킨다. 먼저 동부(도시) 거주자에 비해 읍 및 면 거주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동부의 83.7%, 2.6%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농어가 대비 비농어가, 여자 대비 남성이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은 각각 73.3%, 82.1%라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또한 20대 연령층에 비해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51.7%, 37.5%, 및 12.5%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수준 역시 유사한 유형이 발견된다. 따라서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1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을 경우, 면(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승산비는 앞의 모형에서 동(도시) 거주자에 비해 2.6%이던 것이 63.1%로 크게 증가한다. 그밖에 각 연령과 교육수준별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비농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남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직업이 통제될 경우 인구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격차 역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그 동안 한국에서 실시된 정보화와 관련된 일련의 실태조사 자료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한국의 정보화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보화현황을 정보화기기의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정보의 접근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에서 실시된 일련의 정보화관련 조사항목 중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유사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표본과 조사도구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를 분석, 한국의 정보화실상을 기술하고, 정보격차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한국의

정보화의 이행과정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용이 가능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2년 현재 전체 가구 중 60%가 넘는 가구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인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40%가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을 기초로 한국의 정보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능력을 갖춘 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들 이용자는 대부분 정보검색보다는 게임이나 오락 또는 전자우편 등 단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통계청, 2002e). 또한 정보화의 확산과정에서는 어느 사회나 인구집단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실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현상이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으로 기본조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조사, 집계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과 현재의 이용상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은 이들의 활용능력을 반영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용상태는 '거의 매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한 사람을 기초로 측정했는데, 이들 인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결과를 보면 당초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분석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나, 이를 일상화하고 있는 인구는 농어촌보다는 도시거주 인구, 비농·어업 가구의 사람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을 좀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 한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을 갖는 인구는 극히 제한된 인구집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연령상으로는 10대와 20대에 밀집되어 있고, 이들은 주로 학생인구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업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인구가 주요한 집단이었다.

흔히들 혁신이 확산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자가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구 특성에 따른 정보접근의 격차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인구 특성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경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직업을 통제했을 경우, 현재 정보화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간주되는 농어촌도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신세대의 인구가 배출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기술혁신과 더불어 직업상의 직무가 점차 디지털화되면 격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일 뿐 현실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보화와 관련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화로부터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계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농어민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화기기 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인구집단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이들을 정보화 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화교육의 기회만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는 이들로 하여금 정보화 대열에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 백

제18장 인구추계

김동회 · 김형석

I. 머리말

인구와 가구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원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이다. 인구센서스는 전국의 모든 인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인구나 가구에 대해 분포는 물론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구조 파악을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 자료는 매년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인구 및 가구 자료를 추계하여 사용하게 된다. 사실 추계는 인구 및 가구 자료의 이용자로부터 가장 수요가 많은 자료 중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필요하고, 기업은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예측하는데 필요로 한다.

추계는 일반적으로 추정(estimates)과 추계(projections)로 구분한다. 전자는 센서스 이후에 작성된 인구동태나 등록자료 등 최근 연도의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센서스간(intercensal) 중간연도나 센서스후(postcensal) 연도 등 과거나 현재의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다. 반면, 추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물론 센서스 이전(precensal)의 인구나 가구를 추정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 대해서 장래추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후진적(backward)으로 더러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추계(projections)는 예측(forecasts)과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예측은 특정 시점에서의 추계가 현실과 맞을 거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예

측은 장래추계가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Shryock et al., 1973). 예측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가정에서 만들어진 추계인 반면 추계는 정확하게 관련 변수들을 잘 모형화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가정(예를 들면, 제로 성장 등)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Preston et al., 2001). 다만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추계의 시나리오들이 예측으로 사용되기도 한다(Keyfitz, 1972).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1961년 이후 정부공식 통계로서 작성되어 온 인구추계와 지난 2002년 7월 처음으로 통계청에서 작성, 공표한 가구추계에 대해 추계방법 및 주요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구추계

1. 인구추계 방법

인구추계 방법은 크게 수학적인 방법과 조성법(component method)으로 구분된다. 물론 그밖에도 이론적 모형에 의한 방법¹⁾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수학적인 방법은 인구성장이 산술(linear)모형, 기하(geometric)모형, 지수(exponential)모형, 고펜퍼쯔(Gompertz)모형, 로지스틱(logistic)모형 등의 성장곡선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여 외분(extrapolation)하여 추정한다. 수학적인 방법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우 간단하게 장래의 인구 총량을 예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구조를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조성법은 기준연도의 인구와 출생, 사망 및 인구가동과 같은 인구변화 요인을 장래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인구를 추계한다. 일반적으로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인구변동 요인의 변화를 감안한 조성법이 자료의 이용도 면에서 볼 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조성법에 의한 추계

1) 모형에 의한 방법은 인구전환 및 인구발전단계 이론으로 일반화된 모형에 의해 현재의 특정 인구집단의 장래인구성장 경향을 개관한다. 현재의 사회경제발전이 장래의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때의 국가 수용인구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계방법은 인구자료가 거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최인현, 1971).

〈표 18-1〉 인구 추계기법별 비교

종류	내용
산술모형	$P_t = P_0 + rt$ (P_t 는 t 년 후 인구, P_0 는 최초인구, r 은 증가율) · 기간중 인구변화량이 일정 · 단기간의 예측에 적용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저성장을 보이는 지역에 적용 · 인구변동이 급격한 지역은 부적합
기하모형	$P_t = P_0 \times (1+r)^t$ (P_t 는 t 년 후 인구, P_0 는 최초인구, r 은 증가율) · 기간중 성장률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주로 센서스 사이 연도 추계 시 사용) · 인구변화가 자연증가만으로 설명될 때는 최적의 모형 · 인구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수정지수모형	$y = K + GC^t$ (K 는 인구성장의 한계) · 인구의 증가량이 인구성장의 한계와 그 당시의 인구와의 차이에 비례하는 경우에 적합 · 성장과 쇠퇴의 속도가 체감적으로 진행되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곤란
곱페르쯔모형	$y = k \times gC^t$ · 인구성장이 초기의 체증적 증가 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경우에 적합 · 성장과 쇠퇴의 속도가 체감적으로 진행되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곤란
로지스틱모형	$y = \frac{L}{1 + e^{a+\beta t}}$ · 인구증가 속도가 체증적이다가 점차 체감적으로 되어 인구규모가 성장의 상한에 수렴하는 모형으로 현실 설득력이 높음(대도시의 인구예측에 가장 널리 쓰임) ·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곤란
조성법	$P_t = P_{(t+1)} - B_{(t+1)} + D_{(t+1)} - I_{(t+1)}$ (P 는 인구, B 는 출생아수, D 는 사망자수, I 는 국제이동자수) · 출생, 사망, 인구가동과 같은 인구변화 요인의 가정을 기초로 전망 ·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파악이 용이하고 명확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구구조, 출생, 사망 등 기초자료의 정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인구추계 역사

우리 나라의 인구추계는 1960년 이후 높은 인구성장률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되었다(최인현, 1963, 1971). 현재로서는 1955년 센서스를 토대로 우리 나라 인구추계가 시작되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UN에서 1955년 표본추출 집계자료를 토대로 1955~1980년 기간의 남한인구와 북한인구를 추계한 자료와, 1955년 인구센서스 전수결과를 이용해 1955~1975년의 추계인구를 작성한 김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나라의 인구를 추계한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58년 통계월보 창간호를 보면, 지역 및 연도간에 일정한 인구증가율(1.48%)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곱하여 계산한 자료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인구추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UN 및 김연의 추계를 수정하기 위해 3종의 추계가 등장하였다. 그 첫째가 최인현(1963)의 “한국의 장래인구 1960~1980”이고, 둘째가 임태빈(1963)의 “한국의 인구추계 1960~1980”이다. 이 두 가지를 상호 비교하여 합동작업을 한 것이 “한국의 신인구추계 1960~1980”인데, 미국 상무성 통계국의 Henry S. Shryock이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뒷받침을 위하여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약 3개월간 상주하며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최인현, 1971).

최인현(1963)은 1960년 센서스인구를 기초인구로 1960~1980년간 인구를 추계하였는데, 1960년 센서스가 ‘세는 나이’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령 보정에 많은 사전노력을 기울였다. 임태빈(1963)도 1960~1980년의 20년간의 인구를 추계하였는데, 중위 출산수준은 추계기간 중 연간 1%의 저하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1970년에는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1966년의 센서스인구를 토대로

1966~1986년의 추계인구를 작성하였는데, 이 역시 조성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동안의 추계가 출산력 가정을 성-연령 보정출산율(age-sex adjusted birth rate)에 기초한 반면, 이 추계는 인구특별조사(special demographic survey)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후 우리 나라의 공식통계로서의 인구추계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가 끝나는 다음 해에 작성되었으며, 1994년에는 추계인구가 일반통계 제 10133호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0년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2000~2050년간의 추계인구가 작성되었다.

한편 시·도별 인구추계는 198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1988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2002년에 작성된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3. 2000~2050년 장래인구 추계

1) 추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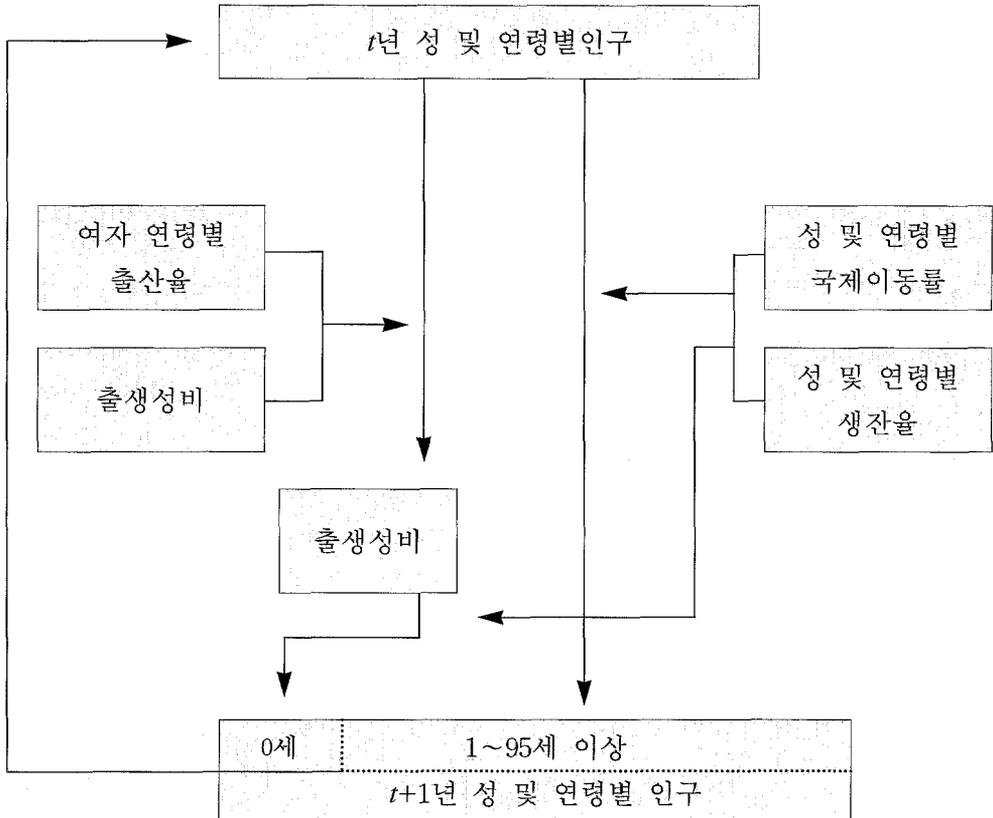
조성법에 의해 작성된 2000~2050년 인구추계는 크게 기준인구(base population)의 작성, 인구변동 요인별 가정설정, 인구추계 시산 및 최종결과 산출의 과정을 거친다. 기준인구를 토대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과정은 <그림 18-1>과 같다.

2) 기준인구의 작성

추계인구 작업 중에서 기준인구의 작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어려운 작업으로 통계청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다. 인구센서스는 짧은 시간 내에 전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누락과 오차를 피할 수 없으며, 기준인구의 작성은 먼저 이에 대한 보정작업에서 출발한다.

먼저 기초인구가 되는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연차별 센서스의 출생 코

〈그림 18-1〉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호트별 자료, 주민등록자료 및 사후조사(post-enumeration survey) 결과와 비교·검토한 후, 1995년 이후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감안하여 성 및 연령별 총인구를 확정한다. 여기서 출생과 사망은 인구동태신고자료를, 그리고 국제이동은 출입국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그런데 1995~2000년간의 인구변동요인을 감안한 인구학적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인구센서스의 순누락율은 2.1%로 나타나, 1995년 센서스의 순누락율 1.6%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20대의 남녀(특히 1인 가구)와 외국인에 대한 조사 누락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0년 인구센서스 사후조사에서는 순누락률이 인구학적 분석보다 다소 낮은 1.6%로 나타났다. 2000

〈표 18-2〉 2000년 인구센서스의 오차 규모

(단위: 천 명, %)

	2000 센서스 인구	인구 변동에 의한 보정인구	사후조사 보정인구	주민등록 인구
규 모(a)	46,136	47,130	46,867	47,655
차 이(b)*		994	731	1,516
오차율(b)/(a)		2.1	1.6	3.2

주: * 2000년 센서스인구와의 차이임.

년 센서스인구와 주민등록인구(4,765.5만 명)의 차이(151.6만 명)는 대부분 조사 누락자와 미상주인구의 등록(중장기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센서스 보정인구는 인구학적인 분석에 의한 순누락율(2.1%)을 감안하여 2000년 센서스인구인 4,613.6만 명보다 99.4만 명이 많은 4,713만 명으로 하였다. 이 보정인구를 인구변동 요인으로 살펴보면, 1995년 11월 1일~2000년 11월 1일 사이에 총 187.5만 명의 인구증가가 있었는데, 출생으로 324.4만 명이 늘어난 반면, 사망과 국제이동에 의해서 각각 125.1만 명과 11.7만 명이 줄어 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연령별 인구의 보정을 위해 센서스 생존율(census survival ratio)을 이용하여 5세 이상에 대해 연령별로 순누락율을 추정했다. 이 때 국제이동에 의한 연령별 인구를 감안해야 보다 정확한 순누락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995년 이후 출입국신고자료에 의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을 작성하여 활용했다. 이렇게 조사인구에다 센서스 생존율 및 국제이동을 감안해 작성된 연령별 인구는 다시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분포와 최종적으로 비교하여 연령별 인구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이때 14세 이하의 연령층 인구는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출생자

〈표 18-3〉 보정인구와 센서스인구의 비교

(단위: 천 명, %)

	보정인구(A)	센서스인구(B)	차이(A-B)
합계	47,130(100.0)	46,136(100.0)	994(0.0)
0~14세	9,908(21.0)	9,647(20.9)	261(0.1)
15~64세	33,772(71.7)	33,114(71.8)	658(-0.1)
65세 이상	3,450(7.3)	3,375(7.3)	75(0.0)

료와 비교 후 다시 보완하여 연령별 구조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인구동태 실적치와 사후조사 결과 보정값 등으로 누락과 중복이 많은 계층의 보정이 끝나면 일단 성 및 연령별 인구가 2000. 11. 1일 기준으로 작성되며, 이를 연앙(7. 1일) 기준으로 이동하면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가 완성된다.

3) 인구 변동요인의 가정

(1) 출산력 가정

일반적으로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에 출산력에 대한 가정은 고위, 중위, 저위로 나누어 추계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화를 중위 가정으로 한다. 이번 추계에서 출산력 가정은 장기간 출산율 변화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연도 및 연령별 출산율을 기초로 출생 코호트별로 재구성하여 연도별로 완결출생아수를 추정하였다. 가정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현재 15세인 1985년생이 50세에 도달하는 시기인 2035년까지의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을 추정한 후, 동일한 수준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완결출산율은 1955년생은 2.27명, 1960년생은 2.08명, 1965년생은 1.98명, 1970년생은 1.71명, 1975년생은 1.49명, 1980년생은 1.45명, 그리고 1985년생은 1.44명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을 연도 및 연령별 출산율로 변환시킨 후

〈표 18-4〉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추정 결과(중위추계), 2000~2035

	합계출산율	출생아수(천 명)
2000	1.47	605
2005	1.37	532
2010	1.36	503
2015	1.37	445
2020	1.37	424
2025	1.38	420
2030	1.39	388
2035	1.40	353

2035년 이후에는 1.4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연령별 출산구조는 초혼연령의 상승 및 미혼율의 증가를 반영하였다. 즉, 20대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되 그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30대 이후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출생아수는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을 해당 연령의 여성인구에 곱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출생성비는 2000년에 110 수준을 적용하였으나, 여아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2025년경에 이르면 정상 성비인 106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사망력 가정

사망력은 일반적으로 성과 연령 요소만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이번 추계에서는 최근의 평균수명 증가속도를 이용하여 각종 모형에 맞추어 장래 평균수명 수준을 추정하였다. 최근의 증가속도는 로지스틱 모형에 적합시켰으나, 남자 75세, 여자 8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증가속도를 활용하였다. 사망력 가정은 연령별 사망확률의 가정값이 필요한 바, 남자는 UN과 각 나라의 생명표 중 가장 낮은 사망확률을 이용하여 최량생명표를 만들어 2050년의 사망확률을 작성했고, 여자는 일본의 생명표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1999년 생명표와 2050년 생명표의 사망확률을 이용해 로짓모형으로 각 연도 평균수명에 적합한 사망확률(5세별)과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5세별 정지인구는 Beer 방법을 적용하여 각 연령으로 분할하였으며, 각 연령별 생산율은 Greville 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향후 평균수명은 최근의 증가 속도를 반영하여 당분간은 다소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표 18-5】 평균수명과 사망자수의 추정 결과, 2000~2050

	2000	2010	2020	2030	2050
평균수명 남녀합	75.87	78.78	80.73	81.53	83.02
남자	72.06	75.50	77.54	78.38	79.95
여자	79.50	82.22	84.08	84.83	86.24
사망자수(천 명)	247	298	390	500	732

의 평균수명은 2030년에는 남자 78.38세, 여자 84.83세, 2050년은 남자 79.95세, 여자 86.24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국제이동 가정

국제이동은 정부의 정책, 국내 경기변동, 국제실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추세를 가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추계에 국제이동률은 향후에도 최근 5년간(1995~2000년)의 성 및 연령별 평균값이 지속되고, 매년 0.8~2.1만 명까지 출국초과 현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인구추계의 결과

(1) 총인구 및 남녀별 인구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현재 우리 나라 총인구는 4,700.8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인구는 2023년까지는 계속 늘어 5,068.3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4,43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은 2000~2001년 현재 0.71%에서 2010~2011년은 0.38%의 증가를 보이다가, 2022~2023년 0%에 도달한 후 2030~

【표 18-6】 총인구와 인구성장률의 추이, 2000~2050

연도	총인구(명)	남자	여자	성비	인구 성장률(%)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101.4	0.71
2005	48,460,590	24,387,814	24,072,776	101.3	0.52
2010	49,594,482	24,932,771	24,661,711	101.1	0.38
2015	50,352,318	25,282,576	25,069,742	100.8	0.18
2020	50,650,260	25,377,186	25,273,074	100.4	0.04
2025	50,648,525	25,299,049	25,349,476	99.8	-0.08
2030	50,296,133	25,046,468	25,249,665	99.2	-0.24
2035	49,483,999	24,565,370	24,918,629	98.6	-0.44
2040	48,204,474	23,836,935	24,367,539	97.8	-0.64
2045	46,470,670	22,881,983	23,588,687	97.0	-0.86
2050	44,336,997	21,751,590	22,585,407	96.3	-1.04

주: 인구성장률은 당해 연도에서 다음 해까지의 증가분을 기초로 산출되었음.

2031년에는 -0.24%, 2050~2051년 -1.04%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우리 나라의 인구 4,700.8만 명 중에는 남자가 2,366.7만 명(50.3%), 여자는 2,334.1만 명(49.7%)이었다. 성비는 101.4로 남자가 더 많으나, 앞으로는 출생성비가 안정되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 101.1, 2025년 99.8, 2030년 99.2, 그리고 2050년에는 96.3 수준까지 낮아 질 것으로 보인다.

(2) 연령계층별 인구

이 추계결과에 의하면, 유년인구(0~14세)는 2000년에는 총인구 중 21.1%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2050년에는 1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3,370.2만 명(총인구의 71.7%)에서 2016년에 3,638.1만 명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2,441.7만 명(55.1%)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학이 대부분인 15~24세의 젊은 연령층 인구는 2000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2.8%(769.7만 명)를 차지했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년인구 유입감소로 2050년에는 15.4%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00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8.8%(1,981.6만 명)로 큰 구성비를 차지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는 47.0%가 될 것 같다. 반면 50~64세 인구는 2000년 생산가능인구의 18.4%(618.9만 명) 수준에서 2030년 36.0%, 그리고 2050년에는 37.6%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경우에는 2000년에 339.5만 명(전체의 7.2%)이었으나, 2050년에는 1,527.1만 명(전체의 34.4%)이 될 전망이다. 이 중 7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201.4만 명에서 2050년에는 1,190.4만 명으로, 그리고 80세 이상 인구도 2000년의 48.3만 명에서 2050년에는 559.1만 명으로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성비는 상대적으로 남자 사망률의 개선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2000년 62.0에서 2050년에는 77.6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총부양인구비는 2000년 39.5에서 2010년에는 38.8로 다소 낮아진 후, 고령인구의 증가로 2030년 54.9, 2050년 81.6으로 계속 높아지게 된다. 소년부양인구비(0~14세 인구/15~

〈표 18-7〉 연령계층별 인구나 부양비의 추이, 2000~2050

(단위: 천명, %)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47,008	49,594	50,650	50,296	48,204	44,337
0~14세	9,911	8,552	7,034	6,217	5,522	4,650
15~64세	33,702	35,741	35,948	32,475	28,149	24,417
65세 이상	3,395	5,302	7,667	11,604	14,533	15,27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21.1	17.2	13.9	12.4	11.5	10.5
15~64세	71.7	72.1	71.0	64.6	58.4	55.1
65세 이상	7.2	10.7	15.1	23.1	30.1	34.4
총부양인구비	39.5	38.8	40.9	54.9	71.2	81.6
소년부양인구비	29.4	23.9	19.6	19.1	19.6	19.0
노년부양인구비	10.1	14.8	21.3	35.7	51.6	62.5
고령화지수	34.3	62.0	109.0	186.6	263.2	328.4

64세 인구)는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00년 29.4에서 2030년 19.1, 2050년 19.0으로 계속 낮아지게 된다. 반면,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2000년 10.1에서 2030년 35.7, 2050년 62.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9.9명당 고령자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2.8명과 1.6명당 고령자 1명씩을 부양하는 셈이다. 고령화지수에 따르면 200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34명 정도이나, 2050년이 되면 328명으로 높아질 것이다.

한편 전체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현재 총인구의 24.2%인 1,138.3만 명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총인구의 12.3%인 548.7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교 대상 연령 인구(6~11세)는 2000년에는 407.3만 명이었으나 2002년의 420.3만 명을 고비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대학교 대상 연령 인구(18~21세)는 출생아수 영향에 의해 2009~2013년 사이에 소폭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0년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는 82.7만 명으로 입학정원(65.5만 명)보다 다소 많았으나, 2004년에는 63만 명으로 입학정원의 9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2009~2015년은 다소 증가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표 18-8〉 학교 구분별 학령인구의 추이, 2000~2050

(단위: 천명, %)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학령인구(6~21세)	11,383	10,141	8,374	7,081	6,344	5,487
(총인구 대비)	(24.2)	(20.4)	(16.5)	(14.1)	(13.1)	(12.3)
초등학교(6~11세)	4,073	3,465	2,915	2,501	2,262	1,900
중학교(12~14세)	1,869	1,980	1,533	1,274	1,213	1,014
고등학교(15~17세)	2,166	2,102	1,590	1,359	1,232	1,062
대학교(18~21세)	3,275	2,593	2,336	1,947	1,637	1,511
대학입학 대상자수(18세 기준)	827	691	547	476	410	367

47.6만 명(73%)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학령인구(6~21세)의 성비는 2000년에는 109.9이었으며 2008년 112.4를 고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성비는 1996년 111.2에서 2000년 114.0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가구추계

1. 정의 및 연구범위

개념적으로 가구는 친족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나 행정등록의 단위인 세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족은 대개 남녀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자녀로 확대되는 혈연에 기반을 둔다. 물론 입양에 의한 양자(養子)를 가족개념에 포함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혈연보다는 친족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UN(1998)에서도 가족을 '결혼과 혈연 또는 입양을 통해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은 취업, 취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를 가족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면에 가구는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다(통계청, 2002a: 8).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된다'고 하였다(통계청, 2001b: 8).

한편 장래 가구추계에서는 앞으로 가구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가구나 가구의 개념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추계기간이 너무 길지 않다면 가구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연구는 현재 통계청의 가구와 가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구추정에는 인구추정보다도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을 추정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을 추정하면 당초 추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장래 가구추계의 대상 기간을 2000~2020년의 20년간으로 정했다. 또한 군부대, 교도소, 재외공관 등에 거주하는 인구와 집단사회시설 가구를 추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의 일반가구인 혈연가구, 비혈연 5인 이하의 가구와 1인 가구를 추계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추계에서 사용하는 가구 자료는 1) 가구의 성, 5세 간격별, 혼인상태별 가구, 2) 가구의 성, 5세 간격별, 가구구성별 가구, 3) 가구원수별 가구 등을 포함한다. 연령은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상한을 85+까지 연장하였고, 가구구성은 '부부 가구', '부모와 자녀', '편부와 자녀', '편모와 자녀', '3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로 구분하였다.

2. 가구추계 기법의 종류

가구와 가족추계는 사용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태(static) 모형과 동태(dynamic) 모형으로 구분된다. 정태적인 방법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추계되는 인구의 구성비나 비율에 따라 가구에 인구를 할당하여 추정하며, 동태적인 방법은 가구상태의 변화나 전환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구를 추정한다.

정태적 방법으로는 거시자료(macro data)를 사용하는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확장가구주율법(headship extensions), 개인특성법(propensity methods) 등이 널리 활용되며, 동태적 방법은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가구천이법(household transition methods)과 생명표법(life tables), 그리고 개별자료(micro data)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으로 분류된다(Bell et al., 1995).

가구주율법에서 장래의 가구주율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수학적 모형(mathematical model), 경제적 모형(economic model), 코호트 이행모형(cohort progression model)의 3가지가 있다.²⁾ 수학적 모형은 가구주율이 장래에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고정된 곡선(trajecory)을 따를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판단적 외삽(judgemental extrapolation), 곡선 맞춤(curve fitting), 로그회귀(log regression),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미국 센서스국은 1958년에 수정지수식(modified exponential curve)을 이용하여 1950~1957년 기간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추이를 1980년의 가구주율 추정에 사용하였다(UN, 1973b). 그 이후 UN(1973b)과 미국 센서스국(U.S. Bureau of the Census, 1986)은 130개 가구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 인구집단별 구성비를 로지스틱 함수로 변형(logistic transformation)하였다. 또한 Ketkar(1990)는 가구주율에 선형로그 외삽법(log linear extrapolation)을 적용하였고, Corner(1989)는 성, 연령, 가구주, 가구형태별로 시계열 외삽법(time series extrapolation)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모형은 소득, 경제활동참가율, 주택가격, 도시화 등 경제적인 요인이 가구주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Kent(1992)는 1961~1987년 사이의 미국 15~24세 가구주율에 대해 회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이들의 가구주율이 소득, 주택가격, 초혼연령, 남자의 대학교육 비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학적 모형은 U.S. Census Bureau(1986), Corner(1989), Ketkar(1990), 경제적 모형은 Kent(1992), 코호트 이행모형은 Kono(1987), Mason(1987), 大江守之(1994)를 참조할 것.

코호트 이행모형은 전후 베이비 붐과 같이 인접한 연령 코호트들 사이의 인구 차이가 클 때나 젊은 층에서 가구주율 변동이 클 때 유용한 가구추계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UN, 1993b). 大江守之(1993)는 순천이율(net transition rate)을 바탕으로 가구주율을 추정하였다. 순천이율은 동일한 연령과 성 코호트의 가구주간의 생산율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순천이율이 35세 이상에서 가구주율보다 더 안정적이며, 35세 미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현상을 교육이나 취업기회의 확대로 여성의 혼인 연령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大江守之(1994)는 1992년 일본의 인구추계에서 사용된 34세 미만의 성별 혼인상태를 추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만혼 경향을 가구추계에 반영하였다. 다른 코호트 이행모형으로는 Bell과 Copper의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3개의 직전 기간 동안 동일 코호트의 평균 변화에 의존하여 코호트별 가구주율을 추정하였다. 이때 변화값은 이론적으로 최대가 되는 가구주율 값에 상대적인 값으로 측정된다(Bell and Copper, 1990).

이런 방법 이외에도 Kono(1987)의 변형된 가구주율 추정방법이 있다. 그는 가구주율 추정에 사용되는 수정지수식을 가구규모 및 연령별 가구주 비율의 분포와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구형태별 가구수 추정에도 사용하였다. 또한 Mason(1987)은 HOMES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구추계를 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는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가구수를 추정하는 이외에 가구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의 가구주 동거형태별로도 추정한다.

3. 2000~2020년 장래가구 추계

1) 추계방법

가구추계기법을 선정하는데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인구변천 수준과 이번 가구추계에서 사용하게 될 기초자료(통계청의 인구센서스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특성 등 2가지 요인을 주로 감안하여 가구주율법을 중심으로 추계기법을 검토하였다. 이 추계기법은 계산과정이나 자료요구가 단순하면서도 인구

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같이 가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민감하여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빠른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Bell et al., 1995).

가구주율법은 미국의 국가자원기획위원회(National Resources Planning Committee)가 1930년 미국 센서스를 토대로 가구추계에 처음 사용하였다(UN, 1993b). 가구주율법에서는 성, 연령, 혼인상태별 인구자료가 필요하다. 추정에서는 각 특성별로 가구주 비율을 산출해 낸 다음, 인구와 가구주 비율을 곱하면 각 특성별로 추정된 가구수가 산출된다.

가구주율법에서 장래의 가구는 특정 집단의 인구에 성, 연령, 혼인상태별 집단의 가구주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H^s(x, t) = \sum_m P^s(m, x, t) \times h^s(m, x, t)$$

여기서, $H^s(x, t)$ 는 연도 t 의 가구주의 성 s , 연령 x 의 가구수, $P^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인구, $h^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가구주율이다. 이 식은 장래가구추계에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계작업은 크게 가구주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로 장래 인구비율을 추정하는 것과, 이들 집단별로 가구주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성, 연령,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의 과거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집단별로 장래 가구주율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가구주율에 장래 인구수를 곱하여 집단별로 장래 가구수를 구한다. 우리 나라의 인구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가구수와 가구주율의 추이는 5년 간격으로 파악한다. 장래가구추계는 5년 간격으로 하게 되며, 연도별 가구추계는 연도별로 내삽(interpolation)하여 산출한다.

장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은 35세 미만에서는 과거 3개 연도 센서스 기준의 선형로그식³⁾ 이, 그리고 35세 이상은 2개 연도 센서스 순천이율⁴⁾의 평균을 사용한 추정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세 미만은

가구변동이 많은 반면, 35세 이상은 가구주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가구추계의 결과

(1) 총가구수

가구와 인구의 관계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가구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통계청, 2001c)까지는 적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처럼 소가족화 및 가구의 분화, 1인 가구의 증가가 계속된다면 가구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증가할 수도 있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나라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증가폭은 점점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00년에 1,460.9만 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1,578.9만 가구, 2010년에는 1,686.4만 가구, 2015년에는 1,757.1만 가구, 2020년에는 1,815.8만 가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구 증가세의 둔화로 연간 평균 가구증가가 2000~2005년간은 매년 약 24만 가구, 2005~2010년간은 매년 약 22만 가구이지만, 2010~2015년간에는 매년 약 14만 가구, 그리고 2015~2020년간에는 매년 약 12만 가구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구증가율을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보면, 인구증가율이 추계기간(2000~2020년)중 연간 0.67~0.14% 수준을 보인 반면,

3) 가구주율 추정을 위한 선형로그식은 다음과 같다.

$$h^s(m, x, t) = a \times Ln(n) + b$$

여기서, $h^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가구주율이고, $Ln(n)$ 은 추계간격 n 의 자연로그이며, a 는 기울기, b 는 상수이다.

4) 순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_i^s(x, t) = \frac{H_i^s(x+5, t+5)}{H_i^s(x, t)} - \frac{P^s(x+5, t+5)}{P^s(x, t)}$$

여기서, $C_i^s(x, t)$ 는 연도 t 의 가구형태 i , 성 s , 연령 x 의 순천이율, $H_i^s(x, t)$ 는 연도 t 의 가구형태 i , 성 s , 연령 x 의 가구수, $P^s(x, t)$ 는 연도 t 의 가구형태 i , 성 s , 연령 x 의 인구이다.

〈표 18-9〉 가구수의 추이와 연평균 증가율, 2000~2020

(단위: 천 가구, 천 명, %)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¹⁾	14,609	15,789	16,864	17,571	18,158
증가량 ²⁾	1,463	1,180	1,075	707	587
연평균증가율 ³⁾	2.13	1.57	1.33	0.83	0.66
일반가구 인구 ⁴⁾	45,427	46,978	48,181	48,849	49,194
증가량 ²⁾	1,561	1,550	1,204	667	345
연평균증가율 ³⁾	0.70	0.67	0.51	0.28	0.14

주: 1) 200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자료로서 누락분이 보정된 자료이며, 2005~2020년은 추계자료임.

2) 직전 기간에서부터의 순증가.

3) 직전 기간에서부터의 연평균 증가율.

4) 외국인, 특별조사구, 집단시설 인구 제외.

가구증가율은 1.57~0.66% 수준을 보임으로써 인구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 가구주의 성·연령별 가구

가구의 성 및 연령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0~2020년의 기간에 가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전체의 12.1%에서 21.0%로, 여자가구는 18.5%에서 21.9%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행성 질환 등 건강관리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의 가구주 비중이 2000년의 3.1%에서 2020년에는 7.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남자(25~64세)들은 전체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4.9%에서 2020년에는 77.1%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의 평균연령은 2000년 여자 50.5세, 남자 45.8세였는데, 2020년에는 여자 56.0세, 남자 51.3세로 각각 늘어 남녀 가구주 모두 고령화되는 가운데 남녀간 연령 차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라 앞으로 우리 나라의 가족구조나 가족 내의 역할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10)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가구수, 2000~2020

(단위: 천 가구, 세)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자	11,901	12,713	13,408	13,840	14,179
0 ~ 14	1	1	1	0	0
15 ~ 19	40	34	38	35	30
20 ~ 24	171	147	118	130	116
25 ~ 29	822	689	640	492	528
30 ~ 34	1,586	1,600	1,410	1,387	1,125
35 ~ 39	1,908	1,829	1,787	1,627	1,647
40 ~ 44	1,917	1,913	1,836	1,838	1,670
45 ~ 49	1,446	1,824	1,873	1,774	1,789
50 ~ 54	1,159	1,336	1,755	1,770	1,704
55 ~ 59	940	1,062	1,250	1,625	1,662
60 ~ 64	806	837	957	1,120	1,477
65 ~ 69	552	680	714	814	974
70 ~ 74	304	425	540	566	664
75 ~ 79	167	209	308	390	420
80 ~ 84	63	94	126	190	246
85 +	20	33	55	80	125
평균 연령	45.8	47.1	48.5	49.9	51.3
여자	2,708	3,076	3,455	3,730	3,979
0 ~ 14	1	1	1	0	0
15 ~ 19	40	33	36	34	29
20 ~ 24	189	196	161	184	176
25 ~ 29	202	202	217	182	211
30 ~ 34	163	191	184	193	160
35 ~ 39	210	222	238	219	226
40 ~ 44	275	301	310	313	290
45 ~ 49	248	333	356	354	356
50 ~ 54	232	275	373	380	371
55 ~ 59	232	252	300	396	402
60 ~ 64	251	240	257	292	378
65 ~ 69	250	279	282	300	347
70 ~ 74	205	267	338	349	393
75 ~ 79	133	172	238	299	327
80 ~ 84	55	81	112	158	200
85 +	22	31	51	76	112
평균 연령	50.5	51.5	53.2	54.6	56.0

〈표 18-11〉 가구주의 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추이, 2000~2020

(단위: 천 가구, %)

가구주 혼인상태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합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유배우	10,963	75.0	11,556	73.2	12,119	71.9	12,458	70.9	12,718	70.0
사별	1,594	10.9	1,730	11.0	1,964	11.6	2,152	12.2	2,352	13.0
이혼	564	3.9	805	5.1	1,005	6.0	1,144	6.5	1,241	6.8
미혼	1,487	10.2	1,697	10.8	1,775	10.5	1,817	10.3	1,847	10.2
남자	11,901	100.0	12,713	100.0	13,408	100.0	13,840	100.0	14,179	100.0
유배우	10,514	88.3	11,058	87.0	11,566	86.3	11,878	85.8	12,120	85.5
사별	228	1.9	255	2.0	292	2.2	323	2.3	359	2.5
이혼	251	2.1	362	2.8	455	3.4	520	3.8	568	4.0
미혼	908	7.6	1,038	8.2	1,095	8.2	1,119	8.1	1,133	8.0
여자	2,708	100.0	3,076	100.0	3,455	100.0	3,730	100.0	3,979	100.0
유배우	449	16.6	498	16.2	552	16.0	580	15.6	598	15.0
사별	1,366	50.5	1,476	48.0	1,672	48.4	1,828	49.0	1,993	50.1
이혼	313	11.6	443	14.4	550	15.9	624	16.7	674	16.9
미혼	579	21.4	659	21.4	681	19.7	698	18.7	714	17.9

(3)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추계기간(2000~2020년) 중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남자는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의 순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배우 가구주는 2.8% 감소하는 반면, 이혼, 사별과 미혼의 가구주는 각각 1.9%, 0.6%, 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사별, 미혼, 유배우, 이혼의 순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사별, 미혼, 이혼, 유배우로 순서가 바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미혼자, 유배우자, 사별자 가구주는 각각 3.5%, 1.6%, 0.4% 감소하고, 이혼자 가구주는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가구구성별 가구

가구 구성면에서는 소가족화 내지는 가족의 분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형태인 ‘부부+자녀 가구’는

〈표 18-12〉 가구구성의 추이, 2000~2020

(단위: 천 가구, %)

가구 구성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합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부부	1,802	12.3	2,185	13.8	2,597	15.4	2,987	17.0	3,429	18.9
부부+자녀	7,035	48.2	7,435	47.1	7,666	45.5	7,688	43.8	7,537	41.5
편부+자녀	225	1.5	242	1.5	266	1.6	279	1.6	284	1.6
편모+자녀	923	6.3	1,005	6.4	1,080	6.4	1,112	6.3	1,125	6.2
(핵가족) ¹⁾	9,984	68.3	10,868	68.8	11,609	68.8	12,066	68.7	12,375	68.2
3세대 이상	1,223	8.4	1,152	7.3	1,073	6.4	964	5.5	852	4.7
1인 가구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비혈연	163	1.1	160	1.0	150	0.9	143	0.8	136	0.7
기타	969	6.6	933	5.9	922	5.5	905	5.2	898	4.9

주: 1) '부부 가구', '부부+자녀(미혼) 가구', '편부+자녀(미혼) 가구', '편모+자녀(미혼) 가구'의 합계.

2000년에는 전체 가구의 48.2%(703.5만 가구)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41.5%(753.7만 가구)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3세대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2000년에 총 122.3만 가구(8.4%)에서 2020년에는 85.2만 가구(4.7%)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부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에 대한 비율이 12.3%(180.2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18.9%(342.9만 가구)로 6.6%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에 '1인 가구'도 2000년에 전체의 15.5%에서 2020년에는 21.5%로 6.0% 증가하여 크게 주목을 끈다. 하지만 호주(2001년, 23%), 독일(2000년, 36%), 미국(2000년, 26%), 일본(2000년 28%, 2020년(추정) 30%)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편부+자녀 가구'와 '편모+자녀 가구'는 2000~2020년 중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가구수는 각각 5.9만 가구, 20.2만 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핵가족의 비율도 앞으로 20년간(2000년: 68.3%, 2020년: 68.2%)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핵가족 비율은 1975년 이후 계속 68%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로써 일반적

〈표 18-13〉 가구주의 연령별 부부 가구의 추이, 2000~2020

(단위: 천 가구)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합계	1,802	2,185	2,597	2,987	3,429
15~19	1	1	1	1	1
20~24	17	17	12	12	10
25~29	185	164	159	125	138
30~34	184	201	191	200	169
35~39	77	82	87	84	88
40~44	64	72	75	80	76
45~49	85	121	137	140	149
50~54	131	167	237	253	256
55~59	190	236	295	403	427
60~64	283	319	383	467	639
65~69	269	349	384	450	554
70~74	172	248	325	348	411
75~79	98	134	198	256	283
80~84	36	57	81	122	158
85+	11	17	31	46	71

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근대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크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부부 가구’는 2000년 180.2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342.9만 가구로 90.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령자 ‘부부 가구’의 증가(89만 가구)에 주로 기인한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보면 ‘부부 가구’는 30~34세에서 첫 번째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여 40~44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60대에 두 번째 정점(최고봉)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1차적인 증가 시기는 가족생애주기상 가족형성기(무자녀기)에 해당되는데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30세 미만의 가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015년 급감은 1984~1990년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 가구주가 30~34세인 ‘부부 가구’는 2005년까지는 증가, 2010년까지는 감소, 2015년까지는 증가를 보인 후 2020년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출생 코호트의 영향에서 비롯(1979~1982년생 급증, 1984~1990년생 급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14〉 '부모+자녀 가구'와 '편부모+자녀 가구'의 추이, 2000~2020

(단위: 천 가구, 세)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합계	7,035	225	923	7,435	242	1,005	7,666	266	1,080	7,688	279	1,112	7,537	284	1,125
15~19	0	0	1	0	0	1	0	0	2	0	0	2	0	0	2
20~24	13	1	10	10	1	13	7	1	12	6	1	14	5	1	14
25~29	279	3	43	213	3	45	182	4	48	129	3	40	127	3	47
30~34	1,018	10	74	1,022	11	82	884	11	77	857	11	81	683	9	68
35~39	1,442	25	119	1,397	20	117	1,375	19	119	1,251	16	111	1,267	16	115
40~44	1,453	45	166	1,471	44	164	1,423	43	159	1,425	43	160	1,296	39	146
45~49	1,047	44	148	1,326	55	180	1,360	58	181	1,292	56	169	1,296	57	167
50~54	764	37	128	882	42	147	1,158	57	190	1,165	58	188	1,120	57	179
55~59	522	26	99	590	29	108	700	34	123	917	45	157	941	46	157
60~64	309	17	69	313	17	66	354	19	70	414	22	78	545	28	98
65~69	128	9	38	139	10	47	138	10	48	148	10	53	169	12	63
70~74	41	4	17	49	5	24	54	6	32	50	6	34	52	6	40
75~79	15	2	7	16	2	9	21	3	13	23	4	17	23	4	19
80~84	4	1	2	5	1	3	6	2	4	9	2	6	10	3	7
85+	1	0	1	1	0	1	2	1	1	3	1	2	4	2	3
평균연령	43.9	49.1	47.3	44.6	49.6	47.7	45.6	50.4	48.5	46.4	51.1	49.3	47.1	51.9	50.1

주: 1) 부부+자녀, 2) 편부+자녀, 3) 편모+자녀.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50~54세(또는 45~49세) 이상인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 둥지(empty nest)'의 가족축소기에 해당된다. 이들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의 출가 후 부부만의 '빈 둥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현재 가장 전형적인 가족형태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가구주가 혼인과 함께 자녀를 갖게 되는 30~34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40~44세에 절정에 달하게 된다. 앞으로는 만혼의 영향으로 점점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 연령층이 30~40대에서 3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편부모+자녀 가구'는 i)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쪽이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ii)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iii) 미혼자녀가 가구

〈표 18-15〉 '1인 가구'의 추이, 2000~2020

(단위: 천 가구, %, 세)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합계	2,270	100.0	2,677	100.0	3,109	100.0	3,493	100.0	3,897	100.0
0~14	1	0.0	1	0.0	0	0.0	0	0.0	0	0.0
15~19	47	2.1	42	1.6	49	1.6	47	1.3	42	1.1
20~24	201	8.8	204	7.6	174	5.6	204	5.8	195	5.0
25~29	324	14.3	310	11.6	320	10.3	266	7.6	305	7.8
30~34	239	10.5	271	10.1	266	8.5	284	8.1	244	6.3
35~39	185	8.2	199	7.4	217	7.0	213	6.1	229	5.9
40~44	169	7.5	189	7.1	202	6.5	218	6.3	211	5.4
45~49	132	5.8	185	6.9	210	6.8	216	6.2	230	5.9
50~54	119	5.3	152	5.7	218	7.0	234	6.7	237	6.1
55~59	132	5.8	158	5.9	198	6.4	270	7.7	286	7.4
60~64	167	7.4	181	6.7	211	6.8	252	7.2	338	8.7
65~69	192	8.4	256	9.5	280	9.0	326	9.3	400	10.3
70~74	172	7.6	254	9.5	342	11.0	372	10.7	446	11.4
75~79	119	5.2	162	6.0	246	7.9	323	9.3	363	9.3
80~84	51	2.3	82	3.1	118	3.8	180	5.1	235	6.0
85+	20	0.9	33	1.2	59	1.9	87	2.5	135	3.5
25 미만	248	10.9	246	9.2	223	7.2	251	7.2	237	6.1
25~64	1,468	64.7	1,644	61.4	1,842	59.2	1,953	55.9	2,082	53.4
65+	554	24.4	787	29.4	1,044	33.6	1,289	36.9	1,578	40.5
평균 연령	47.3		49.7		52.2		54.2		56.0	

주로 부모 중 한쪽과 살고 있는 형태의 가구이다. 이 형태의 가구는 2000년에 114.8만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140.9만 가구로 26.1만 가구 정도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구주의 연령은 30대 후반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 및 진출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00년에 '편부+자녀 가구'가 49.1세, '편모+자녀 가구'가 47.3세였는데, 2020년에는 '편부+자녀 가구'와 '편모+자녀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각각 51.9세와 50.1세로 모두 5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1인 가구'는 2000년 227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310.9만 가구, 2020년에는 389.7만 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표 18-15>에서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는 25~29세가 14.3%로 가장 높고, 이후는 50~54세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65~69세에 8.4%로 두 번째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2010년에 이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1인 가구'의 가장 주된 연령층이 70~74세(11.0%)가 되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24.4%에서 2010년에는 33.6%, 2020년에는 40.5%에 달해 이 기간 중 전체 '1인 가구' 증가(162.7만 가구)의 62.9%(102.4만 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평균 연령은 2000년 47.3세에서 2010년에는 52.2세, 2020년에는 56.0세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5) 가구원수별 가구

추계기간(2000~2020년) 중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를 보면, 2인 이하의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인 가구는 2005년(21.0%)까지는 가구구성비가 높아지나, 평균 가구원수가 3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2010년(20.7%)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소가족화가 더욱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구규모는 호주(2001년) 2.6명, 미국(2000년) 2.6명, 일본(2000년) 2.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8-16>에서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보면, 4인 가구가 앞으로도 가장 주된 유형으로 남는 가운데,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0년에는 4인 가구(31.1%),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 순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2인 가구(22.4%)가 3인 가구(20.7%)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며, 2020년에는 1인 가구(21.5%) 또한 3인 가구(19.5%)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표 18-16〉 가구원수별 가구의 추이, 2000~2020

(단위: 천 가구, %, 명)

가구원수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합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1인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2인	2,787	19.1	3,280	20.8	3,781	22.4	4,220	24.0	4,692	25.8
3인	3,049	20.9	3,314	21.0	3,491	20.7	3,557	20.2	3,546	19.5
4인	4,540	31.1	4,835	30.6	4,994	29.6	5,008	28.5	4,909	27.0
5인	1,473	10.1	1,332	8.4	1,209	7.2	1,078	6.1	949	5.2
6인	352	2.4	260	1.6	212	1.3	167	1.0	133	0.7
7인 이상	137	0.9	92	0.6	66	0.4	48	0.3	32	0.2
평균	3.1		3.0		2.9		2.8		2.7	

IV. 결론 및 토론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인구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규모는 물론 연령별 인구구조 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구규모는 2023년에 5,068.3만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인구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은 1962년에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여 인구증가를 억제해 오다가, 출산력이 1983년에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면서 인구정책이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출산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일단 낮아진 출산수준을 정책 수단에 의해 다시 높인다는 것이 어찌면 지금까지 출산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인구가 규모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다른 사회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즉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나타내는 7.2%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0%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서구(프랑스 155년, 영국 91년, 미국 88년 등)는 물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36년)에 비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 문제에 대한 준비가 다른 사회에 비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 의료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저출산 사회에서의 고령인구의 증가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과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성평등 제고, 재취업 알선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력 부족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의 복지에도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약자인 고령인구의 부양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족에게 대부분 맡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고령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5%에 머물고 있으며, 생계수단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32.5%에 불과하고 45.4%는 일부 지원, 22.0%는 전부 지원을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은 전체의 2.5%가 바깥활동에서, 5.1%는 집 안밖 활동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령인구의 부양은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

식되어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여가, 건강, 소득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연령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사항 중의 하나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들 수 있다. 대입 대상연령인 18세 인구는 2000년 현재 82.7만 명으로 입학정원(65.5만 명)보다 많으나, 2004년이 되면 63만 명으로 줄어 입학정원의 9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2009~2015년에는 다소 증가한 후, 2016년(62.6만 명)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비인기 학과의 폐과를 시작으로 단과대학의 축소 및 대학간 통폐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투자를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장래 가구추계는 현재 한국사회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와 관련 있는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인구추계 못지 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작성한 우리 나라의 2000~2020년 기간의 가구추계 결과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된다.

첫째, 우리 나라의 가구는 지금까지 인구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보여 왔으며, 장래에도 당분간은 동일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과거의 이농향도의 인구가동에 의한 가구분화와 소가족화 같은 가구 증가 요인들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부부가구와 같은 '2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체 가구 증가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 및 연령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0~2020년의 기간에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는 전체의 12.1%에서 21.0%로, 그리고 여자 가구주는 18.5%에서 21.9%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빈 둥지' 기간의 부부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부부만의 기간이 길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령부부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및 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편부모+자녀 가구'는 2000년에는 114.8만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140.9만 가구로 26.1만 가구 정도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구주의 연령은 30대 후반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이들의 사회 진출 및 적응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1인 가구'는 2000년 227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310.9만 가구, 2020년에는 389.7만 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는 25~29세가 14.3%로 가장 높으나 2010년에 이르러 인구의 고령화로 가장 주된 연령층이 70~74세(11.0%)가 되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의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건강, 생계는 물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소가족화가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부터는 2인 가구(22.4%)가 3인 가구(20.7%)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며, 2020년에는 1인 가구(21.5%) 또한 3인 가구(19.5%)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 등 가구내구재 시장에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처럼 크게 늘고 있는 소규모 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생산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9장 인구정책

박 상 태

I. 서론

우리 나라에서 인구 증감과 인구구조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195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인구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시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가 지난 50년 간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큰 변화를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단기간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형의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못지 않게 민간 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기혼부부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이들에게 내면화된 가치관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는 유럽, 북미와 일본 등 선진국들과 더불어 인구학적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선진국과 같이 이른바 인구변천과정을 모두 겪었다.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변천과정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즉 이들은 상호 대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생 및 사망률이 전통적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룩될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발전 없이 출생 및 사망률이 낮은 수준으로 저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은 중국의 경험 등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예컨대 분계점 가설(threshold hypothesis)의 경우,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룩되어 사망률은 저하했다 하더라도 바로 출생률이 떨어지지 않고 발전의 수준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출생, 사망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발전의 지수는 문자해독률(문맹률)과 도시인구비(도시화의 정도)였다(UN, 1973: 95-96). 그러나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문자해독률과 도시인구비를 가지고도 급격한 출생률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기존 이론에 의해서 일정한 모형을 따르기 어려운 점이 강조된다.

II. 인구정책과 인구사상

1. 인구정책의 정의와 범위

이 장에서 인구정책은 인구의 구조(크기, 분포, 구성)와 변화과정(출생, 사망,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한다.

2. 현대 이전 인구사상에서의 낙관적 전통과 비관적 전통

멜서스가 18세기말에 『인구론』을 발표하기 전까지 인구의 크기와 증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낙관적인 견해는 인구에 대한 사상이나 철학이었지 하나의 통합된 이론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했다. 대부분 단편적인 기술이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론이 지배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18세기말에 이르면 중상주의나 중농주의 학자들에게서 몇 가지의 수정과 유보가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멜서스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낙관적인 견해의 학자들은 지구상의 자원은 충분하므로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최소한 투입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수확체증 또는 수확 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비관적인 학자들은 토지와 같은 자원의 경우 무한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단위면적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경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인구의 수만큼 질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동양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한 비관론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홍량길을 들 수 있다. 홍량길 인구사상의 주요 관점은 그의 『의언(意言)』이란 책의 치평(治平)과 생계(生計)란 두 편의 논문에 나타나 있다. 『의언』은 1793년에 발표된 것으로 맬서스의 『인구론』보다 5년 전에 나왔다.

홍량길은 인구문제 분석의 단위를 호(戶)로 하고 있다. 이것은 맬서스식 분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그러나 홍량길의 인구증가의 일반적 추세에 대한 결론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는 맬서스의 결론과 정책적 보완책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었다.

맬서스는 인구과잉 자체는 자연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어떤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이론적 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홍량길은 중·하층 인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개선방법을 고안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홍량길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관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시 맬서스와 유사해 진다(楊家駱, 1983).

3. 정책적 함의

최근 UN의 추계에 의하면 지구상의 전 인류는 2050년쯤 인구변천단계를 모두 거치고 인구안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인구의 출산율이 대체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동시에 사망률도 낮아져 인구증가율이 미미한 영인구성장(zero population growth, ZPG)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이 같은 현상은 인류역사

상 초유의 현상이다. 물론 영인구성장 상태에 어느 정도 오래 머물게 되는가의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인구와 자원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논제는 지구의 부양능력이다. 그 부양능력 중 재생될 수 없는 자연자원은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포함한 생활필수품의 생산능력이다. 과거 수렵채취사회에서의 생산능력으로는 현 지구상 인구의 1%도 부양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도의 식량 및 생활필수품 생산능력으로는 부양능력에 대한 다른 계산이 가능하며, 적정인구에 대한 설정 기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방식으로 부양능력을 계산하든 지구상의 인구수와 부양능력 간의 평형관계는 늘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마련이다.

지난 20세기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지구의 인구 수용능력을 추계해 보았다. 그런데 그 숫자는 참으로 다양하여 적게는 10억 명에서 많게는 1,000억 명을 넘고 있다. 지구상에 몇 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냐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로서 물질적 수준과 복지적(사회적)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구의 인구 수용능력은 단순히 자연자원의 한도에 의해 추계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우리 세대가 아닌 장래 우리 후손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 즉 인구와 경제성장, 인구와 환경, 인구와 사회발전 등 여러 가지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인구성장이나 일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인구 성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되어 왔음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 각 국가별로 그 사회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특히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정책수립과 과감한 실행은 장래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낮고 또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1960년대 초반에 정부의 과감한 가족계획 정책이 우리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의 대체수준(합

계출산율 2.1)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대체수준 유지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성장은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포용할 만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Ⅲ. 출산력에 대한 인구정책

1. 저출산 - 새로운 사회문제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산력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지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출산조절-산아제한이란 표현의 사용은 거의 금기로 여겼으며 가족계획이란 완곡한 표현조차도 사용하기 조심스러웠다. 우리 나라 가입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당시 전근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준인 6.0명이었다. 통계청에서 추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저하하여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6명, 1999년 1.4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10년 이상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기에 우리를 놀라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이다.

저출산율 특히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율은 높은 출산율 못지 않게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총인구수의 감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어느 정도 지연은 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필연적으로 다가올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드물 것이다. 다음, 노동력 공급이나 사회발전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인구 내적인 면만을 보더라도 인구구조상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율이 4분의 1로 저하될 경우, 60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은 4배 이상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영·유아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경우 평균수명이 아무리 증가해도 별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년인구뿐만 아니라 영·유·소년의 사망률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할 경우 노년인구의 비율

은 출산율이 저하한 만큼 계속 반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고령화는 오로지 출산율의 저하가 가져온 현상이지 평균수명의 연장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2. 세계적인 출산력 붕괴현상과 정책적 선회

현재(2001년 기준) 지구상 인구 중 40% 이상의 인구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20~30년 이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을 전후하여 독일과 이태리, 일본 등 군국주의 국가와 당시 벌써 출산율이 매우 낮았던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Spengler(1938), Glass(1940), Taeuber(1958) 등의 연구에서 보여 주듯이, 현금이나 현물 등의 가족수당, 차별적 세금의 적용, 모자보건 혜택 등 금전적인 보상과 훈장 등 사회적인 명예를 수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보상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너무 작았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더구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실시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적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정했던 것 등의 이유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후 신 출산장려주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나 동구의 경우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다. 인기 없는 독재정권, 경제적인 불황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장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즉 강압적인 정책 이외의 자발적인 유도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Ross and Frejka, 2001).

과거 유교, 불교 등 윤리종교와 기독교, 이슬람 등 유일신 종교들은 모두 출산장려에 앞장 서 왔다. 세속화되고 종교성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아진 현대에 와서도 이들 종교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겠으나,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자녀 출산에 대한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종교 이외에 과거 출산장려의 기능을 수행했던 주요 사회적 제도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였다. 일차산업 위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 하에서 전제적 정부의 막강한 통제력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자녀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을 도외시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없으며, 더구나 교육, 보건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자녀 출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남성위주의 불평등 가족구조를 찬양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를 동원하되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는 인기 있는 사회지도자들의 소신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정책적 함의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조상숭배 사상이 강한 나라였다. 고대 유학과 중세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중시하고 그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나오는 불효의 조건 세 가지(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 무조건 부모의 의지를 좇아 부모로 하여금 옳지 못한 데 빠지게 하는 것; 혼인을 하지 않아 대를 잇지 못하는 것)를 신봉하였다. 특히 맹자(孟子)의 영향을 받아 그들 조건 중에서도 후손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다. 오랜 동안 우리 민족 구성원 대부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신념이 단시일 내에 사라질 수 없었다. 그래서 대를 잇는 효를 위해 남아선호 사상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특히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들의 성비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만혼, 독신, 이혼, 별거 등 혼인력을 낮추는 혼인양식이 보편화되어 제도화되고 있다. 또한 다자녀를 기피하고 소자녀를 선호하는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과거 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들였던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 크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현재 의식구조나 가치관을 과거로 되돌린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화, 정보화 된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는 국민 각자 적당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에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어린이는 친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돌봐 주었다. 오늘날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를 마을 전체가 돌보는 제도가 정착하면서 이혼율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문화지체 현상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인구는 자연환경에 의한 자연적 억제와 가족, 동족, 친족의 영향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이 기능을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나 지방행정기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보다 훨씬 먼저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1.3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의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15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는 직접 금전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입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성장한 자녀가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65세 또는 70세 이상 생존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과, 자녀를 부양한 후 퇴직한 부모들에게 부양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수를 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미흡할 경우 정치적인 인센티브로서 모든 국

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20세 미만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사후적 정책으로서는 시행할 필요성이 크지만 예방적 정책으로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및 불임부부 중 자녀를 원하는 부부에 대한 시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과 초·중·고·대학의 입학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의 시행이 실효성이 크리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출산력과 혼인력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광범한 영향을 분석 발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사망률 저하를 포함한 보건정책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나 인간 집단에서 건강한 삶의 유지는 그 자체 모든 사회계획이나 정책의 목표가 되어왔다. 자국이나 자გი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의도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수립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보건정책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나 우선 순위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보건정책은 다른 경제 및 사회정책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 수요에 대한 원만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이는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은 보건 의료에 대한 투자와 다른 분야에의 투자를 생산성과 효용성이란 점에서 비교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정변수를 이용한 전국적인 차원의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는 21세기를 맞아 인구정책의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바람직한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의학 못지 않게 예방의학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출산 전후에 있는 모성집단과 영유아집단 그리고 고령인구 등 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더욱 더 요구된다. 또한 전 인구를 위한 영양학적 정책과 환경개선, 그리고 기존의 전염병은 물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예방 등이 당면한 주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정책의 수립에는 특히 인구학적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성별 연령별 사망에 대한 자료 등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가 인구통계 분야에서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사망 및 유병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시행을 통해 평균수명의 연장은 물론 건강지수의 향상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

V. 인구분포

1. 인구재배치정책의 일반적 유형

인구재배치 문제에 있어 일찌기 당면했던 문제는 농촌의 빈곤문제였다. 산업화 과정 중 세 가지 문제가 이와 관련된다. 첫째, 사망률이 저하되고 높은 출생률이 계속된 농촌, 특히 후진국 농촌지역에서의 과잉인구를 도시에서 충분한 일자리로 흡수하지 못해 무작정 도시로 이주한 도시빈민의 대량 양산이다. 둘째, 발전된 국가에서는 이와 반대로 농촌인구의 도시이출로 인한 농촌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셋째,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농지의 토질과 관계없이 도시 주변의 농촌에 농업이 집중되고 있어 생산성을 저하시킨 점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고안되고 실시되었다. 이들 정책들 중 세계 각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어 시행했던 정책을 살펴본다.

1) 이농민의 농촌귀환

이 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고 도시에서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잉여노동력의 유지비가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서 훨씬 더 크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시행의 배경이 되었다. 이 정책은 오래 전 16세기와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정책이 성공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정도의 억제효과는 있었겠으나 그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앙 통제경제의 경우 이 정책이 성공한 예는 있다. 중국의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과 1968년 모택동에 의한 하방(下放-도시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에 대한 농민과 빈민에 의한 재교육)은 도시민의 대량 농촌이주가 실행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Chen, 1972).

우리 나라에서도 1970~1980년대에 정부가 농토를 마련하여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도시민을 이주시킨 예가 있다. 그러나 엄청난 토지가격에 비해 인구분산과 고용 효과는 미미하여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2) 농촌개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주 농촌 자체의 개발정책이 제안되었다. 농촌개발은 농촌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농촌 및 인근 소도시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농촌개발을 통해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도시 특히 대도시 인구증가의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개발을 전적으로 인구분산책을 위해 시행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고, 농업육성이나 농촌자체의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소련에서 미개발지역으로의 이주정책은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이

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발전은 농촌의 전기, 전신, 전화의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광범한 보급, 그리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확충 등에 의해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개발이 인구분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3) 산업시설의 분산

산업분산정책은 대도시 인구집중 완화를 위해 각국 정부에서 가장 흔히 채택한 정책이다. 인구과밀현상이 큰 문제가 된 폴란드 등 동구 지역과 1960년대 이후 인도의 제3차 5개년 계획 및 중국의 서북부 지역개발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 발전이란 정책적인 배려가 정책시행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산업분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개발계획에 의해 인구 과소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과밀화된 지역의 산업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70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도권 인구 과밀 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에서 인구집중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으로서 7가지와 법적 규제 10가지를 제시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a: 593-595). 또한 1971년 10월에 수립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들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4) 신도시 건설

기존 대도시나 거대도시권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 새 도시를 건설하여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으로서, 서유럽에서 채택하기 시작한 이래 면적이 넓은 중국이나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앞서 설명한 산업분산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시행된다. 신도시는 고용이나 구매, 유통 및 지역사회문화 시설 면에서 자급자족적일 것을 전제하고 건설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미, 울산, 안산 등 신도시의 건설은 이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5) 성장거점도시 개발

이 정책은 산업분산 정책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시행된 정책이다. 원래 경제학에서의 ‘성장거점’이란 산업시설의 극 또는 핵을 의미하지만, 인구학에서의 거점은 지리학적 공간에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성장거점도시는 기존도시가 대부분이지만 계획도시인 경우도 있다. 이들 도시는 대도시 대신 인구흡입을 담당하게 되므로, 기존 대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대도시의 위성도시인 경우도 있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새 도시인 경우도 있다. 산업화 초기에 대도시의 이점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산업화 후기로 진입하면서 그 이점보다 거대도시의 불편한 점이 점점 더 커지므로 거점도시가 개발된다.

앞서 말한 1971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정부는 전국을 8개 권역(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으로 구분하고, 다시 중심도시를 감안한 17개의 소 권역으로 구분했다. 여기서의 중심도시가 성장거점도시가 된다.

그러나 성장거점도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대도시로의 유입인구수의 만족할 만한 양을 중간에서 흡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국토의 협소함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대비되는 관점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해 두 가지의 대립되는 관점이 있다. 수도권 집중이란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자유방임론’과,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에 주목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정책을 지속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개입론’ 간의 대립된 입장이 있다.

자유방임론은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세를 ‘당연한 것’ 또는 ‘주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즉 신고전경제학파적인 입장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집적의 ‘이익’이 ‘불이익’보다 큰 시장상황에서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아울러 자유방임론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성장의 부산물이나 부작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에서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해서 다수의 인구가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면 이들 간에 기능적 분업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개입론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 메카니즘은 '시장의 실패'를 낳는다는 케인스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즉,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진 지역개발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회 내 다수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각종 행정규제나 재정지원을 통해 시장논리에 의해 왜곡된 현실을 정상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 정부개입론에 따르면, 수도권 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장통'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발전 전략에서 비롯된 '고질병'이다. 서둘러서 치유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 주고, 과잉 집중에 시달리는 수도권 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장세훈, 1998c).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를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비정책만으로 해결한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인구집중을 무방비적으로 경제원리에 내맡긴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원리를 수궁하면서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3. 수도권 개발과 국가발전

최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하반기에 확정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집중이 심한 서울 주변과 서울-인천 축과 서울-수원 축 이외에 인천-수원 간의 새로운 축을 개발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수도권 내 공장과 주택 건설 등을 최대한 억제해온 기존의 1~2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기본방향이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 즉 정책선회의 배경에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이란 기본적인 목표는 뚜렷하나 각 부처 및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이런 이

유와 저런 명분을 내세워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미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정부의 기본시책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데 있다. 또한 정부의 시책은 실효성이 없으면서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공장건설을 규제하다 보니 이미 공장을 갖춘 대기업들만 유리해진다 그런 기업들도 확장을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제도하의 사회에서 지역간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지방세제를 보완하고 집중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조세상의 정책과 지방 중심의 우수 고교를 설립하여 인재가 모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와 인력양성 체제하에서는 불균등한 지역발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제도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래 단기간의 제2공화국 시절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961년 이후 효율적인 정책시행에 의한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권력이나 금력 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좌우할 때 나머지 제도의 어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정치권력이 소재한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현상이 된다. 모든 것이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수도집중을 완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 정권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전국민적 민주화의 노력은 독재정권들이 초래했던 유형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리라 예상된다.

VI. 연령구조와 고령화

1. 연령구조의 인구학적 의미

인구의 연령구조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 즉 인구 내적 요인은 그 인구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이다. 출산력이 높은 사회의 인구는 출산력 수준이 낮은 사회에 비해 인구구조가 젊다. 반대로 출산력이 낮은 사회의 인구구조는 고령화된다. UN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안정인구(일정한 수준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오랜 동안 지속된 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를 말함)를 전제로 할 때, 재생산율이 1인 경우, 평균수명이 20세면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16.9%가 된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40세와 70세면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각각 20.4%와 21.9%가 된다. 즉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7~22%가 되는 셈이다. 또한, 재생산율이 3이고 평균수명이 20세, 40세, 70세면,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각각 3.9%, 4.4%, 4.3%로서 4% 내외에 불과하게 된다(UN, 1973: 274). 위의 추계를 놓고 비교해 보면 같은 수준의 평균 수명에서 재생산율의 차이에 따른 연령구성 비율의 차이는 대단히 큰 데 반해, 같은 수준의 재생산에서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른 연령구성의 차이는 미미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 사회의 연령구조는 출산력의 수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구조의 변화는 부양인구비의 증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또한 노동력의 평균연령의 변화를 가져온다. 고출산율 사회에서는 연령구조가 젊고 따라서 노동력의 평균연령도 젊게 된다. 저출산율 사회에서의 노동력의 평균연령은 비교적 높다. 노동력의 평균연령이 젊은 경우, 노동인구는 좀더 신축성이 있고 참신하고 경직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교적 평균연령이 높은 노동력은 책임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령구조의 형태에 따라 소비형태가 다르다. 유소년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많은 돈을 음식물 생산과 교육에 쓰게 된다. 반면 노년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많이 든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급증하면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하고, 경제사회 발전이 더디어 진다. 급증하는 인구는 부양비를 높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생산재를 고갈시키며, 동시에 1인당 투자율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기술개발수준에서 헤어날 수 없고 '맬서스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고령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의미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견해는 비관적인 견해와 낙관적인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인구가 극도로 고령화할 경우,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증가로 연금제도를 비롯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해치게 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보수성이 짙어 새로운 개혁이나 진취적이고 독창적인 사고가 결여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사회보다 뒤지게 된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적체될 경우, 주로 젊은 인구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많은 분야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진공업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 고령화 사회에 오래 전 진입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chulz et al., 1991).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인구비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생활수준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50년대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27%(남자 46%)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1987년에는 11%(남자 16%)로 저하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실업률로 인한 조기퇴직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고령인구로 하여금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한 참가율 저하이진 고령인구의 참가율이 자발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둘째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가설이다. 노동생산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지수이다. 특히 생산성은 교육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고령인구의 교육수준은 젊은 노동력의 교육수준보다 낮으며 경력으로 인한 높은 임금 때문에 고용을 기피할 뿐이다. 물론 공장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은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 뒤진다. 그러나 판매업의 경우 노인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더구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성, 융통성, 결근율, 사고율, 이직률 등

을 고려하면 차이가 없어진다.

셋째로 저축률과 투자율에 관한 것이다. 고령일수록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으나, 저축률의 경우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젊은 노동인구의 가구소득은 대부분 자녀의 교육 등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으나, 연령이 높은 가구의 경우 노후를 위해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개인적 저축률은 감소하지만 집단적 저축률은 연금 계획 등에 의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 투자율은 노동력 참여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과 노인 자신들의 참여율 증가로 저축률 감소 현상이 미미해지게 된다.

3. 우리 나라의 고령화

UN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한다. 우리 나라는 2000년 현재 고령인구가 34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4,700만 중 7.2%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 인구가 14%가 넘게 되는, 즉 고령사회가 되는 시기는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고령인구 취업기회의 제한 등으로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빈곤, 질병, 고독 등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특징인 역할상실이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보건조사연구원의 199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 가구의 절반 가량이 월 8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4. 정책적 함의

고령화현상에 대한 대처에 있어 그 시기를 놓칠 경우, 지체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1) 고령인구 집단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정

고령인구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령인구의 역할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 정보화사회의 대두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가족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국가와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그들의 능력은 어렵지 않게 개발, 이용할 수 있으나 거의 개발이 안된 무한정한 국가자원이다. 고령인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경험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이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어린이들을 돌봐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문화적 유산의 전수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세 세대에게 높은 도덕적 가치를 주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에게 취업기회가 확대될 경우 이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장래 고령인구 집단의 교육수준은 현재에 비할 수 없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고령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은 이들의 성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고령인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2) 가족의 역할

고령인구 보호의 사회적 주요기관으로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이상으로 고령인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은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강화시키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독거 노인이나 3대 이상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게 하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 될 것이다. 고령자를 부양하는 데 대한 지원방안을 좀더 강화하여 자녀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자녀들의 부모가 받게 하는 정책도 연구되어야 한다.

3) 국가차원의 역할

고령자 개인이나 그들이 속한 가족 그리고 각 지역사회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이며 국가는 정책구성과 입법을 통해 적절한 보조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규모의 자원배분과 다양한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고령인구 집단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용기회의 확대는 이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위에 말한 개인, 가족, 국가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압력단체로서, 때로는 로비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대중 미디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물론 장래 고령인구 집단으로 들어갈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이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화, 연극 및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화목과 이에 대한 고령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의 허약함이나 무용성보다는 이들의 경험과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VII. 성구조와 성평등

출생아에 대한 성 선호(남아선호를 말함)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이것은 특히 합계출산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1975년 이후 출생시 성비에 반영되어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었다. 최근 이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듯 하지만 출생시 성비가 자연적(생물학적 결정에 의한) 수준으로 회복될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이의 경우는 성비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문제는 부분적으로 이혼율의 증가와도 관계되어 있다. 계속되는 이혼

〈표 19-1〉 동아시아 4개국의 인구학적 및 성 관련 특성, 1999

특성	일본	홍콩	한국	중국
인구수(백만 명)	126.8	6.7	46.4	1,264.8
도시인구(%)	78.6	100.0	81.1	31.6
연령집단(%)				
0 ~ 14세	14.9	16.8	21.2	25.3
65세 이상	16.7	10.4	6.8	6.7
합계출산율	1.4	1.2	1.5	1.8
순위				
(HDI)	9	24	27	87
(GDI)	11	23	29	76
(GEM)	31	-	61	-
평균수명				
여성	84.1	82.2	78.4	72.5
남성	77.3	76.7	70.9	68.3
15세+ 인구의 문자해독율(%)				
여성	99+	89.7	96.2	75.5
남성	99+	96.4	99.1	91.2
a) 대남성수입비	0.43	-	0.45	-
b) 여성국회의원수(%)	10.8	-	5.9	21.8
c) 여성 상위직종사자(%)	9	22	5	-
d) 여성 전문·기술직종사자(%)	44	38	31	-

주: a)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수입 비율 추계.
 b) 국회 내의 여성 의석 비율.
 c) 여성의 입법부, 행정부의 상위직 종사자 및 관리직 종사자 비율.
 d) 여성 전문직·기술직 종사자 비율.

자료: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2001).

율의 상승세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불안정과 해체를 촉진하고 출산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UN의 1974년 회의(The World Plan of Action)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높은 우선권을 주자는 결정을 채택한 이래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확인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다르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주로 하는 일과 맡고 있는 책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각 사회의 반응도 다르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수를 이용하여 제시해 놓았다(〈표 19-1〉 참조). 이들 세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

에서 개발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유엔은 매년 이 결과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HDI)는 세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이다: 출생시 평균 수명을 이용한 그 나라의 평균수명; 성인의 문자해독률과 취학연령군의 취학 비율을 이용한 교육성취도;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한 생활수준 등을 말한다. 성관련 개발지수(GDI)란 HDI의 지수 중 남성과 여성에 대한 수치들을 비교하여 조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권력지수(GEM)란 특히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권한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경제 참여와 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변수, 즉 행정 관리직에서의 비율 및 전문 기술직에서의 비율을 사용했다. 정치 참여와 결정권의 측정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사용했다.

<표 19-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지위는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일부 이슬람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경제적 권한과 지위는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새로운 정부기구가 설립되고 국가 발전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의 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 노력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출산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국민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 필수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VIII. 국제이민

1. 우리 나라 노동이민의 현황

동아시아, 특히 일부 신흥공업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으로 다른

저개발국가와의 국민소득에 큰 차이를 갖게되어 아시아의 빈곤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 매력 있는 노동이민 대상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계속되는 호황을 누린 일본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 그 대상국이 되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과 더불어 주요 노동자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수출국에서 주요 수입국이 되었으며 아시아의 소위 4개의 작은 용 중 가장 큰 나라로서 노동력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 이입한 노동이민들은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와 조선족계 중국 노동자들이다. 지난 50년 간 다양한 유형의 국제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는 이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Gubhaju et al., 2001: 53-54).

정부와 민간의 필요에 의해 노동이민을 받아 들였다면, 이들의 우리 사회 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통합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 물론 성공적인 통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주요 요인들은 첫째, 노동이민을 수용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둘째, 수용국 국민들의 태도, 그리고 셋째, 이민집단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적 태도 등이다(UN, 1973: 258-261).

수용국의 실정법을 포함한 사회구조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이민집단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때 이들은 잘 통합될 수 있다. 좋은 본보기로 19세기 북아메리카를 들 수 있다. 이민자들은 거의 평등한 자격으로 기회의 사다리에 올라 설 수 있어 빠른 통합이 가능했다. 다음 융통성 있는 사회계층구조와 종교적, 인종적 편견의 강도는 이민집단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이민집단 자신들의 특성이다. 수용국 국민과 이민집단 간의 언어, 종교, 신체상 외모,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전통이 크게 다를 경우 통합을 저해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도와 중국계 이민집단을 흔히 들고 있다.

2. 외국인력에 대한 최근의 정책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은 2002년 3월말 현재 모두 33.7만 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26.6만 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7월 17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999년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합법적 고용은 허용하되 불법취업은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족을 비롯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내국인만으로는 필요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의 서비스업 분야 취업을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국한시키고 취업허용기간을 최장 2년(기본 1년 체류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정했다. 외국동포의 취업자격은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국내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 준비속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독립유공자의 직계 혈족, 외국동포사회 발전기여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 등도 포함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연수생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해온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재보다 18,750명(14.8%) 늘어난 145,500명으로 증원했다. 그리고 2003년 3월말까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업연수생의 분야별 정원을 중소제조업 13만 명, 연근해어업 3천 명, 농축산업 5천 명, 건설업 7,500명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해외동포를 고려한 점과 필요인력의 공급이란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농축산업, 어업 등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에 안정적인 취업, 즉 이들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의 문제와 더불어 국내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조정하는가 등이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IX. 맺는 말

우리 나라가 1980년대 중반까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한 높은 인구증가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향은 역전되어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한 전례 없던 낮은 인구증가율과 인구구조상의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저하했다 해도 인구의 구조적 특성과 향상된 평균수명의 지연된 영향력으로 인해 인구수는 상당기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세기와 달리 21세기의 인류사회는 각 국가 또는 지역별로 그 사회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정책수립과 과감한 실행은 장래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반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낮고 또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시기에 정부의 과감한 가족계획정책이 우리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의 대체수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력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수반한다. 오래 전 인구변천과정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출생률은 일시적으로 기복을 보여 어느 정도 등락이 예상되지만, 일단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출산력이 단기간 이내에 다시 대체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목표와 가족의 목표가 서로 합치되는 출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과 시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인구조절의 기능은 정부나 지방행정기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보다 훨씬 먼저 출산율이 떨어진 일본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의 출산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15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금전적 직접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저출산 국가들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정책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이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직접 65세 또는 70세 이상 생존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 둘째, 자녀를 부양한 후 은퇴한 부모들에게 부양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수를 정해주는 방안; 그리고 셋째,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미흡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20세 미만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및 불임부부 중 자녀를 원하는 부부에 대한 시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과 초·중·고·대학의 입학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출산력과 혼인력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여,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광범한 영향을 분석 발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망률의 경우 특정 성·연령 집단(예컨대, 남자 40대)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정책은 계속되는 과제이며, 건강수명을 포함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과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 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부조와 건강보호 관련 체제의 확대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화 문제는 인구학자들이 지적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즉 사회적 문제는 될지언정 생산성이나 저축률의 감소 등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족에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국가차원의 정책구성이 필요하다. 이들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압력단체로서, 때로는 로비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대중 미디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장래에 고령자 집단에 들어갈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고령인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이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앞장서도록 해야한다.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 유형은 이농민의 농촌귀환, 농촌자체의 개발, 산업의 분산, 신도시의 건설, 성장거점도시의 개발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 인구분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과밀 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년 4월)을 마련했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1971년 10월)에서도 이들 여러 유형의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체도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건국이래 제2공화국 단기간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1961년 이후 효율적인 정책시행에 의한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다행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전국민적 민주화의 노력은 독재정권들이 초래했던 유형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리라 예상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 성관련 개발지수(GDI) 및 성권력지수(GEM) 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성평등 발전정도는 다른 발전의 지수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작업장 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며, 가내 수공업 노동자와 낮은 수준의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은 착취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은 자주 보고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성 평등과 공정의 달성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가족해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이혼율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신세대들은 가족위주의 전통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가족주의나 전통적인 효 사상은 가족구조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의 엄청난 변화와 더불어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개인들도 적극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의 확립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부시책은 혼인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안정된 출산율의 유지와 사망률의 저하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제이민 특히 노동이민은 이민 집단의 개인적 발전과 그들 가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일부 이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행업자들의 비리와 사기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착취당하기 쉬운 집단이며 인권유린 사례도 수없이 많다. 저렴한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단 정책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면 이들에 대한 보호도 외면할 수 없다. 더구나 국제인구이동의 양이 증대되고 이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한국사회에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정부간의 의견교환과 계획수립을 위한 국제협약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농업국가였으나 21세기에 들어와 국민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산업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50여 년이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룩된 현상이지만, 지난 세기 우리 나라의 변화 중 가장 뚜렷한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와 절대 빈곤, 성평등과 공평성, 지역적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들이다.

정부는 1996년 35년 간 시행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인구문제는 그 동안의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고령화의 문제, 세대간의 갈등문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건강 지수의 향상 등이 바로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안정됐다고 해서 세계 일부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로 떨어져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미노 현상을 우리는 IMF 경제위기 사태로 경험했다.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 나라에서의 인구변화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여 백

참고문헌

통계관련자료

- 경제기획원. 1962.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통계월보』 9: 5-1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3. 『1960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4. 『1960년 인구국세조사평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8. 『1966 인구동태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9. 『1966 인구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1. 『한국인의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2. 『1970 총인구및주택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4. 『1970년 인구센서스평가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7. 『1975 총인구및주택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9. 『제2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2a. 『198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2b. 『1981 사망원인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2c. 『1978~79년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3. 『1982 사망원인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4. 『제1차 고용구족특별조사결과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7. 『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공보처. 1949. 『제1회 총인구조사결과속보』. 공보처 통계국.
- 내무부. 1955.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보고』. 전국편.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58. “인구추계.” 『통계월보』 2: 25-37.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59. 『1955 간이총인구조사보고』.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61. “미래의 한국인구추계.” 『통계정보』 3(1): 66-89. 내무부 통계국.
- 보건복지부. 2000. 『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_____. 2001. 『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조선총독부. 1926. 『1925 간이국세조사결과표』. 조선총독부.
- _____. 1934.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_____. 1936. 『1935 조선국세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_____. 1944. 『1940 조선국세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_____. 1945. 『1944 인구조사결과보고』. 조선총독부.
- 통계청. 1992a. 『한국통계발전사 I, II』. 통계청.
- _____. 1992b. 『1991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1993.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1995.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 _____. 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_____. 1997a. 『19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1997b. 『1995년 생명표』. 통계청.
- _____. 1997c. 『1971~1997년 생명표』. 인구분석과 내부자료. 통계청.
- _____. 1997d.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1998. 『1997년 인구이동특별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1999a. 『인구추계』. 통계청.
- _____. 1999b. 『1971~97년 생명표』. 통계청.
- _____. 1999c. 『북한인구 추계결과』. 통계청.
- _____. 1999d.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00a. 『1999년 인구동태통계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0b. 『인구추계자료집 1, 2』. 통계청 인구분석과 업무자료. 통계청.
- _____. 2000c.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00d.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통계청.
- _____. 2000e.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통계청.
- _____. 2000f.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통계청.
- _____. 2001a. 『2000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1b.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 _____. 2001c. 『장래인구추계: 2000~2050』. 통계청.
- _____. 2001d.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www.nso.go.kr. 서울: 통계청.
- _____. 2001e.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01f. 『1999년 생명표』. 통계청.
- _____. 2001g.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_____. 2001h. 『2000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1i.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1j. 『2000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1k. 통계청 인구분석과 내부 통계자료. 통계청.
- _____. 2001l. 『2001년 정보화실태조사결과』. 통계청.
- _____. 2002a.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2002b. 『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통계청.
- _____. 2002c. 『시도별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통계청. 2002d. 『2001년 출생, 사망통계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통계청.
- . 2002e. 『2002 정보화실태조사결과』. 통계청.
- . 2002f.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 2002g.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 2002h. 『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 2002i. 『2001년 인구가동통계연보』. 통계청.
- . 2002j.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CD. 통계청.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참고문헌

- 강대기·홍동식. 1982. “대도시 주거환경과 근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23-140.
- 강명구. 1993. “자본주의적 공간 분화와 정치과정의 전개.” 『경제와 사회』 20: 230-252.
- . 1997.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행위자 중심적 해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1(3): 109-128.
- . 1999. “1960년대 도시 발달의 유형과 특징: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조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백산서당.
- 강인철. 1997. “한국 무종교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52: 87-118. 문학과 지성사.
- 고갑석·김일현. 1964. “An Abridged Life Ta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한국통계월보』 6(7-8): 12-2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고송무. 1990.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 고승제. 1973. 『한국 이민사 연구』. 장문사.
- 고응린·박홍래·이동우·최지훈. 1974. 『인구통계세미나』. 대한통계협회.
- 공보처. 1949. “제1회 총인구조사지방사무처리규칙.” 『통계월보』 2: 4-18. 공보처 통계국.
- 공세권·임종권·김미경. 1983.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선영. 2001.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변화정도, 대처전략 및 적응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75-105.
- 교육부. 2000. 『국제교육백서』. 교육부.
- 구자순. 1992. “한국 사회노년학 연구의 이론적 발전.” 『한국노년학』 12(1): 97-116.
- 구해근·유의영. 1983. “한국인의 미국이민.”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국민일보. 2002. “미국 남성들 ‘결혼 급할 거 있나요.’” 2002년 8월 16일. 국민일보. http://www.kinds.or.kr/genl_html.

- 국토개발연구원 편. 1996. 『국토 50년』, 국토개발연구원.
- _____. 1992. 『수도권 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권남훈. 2002. 『IT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조사』, 연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권용우. 2001. 『교외지역: 수도권 교외화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 권이혁. 1968. “한국의 사망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지』 11(12): 792-980.
- 권태환. 1980. “도시화와 인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론』, 민음사, pp. 203-234.
- _____. 1984. “한국사회학에 있어서의 도시연구.” 『한국사회학』 18: 3-26.
- _____. 1990. “일제 시대의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1: 251-2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통일원.
- _____. 1997. “출산력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 등,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pp. 13-56.
- 권태환·김두섭. 1989.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 1990. 『한국인의 생명표: 1970~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구조와 가족형태.” 권태환·김태현·최진호 공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pp. 239-365.
-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 시론.” 『동아문화』 14: 289-33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권태환·전광희. 1990. 『한국사회의 인구가동구조와 도시문제의 성격-생활사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 연구소.
- 권태환·전광희·은기수. 1997. 『서울의 전통 이해: 인구와 도시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 김남일·최순·박우순·양기석. 1997. 『인구가동과 농촌지역 인구특성 변화』, 통계청.
- 김대영·이효구. 1976. 『우리나라 인구가동의 특징,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배. 1999. “노인과 경제생활: 노인도 경제생활의 주체이다.” 김익기 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pp. 259-316.
- 김두섭. 1987. “혼인력의 양상과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총』 6: 161-185, 한양대학교.
- _____. 1989. “한국의 인구정책: 1960~1985.” 『인간과 경험』 1: 95-118, 한양대학교.
- _____. 1990.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4(여름): 7-24.
- _____. 1991. “한국의 인구성장과정과 출산력 변천, 1910~1990.” 『사회과학논총』 10: 117-140, 한양대학교.
- _____. 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남북한의 비교.” 『통일문제연구』 5(4): 202-235, 통일원.

- 김두섭. 1997.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지역별 격차.”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공저.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132-160.
- . 1999. “미군정기 남한인구 재구성.” 최영희 외.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 145-166.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90.
- 김두식. 1991. “제3세계의 과잉도시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대구대 사회연구』 1: 67-80.
- 김민경. 1996. “인구의 경제활동상대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 19(1): 73-92.
- .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도서출판 글로벌.
- 김성천·윤혜미·류만희. 2001. “가족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61-88.
- 김승권. 1992. “우리 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논집』 12(1): 119-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7. “출산력 저하와 가족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10: 20-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a. “제3장. 한국가족변화의 주요요인.”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b. “제5장. 가족구조의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송인주. 2000a. “제2장. 가족관련 제 이론 및 연구동향.”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b. “제10장. 가족해체와 결손가족의 문제.”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c. “제11장. 다양한 가족의 출현.”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장경섭·이현송·정기선·조애저·송인주.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 1999.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아동학회지』 20(1): 99-114.
- 김유순·김정석. 2001.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이영환 편.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 나눔의 집.
- 김 인. 1983. “한국의 도시 체계와 성장도시.” 『환경논총』 12: 134-165.
- 김 인·권용우 공편. 1988. 『수도권 지역 연구: 공간 인식과 대응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일현·최봉호. 1988. “최근의 영아 사망률 수준의 추정.” 『한국인구학회지』 11(1): 76-85.
- 김정석. 2000.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151-186.

- 김정근·이광식·김동희. 1977. “1970년도 한국인 남자 간이 노동력 생명표.” 『한국인구학회지』 1: 5-13.
- 김태현. 1990. “차별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 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 1997a. “인구전망과 사회적 영향.”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127-154.
- . 1997b. “인구총조사의 방법과 평가.” 『한국인구학』 20(1): 27-46.
- .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5-40.
- 김한곤. 1997. “대구·경북지방의 성비 불균형.” 한국인구학회 199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1): 65-90.
- 김혜순. 1989. “노년에 관한 사회적 구성의 비판적 분석.” 『한국노년학』 9: 44-63.
- 김혜영. 1992. “과잉교육화 문제.”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pp. 391-412.
- 노치준. 1998.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울.
- 다나카 히로시. 2000. 『재일 외국인』. 김동혁·허수동 역.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문석남. 1993. “한국의 도시화: 그 유형과 특성.” 『전남대 지역개발연구』 29: 29-66.
- 문선화. 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213-233.
- 문소정. 1995.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문현상·한영자·전학석. 1992.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상·전학석. 1992. “수도권 인구 집중의 추이, 요인, 문제점.” 문현상 외.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상·한영자. 1989. 『수도권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가동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박경숙. 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 박경애. 1995. “한국인의 사망원인 구조, 1983~1993.” 『한국인구학회지』 18(1): 167-193.
- . 2000. “한국의 이혼을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 23(1): 5-29.
- 박광성. 1999. “개혁개방 공간의 중국 조선족 사회 제조직 과정연구.” 연변대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박상태. 1999.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구학』 22(2): 5-45.
- 박세일. 1983. “학력별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과 변화과정분석.” 『한국개발연구』 가을호: 32-49.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박원란. 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 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6(1): 155-183.
- 박제민. 1961. “한인의 사망률과 사인에 관한 통계학적 관찰.” 『통계정보』 3(6-7): 1-35. 내무부

- 통계국.
- 박재욱. 1996. “대기업 주도형 도시정치의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_____. 1999. “대기업 도시 울산시와 도요타(豊田)시의 기업권력과 지방정치.”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30: 97-129.
- 박준경·김정호. 1992.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방하남·안주엽·장지연·박은경·호정화·정혜경. 1999.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
동연구원.
- 변화순. 1987.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찰.” 『한국인구학』 10(2): 1-16.
- _____. 1995. “가족해체와 재구성.”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 2000. 『최근 가족해체 및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
성개발원.
- 변화순·백경희·김현주. 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
성개발원.
- 성규탁. 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28-43.
- 성지미. 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석현호. 1986. “한국의 도시화와 사회변동.” 『成大 사회과학』 25: 107-143.
- 석현호 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 손정목. 1996.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 송병락. 1978. “경제성장과 지역경제계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17(3): 413-453.
- _____. 1979. 『한국의 국토·도시·환경: 문제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송병락·Edwin Mills. 1980. 『성장과 도시화 문제』. 한국개발연구원.
- 신광철. 2002. 『지식자원 유출현상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소.
- 심상완·김정석. 200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원모형분석.” 『한국인구학』 24:
235-253.
- 안병철. 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양금옥. 2001. “조선족의 사회문제: 인구감소 현황과 그 과제.” 이화여대 생활과학연구소. 『한민
족 공동체 시각에서 본 연변조선족의 현실』.
- 여성신문. 2002. “가족법, 다양한 가족 수용해야.” 2002년 10월 4일. 여성신문.
- 염미경. 1996. “지방자치와 기업의 지배전략.” 『전남대 지역개발연구』 32: 183-211.
- _____. 1997. “기업도시의 선거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3): 563-594.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외교통상부. 2001. 『2001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 _____. 2002. 재외동포재단 내부자료.

- 원영희. 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성호. 2000.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노인복지연구』 8: 169-175.
- 유지열. 200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접근연구.” 『한국사회학』 36(1): 223-246.
- 윤덕중·김태현. 1989. “사회·경제적 요인별 차별사망력의 변화, 1970~86: 사망신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2(2): 1-21.
- 윤종주. 1975. 『서울시 인구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5. “근세 한국의 민족이산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4: 7-69.
- _____. 1986. “해방 후 우리 나라 인구 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연구소 편, 『인구문제 논문집』 27: 17-35.
- _____. 1991. “해방 후의 인구 이동과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5: 1-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은기수. 1997a. “주야간활동인구 개념.” 『비전 중구 2000-상주인구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p. 161-172.
- _____. 1997b. “지역, 교육 및 직업별 차별출산력.”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99-126.
- _____. 2000.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도시중심부연구』. 보성각, pp. 327-365.
- _____. 2001a.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41-65.
- _____. 2001b. “한국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271-332.
- _____. 2002a. “한국 가족의 종교정체성: 종교백화점?”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문총위원회 엮음,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pp. 34-58.
- _____. 2002b. “출산을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발표논문. 한국여성개발원.
- 이광규. 1983. 『재일 한국인』. 일조각.
- 이기석. 1998. “한국 근대도시의 공간적 이해.”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도시론』. 박영사.
- 이문웅. 1966. 『세계의 한민족: 일본』. 통일원.
- 이삼식. 1993. “한국인의 혼인 행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16(2): 4-110.
- 이성립·김민정. 2001.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학적 동향과 경제적 복지 상태.” 『소비자학연구』 12(1): 17-30.
- 이애재. 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학연구』 1: 69~93.
- 이영분·양심영. 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 117-148.
- 이인모. 1988. “한국인 남자의 간이노동력 생명표: 1980.” 서울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 이장영. 1992. “산업구조와 임금 불평등의 변화.”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pp. 215-236.
- . 1997. 『해외귀국 청소년의 국내적응 연구』. 집문당.
- 이정우. 1991.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이종각. 1995. 『교육사회학 신강』. 동문사.
- 이재원. 1996. “행정구역 개편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 『공간과 사회』 7: 137-158.
- 이태영. 1968. 『한국의 이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 1981. 『한국의 이혼율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한순·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가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1960~1980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24: 123-143.
- 이홍탁. 1994. 『인구학』. 법문사.
- 임돈희·로저 L. 자넬리. 2002. “한국 가족 변화의 의미.” 『비교민속학』 22: 321-336.
- 임석희. 1996. “행정구역 개편의 공간적 논리와 쟁점.” 『공간과 사회』 7: 159-188.
- 임태빈. 1963. “장래인구추계의 요약.” 『한국통계월보』 11, 12호: 5-4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장경섭. 2000. “제4장. 가족가치관의 특성과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세훈. 1998a.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민민: 서울시의 무허가정착지 철거정비정책을 중심으로.” 김형국·하성규(편). 『불량주택재개발론』. 나남. pp. 231-303.
- . 1998b. 『수도권 정비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현안분석 제170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 . 1998c. “수도권 정비정책의 쟁점과 향후과제.” 한국사회학회 인구도시연구회 1998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요약집. pp. 53-77.
- . 1999. “도시화, 국가, 그리고 그린벨트.”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연구』 4: 33-69.
- 장영식·조남훈·문현상·변용찬·오영희. 1996.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윤석. 1961a. “1960년도 인구조사개요-상.” 『통계정보』 3(3/4): 25-49. 내무부 통계국.
- . 1961b. “1960년도 인구조사개요-하.” 『통계정보』 3(6): 21-44. 내무부 통계국.
- 장지연·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미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전광희. 1997. “출산력 변화의 메카니즘.”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57-98.
- 전경수. 1996. 『세계의 한민족: 중남미』. 통일원.
- 전성표. 2001. “우리 사회 종교갈등의 실태와 잠재력: 1991~2000.” 한국사회학회 2001년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전영자. 2000. “가족의 변화와 가족학의 과제.” 『한국생활과학회지』 9(22): 177-187.

- 정경희 · 조애저 · 오영희 · 변재관 · 변용찬 · 문현상.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신철. 1999.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조남훈 · 서문희. 1994.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 이삼식. 2001. “장기인구전망과 인구정책 방향.” 한국인구학회 2001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남훈 · 홍문식 · 이상영. 1995.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석근 · 오유석. 2001. “압축성장 전제조건인 형성: 1950년대.” 김진업 편. 『한국 자본주의 발전 모델의 형성과 해체』. 도서출판 나눔의 집, pp. 87-128.
- 조애저. 2000. “제7장. 가족형성 및 주기의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진만. 1990. “우리 나라 노동생명표에 의한 노동력추이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3(2): 1-16.
- 조채희. 2000. “국내대학 외국 유학생 유치기반 부실.” 조선일보, 10월 29일.
- . 2002. “수능지원 67만명... 사상 최소.” 조선일보, 9월 11일.
- 조혜인. 1978. “한국 사회의 과잉도시화 여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학연구』 2: 107-144.
- 최강식. 2000. “21세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인구학』 23(2): 113-141.
- 최인현. 1963. “대한민국 인구추계 1960~1980.” 『한국통계월보』 6, 7호: 5-5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 1971. “한국인구추계 자료에 대한 소고.” 『인구문제논집』 12: 5-57.
- 최인현 · 박제수. 1969. 『1966 특별인구조사결과 및 개요』.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연구총서 3호.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 최인현 · 윤종주 · 김수봉 · 정기원 · Huguet. 1996. “인구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 인구및주택센서스 인구종합분석 보고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pp. 241-357.
- 최인현 · 정영일 · 변용찬 편. 1986. 『인구이동과 사회경제발전-인구이동특별조사 심층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최종철. 1996. “종교의 일상사회학.”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pp. 157-190.
- 최협 · 박찬웅. 1996. 『세계의 한민족: 미국 · 캐나다』. 통일원.
- 최종현. 1991. “제3세계의 도시화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최진호. 1982. “우리 나라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 116-131.
- . 1986. “인구분석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9: 32-40.
- .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분포의 원인』. 통계청.
- . 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17: 1-20.
- . 1995. “지역간 인구 분포.” 권태환 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pp. 127-235.
- . 1997. “인구이동패턴의 변화, 1960~1990.” 한국인구학회 편.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pp. 63-89.

- 최진호·최병선.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1999. 『한국의 도시』. 범문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a.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1b.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정보사회통계조사 10년 자료집』. 한국정보문화센터.
- . 1999. 『99 국민 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 2000a. 『정보문화지수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센터.
- . 2000b. 『2000 국민생활정보화인식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 2001.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행정문화원. 각 연도. 『한국행정구역총람』. 한국행정문화원.
- 한남제. 1999. 『현대가족의 이해』. 일지사.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경희. 1979. 『한국 도시 연구』. 중화당.
- . 1986. “한국의 도시화: 인구 면으로 본 1970년대(1970~1980)의 도시화.” 『경북대 논문집』 42: 65-94.
-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7.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7). 통계청.
- .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현의성. 1988. “한일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7: 5-22.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2. 『人口統計資料集 2001/2002』. 東京.
- 金哲. 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東京: 岩波書店.
- 南亮三郎 編. 1972. 『韓國人口の經濟分析』.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大江守之. 1994. “世帯主のコーホト變化に着目した家族類型世帯數の推計手法-その2 世帯形成期の有配偶關係推計と家族類型別世帯主率推計.” 『人口問題研究』 49(4): 1-22.
- . 1993. “世帯主のコーホト變化に着目した家族類型世帯數の推計手法-その1 家族類型別純遷移率法の提案.” 『人口問題研究』 49(3): 39-46.
- 藤田峰三. 1995. 『新國勢調査論』. 大藏省 印刷局.
- 朴在一. 1957. 『在日韓國人に關する總合調査研究』. 東京: 新紀元社.
- 石南國. 1972. 『韓國の人口増加の分析』. 東京: 草書房.

- 統計局(日本國). 1985. 『國勢調査の話』(내부자료). 總務廳 統計局.
- . 1990. 『國勢調査の話』(내부자료). 日本統計協會.
-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5. 『日本の世帯數の將來推計: 全國推計/都道府縣別推計-1990年~2010年』. 東京.
- 楊家駱主編. 1983. 『洪北江詩文集上』. 中國學術名著第六集 第二十一冊. 臺北:世界書局 民國七十二年.
- 崔昌來·陳通河·朱成華. 1979. “延邊人口與計劃生育論.” 隋喜林 外(編) 『發展中延邊』.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Anderton, Douglas, Richard Barrett, and Donald Bogue. 1997.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Free Press.
- Anker, Richard. 1998. *Gender and Job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Antonovsky, A. 1967 “Social Class, Life Expectancy and Overall Mortalit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5(2): 31-73.
- Atoh, Makoto, Vasantha Kandiah, and S. Ivanov. 200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Is It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Europe?” Unpublished Paper.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 Barringer, Herbert R. and Sung-Nam Cho. 1989.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 Fact Book*. Honolulu: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Behm, H. 1980.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ortality in Latin America.” Pp. 140-164 in *Proceedings of the Meeting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UN/WHO Seminar, Mexico City, WHO.
- Bell, M. and J. Cooper. 1990. “Household Forecasting: Replacing the Headship Rate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19-21 November, Melbourne.
- Bell, M. and J. Cooper and M. Les. 1995. *Household and Family Forecasting Models: A Review*.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 Benjamin, B. 1965.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Mortality*. Paris: Mouton & Co.
- Bennett, N. G. and S. Horiuchi. 1981.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in a Closed Population.” *Population Index* 47(2): 207-221.
- . 1984. “Mortality Estimation from Registered Death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Demography* 21: 217-233.
- Bielby, William T. and Denise D. Bielby. 1992. “I Will Follow Him: Family Ties, Gender-Role Beliefs, and Reluctance to Relocate for a Better Job.”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97(5): 1241-1267.
- Bloom, D. E. and J. G. Williamson. 1997. "Demographic Transition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king Paper 626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rvard University.
- Bongaarts, John. 1998. "Fertility and Reproductive Preferences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Working Paper No. 114. Population Council.
- _____.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ing World." Expert Group Meeting on Completing the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ecretariat, March 11-14, New York.
- Bongaarts, John and Robert G. Potter, Jr. 1983.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Academic Press.
- Brown, S. P. 1951. "Analysis of a Hypothetical Stationary Population by Family Units: a Note on Some Experimental Calculations." *Population Studies* IV (4): 380-394. London.
- Bumpass, Larry L. and Minja Choe. 1999. "Attitudes Relating to Marriage and Family Life." Unpublished Paper.
- Byun, Wha-Soon. 1987. "Étude Comparative sur la Famille et le Divorce en Corée du Sud et en France." Thèse pour le Doctorat de 3^{ème} Cycle, Université de Paris V.
- Caldwell, J.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 Castells, Manuel.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Translated by A. Sheridan. London: Edward Arnold.
- _____. 1989. "The Information City: Information Technology." In *Economic Restructuring and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England: Blackwell.
- Chang, Edward Tachan. 1999. "The Post-Los Angeles Riot Korean American Community: Challenges and Prospect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0(1&2): 6-26.
- _____. 2000. "Korean Kaleidoscope: An Overview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2): U5-U20.
- Chang, Yunshik (ed.). 1980.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en, Pi-Chao. 1972. "Over-urbanization, Rustication of Urban Educated Youths, and Politics of R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China." *Comparative Politics* 4: 361-386.
- Cho, Lee-Jay, Fred Arnold, and Tai-Hwan Kwon. 1982.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ho, Nam-Hoon. 2001. "Issues and Policy Options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UN Meeting, Malta.

- Cho, Nam-Hoon and Sam-Shik Lee. 2001. "Long-Term Population Prospects and the Direction of Population Policies." *Summary Reports*. Seoul: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 Choi, Jin Ho. 1984. "Urban to Rural Migration in Korea." Pp. 21-108 in *Rural Migration in Developing Nations*. Edited by Calvin Goldscheider.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Coale, A. J. 1974.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considered."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1973*. 1: 53-72. Liege, Belgium: IUSSP.
- Coale, A. and P. Demeny. 1983. *Regional Model Life Tables and Stable Popul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orner, I. E. 1989. "Developing Centralised Household Projections for National and Sub-national Areas." In *Advances in Regional Demography: Information, Forecasts, Models*. Edited by P. Congdon and P. Batey. London: Belhaven Press.
- Das Gupta, Prithwis. 1978. "A General Method of Decomposing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into Several Components." *Demography* 15: 99-109.
- DaVanzo, Julie. 1976. "Differences Between Return and Nonreturn Migration: An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0(1): 13-27.
- Davis, K. 1963.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 345-366.
- Davis, K. and H. Golden. 1955.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e-Industrial A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3): 6-26.
- Doherty, W. 1999. "Postmodernism and Family Theory." Pp. 205-218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Edited by M. Sussman, S. Steinmetz, and G. Peterson. New York: Plenum Press.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0.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angkok: ESCAP.
- . 1996. *Population Aging and Development*.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140. New York: United Nations.
- Feldstein, P. J. 1979. *Health Care Economics*. New York: Wiley.
- Fox, A. J., P. O. Goldblatt and A. M. Adelstein. 1982. "Selection and Mortality Differential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6(2): 69-79.
- Friedlander, D. 1969. "Demographic Responses and Population Change." *Demography* 6: 359-381.
- Gilbert, R. 2001. *Asking Questions on 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pulation Census*. Working Paper No. 2001-1.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lass, David. 1940. *Population Policies and Movements in Europe*. Oxford: Clarendon Press.

- Goldscheider, Calvin. 1971. *Population, Modernization, and Social Structure*. Boston: Little, Brown and Co.
- _____. 1981. "Social Change and Demographic Transitions: Selected Theoretical Issues and Research Strategies." Paper Prepared for the Chaire Quetelet, Belgium.
- Goldstein, Sidney and Penporn Tirasawat. 1977. "The Fertility of Migrants to Urban Places in Thailand." Reprint Number 43.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 Gordon, Nancy M. 2002. "Census 2000: The Last Long Form." Paper Presented at the 20th Population Census Conference. Ulaanbaatar, Mongolia.
- Gove, W. R. 1973.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45-67.
- Gubhaju, Bhakta, K. S. Seetharam, and Jerrold Huguet. 2001. "Demographic Dynamics in ESCAP Regio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6-1: 45-66.
- Hansluwka, H. 1968. "Some Considerations about Statistics on Mortality." In *World Views on Population Problems*. Budapest: Akadeiai Kiado.
- Hansluwka, H., A. Lopez, and L. Ruzicka. 1981. "Health Outlook for South and East Asia for the Year 2000." *World Health Statistics* 34(3): 168-195.
- Harbison, Sarah H. and Warren C. Robinson. 2002. "Policy Implications of the Next World Demographic Transition." *Studies in Family Planning* 33-1: 37-48.
- Hoem, Jan M. and Monica S. Fong. 1976. "A Markov Chain Model of Working Life Tables." Working Paper No. 2. Laboratory of Actuarial Mathematics.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1. *The Dilemma of the Informal Sector*.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Labor Office, 78th Session, Geneva: ILO.
- _____. 1993.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http://www.ilo.org>.
- _____. 2002. *Collection of Economic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Censuses*. Technical Report: ST/ESA/STAT/119. Geneva: ILO.
- Jones, G. W. 1990. "Fertility Transitions among Malay Populations of Southeast Asia: Puzzles of Interpret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 507-537.
- Jun, Kwang-Hee. 1987. "The Reproductive Behavior of Rural-Urban Migrants in Korea: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Brown University.
- _____. 1999.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Fertility Behavior of Migrants in Korea: An Analysis of the Life History Matrix Data." A Paper Read at the 1999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f Sociology(APRCS).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February 4-6, 1999.

- Kashiwazaki, Chikako. 2000. "To Be Korean without Korean Nationality: Claim to Korean Identity by Japanese Nationality Holder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J48-J70.
- Kau, James and C. F. Sirmans. 1976. "New, Repeat and Return Migration: A Study of Migration Types." *Southern Economic Journal* 43(2): 1144-1148.
- _____. 1978. "New Repeat and Return Migration: Comment." *Southern Economic Journal* 44(3): 680-684.
- Keilman, N., A. Kuijsten, and A. Vossen (eds.). 1988. *Modelling Household Formation and Dissolution*. Oxford: Clarendon Press.
- Kent, R. 1992. "Household Formation by the Young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s* 24(10): 1129-1137.
- Ketkar, K. W. 1990. "A Log-linear Approach to Disaggregated Micro-level Population Forecast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6(2): 241-251.
- Keyfitz, N. 1972. "On Future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7(338): 347-363.
- Kiker, B. F. and Earle C. Traynham, Jr. 1976. "A Comment on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3): 885-888.
- Kim, Cheong-Seok and Ka-Oak Rhee. 1997. "Variations in Living Arrangements among Korean Elderly Par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 189-202.
- _____. 1999.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 Views of Korean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2): 94-111.
- _____. 2000.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 36-48.
- Kim, Dae Young and John Sloboda. 1981. "Migration and Korean Development." Pp. 36-138 in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dited by Repetto et al.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Doo-Sub. 1986.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and Fertility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5: 19-30.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7. *Socioeconomic Status, In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92.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Pp. 45-66 in *Fertility Transitions,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Policy*. Edited by C. Goldscheider. Brown University Studie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Kim, Hyung-Chan and W. Patterson. 1974. *The Koreans in America 1882-1974*.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 Kim, Hyung-seog. 2001. "A Demographic Implication of the Patterns of Working Life among Korean Women in 1999." 『통계분석연구』 6(1): 184-208.
- _____. 2002. "Household Projections for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20th Population Census Conference. June 19~21. Ulaanbaatar, Mongolia.
- Kim, Hyung-seog and Namsoo Jung. 2001. "Determinants of Entry into First Marriage in Korea." A Contributed Paper to the 5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August 22~29. Seoul, Korea.
- Kim, Luke. 1999. "The 1.5 Generation and Its Self-identity Development."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0(1/2): 27-41.
- Kim, Nam. Il. 1976. "Infant Mortality Rates in Korea: Its Biological and Sociological Correlates: A Field Study Report." Unpublished Paper.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 Kim, Shin and Kwang Jung Kim. 2000. "Korean Immigrant Churche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2): U53-U67.
- Kim, Tai-Hun.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tagawa, Evelyn.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 1168-94.
- _____. 1964. "Standardized Comparisons in Population Research." *Demography* 1: 298-311.
- Kitagawa, Evelyn. and P. M. Hauser. 1973. *Differential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Socioeconomic Epidemi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Kobayashi, K. 1984.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Population of Japan*, Country Monograph Series, No. 11, ESCAP, Bangkok. Pp. 43-60.
- Kono, Shigemi. 1987. "The Headship Rate Method for Projecting Households." Pp. 287-308 in *Family Demography*. Edited by John Bongaarts, Thomas Burch and Kenneth Wachter. Oxford University Press.
- Kreider, Rose M. and Jason M. Fields. 2001. "Number, Timing, and Duration of Marriages and Divorce: Fall 1996." *Current Population Reports* 70-80. Washington, D. C.: U.S. Census Bureau.
- Kwon, E. H. and T. R. Kim. 1968. "The Population of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7: 113-181.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1.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Pp. 1-26 in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 of Korea. Edited by R. Repetto et a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won, Tai-Hwan. 1986.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76,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ited Nations.
- _____. 1990. "The Trends and Patterns of Urbanward Migration in Korea, 1960~1985." Pp. 154-174 in *Urbanization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Edited by Bui Dang Ha Doan. CICRED Inter-Center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Survey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92. "Social Change and Family System in Korea." Pp. 167-184 in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 Strategies*. Edi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Kwon, Tai-Hwan and Kwang-Hee Jun, 1999. "Demographic Change and Urbanization." Unpublished Paper.
- Kwon, Tai-Hwan, Kwang-Hee Jun, and Sung-Nam Cho. 1997. *Induced Abortion in Korea*. ISDPR Social Studies Series No. 2.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Tai-Hwan, Hae-Young Lee, Yunshik Chang, and Eui-Young Yu. 1975. *The Population of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vallette, Michael and Alan Pratt(eds.). 1997. *Social Policy: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Lazo, Lucita S. 1999. "Counting Paid and Unpaid Work: the State of the Art in the Asia-Pacific Region." Pp. 1-22 i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Selected Papers*. Edited by Margarita F. Guerrero. UNPD Regio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Asia Office.
- Lee, D. W. 1973. "Construction of Life Tables from the Recent Korean Censuses."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6: 65-80. Seoul.
- Lie, John. 2000. "Imaginary Homeland and Diasporic Realization: Kikan Sanzenri, 1975~87."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J11-J26.
- Lee, Ki-Seuk. 1979. *A Social Geography of Greater Seoul*. Seoul: Pochinchai Printing Ltd.
- Lee, On Jook. 1978. *Urban to 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 B. 1980. "An Overview of Mortality in Korea." *Journal of Family Planning Studies* 7: 163-180, Seoul.
- Mason, A. 1987. *HOMES: A Household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 Mason, Karen O., and Noriko O. Tsuya. 1999. "View of Marriage Among Never-Married Young

- Adult." Unpublished Paper.
- Mathis, E. S. 1969.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eceased Person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22(9).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iller, Ann R. 1977. "Interstate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Some Socioeconomic Difference by Type of Move." *Demography* 14(1): 1-17.
- Min, Pyoung-Gap. 1995. "Kore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In *Thousand Oaks*. Edited by Pyoung-Gap Min. CA: Sage Publications.
- Mincer, J.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749-7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2000 Guidelines on Government Funding Services for Older Persons'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 Mosher, W. D. 1980a.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An Application to Puerto Rico, 1940 to 1970." *Population Studies* 34: 45-58.
- _____. 1980b. "Demographic Responses and Demographic Transitions: A Case Study of Sweden." *Demography* 17: 395-412.
- Nishioka, H., T. Suzuki, Y. Koyama, C. Yamamoto, and K. Kojima. 2000.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1995~2020: Methods and Result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65-85.
- Noh, Hee-Bang. 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Notestein, F. 1953. "Economic Problems of Population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London, U.K.
- Oh, Kap-Hwan and Hae-Young Lee. 1980. "Urbanism in Korea: A New Way of Life?." Pp. 219-240 in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Edited by Yunshik Chang.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Omran, A. 1971.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9(4): 509-538.
- _____. 1977. "Epidemiolog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lletin* 32(2).
- Park, Chai-Bin. 1978. "The Fourth Korean Child: The Effect of Son Preference on Subsequent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0: 95-106.
- Park, Chai-Bin and Nam Hoon Cho. 1995.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1): 59-84.
- Pathak, K. and P. Murty. 1983. "Levels and Trends of Mortality in Some Selected Countries of Asia." Pp. 246-277 in *Dynamics of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1983*. Bombay: Himalaya Publishing House.

- Preston, S. H. 1980.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Declin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Pp. 289-360 in *Population Economic Chang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Edited by R. A. Easterl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4. "Use of Direct and Indirect Techniques for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Systems." Pp. 66-76 in *Data Bases for Mortality Measuremen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ited Nations.
- Preston, S. H., H. Patrick and G. Michel. 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 Retherford, Robert D., Naohiro Ogawa, and Rikiya Matsukura. 2002.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Tokyo: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 Ross, John and Thomas Frejka. 2001. "Paths to Sub-replacement Fertility: The Empirical Evide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13-254.
- Rutstein, S. D. 1983. *Infant and Child Mortality: Levels, Trends and Demographic Differentials*. WFS Comparative Studies, No. 24. World Fertility Survey.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Ruzicka, L. T. 1982. "Implications of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in the ESCAP Region." Pp. 83-100 in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8. ESCAP, Bangkok.
- Ryang, Sonia. 2000. "New Dimensions of Hybrid and Diverse Communities: An Introduction."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J1-J10.
- _____. 2001.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55-86.
- Schoen, R. and K. Woodrow. 1980. "Labor Force Status Life Tables for the United States, 1972." *Demography* 17(3): 297-322.
- Schulz, James H., Allan Borowski, and William H. Crown. 1991. *Economics of Population Aging*. New York: Auburn House.
- Shihadeh, E. S. 1991. "The Prevalence of Husband-Centered Migration: Employment Consequences for Married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2-444.
- Shiller, Herbert I. 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 Shryock, Henry S., Jacob Siegel, and Associates. 1973.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Second Printing(revision).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80.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U. S. Department of Commerce.

- Sjaastad, Larry A. 1962.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upplement) 70: 80-93.
- Srikantan, K. S. 1982. "Threshold Hypothesis." Pp. 266-268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pulation Vol 1*. Edited by J. A. Ross. New York: Free Press.
- Spengler, Joseph J. 1938. *France Faces Depopul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Statistics Canada. 2002. "The 2006 Census Context." http://www.statcan.ca/english/2006/census_site/index.htm.
- Statistics Denmark. 1995. *Principle Fram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pulation Statistics System*. Statistics Denmark.
- Suzuki, Toru. 1999. "Projection of Households in Japan with a Dynamic Macro- Simulation Model."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_____. 2000. "Leaving the Parental Household in Contemporary Japan."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10: 23-35.
- Taeuber, Irene B. 1958.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1958. *Multilingual Demographic Dictionary*. New York: UN.
- _____. 1973a.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
- _____. 1973b. *Method of Projecting Households and Families*. 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Manual VII). New York: UN.
- _____. 1980. *Patterns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 Growth*.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
- _____. 1982. *Model Life Tables for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77. New York: UN.
- _____. 1983. "Patterns of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Pp. 7-32 in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Edited by A. Lopez and L. Ruzicka.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40-61. New York: UN.
- _____. 1988. *Improving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Women Using Household Survey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48. New York: UN.
- _____. 1989. *Projection Methods for Integrating Population Variables into Development* (Volume 1 Methods for Comprehensive Planning). New York: UN.
- _____. 1993a. *Methods of Measuring Women's Economic Activity*. Technical Report. New York: UN.
- _____. 1993b.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Proceeding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New York: UN.

- United Nations. 1993c. *System of National Accounts*. New York: UN.
- . 199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 1*.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Rev.1. New York: UN.
- .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ESA/P/WP. 160, New York: UN.
- . 200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0 Revision*. New York: UN.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2001.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50. *Tables of Working Life: Length of Working Life for Men*. Bulletin No. 100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Bureau of the Census. 1986. *Projections of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Families 1986~2000*. Washington, D.C.
- . 1992.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1990's." *Current Population Reports*. Pp. 23-18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 2001.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www.census.gov/acs/www/AdvMeth/Papers/Papers1.htm>.
- Vanhove, N. and Leo Klaassen. 1980. *Regional Policy-A European Approach*. Saxon House.
- Ware, H. 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Mortality and Fertility: Replacement and Insurance Effects." In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1. Liege, Belgium: IUSSP.
- Webster, Frank. 1995. "Information and Reconstruction: Beyond Fordism." In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 Weeks, J. R. 198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4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Williamson, Jeffrey E. 1998. "Growth, Distribution, and Demography: Some Lessons from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5: 241-271.
-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 Yoon, In-Jin. 2001. "Korean American Experience: Ethnic Mobilization as a Mode of Incorpor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11-54.
- Yu, Eui-Young. 1974. "Internal Migration and Urbanization." Pp. 110-180 in *The Study of the Korean Population, 1996*. By Yunshik Chang et a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 1975. "Population Distribution, Internal Migration and Urbanization." Pp. 62-78 in *The Population of Korea*. By Tai Hwan Kwon et a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Yu, Eui-Young. 1977. "Koreans in America: An Emerging Ethnic Minority." *Amerasia Journal* 4: 117-131.
- _____. 1980. "Inter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Cities." Pp. 143-175 in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Edited by Yunshik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s Reflected in the Year 2000 U.S. Census." 한국인구학회 2001 후기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요약집.

여 백

부록

〈부표 1〉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지역별 인구, 1925~2000	700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702
〈부표 3〉 시도별 인구, 2000	711
〈부표 4〉 성 및 연령별 인구, 2000	712
〈부표 5〉 장래 추계인구, 2000~2050	716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718

〈부표 1〉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지역별 인구, 1925~2000

(단위: 명)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합계	19,522,945	21,058,305	22,899,038	24,326,327	25,900,142	20,188,641	21,526,374	24,989,241
시부	1,009,628	1,327,177	1,606,179	2,818,196	3,411,542	3,474,152	5,281,432	6,996,746
군부	18,513,317	19,731,128	21,292,859	21,508,131	22,488,600	16,714,489	16,220,954	17,992,495
읍부					2,481,029	1,669,269	1,437,088	1,993,308
면부					20,007,571	15,045,220	14,783,866	15,999,187
서울	(34,626)	(384,240)	(444,098)	(935,464)	(988,537)	1,446,019	1,574,868	2,445,402
부산	(106,642)	(146,098)	(182,503)	(249,734)	(329,215)	(473,619)	(1,045,183)	(1,163,671)
대구	(76,534)	(93,319)	(107,414)	(178,923)	(206,638)	(313,705)	(487,252)	(676,692)
인천	(56,295)	(68,137)	(82,997)	(171,165)	(213,833)	(265,767)	(317,967)	(401,473)
광주	(23,734)	(39,463)	(54,607)	(64,520)	(82,431)	(138,883)	(233,043)	(314,420)
대전	(8,614)	(27,594)	(39,061)	(45,541)	(76,675)	(126,704)	(172,786)	(228,987)
울산								
경기	2,019,108	2,157,413	2,451,691	2,864,389	3,089,888	2,740,594	2,363,660	2,748,765
강원	1,332,352	1,487,715	1,605,274	1,764,649	1,856,707	1,138,785	1,496,301	1,636,767
충북	847,476	900,226	959,490	944,870	979,656	1,146,509	1,192,071	1,369,780
충남	1,282,038	1,382,888	1,526,825	1,575,945	1,673,489	2,028,188	2,222,725	2,528,133
전북	1,369,010	1,503,695	1,607,236	1,598,614	1,673,041	2,050,485	2,126,255	2,395,224
전남	2,158,513	2,332,256	2,508,346	2,638,969	2,747,819	3,042,442	3,127,559	3,553,041
경북	2,332,572	2,416,762	2,563,251	2,472,211	2,603,739	3,206,201	3,363,798	3,848,424
경남	2,021,887	2,135,716	2,248,228	2,241,902	2,416,093	3,134,829	3,770,209	4,182,042
제주	(205,194)	(208,331)	(207,220)	(213,947)	(221,366)	254,589	288,928	281,663
황해	1,461,879	1,523,523	1,674,214	1,812,933	2,013,166			
평남	1,241,777	1,331,705	1,469,631	1,768,265	1,826,651			
평북	1,417,091	1,562,791	1,710,352	1,662,316	1,881,352			
함남	1,412,996	1,578,491	1,721,676	1,878,992	2,014,388			
함북	626,246	745,124	852,824	1,102,272	1,124,153			

〈부표 1〉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지역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합계	29,159,640	31,435,252	34,706,620	37,436,315	40,448,486	43,410,899	44,608,726	46,136,101
시부	8,354,424	12,929,002	16,792,771	21,434,116	26,442,980	32,308,970	35,036,473	36,755,144
군부	20,805,216	18,506,250	17,913,849	16,002,199	14,005,506	11,101,929	9,572,253	9,380,957
읍부	2,256,362	2,850,355	3,723,354	4,539,666	4,817,236	3,603,647	3,484,148	3,755,782
면부	18,548,854	15,653,957	14,187,007	11,462,533	9,188,270	7,498,282	6,088,105	5,625,175
서울	3,793,280	5,525,262	6,889,502	8,364,379	9,639,110	10,612,577	10,231,217	9,895,217
부산	1,426,019	1,876,391	2,453,173	3,159,766	3,514,789	3,798,113	3,814,325	3,662,884
대구	(845,189)	(1,080,819)	(1,310,768)	(1,604,934)	2,029,853	2,229,040	2,449,420	2,480,578
인천	(525,827)	(643,384)	(800,007)	(1,083,906)	1,386,911	1,817,919	2,308,188	2,475,139
광주	(403,495)	(501,967)	(607,011)	(727,600)	(905,896)	1,139,003	1,257,636	1,352,797
대전	(314,991)	(413,823)	(506,708)	(651,792)	(866,148)	1,049,578	1,272,121	1,368,207
울산	(112,848)	(159,433)	(252,570)	(418,326)	(551,014)	(682,411)	(967,429)	1,014,428
경기	3,102,325	3,353,272	4,039,132	4,933,862	4,794,135	6,155,632	7,649,741	8,984,134
강원	1,831,185	1,865,426	1,861,560	1,790,954	1,724,809	1,580,430	1,466,238	1,487,011
충북	1,548,821	1,480,338	1,522,203	1,424,083	1,391,004	1,389,686	1,396,728	1,466,567
충남	2,902,941	2,858,202	2,948,553	2,956,214	3,001,179	2,013,926	1,766,854	1,845,321
전북	2,521,207	2,431,892	2,456,403	2,287,689	2,202,078	2,069,960	1,902,044	1,890,669
전남	4,048,769	4,004,832	3,984,123	3,779,736	3,748,428	2,507,439	2,066,842	1,996,456
경북	4,472,895	4,555,866	4,858,551	4,954,559	3,010,945	2,860,595	2,676,312	2,724,931
경남	3,175,146	3,118,634	3,322,132	3,322,132	3,516,660	3,672,396	3,845,622	2,978,502
제주	337,052	365,137	411,732	488,576	488,576	514,605	505,438	513,260

주: 1) 1925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부(府)인구, 광주, 대전은 면(面)인구.
 2) 1930~194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부(府)인구.
 3) ()는 서울은 경기, 부산은 경남, 대구는 경북, 인천은 경기, 광주는 전남, 대전은 충남, 울산은 경남에 포함.
 4) 특별조사구 인구 및 외국인 포함(단, 1955년 시·군부는 외국인 미포함).
 5) 1970년, 1975년 군부에는 읍·면 미상 포함.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단위: 명)

연령	1925	1930	1935	1940	1944
남녀합	19,020,030	20,438,108	22,208,102	23,547,465	25,120,174
0 ~ 4	3,069,586	3,281,683	3,671,581	3,897,658	4,278,618
5 ~ 9	2,324,094	3,281,683	2,886,471	3,237,238	3,562,531
10 ~ 14	2,157,223	2,657,660	2,531,631	2,721,264	3,008,747
15 ~ 19	1,877,066	2,220,479	2,101,905	2,263,663	2,350,425
20 ~ 24	1,470,283	2,051,939	1,897,029	1,835,093	1,869,326
25 ~ 29	1,472,542	1,711,543	1,613,770	1,704,599	1,671,576
30 ~ 34	1,259,397	1,371,976	1,285,942	1,456,721	1,567,460
35 ~ 39	1,139,848	1,197,402	1,308,753	1,205,407	1,356,763
40 ~ 44	949,548	1,055,400	1,112,764	1,201,302	1,138,860
45 ~ 49	817,690	889,145	991,393	1,016,874	1,086,046
50 ~ 54	673,697	737,442	797,501	885,031	902,634
55 ~ 59	588,370	607,955	666,028	713,241	743,975
60 ~ 64	480,125	483,750	503,268	552,549	607,464
65 ~ 69	389,454	367,736	381,639	391,881	426,058
70 ~ 74	207,604	252,258	247,966	256,193	302,049
75 ~ 79	104,274	116,623	145,798	133,218	154,221
80 ~ 84	39,230	51,055	64,663	75,533	61,451
85 이상					31,970
미상					

주: 외국인 제외(단, 1960년, 1966년, 1970년은 외국인 포함).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49	1955	1960	1966	1970
남녀합	20,166,756	21,502,386	24,989,241	29,159,640	31,435,252
0 ~ 4		3,376,648	3,549,564	4,480,921	4,316,143
5 ~ 9	5,877,777 ¹⁾	2,867,388	3,781,551	4,612,872	4,531,942
10 ~ 14	2,514,640	2,621,021	2,822,255	3,590,027	4,393,348
15 ~ 19	2,022,651	2,394,911	2,383,154	2,708,146	3,088,134
20 ~ 24	1,717,726	1,754,400	2,279,449	2,298,683	2,523,170
25 ~ 29	1,495,317	1,439,127	1,913,186	2,244,334	2,204,293
30 ~ 34	1,265,721	1,389,448	1,556,334	1,959,774	2,193,279
35 ~ 39	1,142,184	1,168,579	1,416,737	1,552,795	1,854,200
40 ~ 44	947,333	1,054,062	1,187,470	1,346,826	1,461,903
45 ~ 49	774,149	947,881	1,033,761	1,116,535	1,284,628
50 ~ 54	681,634	679,901	884,576	947,632	1,024,535
55 ~ 59	616,519	614,994	664,538	788,723	855,041
60 ~ 64	1,075,726 ²⁾	480,506	566,571	550,953	665,258
65 ~ 69		359,204	404,732	437,384	434,715
70 ~ 74		191,742	297,002	267,288	315,444
75 ~ 79		107,355	140,663	171,669	175,416
80 ~ 84		39,995	68,440	59,630	83,836
85 이상		15,224	24,169	25,348	29,967
미상	35,379		15,089	100	

주: 1) 10세 미만.
2) 60세 이상.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남녀합	34,678,972	37,406,815	40,419,652	43,390,374	44,553,710	45,985,289
0 ~ 4	4,227,360	3,794,692	3,702,555	3,279,790	3,427,409	3,130,258
5 ~ 9	4,453,698	4,420,946	3,916,350	3,862,508	3,096,115	3,444,056
10 ~ 14	4,527,330	4,440,137	4,475,985	3,991,917	3,711,980	3,064,442
15 ~ 19	4,146,912	4,239,729	4,316,264	4,448,996	3,863,491	3,691,584
20 ~ 24	3,123,126	4,053,638	4,245,090	4,396,309	4,304,378	3,848,186
25 ~ 29	2,507,450	3,082,172	4,070,408	4,333,500	4,137,913	4,096,978
30 ~ 34	2,224,238	2,519,241	3,115,238	4,207,714	4,230,239	4,093,228
35 ~ 39	2,189,144	2,223,341	2,581,181	3,201,210	4,133,864	4,186,953
40 ~ 44	1,800,153	2,131,651	2,187,508	2,539,269	3,071,101	3,996,336
45 ~ 49	1,398,820	1,781,813	2,089,212	2,176,890	2,464,295	2,952,023
50 ~ 54	1,197,379	1,325,925	1,695,259	2,010,018	2,063,768	2,350,250
55 ~ 59	939,205	1,125,353	1,267,757	1,622,853	1,913,461	1,968,472
60 ~ 64	737,552	822,057	1,006,876	1,157,059	1,495,082	1,788,849
65 ~ 69	542,827	620,283	722,817	900,314	1,043,979	1,376,122
70 ~ 74	325,213	425,096	501,254	595,116	762,544	918,121
75 ~ 79	204,290	229,286	312,090	377,171	455,673	600,598
80 ~ 84	90,917	118,207	137,660	195,312	246,191	303,759
85 이상	43,352	53,242	75,728	94,326	131,818	173,206
미상	6	6	420	102	409	1,868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25	1930	1935	1940	1944
남자	9,726,150	10,398,889	11,271,005	11,839,295	12,521,173
0 ~ 4	1,560,053	1,661,240	1,864,127	1,974,157	2,159,146
5 ~ 9	1,200,503	1,361,625	1,478,064	1,655,425	1,815,269
10~14	1,117,122	1,153,608	1,301,810	1,398,317	1,545,793
15~19	964,185	1,058,199	1,080,314	1,142,250	1,174,771
20~24	749,424	860,573	959,748	908,119	889,337
25~29	754,495	692,154	811,545	845,382	812,916
30~34	654,292	706,726	652,568	725,152	768,255
35~39	594,449	618,681	669,307	606,498	675,127
40~44	497,970	548,241	572,611	608,860	575,438
45~49	425,428	460,921	508,714	515,050	554,141
50~54	347,447	379,603	409,120	445,617	451,506
55~59	291,999	305,594	334,045	355,954	366,961
60~64	231,498	235,138	248,205	270,603	293,122
65~69	181,586	171,553	179,466	186,391	200,965
70~74	94,614	114,519	113,398	115,515	136,940
75~79	45,498	50,191	62,583	56,882	65,901
80~84	15,587	20,323	25,380	29,123	24,464
85 이상					11,121
미상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49	1955	1960	1966	1970
남자	10,188,238	10,752,973	12,543,968	14,684,147	15,779,615
0 ~ 4		1,742,778	1,820,312	2,318,664	2,228,736
5 ~ 9	2,991,580 ¹⁾	1,495,871	1,958,379	2,391,295	2,349,086
10 ~ 14	1,282,027	1,371,568	1,480,279	1,857,472	2,274,301
15 ~ 19	1,029,625	1,256,904	1,248,791	1,399,246	1,573,179
20 ~ 24	863,715	808,143	1,175,602	1,203,321	1,298,687
25 ~ 29	759,752	635,243	916,751	1,116,120	1,096,819
30 ~ 34	652,043	679,017	727,096	975,994	1,108,853
35 ~ 39	589,925	585,542	687,559	734,345	915,069
40 ~ 44	488,270	530,158	598,867	659,331	691,062
45 ~ 49	393,673	496,405	518,017	559,889	628,934
50 ~ 54	340,893	337,483	444,283	465,588	506,554
55 ~ 59	294,192	295,560	318,745	376,426	407,895
60 ~ 64	485,605 ²⁾	217,405	257,447	248,035	302,362
65 ~ 69		156,091	174,206	182,750	181,431
70 ~ 74		80,971	120,719	104,987	120,835
75 ~ 79		43,441	55,635	62,232	60,931
80 ~ 84		15,312	25,744	20,423	26,355
85 이상		5,081	8,186	7,932	8,526
미상	16,938		7,350	97	

주: 1) 10세 미만.

2) 60세 이상.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자	17,445,246	18,749,306	20,227,564	21,770,919	22,357,352	23,068,181
0 ~ 4	2,189,456	1,963,963	1,922,758	1,726,863	1,821,350	1,641,166
5 ~ 9	2,302,542	2,282,386	2,025,353	1,999,001	1,626,922	1,831,446
10 ~ 14	2,348,676	2,186,973	2,310,570	2,054,494	1,913,801	1,615,013
15 ~ 19	2,124,156	2,067,729	2,227,322	2,267,129	1,987,044	1,913,885
20 ~ 24	1,611,767	1,540,965	2,185,720	2,294,290	2,237,940	2,028,206
25 ~ 29	1,271,743	1,293,533	2,027,185	0,160,912	2,078,417	2,057,321
30 ~ 34	1,131,486	1,127,158	1,589,610	2,142,825	2,146,351	2,068,202
35 ~ 39	1,111,449	1,080,457	1,324,360	1,648,205	2,103,016	2,117,492
40 ~ 44	885,250	868,659	1,108,685	1,315,182	1,579,850	2,029,413
45 ~ 49	649,961	609,166	1,042,989	1,100,966	1,261,509	1,496,104
50 ~ 54	576,664	521,797	809,619	994,511	1,028,887	1,185,239
55 ~ 59	449,224	373,222	560,580	760,993	923,625	959,680
60 ~ 64	334,479	260,597	440,387	494,845	673,719	836,465
65 ~ 69	229,780	373,222	306,710	375,752	420,873	593,974
70 ~ 74	123,219	161,867	190,553	233,308	293,696	348,226
75 ~ 79	68,241	74,175	103,513	127,905	160,498	211,347
80 ~ 84	26,304	31,546	36,163	54,861	71,267	94,135
85 이상	10,843	11,296	15,140	18,830	28,370	39,715
미상	6	4	338	47	217	1,152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25	1930	1935	1940	1944
여자	9,293,880	10,039,219	10,937,097	11,708,170	12,599,001
0 ~ 4	1,509,533	1,620,443	1,807,454	1,923,501	2,119,472
5 ~ 9	1,123,590	1,296,035	1,408,407	1,581,813	1,747,262
10 ~ 14	1,040,101	1,066,871	1,229,821	1,322,947	1,462,954
15 ~ 19	912,881	993,740	1,021,591	1,121,413	1,175,654
20 ~ 24	720,859	850,970	937,281	926,974	979,989
25 ~ 29	718,047	679,822	802,225	859,217	858,660
30 ~ 34	605,105	677,336	633,374	731,569	799,205
35 ~ 39	545,399	578,721	639,446	598,909	681,636
40 ~ 44	451,578	507,159	540,153	592,442	563,422
45 ~ 49	392,262	428,224	482,679	501,824	531,905
50 ~ 54	326,250	357,839	388,381	439,414	451,128
55 ~ 59	296,371	302,361	331,983	357,287	377,014
60 ~ 64	248,627	248,612	255,063	281,946	314,342
65 ~ 69	207,868	196,183	202,173	205,490	225,093
70 ~ 74	112,990	137,739	134,568	140,678	165,109
75 ~ 79	58,776	66,432	83,215	76,336	88,320
80 ~ 84	23,643	30,732	39,283	46,410	36,987
85 이상					20,849
미상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49	1955	1960	1966	1970
여자	9,978,518	10,749,413	12,445,273	14,475,493	15,655,637
0 ~ 4		1,633,870	1,729,252	2,162,257	2,087,407
5 ~ 9	2,886,197 ¹⁾	1,371,517	1,823,172	2,221,577	2,182,856
10 ~ 14	1,232,613	1,249,453	1,341,976	1,732,555	2,119,047
15 ~ 19	993,026	1,138,007	1,134,363	1,308,900	1,514,955
20 ~ 24	854,011	946,257	1,103,847	1,095,362	1,224,483
25 ~ 29	735,565	803,884	996,435	1,128,214	1,107,474
30 ~ 34	613,678	710,431	829,238	983,780	1,084,426
35 ~ 39	552,259	583,037	729,178	818,450	939,131
40 ~ 44	459,063	523,904	588,603	687,495	770,841
45 ~ 49	380,476	451,476	515,744	556,646	655,694
50 ~ 54	340,741	342,418	440,293	482,044	517,981
55 ~ 59	322,327	319,434	345,793	412,297	447,146
60 ~ 64	590,121 ²⁾	263,101	309,124	302,918	362,896
65 ~ 69		203,113	230,526	254,634	253,284
70 ~ 74		110,771	176,283	162,301	194,609
75 ~ 79		63,914	85,028	109,437	114,485
80 ~ 84		24,683	42,696	39,207	57,481
85 이상		10,143	15,983	17,416	21,441
미상	18,441		7,739	3	

주: 1) 10세 미만.

2) 60세 이상.

〈부표 2〉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성 및 연령별 인구, 1925~2000 (계속)

(단위: 명)

연령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여자	17,233,726	18,657,509	20,192,088	21,619,455	22,196,358	22,917,108
0 ~ 4	2,037,904	1,830,729	1,779,797	1,552,927	1,606,059	1,489,092
5 ~ 9	2,151,156	2,138,133	1,890,997	1,863,507	1,469,193	1,612,610
10 ~ 14	2,178,654	2,146,751	2,165,415	1,937,423	1,798,179	1,449,429
15 ~ 19	2,022,756	2,052,756	2,088,942	2,181,867	1,876,447	1,777,699
20 ~ 24	1,511,359	1,985,909	2,059,370	2,102,019	2,066,438	1,819,980
25 ~ 29	1,235,707	1,541,207	2,043,223	2,172,588	2,059,496	2,039,657
30 ~ 34	1,092,752	1,225,708	1,525,628	2,064,889	2,083,888	2,025,026
35 ~ 39	1,077,695	1,096,183	1,256,812	1,553,005	2,030,848	2,069,461
40 ~ 44	914,903	1,051,194	1,078,823	1,224,087	1,491,251	1,966,923
45 ~ 49	748,859	913,154	1,046,223	1,075,924	1,202,786	1,455,919
50 ~ 54	620,715	716,759	885,640	1,015,507	1,034,881	1,165,011
55 ~ 59	489,981	603,556	707,177	861,860	989,836	1,008,792
60 ~ 64	403,073	448,835	566,489	662,214	821,363	952,384
65 ~ 69	313,047	359,686	416,107	524,562	623,106	782,148
70 ~ 74	201,994	263,229	310,701	361,808	468,848	569,895
75 ~ 79	136,049	155,111	208,577	249,266	295,175	389,251
80 ~ 84	64,613	86,661	101,497	140,451	174,924	209,624
85 이상	32,509	41,946	60,588	75,496	103,448	133,491
미상		2	82	55	192	716

〈부표 3〉 시도별 인구, 2000

(단위: 명)

구분	총인구			한국인			외국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전국	46,136,101	23,158,582	22,977,519	45,985,289	23,068,181	22,917,108	150,812	90,401	60,411
동부	36,755,782	18,484,139	18,271,005	36,642,448	18,417,822	18,224,626	112,696	66,317	46,379
읍부	3,755,144	1,885,263	1,870,519	3,742,053	1,876,875	1,865,178	13,729	8,388	5,341
면부	5,625,175	2,789,180	2,835,995	5,600,788	2,773,484	2,827,304	24,387	15,696	8,691
서울특별시	9,895,217	4,966,993	4,928,224	9,853,972	4,943,550	4,910,422	41,245	23,443	17,802
부산광역시	3,662,884	1,827,062	1,835,822	3,655,437	1,822,539	1,832,898	7,447	4,523	2,924
대구광역시	2,480,578	1,247,562	1,233,016	2,473,990	1,243,681	1,230,309	6,588	3,881	2,707
인천광역시	2,475,139	1,250,383	1,224,756	2,466,338	1,244,327	1,222,011	8,801	6,056	2,745
광주광역시	1,352,797	674,228	678,569	1,350,948	673,166	677,782	1,849	1,062	787
대전광역시	1,368,207	690,600	677,607	1,365,961	689,340	676,621	2,246	1,260	986
울산광역시	1,014,428	522,062	492,366	1,012,110	520,656	491,454	2,318	1,406	912
경기도	8,984,134	4,538,265	4,445,869	8,937,752	4,507,362	4,430,390	46,382	30,903	15,479
강원도	1,487,011	747,351	739,660	1,484,536	746,162	738,374	2,475	1,189	1,286
충청북도	1,466,567	736,271	730,296	1,462,621	734,196	728,425	3,946	2,075	1,871
충청남도	1,845,321	927,824	917,497	1,840,410	924,986	915,424	4,911	2,838	2,073
전라북도	1,890,669	936,683	953,986	1,887,239	935,330	951,909	3,430	1,353	2,077
전라남도	1,996,456	988,249	1,008,207	1,994,287	987,463	1,006,824	2,169	786	1,383
경상북도	2,724,931	1,361,753	1,363,178	2,716,218	1,357,358	1,358,860	8,713	4,395	4,318
경상남도	2,978,502	1,488,847	1,489,655	2,970,929	1,484,009	1,486,920	7,573	4,838	2,735
제주도	513,260	254,449	258,811	512,541	254,056	258,485	719	393	326

(부표 4) 성 및 연령별 인구, 2000

(단위: 명)

구분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계	45,985,289	23,068,181	22,917,108	100.66
0 ~ 4	3,130,258	1,641,166	1,489,092	110.21
0	599,073	315,765	283,308	111.46
1	589,431	307,738	281,693	109.25
2	627,019	327,973	299,046	109.67
3	647,695	337,686	310,009	108.93
4	667,040	352,004	315,036	111.73
5 ~ 6	3,444,056	1,831,446	1,612,610	113.57
5	686,220	364,263	321,957	113.14
6	690,082	369,301	320,781	115.13
7	697,324	371,804	325,520	114.22
8	704,815	373,690	331,125	112.85
9	665,615	352,388	313,227	112.50
10 ~ 14	3,064,442	1,615,013	1,449,429	111.42
10	635,058	338,272	296,786	113.98
11	609,729	322,993	286,736	112.64
12	602,762	317,863	284,899	111.57
13	601,647	312,843	288,804	108.32
14	615,246	323,042	292,204	110.55
15 ~ 19	3,691,584	1,913,885	1,777,699	107.66
15	626,549	327,213	299,336	109.31
16	678,573	354,337	324,196	109.31
17	742,472	384,101	358,371	107.18
18	799,214	411,643	387,541	106.21
19	844,776	436,551	408,225	106.94
20 ~ 24	3,848,186	2,028,206	1,819,980	111.44
20	864,780	464,067	400,713	115.81
21	819,903	444,949	374,954	118.67
22	731,861	383,972	347,889	110.37
23	722,940	372,886	350,054	106.52
24	708,702	362,332	346,370	104.61

〈부표 4〉 성 및 연령별 인구, 2000 (계속)

(단위: 명)

구분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25~30	4,096,978	2,057,321	2,039,657	100.87
25	750,203	377,720	372,483	101.41
26	795,122	400,949	394,173	101.72
27	815,384	407,220	408,164	99.77
28	860,807	431,406	429,401	100.47
29	875,462	440,026	435,436	101.05
30~34	4,093,228	2,068,202	2,025,026	102.13
30	857,084	432,165	424,919	101.71
31	852,158	429,853	422,305	101.79
32	813,151	410,538	402,613	101.97
33	779,428	393,061	386,367	101.73
34	791,407	402,585	388,822	103.54
35~39	4,186,953	2,117,492	2,069,461	102.32
35	798,444	402,548	395,896	101.68
36	797,307	404,077	393,230	102.76
37	868,293	438,401	429,892	101.98
38	857,272	435,722	421,550	103.36
39	865,637	436,744	428,893	101.83
40~44	3,996,336	2,029,413	1,966,923	103.18
40	871,573	440,465	431,108	102.17
41	861,060	435,642	425,418	102.40
42	810,303	412,592	397,711	103.74
43	746,868	381,535	365,333	104.43
44	706,532	359,179	347,353	103.40
45~49	2,952,023	1,496,104	1,455,919	102.76
45	738,313	372,033	366,280	101.57
46	627,309	321,839	305,470	105.36
47	528,790	266,901	261,889	101.91
48	599,908	306,597	293,311	104.53
49	457,703	228,734	228,969	99.90

(부표 4) 성 및 연령별 인구, 2000 (계속)

(단위: 명)

구분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50~54	2,350,250	1,185,239	1,165,011	101.74
50	481,419	244,239	237,180	102.98
53	483,658	244,944	238,714	102.61
52	484,445	244,936	239,509	102.27
53	483,767	241,980	241,787	100.08
54	416,961	209,140	207,821	100.63
55~59	1,968,472	959,680	1,008,792	95.13
55	372,407	185,087	187,320	98.81
56	377,444	185,458	191,986	96.60
57	381,625	185,786	195,839	94.87
58	429,084	208,888	220,196	94.86
59	407,912	194,461	213,451	91.10
60~64	1,788,849	836,465	952,384	87.83
60	367,399	174,290	193,109	90.25
61	378,797	177,667	201,130	88.33
62	360,387	170,265	190,122	89.56
63	348,665	161,278	187,387	86.07
64	333,601	152,965	180,636	84.68
65~69	1,376,122	593,974	782,148	75.94
65	320,763	143,972	176,791	81.44
66	300,263	133,061	167,202	79.58
67	260,273	113,914	146,359	77.83
68	265,415	111,525	153,890	72.47
69	229,408	91,502	137,906	66.35
70~74	918,121	348,226	569,895	61.10
70	206,231	81,147	125,084	64.87
71	205,285	78,771	126,514	62.26
72	182,739	68,769	113,943	60.38
73	167,142	62,106	105,036	59.13
74	156,724	57,406	99,318	57.80

〈부표 4〉 성 및 연령별 인구, 2000 (계속)

(단위: 명)

구분	남녀합	남자	여자	성비
75~79	600,598	211,347	389,251	54.30
75	138,444	49,594	88,850	55.82
76	130,915	47,112	83,803	56.22
77	125,114	44,440	80,674	55.09
78	106,164	36,642	69,522	52.71
79	99,961	33,559	66,402	50.54
80~84	303,759	94,135	209,624	44.91
80	80,280	26,608	53,672	49.58
81	62,847	20,354	42,493	47.90
82	58,640	17,906	40,734	43.96
83	53,788	15,738	38,050	41.36
84	48,204	13,529	34,675	39.02
85 이상	173,206	39,715	133,491	29.75
미상	1,868	1,152	716	160.85
15 미만	9,638,756	5,087,625	4,551,131	111.79
15~64	32,972,859	16,692,007	16,280,852	102.53
65 이상	3,371,806	1,287,397	2,084,409	61.76

〈부표 5〉 장래 추계인구, 2000~2050

(단위: 명)

연도	남녀합	남자	여자	0~14세	15~64세	65세 +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9,911,229	33,701,986	3,394,896
2001	47,342,828	23,835,309	23,507,519	9,860,001	33,903,614	3,579,213
2002	47,639,618	23,983,838	23,655,780	9,792,573	34,074,591	3,772,454
2003	47,925,318	24,126,185	23,799,133	9,718,733	34,237,549	3,969,036
2004	48,199,227	24,260,585	23,938,642	9,632,613	34,395,598	4,171,016
2005	48,460,590	24,387,814	24,072,776	9,517,521	34,577,106	4,365,963
2006	48,710,241	24,508,669	24,201,572	9,362,001	34,774,275	4,573,965
2007	48,948,463	24,623,776	24,324,687	9,171,846	34,984,188	4,792,429
2008	49,175,329	24,732,657	24,442,672	8,965,362	35,226,217	4,983,750
2009	49,391,042	24,835,655	24,555,387	8,757,151	35,485,667	5,148,224
2010	49,594,482	24,932,771	24,661,711	8,551,714	35,740,673	5,302,095
2011	49,782,861	25,022,377	24,760,484	8,355,476	35,950,603	5,476,782
2012	49,954,138	25,102,648	24,851,490	8,171,560	36,091,847	5,690,731
2013	50,107,196	25,173,186	24,934,010	8,006,418	36,183,163	5,917,615
2014	50,240,035	25,233,381	25,006,654	7,846,986	36,253,148	6,139,901
2015	50,352,318	25,282,576	25,069,742	7,682,494	36,324,424	6,345,400
2016	50,444,562	25,320,056	25,124,506	7,526,064	36,381,156	6,537,342
2017	50,518,349	25,347,397	25,170,952	7,395,633	36,336,556	6,786,160
2018	50,575,573	25,365,197	25,210,376	7,268,342	36,273,365	7,033,866
2019	50,618,727	25,374,738	25,243,989	7,147,303	36,157,808	7,313,616
2020	50,650,260	25,377,186	25,273,074	7,034,423	35,948,429	7,667,408
2021	50,671,508	25,373,146	25,298,362	6,929,751	35,707,219	8,034,538
2022	50,682,718	25,363,335	25,319,383	6,832,336	35,447,259	8,403,123
2023	50,683,490	25,348,160	25,335,330	6,740,530	35,135,293	8,807,667
2024	50,672,580	25,326,986	25,345,594	6,652,654	34,768,782	9,251,144
2025	50,648,525	25,299,049	25,349,476	6,568,078	34,391,125	9,689,322

〈부표 5〉 장래 추계인구, 2000~2050 (계속)

(단위: 명)

연도	남녀합	남자	여자	0~14세	15~64세	65세 +
2026	50,609,812	25,263,546	25,346,266	6,487,361	34,009,733	10,112,718
2027	50,555,926	25,220,701	25,335,225	6,411,188	33,623,463	10,521,275
2028	50,486,512	25,170,669	25,315,843	6,340,794	33,228,693	10,917,025
2029	50,400,297	25,112,799	25,287,498	6,276,482	32,849,819	11,273,996
2030	50,296,133	25,046,468	25,249,665	6,217,381	32,475,033	11,603,719
2031	50,173,251	24,971,075	25,202,176	6,162,146	32,082,400	11,928,705
2032	50,030,653	24,885,574	25,145,079	6,052,946	31,687,136	12,235,366
2033	49,867,811	24,789,218	25,078,593	6,108,151	31,271,398	12,543,467
2034	49,685,300	24,682,305	25,002,995	5,994,394	30,825,259	12,865,647
2035	49,483,999	24,565,370	24,918,629	5,930,727	30,362,113	13,191,159
2036	49,264,090	24,438,694	24,825,396	5,860,714	29,887,376	13,516,000
2037	49,025,597	24,302,358	24,723,239	5,783,981	29,413,329	13,828,287
2038	48,769,279	24,156,511	24,612,768	5,701,134	28,966,199	14,101,946
2039	48,495,794	24,001,408	24,494,386	5,613,422	28,538,700	14,343,672
2040	48,204,474	23,836,935	24,367,539	5,522,324	28,148,960	14,533,190
2041	47,894,421	23,663,090	24,231,331	5,429,245	27,801,721	14,663,455
2042	47,565,627	23,480,363	24,085,264	5,335,433	27,473,265	14,756,929
2043	47,218,421	23,289,101	23,929,320	5,241,931	27,134,214	14,842,276
2044	46,853,160	23,089,491	23,763,669	5,149,615	26,758,263	14,945,282
2045	46,470,670	22,881,983	23,588,687	5,259,173	26,342,170	15,069,327
2046	46,072,143	22,667,286	23,404,857	4,971,127	25,891,902	15,209,114
2047	45,658,087	22,445,997	23,212,090	4,885,899	25,458,485	15,313,703
2048	45,229,843	22,218,968	23,010,875	4,803,801	25,064,746	15,361,296
2049	44,789,042	21,987,179	22,801,863	4,725,044	24,718,452	15,345,586
2050	44,336,997	21,751,590	22,585,407	4,649,549	24,416,858	15,270,590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남녀합

연령	사망확률 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0	0.00602	100,000	602	99,437	7,555,026	75.55
1	0.00061	99,398	61	99,368	7,455,589	75.01
2	0.00050	99,338	49	99,313	7,356,221	74.05
3	0.00042	99,289	41	99,268	7,256,908	73.09
4	0.00037	99,247	37	99,229	7,157,640	72.12
5	0.00034	99,211	33	99,194	7,058,411	71.15
6	0.00030	99,177	30	99,162	6,959,216	70.17
7	0.00027	99,147	27	99,134	6,860,054	69.19
8	0.00024	99,120	23	99,109	6,760,920	68.21
9	0.00021	99,097	21	99,086	6,661,811	67.23
10	0.00019	99,076	19	99,066	6,562,725	66.24
11	0.00019	99,057	18	99,048	6,463,659	65.25
12	0.00020	99,038	19	99,029	6,364,611	64.26
13	0.00023	99,019	23	99,007	6,265,582	63.28
14	0.00030	98,996	30	98,981	6,166,575	62.29
15	0.00040	98,966	40	98,946	6,067,594	61.31
16	0.00047	98,927	47	98,903	5,968,647	60.33
17	0.00054	98,880	53	98,853	5,869,744	59.36
18	0.00059	98,827	59	98,797	5,770,891	58.39
19	0.00064	98,768	64	98,736	5,672,094	57.43
20	0.00066	98,705	65	98,672	5,573,357	56.47
21	0.00066	98,639	65	98,607	5,474,685	55.50
22	0.00067	98,575	66	98,542	5,376,078	54.54
23	0.00073	98,508	71	98,473	5,277,537	53.57
24	0.00076	98,437	75	98,400	5,179,064	52.61
25	0.00077	98,362	76	98,325	5,080,664	51.65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녀합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26	0.00078	98,287	77	98,248	4,982,340	50.69
27	0.00079	98,210	77	98,171	4,884,092	49.73
28	0.00083	98,132	81	98,092	4,785,920	48.77
29	0.00086	98,051	84	97,922	4,687,829	47.81
30	0.00091	97,967	89	97,830	4,589,820	46.85
31	0.00097	97,878	95	97,731	4,491,897	45.89
32	0.00106	97,783	103	97,623	4,394,067	44.94
33	0.00115	97,679	113	97,506	4,296,336	43.98
34	0.00125	97,566	122	97,379	4,198,713	43.03
35	0.00134	97,445	131	97,242	4,101,208	42.09
36	0.00148	97,314	144	97,092	4,003,828	41.14
37	0.00161	97,170	157	97,927	3,906,586	40.20
38	0.00178	97,013	173	96,927	3,809,494	39.27
39	0.00196	96,840	190	96,746	3,712,567	38.34
40	0.00214	96,651	207	96,547	3,615,822	37.41
41	0.00236	96,444	227	96,330	3,519,274	36.49
42	0.00255	96,216	246	96,094	3,422,944	35.58
43	0.00277	95,971	266	95,838	3,326,851	34.67
44	0.00302	95,705	290	95,560	3,231,013	33.76
45	0.00331	95,416	316	95,258	3,135,452	32.86
46	0.00362	95,100	344	94,928	3,040,194	31.97
47	0.00397	94,756	377	94,568	2,945,266	31.08
48	0.00430	94,379	406	94,176	2,850,699	30.20
49	0.00468	93,973	440	93,753	2,756,523	29.33
50	0.00484	93,533	453	93,307	2,662,769	28.47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녀합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bar{e}_x
				nL_x	T_x	
51	0.00515	93,081	479	92,841	2,569,462	27.60
52	0.00557	92,602	516	92,344	2,476,621	26.74
53	0.00605	92,085	557	91,807	2,384,277	25.89
54	0.00680	91,528	622	91,217	2,292,471	25.05
55	0.00728	90,906	662	90,575	2,201,253	24.21
56	0.00780	90,244	704	89,092	2,110,678	23.39
57	0.00842	89,540	754	89,163	2,020,786	22.57
58	0.00912	88,786	810	88,382	1,931,623	21.76
59	0.01009	87,977	888	87,533	1,843,241	20.95
60	0.01088	87,089	947	86,615	1,755,708	20.16
61	0.01193	86,142	1,028	85,628	1,669,093	19.38
62	0.01305	85,144	1,111	84,559	1,583,465	18.60
63	0.01414	84,003	1,187	83,410	1,498,906	17.84
64	0.01532	82,816	1,269	82,182	1,415,496	17.09
65	0.01669	81,547	1,361	80,867	1,333,315	16.35
66	0.01820	80,186	1,460	79,456	1,252,448	15.62
67	0.02014	78,727	1,586	77,934	1,172,992	14.90
68	0.02206	77,141	1,702	76,290	1,095,058	14.20
69	0.02452	75,439	1,850	74,514	1,018,768	13.50
70	0.02681	73,589	1,973	72,603	944,254	12.83
71	0.02995	71,616	2,145	70,544	871,651	12.17
72	0.03360	69,472	2,334	68,305	801,107	11.53
73	0.03775	67,138	2,535	65,870	732,802	10.91
74	0.04236	64,603	2,737	63,235	666,932	10.32
75	0.04618	61,866	2,857	60,438	603,697	9.76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녀합

연령	사망확률 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bar{e}_x
				nL_x	T_x	
76	0.05116	59,010	3,019	57,500	543,259	9.21
77	0.05654	55,991	3,166	54,408	485,759	8.68
78	0.06361	52,825	3,360	51,145	431,351	8.17
79	0.07076	49,465	3,500	47,715	380,206	7.69
80	0.07786	45,965	3,579	44,176	332,491	7.23
81	0.08592	42,386	3,642	40,565	288,315	6.80
82	0.09402	38,744	3,643	36,923	247,750	6.39
83	0.10269	35,102	3,604	33,299	210,827	6.01
84	0.11264	31,497	3,548	29,723	177,527	5.64
85	0.12289	27,949	3,435	26,232	147,804	5.29
86	0.13385	24,515	3,281	22,874	121,572	4.96
87	0.14556	21,233	3,091	19,688	98,698	4.65
88	0.15804	18,143	2,867	16,709	79,010	4.35
89	0.17132	15,275	2,617	13,967	62,301	4.08
90	0.18542	12,658	2,347	11,485	48,334	3.82
91	0.20037	10,311	2,066	9,278	36,850	3.57
92	0.21617	8,245	1,782	7,354	27,572	3.34
93	0.23285	6,463	1,505	5,710	20,218	3.13
94	0.25041	4,958	1,242	4,337	14,507	2.93
95+	1.00000	3,716	3,716	10,170	10,170	2.74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자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0	0.00613	100,000	613	99,424	7,171,463	71.71
1	0.00065	99,387	64	99,355	7,072,039	71.16
2	0.00053	99,323	53	99,296	6,972,684	70.20
3	0.00045	99,270	45	99,247	6,873,387	69.24
4	0.00041	99,225	41	99,205	6,774,140	68.27
5	0.00038	99,184	38	99,165	6,674,935	67.30
6	0.00035	99,147	35	99,129	6,575,770	66.32
7	0.00032	99,111	31	99,096	6,476,641	65.35
8	0.00027	99,080	27	99,066	6,377,545	64.37
9	0.00024	99,053	24	99,041	6,278,479	63.39
10	0.00022	99,029	22	99,018	6,179,438	62.40
11	0.00021	99,007	21	98,997	6,080,419	61.41
12	0.00023	98,986	23	98,975	5,981,423	60.43
13	0.00028	98,963	27	98,950	5,882,448	59.44
14	0.00036	98,936	36	98,918	5,783,498	58.46
15	0.00049	98,900	49	98,876	5,684,580	57.48
16	0.00061	98,852	60	98,822	5,585,704	56.51
17	0.00072	98,792	71	98,756	5,486,883	55.54
18	0.00081	98,721	80	98,681	5,388,127	54.58
19	0.00088	98,641	86	98,598	5,289,446	53.62
20	0.00088	98,554	87	98,511	5,190,848	52.67
21	0.00088	98,467	87	98,424	5,092,337	51.72
22	0.00092	98,380	90	98,335	4,993,914	50.76
23	0.00100	98,290	99	98,241	4,895,579	49.81
24	0.00106	98,191	104	98,139	4,797,338	48.86
25	0.00107	98,087	105	98,035	4,699,199	47.91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자

연령	사망확률 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26	0.00108	97,982	106	97,930	4,601,164	46.96
27	0.00108	97,877	106	97,824	4,503,234	46.01
28	0.00113	97,771	111	97,716	4,405,410	45.06
29	0.00117	97,661	115	97,603	4,307,695	44.11
30	0.00123	97,546	120	97,486	4,210,091	43.16
31	0.00132	97,426	129	97,361	4,112,606	42.21
32	0.00143	97,297	139	97,227	4,015,244	41.27
33	0.00158	97,157	154	97,081	3,918,017	40.33
34	0.00172	97,004	167	97,920	3,820,937	39.39
35	0.00188	96,837	182	97,746	3,724,016	38.46
36	0.00207	96,655	200	97,555	3,627,270	37.53
37	0.00228	96,455	220	97,345	3,530,716	36.60
38	0.00253	96,235	244	96,113	3,434,371	35.69
39	0.00282	95,991	270	95,856	3,338,258	34.78
40	0.00310	95,721	297	95,572	3,242,403	33.87
41	0.00343	95,424	328	95,260	3,146,830	32.98
42	0.00374	95,097	356	94,919	3,051,570	32.09
43	0.00410	94,741	388	94,546	2,956,652	31.21
44	0.00450	94,352	424	94,140	2,862,105	30.33
45	0.00493	93,928	463	93,696	2,767,965	29.47
46	0.00540	93,464	505	93,212	2,674,269	28.61
47	0.00595	92,959	553	92,683	2,581,057	27.77
48	0.00645	92,406	596	92,108	2,488,374	26.93
49	0.00698	91,811	641	91,490	2,396,266	26.10
50	0.00721	91,170	657	90,841	2,304,776	25.28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자

연령	사망확률 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bar{e}_x
				nL_x	T_x	
51	0.00762	90,512	690	90,167	2,213,935	24.46
52	0.00826	89,822	742	89,451	2,123,767	23.64
53	0.00899	89,081	801	88,680	2,034,316	22.84
54	0.01014	88,280	895	87,833	1,945,636	22.04
55	0.01094	87,385	956	86,907	1,857,803	21.26
56	0.01180	86,429	1,020	85,919	1,770,896	20.49
57	0.01273	85,409	1,087	84,865	1,684,977	19.73
58	0.01377	84,322	1,161	83,741	1,600,112	18.98
59	0.01522	83,161	1,266	82,528	1,516,371	18.23
60	0.01647	81,895	1,349	81,221	1,433,842	17.51
61	0.01804	80,547	1,453	79,820	1,352,621	16.79
62	0.01963	79,094	1,552	78,318	1,272,801	16.09
63	0.02120	77,541	1,644	76,719	1,194,484	15.40
64	0.02300	75,897	1,745	75,025	1,117,764	14.73
65	0.02511	74,152	1,862	73,221	1,042,740	14.06
66	0.02720	72,290	1,966	71,307	969,519	13.41
67	0.03015	70,324	2,120	69,264	898,212	12.77
68	0.03276	68,204	2,234	67,087	828,947	12.15
69	0.03615	65,970	2,385	64,777	761,861	11.55
70	0.03909	63,585	2,486	62,342	697,083	10.96
71	0.04310	61,099	2,633	59,783	634,741	10.39
72	0.04827	58,466	2,822	57,055	574,958	9.83
73	0.05300	55,644	2,949	54,169	517,904	9.31
74	0.05886	52,695	3,102	51,144	463,734	8.80
75	0.06298	49,593	3,123	48,032	412,590	8.32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남자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76	0.06956	46,470	3,232	44,854	364,558	7.85
77	0.07606	43,238	3,289	41,593	319,705	7.39
78	0.08460	39,949	3,380	38,259	278,111	6.96
79	0.09237	36,569	3,378	34,880	239,852	6.56
80	0.10026	33,191	3,328	31,527	204,972	6.18
81	0.10978	29,863	3,278	28,224	173,445	5.81
82	0.11980	26,585	3,185	24,993	145,220	5.46
83	0.13059	23,400	3,056	21,872	120,228	5.14
84	0.14268	20,345	2,903	18,893	98,355	4.83
85	0.15396	17,442	2,685	16,099	79,462	4.56
86	0.16579	14,757	2,446	13,533	63,363	4.29
87	0.17818	12,310	2,193	11,213	49,830	4.05
88	0.19111	10,117	1,933	9,150	38,616	3.82
89	0.20457	8,183	1,674	7,346	29,466	3.60
90	0.21854	6,509	1,423	5,798	22,120	3.40
91	0.23300	5,087	1,185	4,494	16,322	3.21
92	0.24792	3,901	967	3,418	11,828	3.03
93	0.26327	2,934	772	2,548	8,410	2.87
94	0.27901	2,162	603	1,860	5,862	2.71
95+	1.00000	1,559	1,559	4,002	4,002	2.57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여자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hat{e}_x
				nL_x	T_x	
0	0.00591	100,000	591	99,449	7921,520	79.22
1	0.00057	99,409	56	99,381	7,822,072	78.69
2	0.00045	99,352	45	99,330	7,722,691	77.73
3	0.00037	99,307	37	99,289	7,623,361	76.77
4	0.00032	99,270	32	99,254	7,524,072	75.79
5	0.00029	99,238	28	99,224	7,424,818	74.82
6	0.00024	99,210	24	99,198	7,325,594	73.84
7	0.00022	99,186	22	99,175	7,226,396	72.86
8	0.00019	99,164	19	99,154	7,127,222	71.87
9	0.00018	99,144	18	99,135	7,028,068	70.89
10	0.00016	99,127	16	99,118	6,928,932	69.90
11	0.00016	99,110	16	99,103	6,829,814	68.91
12	0.00016	99,095	15	99,087	6,730,711	67.92
13	0.00019	99,079	18	99,070	6,631,624	66.93
14	0.00024	99,061	23	99,049	6,532,554	65.94
15	0.00030	99,038	30	99,023	6,433,505	64.96
16	0.00033	99,008	33	98,991	6,334,482	63.98
17	0.00034	98,975	34	98,958	6,235,491	63.00
18	0.00037	98,941	36	98,923	6,136,533	62.02
19	0.00040	98,905	39	98,885	6,037,610	61.04
20	0.00042	98,865	42	98,845	5,938,725	60.07
21	0.00042	98,824	41	98,803	5,839,880	59.09
22	0.00042	98,783	41	98,762	5,741,077	58.12
23	0.00043	98,742	43	98,720	5,642,315	57.14
24	0.00045	98,699	44	98,677	5,543,595	56.17
25	0.00045	98,655	45	98,632	5,444,1918	55.19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여자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26	0.00047	98,610	47	98,587	5,346,286	54.22
27	0.00048	98,563	47	98,540	5,247,699	53.24
28	0.00051	98,516	50	98,491	5,149,160	52.27
29	0.00053	98,466	52	98,440	5,050,669	51.29
30	0.00058	98,414	57	98,385	4,952,229	50.32
31	0.00062	98,357	61	98,327	4,853,844	49.35
32	0.00066	98,296	65	98,264	4,755,517	48.38
33	0.00070	98,231	69	98,197	4,657,253	47.41
34	0.00074	98,162	73	98,126	4,559,056	46.44
35	0.00077	98,090	76	98,052	4,460,930	45.48
36	0.00084	98,014	82	97,973	4,362,878	44.51
37	0.00091	97,932	89	97,887	4,264,905	43.55
38	0.00100	97,843	98	97,794	4,167,018	42.59
39	0.00107	97,745	105	97,692	4,069,225	41.63
40	0.00114	97,640	111	97,585	3,971,532	40.68
41	0.00122	97,529	119	97,470	3,873,948	39.72
42	0.00130	97,410	127	97,347	3,776,478	38.77
43	0.00138	97,283	134	97,216	3,679,131	37.82
44	0.00150	97,149	145	97,077	3,581,915	36.87
45	0.00162	97,004	157	96,925	3,484,839	35.92
46	0.00177	96,847	171	96,761	3,387,913	34.98
47	0.00193	96,676	187	96,582	3,291,152	34.04
48	0.00208	96,489	201	96,389	3,194,570	33.11
49	0.00230	96,288	222	96,177	3,098,181	32.18
50	0.00241	96,067	231	95,951	3,002,004	31.25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여자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hat{e}_x
				nL_x	T_x	
51	0.00262	95,835	251	95,710	2,906,053	30.32
52	0.00286	95,585	273	95,448	2,810,343	29.40
53	0.00313	95,311	298	95,162	2,714,895	28.48
54	0.00354	95,013	336	94,845	2,619,733	27.57
55	0.00378	94,677	358	94,498	2,524,888	26.67
56	0.00402	94,319	379	94,130	2,430,390	25.77
57	0.00438	93,940	411	93,735	2,336,260	24.87
58	0.00482	93,529	451	93,304	2,242,525	23.98
59	0.00543	93,078	506	92,826	2,149,222	23.09
60	0.00588	92,573	544	92,301	2,056,396	22.21
61	0.00656	92,028	604	91,726	1,964,095	21.34
62	0.00741	91,424	678	91,085	1,872,369	20.48
63	0.00826	90,747	749	90,372	1,781,284	19.63
64	0.00916	89,997	824	89,585	1,690,912	18.79
65	0.01020	89,173	910	88,718	1,601,326	17.96
66	0.01159	88,264	1,023	87,752	1,512,608	17.14
67	0.01317	87,241	1,149	86,666	1,424,856	16.33
68	0.01497	86,092	1,289	85,447	1,338,189	15.54
69	0.01708	84,803	1,448	84,079	1,252,742	14.77
70	0.01914	83,355	1,596	82,557	1,168,663	14.02
71	0.02190	81,759	1,791	80,864	1,086,105	13.28
72	0.02483	79,969	1,986	78,976	1,005,241	12.57
73	0.02866	77,983	2,235	76,866	926,265	11.88
74	0.03252	75,749	2,464	74,517	849,399	11.21
75	0.03634	73,285	2,663	71,953	774,882	10.57

〈부표 6〉 완전 생명표, 1999 (계속)

여자

연령	사망확률 nq_x	생존자수 l_x	사망자수 nd_x	정지 인구		기대여명 e_x
				nL_x	T_x	
76	0.04073	70,622	2,876	69,183	702,929	9.95
77	0.04587	67,745	3,108	66,191	633,746	9.35
78	0.05227	64,637	3,379	62,948	567,554	8.78
79	0.05935	61,259	3,636	59,441	504,606	8.24
80	0.06656	57,623	3,835	55,705	445,166	7.73
81	0.07470	53,788	4,018	51,779	389,460	7.24
82	0.08275	49,769	4,119	47,710	337,682	6.78
83	0.09124	45,651	4,165	43,568	289,972	6.35
84	0.10109	41,486	4,194	39,389	246,403	5.94
85	0.11162	37,292	4,162	35,211	207,015	5.55
86	0.12294	33,129	4,073	31,093	171,804	5.19
87	0.13508	29,056	3,925	27,094	140,711	4.84
88	0.14806	25,131	3,721	23,271	113,617	4.52
89	0.16189	21,410	3,466	19,677	90,346	4.22
90	0.17657	17,944	3,168	16,360	70,669	3.94
91	0.19212	14,776	2,839	13,357	54,309	3.68
92	0.20852	11,937	2,489	10,693	40,952	3.43
93	0.22576	9,448	2,133	8,382	30,259	3.20
94	0.24384	7,315	1,784	6,423	21,878	2.99
95+	1.00000	5,531	5,531	15,455	15,455	2.79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연구위원회

위원장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선주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위원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과 교수)

윤형백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장)

권오술 (통계청 인구조사과장)

편집자

- 김 두 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박 상 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집필진

- 김 민 경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김 두 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전 광 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김 태 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과 교수)
 권 태 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 남 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 화 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 정 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 장 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민 경 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 경 숙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최 진 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장 세 훈 (국회 입법분석관)
 최 순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김 동 회 (통계청 인구분석과 서기관)
 김 형 석 (통계청 인구조사과 사무관)
 박 상 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인구 2

발행일 : 2002년 12월

발행인 : 오 종 남

발행처 : 통 계 청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인쇄 : 도서출판 계영사

※ 이 책자는 서점의 정부간행물코너에서 1질(2권) 당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